

# 2021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

## 2021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발 행 일            2020. 11. 6.  
발 행 처            평화통일연구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연      락            02-711-7292, spark946@hanmail.net

### [국방부]

(1) 장교 인건비 (1101-151) .....	8
(14)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8101-882) .....	29
(151) 군사시설개선 (5131-302) .....	38
(152) 군수분야 (5131-304) .....	50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 환경조사 및 치유 (4232-302) .....	59
(166) 군사정보활동 (7131-302) : 특수활동비 .....	69
(7) 신속대응사단(육군 부대개편 4차) (4131-476) .....	77

### [방위사업청]

대형수송함-Ⅱ(LPX-Ⅱ) (2332-340) .....	82
(3-22) 장보고-Ⅲ Batch-Ⅱ (2332-323) .....	93
(3-10) 광개토-Ⅲ Batch-Ⅱ (2332-304) .....	104
(3-9) 한국형구축함(KDDX) (2332-303) .....	113
(4-16) F-35A (2433-300) .....	123
F-X 2차 (2432-301) .....	133
*부록 : F-X 2차 (2432-301) : (F-35B) .....	142
(4-2) 보라매 (R&D) (2431-302) .....	151
(3-20) 특수침투정 (2332-320) .....	159
(3-17) 특수전지원함 (2332-314) .....	164
(4-8)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 (2432-308) .....	167
(4-7) 상륙기동헬기 (2432-307) .....	179
(2-1) 상륙돌격장갑차-Ⅱ (R&D) (2231-313) .....	188
(5-31) 패트리엇 PAC-3 유도탄 2차 (2533-307) .....	193
(5-2)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2531-314) .....	200
(5-27)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532-338) .....	206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R&D) (2531-329) .....	217
확산탄 .....	228
(2-7) K2 전차 (2232-302) .....	235

2021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 평화, 국익, 주권을 지키고 국방개혁 위해 2021년 국방예산 **대폭 삭감해야**

- 장성과 고급장교를 과감히 감축하고 특혜도 폐지해야
- 방위비분담금 등 불법부당한 미군지원 중단해야
- 대북 선제공격과 공세전략 위한 F-35전투기, 기동헬기, 신속대응사단 예산 삭감해야
-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수행에 동원될 우려 큰
- 항공모함,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미사일 방어체계 예산 삭감해야

**52조 9174억 원 중 최소 6조 5322억 원은 삭감해야!**



## 2021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 요지

### ● 장교 인건비 삭감 필요성

- 내년도 장교 후생복지비(638억 원) 22% 증가는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0.9%로 억제해 감염병 위기 극복에 쏟는다는 정부 예산편성 방침에 어긋남.
- 장성 정원 감축에 소극적임. 26개 국직부대는 장성급 지휘관이 민간인으로 교체된 것은 2명(국군체육부대, 국방부 근무지원단)뿐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8개 장성직위가 감축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직부대 44개 장성직위 중 30개 이상은 감축돼야 함. 감사원의 폐지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방부의 4개의 불법적인 한시조직의 장성직위(군구조개혁차장, 대북정책차장, 국회협력단장 등)도 없애야 함.
- 방만한 인력구조 정예화를 위해서는 영관급 장교를 대폭 줄여야 하나 오히려 내년도에 155명 늘어남. 국방부는 대령 300명 감축안을 검토하고서도 내년에 불과 13명만 줄이고 중령은 74명이 늘어남. 영관급은 현재 21,000명 수준에서 15,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함.
- 장교정원 67,000명으로의 감축은 너무 소극적임. 정예군 건설을 위해서는 현재 7만 수준에서 4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함.

### ● 방위비분담 군사시설개선

- 2021년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 없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11차 협정이 미체결 상태. 내년도 예산 편성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
- 2020년도 군사건설예산 3,710억 원에서 1,977억 원을 집행한 것은 11차 협정이 아직 미체결상태이므로 법적 근거 없는 불법집행.
- 국방부는 1,977억 원 집행이 과거 약속한 '미지급액'(미집행 현물지원분)을 지급(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0년도 군사건설예산은 11차 협정 체결 시 미국에 지급할 예산이었음. 국회가 의결한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45조에서 금지하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 국방부가 주장하는 ‘미집행 현물지원분’이란 과거(8차, 9차, 10차) 협정금액과 예산 편성액의 차액(감액)을 뜻함. 그러나 이 차액을 미지급금 또는 미집행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임. 협정금액보다 예산이 덜 편성된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은 집행되지 않은 군사건설비가 매년 너무 많이 발생해 한미가 합의해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한 결과임. 협정액 보다 줄여 편성됐다고 해서 군사건설사업이 차질이 있었던 일도 없음. 굳이 예산 편성하지 않아도 되었던 부분, 예산 편성했다면 필히 남았을 부분은 미집행금이 아니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돈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돈, 결과적으로 보면 사용하고 남은 돈, 즉 불용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불용액은 집행이 끝나고 남은 돈이므로 국고로 회수해야 할 돈이지 미국에 줄 돈이 아님. 더구나 과거 협정은 이미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한국이 지급할 의무가 없음.
- 미 측은 한 해 군사건설비에 족히 쓸 수 있는 현금을 3,432억 원 보유 중. 쓰고 남은 불용액이므로 국고로 회수해야.
- 사드 기지 공사와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이 불법 전용되는 것 막으려면 군사시설개선 예산 전액 삭감해야.

## ● 방위비분담 군수지원

- 2021년 군수분야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 없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11차 협정이 미체결 상태. 내년도 예산편성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
- 2020년도 군수지원예산 1,674억 원에서 627억 원을 집행한 것은 11차 협정이 아직 미체결상태이므로 법적 근거 없는 불법집행.
- 국방부는 627억 원 집행이 과거 약속한 ‘미지급액’(미집행 군수분야 현물지원분)을 지급(집행)한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2020년도 군수지원예산은 11차 협정 체결 시 미국에 지급할 예산이었음. 국회의 의결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45조에서 금지하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 국방부가 주장하는 ‘미집행 현물지원분’이란 과거(8차, 9차, 10차) 협정금액과 예산 편성액의 차액(감액)을 뜻함. 그러나 이 차액을 미지급금 또는 미집행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임. 협정금액보다 군수지원예산이 덜 편성된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비가 매년 너무 많이 발생해 한미가 합의해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한 결과임. 협정액 보다 줄여 편성됐다고 해서 군수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은 것도 아니었음. 굳이 예산편성 하지 않아도 되었던 부분, 예산편성 했다면 필히 남았을 부분은 미지급금이 아니라 불용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불용액은 집행이 끝나

고 남은 돈이므로 국고로 회수해야 할 돈이지 미국에 줄 돈이 아님.

- 주일미군의 장비 정비에 불법 전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 2014~2018년 기간에 957억 원을 써서 10차 협정 비준 당시(2019. 4.) 국회가 지적하고 근절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2019년에 또다시 134억 원이 주일미군 장비 정비에 씀.
- 한반도 전쟁 상정한 미군 예비탄약관리, 전쟁예비물자 정비 등 냉전적, 대북 공세적 성격의 군수지원은 중단되어야 함.

## ● 환경조사 및 치유 예산

- 국방부를 정화책임자로 하는 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또는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로 하여금 토양정화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10조의 4. 1항)을 위반하는 사업임.
- 200차 한미소파합동위원회(2019. 12. 11.)의 주한미군기지 4곳을 우선 반환받되 오염정화 책임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정화책임을 묻지 못하고 한국이 사실상 정화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굴욕적임. 또 이 결정은 국제환경법의 오염자 부담원칙과 토지환경보전법에 위배 됨.
- 우리 국내 환경법에 규정된 오염 기준 및 평가방식에 입각해 반환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정도 및 정화 비용을 산정해야 함. 정부가 우리의 환경주권 수호 차원에서 4곳 미군기지 정화에 대해 미국과 재협상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는 내년 환경조사 및 치유 예산을 삭감해야 함.
- 앞으로 반환될 미군기지를 정화하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1조 5천억 원 이상임. 이 비용을 우리 국민이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반환 절차를 시작한 미군기지가 9곳에 대해서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환경조사와 오염평가를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환경주권을 지키려는 투철한 의지가 있어야 함. 국회는 정부가 우리 환경주권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미국과의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2021년 환경조사 및 치유 예산 567억 5,4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함.

## ● 군인연금

- 군인연금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국가보전금도 증가 일로임. 그럼에도 국방부는 군인연금 개혁을 외면하고 있으며 현행 저부담 고급여체계가 군복

무의 특성 상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그러나 군인연금이 누리는 특혜(대표적으로는 전투기간 3배 계산제나 전역 즉시 수급,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연금지급률 등)는 대부분 과거 군사정권 시대 때 도입된 것임. 전투기간 3배 계산제는 일본 군국주의 잔재임.

- 전역 즉시 수급은 외국의 보편적인 제도라는 국방부 주장은 사실이 아님. 미국 등 극소수만이 전역 즉시 수급제를 채택하고 일본, 스웨덴, 이태리, 독일, 호주 등 대다수가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60세 또는 65세임.
- 국방부가 군인연금 적자가 증가일로인데도 이를 방지하면서 미봉책(이자수익 증대, 기금보유 건물의 임대료수입 증대)에만 매달리는 것은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실시해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제41조를 위배하는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15년의 공무원연금개혁에 준한 개혁을 실시하면 2030년 6,300억 원, 2040년 8,500억 원으로 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보험료율 7%에서 9%로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내리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전역 즉시에서 65세로 늦추고 군사정권시절의 특혜인 전투기간 3배 계산제를 폐지하는 군인연금 개혁을 즉각 실시해야 함.

## ● 특수활동비

- 특수활동비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제12조는 박정희군사독재정권시대의 중앙정보부법을 그대로 승계한 것임.
- 만약 국정원의 예산을 국방부에 편성하여 국정원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계속된다면 사이버사령부에 국정원 예산을 배정해 사이버사령부로 하여금 2012년 대선과 총선 때 댓글공작을 펴던 정치개입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음.
-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편성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공무원 특수활동비 등의 지출을 구조 조정해 감염병 위기 극복과 그린뉴딜에 쏟는다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어긋남.
-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편성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그 사업목적과 산출내역 등이 투명하지 않는 등 국가재정법에 위배 됨.

## (1) 장교 인건비 (1101-151)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4,366,844	4,476,976	110,132	639,146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사업 목적> 장교 70,061명 및 무관후보생 4,510명의 봉급 및 제 수당,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국방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0. 9.)
- ② <2021년도 장교인건비 증액 사유> “국방개혁 2.0”의 간부 계급구조 개편을 위한 장교 증감소요 반영(131억 원 감액) 및 공통처우개선 등 소요(544억 원 증액)
- ③ <내년도 증원 및 감원되는 장교 내역> 장교 710명 감원(장성 -15, 대령 -13, 중령 +74, 소령 +94, 위관 -828, 준위 -22명)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지출을 구조 조정해 감염병 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 방침과 어긋나는 장교인건비 증가
  - 내년 장교인건비는 4조 4,770억 원으로 올해 4조 3,668억 원보다 비율로는 2.5%, 금액으로는 1,101억 원이 늘어난다. 장교 인건비 증가율 2.5%는 내년도 공무원 임

금인상률 0.9%를 훨씬 넘는 수치다. 장교인건비 증가의 내역을 보면 복리후생비가 금액으로는 638억 원, 비율로는 무려 22.2%나 인상된다. 내년 장교인건비가 공무원임금인상률 0.9%를 상회하여 2.5% 인상되고 복리후생비의 경우 22%나 증가하는 것은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공무원 임금인상율도 최대한 억제해 절약되는 재원을 감염병 위기극복과 서민경제 지원에 쏟는다는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반한다.

- 2020년도의 장교 복리후생비 예산(3,482억 원)이 추경 예산편성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610억 원 삭감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내년도 복리후생비를 22.2%나 올릴 이유는 될 수 없다.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 확실한데다 내년도도 감염병 위기와 그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난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 장교 인건비는 부사관에 비해서도,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점에서 내년도 복리후생비가 무려 22.2%나 늘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공무원 봉급(기본급)인상을 0.9%로 억제하자 이를 피해서 급여를 올리기 위한 수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장교 복리후생비 증가는 국방부가 ‘내년도 전력운영비 편성의 중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방인력구조의 정예화’(국방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개요”)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방 인력구조의 정예화를 추진하는 본래 취지는 방만한 장교운영인력을 대폭 줄이고 비대한 군 조직을 간소화하며 그럼으로써 국방예산의 지출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 장교 정원이 1.0% 감축(710명)에 그치고—이는 내년도 병 감축률 7.6%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인건비가 1,100억 원 넘게 는다. 이는 국방인력구조의 정예화에 역행한다.

## ② 내년도 장성 감축 15명은 방만한 군 조직 간소화와 국방개혁 추동엔 턱없이 부족

### • 기득권 세력 반발에 굴복한 국방개혁 2.0의 장성 정원 조정계획

- 내년도 장성정원 15명 감축은 2022년도에 장성정원 360명을 유지한다는 국방개혁 2.0의 목표치에 맞춰서 산정된 숫자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1·3 야전군 사령부 통합 등 부대개편, 국방부 및 방사청 일부 직위 문민화, 교육·군수·행정 등 비전투부대 계급적정화 등을 통해 “현재(2017년) 436명의 장성정원을 76명을 줄여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할 것”임을 밝혔다(국방부 보도자료 2018. 7. 27.).

<표1> 장성 정원 변화 현황 (단위 : 명)

회계연도	1953	1961	1975	2014	2017	2019	2020	2021	2022
정원	109	239	360	441	436	405	390	375	360

- 국방개혁 2.0 장성정원 감축계획은 그 자체가 매우 소극적으로 짜인 것이다. 국방부가 2018년 초 국방개혁안을 짤 때만 해도 전체 장성 감축 규모는 100명이 넘었다고 한다(동아일보, 2018. 3. 13.). 그러나 육군의 반발로 그 규모가 줄어들었고 그나마 ‘부군단장’, 상비사단의 ‘부사단장’을 100% 장성으로 편성하는 안을 내고서야 육군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뉴스, 2018. 7. 29.). 실제로 발표된 국방개혁 2.0은 “상비사단 부사단장,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등 전투부대의 장성 직위는 오히려 보강하여 전투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육군의 반발로 ‘상비사단의 부사단장’ 등을 장성으로 편제하기로 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아무리 전투부대라 하더라도 평시에 군이 부사단장이나 부지휘관을 운용해야 할 필요가 없고 또 부사단장이나 부지휘관을 장성 직위로 해야 전투력이 강화된다는 것도 억지라는 점에서 부사단장, 부지휘관을 장성 직위로 편제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이고 집단이기주의이다. 이처럼 부군단장이나 부사단장, 또 덩달아 해·공군의 부대 부지휘관을 장성 직위로 편제하게 되면 줄어든 장성정원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육군의 경우 앞으로 군단은 6개로, 상비사단은 16개(전체 사단수는 33개)로 주는데 그 경우 군단과 상비사단 부지휘관을 장성으로 보임하면 그것만으로 22개의 장성 직위를 늘릴 수 있다. 부사단장이나 부지휘관을 장성으로 편제하기로 한 국방개혁 2.0의 장성정원 감축계획은 개혁성을 상실한 것이다.

#### • 장성정원 360명 유지의 부당성

- 국방부가 제시한 2022년 장성 정원 360명 유지계획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5년 장성 정원 360명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송영무 국방장관, 국방위 답변, 2018. 8. 24.). 국방부가 1975년 장성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1971~1977년 베트남전 철수 이후 한국군 현대화 추진 시기에 제대별 규모와 지휘관 계급 등 현재의 편성 기준이 정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1975년은 10월 유신 이후 군부독재 통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로 군부통치의 기반 강화 차원에서 장성 정원이 크게 부풀어 있었다. 장성 정원은 1961년 239명(국방부 발표)에서 1964년 251명,

1969년 329명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박정희가 집권한 뒤로 장성 정원이 1975년까지 무려 120명 이상이 늘었다. 이런 점에서 문민통제를 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이 군부독재 시절인 1975년의 장성 정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다. 국방부가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하면서 남북관계, 주변국과의 관계(한중 및 한러 관계), 장비수준, 문민통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정도 등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1975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 또한 시대착오적이다. 설사 1975년의 장성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병력이 50만 명 일 때의 장성 정원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1975년 당시 병력이 60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장성 정원을 360명이 아닌 300명으로 했어야 그나마 일관성이 있었을 것이다. 국방부가 1975년 장성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360명이란 숫자를 미리 정해 놓고 여기에 꿰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 국방개혁 2.0의 장성정원 조정계획이 개혁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3군 균형발전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군의 절대적 우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도 보인다. 2022년 장성 정원의 감축이 완료된 뒤 각 군의 장성은 육군 247명, 해군 59명, 공군 54명이 된다. 비율로 따지면 육군 4.6 대 해군 1.1 대 공군 1.0으로 여전히 육군 장성 수가 압도적이다. 이처럼 장성 수에서 육군이 압도적이게 되면 상부지휘조직이나 행정조직 등을 육군이 장악하게 되어 사실상 3군 균형발전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 국방부는 직할부대 개혁 약속을 지키고 장성정원 30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 국직부대의 방만한 조직과 방만한 인력운영(특히 장성과 고급장교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의 하나다. 국방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를 보면 국방부 및 국직부대 기본사업경비(예산)는 2018년 1,589억 원(복리후생비 1,082억 원), 2020년 1,597억 원(복리후생비 1,115억 원), 2021년 1,660억 원(복리후생비 1,190억 원)으로 증가추세다. 복리후생비를 위주로 한 국직부대의 예산 증가 추세는 국직부대의 구조개혁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다.
- 26개의 국직부대/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해 이중 8개만 남긴다는 국방부의 방침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해체된 기관은 고등군사법원 한 곳뿐이다. 합동군사대학<sup>1)</sup>은 해체된다고는 하나 육군대학과 해군대학, 공군대학 과정은 각 군에 돌려보내

고 합동참모대학과 국방어학원은 그대로 둔 채 그 소속만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바뀐다. 합동군사대학의 당초 6개의 장성 직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직부대 중 부대 지휘관이 민간인으로 교체 된 곳은 2020년 10월 현재 두 곳(국군체육부대, 국방부 근무지원단)뿐이다.

- 국방부는 국직부대/비전투부대의 계급적정화 차원에서 지휘관의 계급(소장, 준장)을 한 단계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0년 10월 현재 국직부대/기관 및 비전투부대 중 소장·준장 직위를 하향한 것은 5건이며, 장성은 1명 감축되는데 그쳐(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 계급적정화 역시 말잔치로 끝났다. 계급적정화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 검찰단장의 직위를 대령에서 준장으로 상향키로 하였는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줄어드는 장성 직위를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국방조사본부의 경우 소장 직위를 준장 직위로 낮추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원래는 대령 직위로 낮춘다는 방침이었다가 후퇴한 것이다.
- 국방부의 국직부대 개편이 유야무야된 것은 애초 부대개편 계획 자체가 소극적이었던 데다 “각 부대와 기관들이 설립 취지와 필요성 등 조직 논리를 내세우며” 반발한 결과다(이데일리, 2020. 8. 18.).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이 군 내부 기득권세력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하고 거기에 떠밀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 26개의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장성은 2020년 10월 현재 44명(정원 기준)이다(평화통일연구소 정보공개청구).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국직부대/기관의 18개의 장성 직위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감축될 거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감축안은 소극적이고 기간도 너무 길다. 국직부대/기관은 장성급 부대 지휘관(17명)의 전원 민간인으로서의 교체, 기무사의 이름을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장성 직위 7개)의 해체, 합동군사대학(장성 직위 6개) 폐지, 기타 부대의 통폐합 또는 해체 등을 통해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장성 직위도 대부분 다 없애야 한다.

#### • 문민화를 위해 국방부 본부와 방사청의 장성 직위는 폐지되어야 한다

- 국방부 본부는 5개의 장성 직위(정책기획관, 대북정책관, 군구조개혁추진관, 국방부

---

1) 개편되기 전 합동군사대학은 합동참모대학과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과정을 두고 있었고 국방어학원을 두고 있다.

국방정책실 차장, 국방개혁실 등)를 운용하고 있다. 국방문민화 차원에서 이들 5명의 장성 직위는 폐지되거나 민간인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또 국방부는 모두 10개에 이르는 한시기구(TF)를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에 소속된 장성은 4명(대북정책차장과 군구조개혁차장, 국회협력단장 등)이다. 감사원은 장성을 책임자로 하는 4개의 한시기구에 대해서 직제에 없는 불법적인 기구이므로 시정할 것을 2018년, 2019년 잇따라 요구하였다. 대북정책차장이나 국회협력단장 등 불법적인 한시기구에 편제된 4개의 장성 직위는 폐지되어야 한다.

- 방사청은 장성이 2020년 10월 현재 7명(정원)이다. 2021년에 4명으로 줄 것이라고 하는데 문민화 차원에서 4개 장성 직위도 민간인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국방개혁 2.0 성안 당시 검토했던 방사청의 100% 문민화 원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예비역 공군 중장인 박 모씨가 무기도입사업을 총괄하는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퇴임 1년 만에 미국 방산업체 보잉의 고문으로 취직했다’(SBS, 2018. 3. 9.)는 사실에서 보듯 방사청 100% 문민화는 문민통제 원칙을 확고히 하고, 만연한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 군인사법 제16조 2의 1항 단서 조항에서 인정되는 정원 외 장성 직위도 없애야 한다. 가령 청와대에 파견된 장성만 3명(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방개혁비서관, 대통령 경호처 군사관리관)이다. 청와대 현역 장성이 맡은 직위가 꼭 군인(장성)으로 채워져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국방개혁비서관을 현역장성에게 맡기는 것은 문민통제 원칙에 어긋난다.

#### • 인력감축 및 예산절약이라는 애초 목적을 벗어난 지작사 창설

- 언론은 1·3야전군 사령부 통합과 지상작전사령부 창설로 21~25개의 장성 직위가 줄 것으로 보도했다”(연합뉴스, 2018. 7. 29.).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에 불과한 12명 주는데 그쳤다. 이처럼 장성 직위가 절반밖에 줄지 않은 이유는 지작사의 조직이 방만하게 꾸려졌음을 의미한다. 지작사 본부의 직제가 5부4처8실48과 614명으로 꾸려졌는데 이는 재편 전의 야전군사령부 직제(6부2실34과 499명)보다 훨씬 비대한 것이다.
- 지상작전사령부는 애초 창설 목적이 “지상작전사령부는 강하고 스마트한 국방을 위한 군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2019. 1. 9.)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처럼 부대병

력을 줄이면서 ‘스마트군’(정예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작사는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제에 초점을 두면서……신속한 작전지휘와 전투능력 제고,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송진현,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른 지상군 발전방안 연구”, 군사연구 19쪽, 2019. 6. 30.)을 위해 추진되었다. “2018년 육본 연도부대계획”(2017. 7.)에 의하면 지작사는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단에 대해 작전지휘 기능만 수행하고 화력 및 지속지원 기능은 사실상 포함하지 않았”(송진현, 위 자료)다고 한다. 그러나 창설된 지작사는 군단에 대한 작전지휘 역할을 뛰어넘어 직접 작전을 주도하고 군정(군수지원)까지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그에 맞춰 각종 작전 및 군수 부대를 직할부대로 거느리는 등 인력감축과 예산절감이라는 창설 목적에서 벗어나 몸집불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 지작사는 8개 군단, 2개 후방지역담당 사단, 육군동원전력사령부(2018년 4월 창설), 지상정보단(2018년 9월 창설), 화력여단(2019년 1월 창설), 산악여단, 정보통신여단(2019년 1월 창설), 항공단, 방공단, 공군항공지원작전본부(ASOC), 군수지원사령부, 공병단, 군무지원단, 야전수송교육단, JSA대대, 군사경찰단 등을 직할 또는 예하부대로 거느리는 초유의 초대형 부대로 자리잡고 있다.
- 지작사 창설과 함께 그 직할 및 예하 부대가 창설되거나 증설되는 부대가 준비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성급 직위가 앞으로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화력여단이 창설되었고 지상정보단은 지상정보여단으로 증설될 예정이다-이는 그렇지 않아도 팽창된 장성인력을 더욱 팽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 지작사의 몸집불리기는 중단되어야 하며 애초 창설 목적에 부합되게 군단에 대한 지휘기능 정도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대폭 축소되거나 아니면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

#### • 각 군의 장성 정원 늘리기 위한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 육군은 2017년 12월 1일 특임여단을 창설한데 이어 2018년 4월에 군단급의 동원전력사령부(장성 직위 2)를 창설하고 2019년에는 지작사의 직할부대로서 화력여단과 정보통신여단을 각각 창설하였다. 또 2018년에 창설한 지상정보단은 앞으로 지상정보여단으로 증설될 예정이다. 여기서만 5개의 장성 직위가 새로 생기게 된다.

- 육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2보병사단을 해체하면서도 이를 모태로 신속대응사단 창설에 나서고 있다. 2025년까지 2개 군단과 6개 사단을 해체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단을 창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사단수가 줄지가 않는다. 2025년에 33개 사단을 유지한다는 계획은 노무현 때의 24개 사단 유지 계획에 비춰보면 터무니없이 많은 숫자다.
- 해군은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해군은 정보단장과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을, 공군은 항공정보단장을 각각 장성 직위로 상향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는 육군이 상비사단의 부지휘관을 100% 장성으로 편성하기로 한데 따라 해군과 공군에 대해서도 균형을 맞추는 차원의 조치로 보인다. 각 군이 기득권 지키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뤄지고 있는 특임여단이나 화력여단, 지상정보단, 신속대응사단 등의 창설은 북한에 대한 초공세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군의 몸집불리기 차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 • 중간 지휘구조의 간소화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직부대와 교육·군수·행정 부대의 장군 직위는 계급을 낮추거나 중간 지휘 조직을 감축할 계획”(조선일보, 2018. 7. 28.)임을 밝혔다고 한다.
- 사실 중간 지휘구조를 간소화해 장성 직위를 감축하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검토해 온 방안이다. 국방부는 2012년 7월 30일 각 군에 군상부구조의 슬림화를 뼈대로 하는 군 조직 개편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 그 때 유력하게 검토된 안이 이른바 대과로의 통폐합(중간 결재라인 폐지)으로 육군본부의 경우 부장(소장)-차장(준장)-과장(대령)으로 되어 있는 결재라인 중 차장만 없애도 20명의 장성을 줄일 수 있다(내일신문, 2012. 7. 30.)고 한다. 부장(소장)-차장(준장)-과장(대령)으로 되어 있는 각 군 본부의 결재라인 중 차장을 없애 장성을 줄이고 방만한 조직운영도 간소화해야 한다.

- 국방부는 계급적정화 차원에서 직할부대와 비전투부대의 지휘관(소장 또는 준장) 계급을 한 단계씩 낮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였다고 한다(동아일보, 2018. 3. 13.). 합참과 한미연합사를 포함해 국직부대/기관의 준장계급이 40명 수준이므로 계급적정화 차원에서 한 단계 직위를 낮춘다면 그것만으로 40명의 장성감축 효과가 있다.
- 계급적정화 원칙은 비단 비전투 행정조직에 대해서만 적용될 이유가 없다. 계급의 인플레이션은 전투조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하다. 가령 특수전사령부는 6개 여단의 장이 모두 장성급이다. 부풀려진 계급의 적정화를 위해 여단장도 대령급으로 낮추어야 한다.

#### • 바람직한 장성 정원 규모는 200명 수준

- 1988년 10월 6일 국방부는 ‘군 계급구조 개편’ 방침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 때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장교 대비 장성 비율이 0.62%(장교 69,733명 중 장성 정원은 433명)로 미군 0.34%(장교 309,000명 정원에 장성 1,057명)보다 높다고 하면서 군 계급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에 밝혔다(동아일보, 1988. 10. 7.). 2020년 8월 기준으로 미국의 장교(232,256명) 대비 장성(914명) 비율은 0.39%다. 미국은 의회가 장성 정원을 장교 총 정원의 일정한 비율 이내로 제한한다. 만약 미국의 장교 대비 장성 정원 비율 0.34~0.39%를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군은 2024년에 장교를 67,0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므로 그 때 적정 장성 수는 227~261명이 된다. 그러나 2024년 장교 정원 67,112명은 병력 50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많은 병력으로 20~25만 명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그 경우 장교도 40,000~45,000명 수준이 적당하다. 만약 장교 수를 45,000명으로 상정하면 그 때 적정 장성 수는 180명이 된다. 김중로 의원도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몇 명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장군 수를 지금(2017년 436명) 반절로 줄여야 됩니다”(국방위원회, 2017. 8. 21.)라고 국회에서 말한 바가 있다.
- 과거 한국군의 장성 숫자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1960년 4·19혁명 뒤 집권한 장면 정부는 당시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병력을 줄였다. 그에 따라 전체 병력은 72만 명(1957년)에서 60만 명(1960년)으로 감축되었고 장성 정원도 1957년 333명에서 1961년 239명(1960년 장성 정원 통계는 국방부가 발표하지 않음)으로 줄었다. 1961년 60만 병력 대비 장성 239명을 기준으로 하면 50만 병력에 대한 장성

정원은 199명이 된다. 병력을 20~25만 명으로 감축 시 장성 숫자는 더 줄어들어야 한다. 한국군의 장성 수는 200명 수준이면 적당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데 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장성 정원을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

- 장성 인력의 비대화를 용인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군인사법 제16조 2의 1항 단서 조항이다. 이 단서 조항은 정원 외로 장성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 3항(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은 무려 7개 항목에 걸쳐서 정식 편제 정원 외로 운용할 수 있는 장성 직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런 부수병력을 광범하게 인정하게 되면 자연히 장성 수가 불필요하게 팽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식 편제 정원 외에 장성 정원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한 이 군인사법 제16조 2의 단서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의 '장성정원 조정계획'은 이 정원 외 장성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아무런 계획이나 언급이 없다.

- 문민통제가 일찍 확립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의회가 선발에 비군 정원을 포함해 매년 현역 군인 총 정원을 인가하도록 규정한다. 또 부사관의 최상위 계급 정원의 상한을 정하고 장교 총 정원 크기에 따른 영관장교의 군별·계급별 상한, 장성의 정원과 계급별 정원 상한을 정해 군이 함부로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방 조직과 정원을 대통령령과 국방부 훈령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비해 미국은 구속력이 강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서울신문, 2015. 8. 16.).

### ③ 영관급 장교 정원 증가의 부당성과 삭감의 필요성

-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영관급 장교의 지속적 증원

- 내년 영관급 정원은 2020년에 비해 155명이 늘어난다. 2020년에 영관급 장교가 90명이 늘었는데 2021년에는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영관급 장교는 2007년에 장교의 28.7%를 차지하였는데 그 비율이 2021년에는 30.8%로 늘어난다. 장성 못지않게 영관급 장교도 팽창되어 있어 인력운용의 비효율성과 군 조직의 방만한 운영의 요인이 되고 있는 터다. 이런 상황에서 영관급 장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방인력의 정예화에 역행한다.

- 영관급 장교는 참모 역할이 많기 때문에 영관급 장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부대가 새로 창설되거나 증설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군 상부조직의 슬림화라는 개혁방향에 역행한다.

**<표2> 영관급 장교 정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07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영관장교	20,517	20,964	20,875	21,050	21,310	21,333	21,423	21,578

- 내년도 영관급 장교 증감 내역을 보면 소령과 중령이 각각 94명, 74명 늘고 대령이 13명 준다. 중령 이상의 고급장교는 하급장교와 달리 보수 수준이 아주 높고 수당, 군인연금 등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고급장교는 그 정원이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어 인건비 압박이 심하고 군조직의 비대화와 방만한 인력운영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과도한 진급경쟁으로 군의 건강성을 해치며 진급 적체로 군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고급장교의 과감한 감축이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인 까닭이다.
- 국방부는 군의 정예화 차원에서 비전투부대 대령의 수를 300명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고 한다(연합뉴스, 2018. 5. 9.). 이는 영관급 장교 특히 대령이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음을 국방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령은 2020년에 15명, 2021년에 13명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방부가 검토하였던 300명 감축안에 비한다면 사실상 거의 동결 수준이나 다를 바 없다.

**<표3> 최근 영관급 장교정원 증감 추이 (단위 : 명, 괄호 안은 전직교육 정원)**

연도	2019	2020	2021
소령	11,832 (182)	11,890 (182)	11,984 (182)
중령	7,057	7,104	7,178
대령	2,444 (8)	2,429 (8)	2,416 (8)
계	21,333 (190)	21,423 (190)	21,578 (190)

• 영관급 장교 정원 삭감 요인

- 1·3군이 통합되어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었고 두 개 군단이 해체될 예정인데 영관급 장교가 계속 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 때 군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1·3군의 통합이 검토되었는데 당시 이 안이 시행되면 장성 직위는 25개가 줄고 영관장교는 565명이 줄어든다(서울신문, 1998. 8. 26.)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었다.
- 육군의 사단수는 39개에서 33개로 줄 예정이다. 1개 사단의 장교수가 대략 561명 정도 되기 때문에 6개 사단 해체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자연감소도 1,000명 정도 될 것이다.
- 2020년 7월 현재 국방부 본부의 장교정원은 324명이며 이중 장성은 5명, 중령과 대령 정원은 214명이다. 또 국방부는 10개의 한시기구(TF)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대령 12명이 포함되어 있고 22개의 한시 편제에는 대령 1명이 소속되어 있다. 직제에 없는 불법적인 한시기구의 하나인 국회협력단에는 준장계급인 단장 말고도 중령(총괄담당), 대령(협력관 명칭으로 육·해·공·합참·방사청·해병대에서 각 1명 파견) , 주무관(소령) 등이 소속되어 있다. 불법적인 한시기구에 편제된 인원을 포함해 227명의 중령과 대령 직위를 국방문민화를 위해 감축해야 한다.
- 방위사업청은 2021년도 예산편성 군인정원이 장성 4명, 영관급 394명(이 중 대령 53명), 위관급 66명, 부사관 3명을 합쳐 467명이다. 여기서도 영관급 394명을 문민화 차원에서 감축할 수 있다.
- 2020년 7월 현재 국직부대/기관을 포함해 국방부(본부), 합참, 한미연합사 등 육군·해군·공군 외의 부대/기관에 배정된 군인정원은 24,212명이고 이 중 장성이 106명, 대령 602명, 중령 1,905명, 소령 1,888명이다. 이 가운데 중령과 대령 직위의 2/3를 감축한다면 1,671명을 감축할 수 있다.
- 국방부는 영관급 장교 정원에 전직교육(퇴역 뒤 취업을 위한 교육)을 위한 별도 정원으로 190명(소령 182명, 대령 8명)을 두고 있다. 이런 전직교육 정원은 다른 계급에는 없다. 190명의 영관장교가 현직을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으로 전직교육 지원까지 받는다면 이는 특권이고 세금 낭비다. 마땅히 전직교육 정원을 폐지해야 한다.

- 영관급 장교, 특히 중령 이상의 고급장교 정원을 감축할 많은 요인이 있는데도 내년 영관급 장교가 155명 늘고 대령 감축이 13명에 그치는 것은 국방부가 기득권에 사로잡혀 고급장교 감축 의지가 없으며 비대한 국방조직의 간소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 • 적정한 영관급 장교 정원 수준

- 국방부는 1993년 7월 6일 ‘군 정원 및 인력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개선안은 대령 정원을 1,881명(당시 정원) 수준에서 동결하고 대령과 중령과 소령의 비율을 1 : 3 : 5.5에서 1 : 2.5 : 4.5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 국방부의 군 정원 개선안(1993년)대로 하면 영관장교 정원은 15,049명(대령 1,881명, 중령 4,703명, 소령 8,465명)이 된다. 2021년도 기준으로 영관급의 정원은 대령 2,146명, 중령 7,178명, 소령 11,984명이다. 국방부의 정원 개선안에 비춰보면 대령은 265명, 중령은 2,475명, 소령은 3,519명 초과다. 2021년도 적정한 예산편성 영관장교 정원을 15,049명으로 본다면 6,259명 초과다. 이에 내년도 영관급 장교 정원은 6,259명을 감축해야 한다.

#### ④ 군 조직 슬림화와 정예군 건설에 역행하는 내년도 장교 정원 70,061명

##### • 내년도 장교정원 710명 감축의 소극성

- 내년도 장교 정원은 70,061명으로 2020년 70,771명에 비해 710명(1.0%)이 준다. 그러나 이런 현상유지 수준의 미미한 장교 감원율은 내년도 병 감축율 7.6% (26,624명)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병 감축에 맞추려면 적어도 5,379명은 줄어야 한다.

**<표4> 연도별 장교정원 및 운영병력 추이 (단위 : 명)**

연도	2007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장교정원	71,537	72,142	71,964	71,555	71,461	71,064	70,771	70,061
운영병력	-	-	-	70,842	70,051	69,467	-	-

- 줄어드는 장교 정원 710명의 내역을 보면 장성 15명, 대령 13명, 위관 828명, 준

위 22명으로 대부분 하급 또는 초급 장교다. 늘어나는 장교는 중령과 소령이 각각 74명과 94명이다. 국방인력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령 이상의 고급장교의 과감한 감축이 필요한데 오히려 내년 고급장교는 46명이나 늘어난다. 이는 새로운 부대 창설이나 증설 등의 요인으로 고급장교의 자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조직의 슬림화(간소화)도 국방인력의 정예화도 말만 앞세울 뿐 국방부가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표5> 내년 예산편성 장교 정원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장성	영관	위관	준위	계
2020	390	21,423	42,612	6,346	70,771
2021	375	21,578	41,784	6,324	70,061
증감	-15	155	-828	-22	-710

- 내년 장교 정원 710명 감축은 부대의 통폐합이나 해체로 생기는 자연적인 장교 감원 수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것이다. 육군 사단은 2018년에 1개(26사단), 2019년에 2개(20기계화보병사단과 2보병사단), 2020년 1개(기계화보병사단의 기갑여단으로 개편)가 해체되었고, 2021년에 1개가 더 해체된다. 보통 1개 사단(병력 11,500명 기준)의 장교는 561명 정도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2,805명의 장교 감축 소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2021년 사이에 준 장교정원은 1,494명(연평균 375명)에 불과하다. 사단을 해체하면서도 새로운 부대(신속대응사단, 화력여단, 동원전력사령부, 특임여단, 정보통신여단 등)를 창설하거나 증설하는 등으로 줄어드는 장교를 흡수함으로써 장교 감축이 실제로는 현상유지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내년도 장교정원 710명 감축은 국방부 본부(2020년 7월 현재 장교 324명)와 방사청(2021년 장교정원 464명)의 문민화, 국방부 국직부대/기관(26개)의 축소개편(군인의 군무원으로의 교체 포함), 국방부의 불법적인 한시기구(가령 국회협력단에는 협력관 6명 등 10명 장교가 소속됨)의 폐지, 1·3 야전군사령부 통합, 기무사령부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의 축소개편 등 수 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교 감축 소요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국직부대/기관을 포함하여 국방부(본부), 합참, 연합사 등 육군·해군·공군 외의 부대/기관에 배정된 군인(정원)은 24,212명이고 장교는

7,698명이다. 비전투행정부대와 할 수 있는 26개 국직부대/기관의 장교 정원은 5,391명으로 육·해·공군 외의 부대/기관에 배정된 장교정원의 70.0%를 차지한다. 국직부대/기관의 해체나 축소 등을 통해서 4,000명 이상의 장교를 줄여야 한다.

- **4만 명이면 장교는 충분하다**

- 국방개혁 2.0은 간부 중심의 정예군대로의 전환을 위해 장교인력을 현재(2020년) 70,771명에서 약 3,000명을 줄여 2024년부터는 67,000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장교 정원 67,000명 유지하는 간부 중심의 정예군 개념에는 맞지 않는 과도한 규모다. 인구수에 비해 비교적 적은 병력인 20만 내외의 군대를 보유한 국방선진국 예를 보면 장교수가 일본이 46,039명(2020년, 전체 병력은 227,442명), 독일은 37,054명(2012년, 병력 202,002명), 프랑스는 36,179명(2012년, 병력 222,215명), 영국은 27,230명(2015년, 병력 153,720명)이다. 이들 나라 장교는 그 수가 많으면 4.6만 적으면 3.6만 명 선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도 전체 병력을 20~25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4만 명 안팎의 장교만 있으면 얼마든지 질적으로 우수한 군대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군은 장교 수가 2019년 현재 69,467(현원 기준)명이며 2024년까지 정원을 67,0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보면 67,000명으로의 감축은 사실 별의미가 없으며 4만 명 선까지 줄여야 한다.

- 한국군의 병력규모는 2020년 현재 57.7만 명(상근예비역 1.6만 명 포함)이다. 이런 대규모 병력과 그에 따른 방대한 군조직을 거느리게 되면 각급 부대에 장교를 편제해야 하고 대병력을 관리해야 하므로 장교인력도 방만해지게 된다. 이처럼 방대한 군조직과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대한 군인력운동을 그대로 두거나 감축 흉내만 낸다면 정예군의 건설은 백년하청일 것이다. 이에 장교인력의 정예화를 달성하려면 6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장교도 현재의 7만 명 선에서 4만 명 선으로 과감히 감축해야 한다.

### ⑤ 간부 중심의 정예군이 되려면 대폭적인 병력감축이 전제되어야

- **‘간부 중심 정예군’ 위해서는 병력을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

- 국방개혁 2.0은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간부(장교와 부사

관)의 비율을 2019년 34.2%(19.8만 명)에서 2024년 40.0%(20.2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간부(장교와 부사관)의 비율이 40%가 된다는 것은 병이 60%를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말하는 군대(간부가 40%가 되는 군대)는 병 중심의 군대일 뿐 정예군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군대다. 국방부가 말하는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라는 것이 한낱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은 간부 중심의 군대를 가진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간부비율이 일본은 75.4%(병력 227,442명 중 191,153명, 2020년), 독일이 71%(병력 202,000명 중 14.1만 명, 2012년), 프랑스가 61%(병력 222,215명 중 13.6만 명, 2012년)다.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은 간부 비율이 60~75%에 달하기 때문에 병이 아닌 간부가 중심을 이루는 군대라고 부를 수 있다.

- 간부 수는 한국군이 19.9만 명으로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군보다 절대적으로 많다. 그렇지만 한국군은 병 중심의 군대다. 이는 간부 중심의 정예군이란 간부 수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간부의 비율이 최소한 절반 이상 60-80%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적은 간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간부 중심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현재 병력 50만 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속에서 간부 중심의 군대가 되려면 간부는 최소한 절반 이상 30만 명(60%)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간부는 20만 명이 아니라 그보다 10만 명이 더 증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50만이 넘는 병력을 보유한 속에서 간부를 절반 이상 즉 30만 명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부사관을 2020년 말 129,000명에서 2024년 135,000명으로 6,000명 늘린다는 계획도 하사 충원이 안 되어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장교와 부사관을 10만 명이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 간부를 10만 명 늘리려면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운영유지비 제외)만 5조 960억 원(2021년 기준)이 추가로 필요하다. 국방비 부담률(국민 1인당 국방비)은 SIPRI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일본 375달러, 독일 590달러, 영국 720달러, 프랑스 770달러로 한국의 857달러보다 훨씬 적다. 우리 국민의 국방부 부담을 줄여야 하는 판에 간부 증원을 위해 매년 5조 원 이상을 늘려야 한다면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간부 중심의 정예군은 국방비를 물 쓰듯이 하는 군대가 아니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추구하는 군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간부가 30만 명이 되면 이 대규모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군 조직은 필히 방만해질 수밖에 없다. 각종 부대와 직위가 남발될 것이며 각급 제대의 간부 편제도 중복되고 과잉상태가 될 것임은 물론이다. 정예군 한다

고 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공룡 같은 군조직이 될 수 있다.

- 우리 군이 간부 중심의 정예군으로, 작지만 강한 군대가 되려면 50만 명의 병력규모를 절반 정도(25만 명)로 줄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방비 부담률을 줄이면서도 간부의 비율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만약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인다면 간부와 병을 각각 15만 명(장교 5만, 부사관 10만, 병 15만)으로 설계할 수 있다. 25만 명으로 병력을 줄인다면 간부 12.5만 명(장교 4.5만, 부사관 8만 명), 병 12.5만 명으로 편성할 수 있다. 만약 병력을 20만 명으로 줄인다면 간부 10만 명(장교 4만 명, 부사관 6만 명), 병 10만 명으로 편성할 수 있다.

• 대폭적인 병력감축은 남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 위해 필요하다

- 50만 명의 대병력유지는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전쟁목표와 군사 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력이다. 그러나 이런 공격적인 군사전략은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 또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굳혀가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이 불가피하다. 남과 북은 서로에 대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격적 전력은 감축해야 한다. 당연히 병력 규모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 방어에 충분한 전력으로 줄어야 한다. 20만 명 수준으로도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공격으로부터도 방어가 가능한 전력이다.
- 병력감축은 움직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다. 『2020년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병력은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이 59.9만 명인데 반해 일본 24.7만 명, 대만 16.3만 명, 프랑스 20.4만 명, 독일 18.1만 명, 영국 14.8만 명이다.
- 한반도 평화시대의 도래, 감염병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의 지속, 미중 패권대결 시대 속에서의 남북 경협을 축으로 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 수립, 주변국과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안보의 확보라는 시대적, 정세적, 지역적 요구에 비춰 이제 대병력주의에 대한 맹신적 사고를 바꾸어야 할 때다. 국방비를 줄여 민생을 살리고 보편적 복지를 향해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군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30만, 25만, 20만 명으로 줄어나간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 민생과 복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간부계급구조를 바꾸는 것이 간부 증원의 근거는 될 수 없어

- 국방개혁 2.0은 간부의 계급구조를 “‘다수획득-단기활용’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적정획득-장기활용’ 가능한 향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하여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국방부,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보도자료, 2020. 8. 9.)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 2022년까지 대위·소령·중령과 중·상사는 증원하고 중·소위 및 하사는 감축할 계획이라고 한다(국회 예산정책처, 『2021년도 위원회별 예산 분석』, 2020. 10.). 하지만 간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향아리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간부의 규모를 절대적으로 늘려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국방부는 간부중심의 군대로의 전환을 명분으로 부사관을 2019년 127,000명에서 2024년 135,000명으로 8,000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하사의 충원이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차질을 빚고 있다. 2019년 현재 소위의 운영률은 98%인데 하사의 운영률은 80.4%에 불과하다. 하사의 운영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현재 부사관 정원구조 상 장기복무 선발률이 42% 수준으로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져 청년인구의 유입이 저조하기 때문”(국회예산정책처, 위 자료)이라고 한다. 장교와 부사관을 20만 명의 대규모 인력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한 그 충원도 어렵고 질적 수준의 보장도 어렵다는 하나의 증거다. 그렇지 않아도 간부인력이 팽대한 한국군의 구조 속에서 중간계급인 대위·소령·중령과 중·상사가 더 늘어나게 되면 군의 조직구조나 인력구조가 방만해지고 효율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병의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첨단장비를 더 많이 도입해야 되고 이 첨단무기를 다루는 부사관을 더 증원해야 한다는 사고도 기계적 사고다. 첨단 무기장비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곧 우리 군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무기장비의 양도 성능도 아니다. 무기장비의 양과 성능으로 따지면 과잉투자 상태다. 우리 군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첨단무기를 늘리고 부사관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병의 고르고 합당한 대우, 장병의 교육 및 훈련 수준, 장비의 정비 수준, 지휘관의 훌륭한 지도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데 50만이라는 대병력을 유지하는 속에서는 이런 질적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병력 감축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서도 불가피

- 저출산으로 20세 남자 인구가 2017년 35만 명에서 2022년 이후 22~25만 명으로 급감하고 그에 따라 2023년 이후 현역 자원이 연평균 2~3만 명 부족할 것이란 전

망이다. 국방부는 현역판정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인다고 하지만 이는 미봉책이며 소수 정예군화 방침과 안 맞는다. 따라서 병력을 50만 명에서 25~20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 ⑥ 병 봉급 인상 위해 장교 인건비 대폭 삭감해야

- 국방부는 병 봉급을 2024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병장 기준 월 676,1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병 인건비 인상을 위해서는 9,000억 원(병 인건비 2021년 약 2.2조 원, 2025년 3.1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24년에 병 봉급이 2017년 최저임금의 50%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군복무에서 오는 정신적 및 육체적 노동력의 격심한 소모를 회복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상이라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 2021년 기준으로 병 1명의 인건비(평균 661,000원)는 장교의 1인당 인건비(평균 연봉 6,004만 원)의 11.0%, 부사관 인건비(4,579만 원)의 14.4%에 불과하다. 군 병력의 61.9%(2021년 정원기준)를 차지하는 병의 처우를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에 둔 채 우리 군의 질적 발전이나 군의 정예화를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표6> 2021년 국방예산(정부안)의 군인 인건비 비교**

	장교	부사관	병	합계/평균
인건비(억 원)	44,770 (35.2%)	60,012 (47.2%)	22,326 (17.6%)	127,107 (100%)
정원(명)	74,571* (13.7%)	131,046 (24.1%)	337,859 ** (62.2%)	543,476 (100%)
1인당 연 인건비(만 원)	6,004	4,579	661	2339 (평균)
1인당 월 인건비(만 원)	500	382	55	195 (평균)

\*무관 후보생 4,510명 포함 // \*\*상근예비역 포함

- 장교는 병력의 13.7%에 불과하나 그 인건비 비중은 35.2%에 달한다. 이는 장교인건비가 군인 인건비의 최대 압박 요인임을 말해준다. 국방비는 정부재정의 14.1%(2021년)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한국의 복지를 낮은 수준에서 억제하는 주요 요인이다. 국방비를 줄이면서도 병 봉급의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압박이 가장 큰 장교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 ⑦ 군부독재 잔재인 직급 상향 대우 폐지로 형평성 기하고 예산낭비 막아야

-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를 근거로 군인을 일반 공무원에 비해 2직급 상향 대우하는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
- 2020년 군인봉급표의 대령(15호봉) 기본급은 월 6,022,300원이다. 공무원 4급(21호봉)의 경우 기본급은 4,970,100원이다. 같은 과장급인데도 대령은 직급이 ‘2갑’이다. 기본급만 약 월 105만 원, 연 1,260만 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2019년 기준으로 대령은 평균 연봉(수당 포함)이 1억1132만 원(2019 국방통계연보 군인보수현황)이며 공무원 4급(21호봉) 연봉은 약 8,450만 원이다. 대령은 같은 과장급 직급인데도 공무원과 비교해 월평균 224만원, 연 2,682만원을 더 받는다.
- 군인과 공무원의 대우 차이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 지침’(국무총리훈령 제157호, 1980. 7. 29. 제정) 및 총무처 예규 219호(1986. 6. 17.)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은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군사독재시대의 유물이다.
- 군인의 2직급 높은 대우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특수 계급 제도를 부인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군인의 2직급 높은 대우는 같은 직책이라도 군인 신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대한다는 점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헌법 11조 1항에 위배된다. 또 군인 예우지침은 군인을 특수한 신분집단으로 예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11조 2항에 위배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장교인건비 예산 삭감 요구

##### ① 2021회계연도 장성 정원은 375명이 아니라 320명으로 한다

- 2021년도 장성 정원 감축 목표를 정부 안 15명에 47명(국방부 본부 5, 방위사업청

6, 한시조직 4, 부군단장과 부사단장 직위 14, 국방부 직할부대 최소 10, 육군본부 8)을 추가하여 62명으로 늘리고, 장성 정원을 320으로 조정한다. 47명의 추가 감축으로 절약되는 인건비 예산은 54억 1,440만 원이다(2021년 장성 1인 평균연봉은 1억1520만원임). 이는 봉급에 국한되는 비용이고 장성 유지 운영비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절약될 것이다.

## ② 대령과 중령을 위주로 영관장교 정원을 6,259명 줄인다

- 2021년 영관급 장교 정원을 6,259명(대령 265명, 중령 2,475명, 소령 3,519명) 줄인다.
- 2021년 대령 연봉은 1억 1745만원 (2019년 대령 연봉 1억 1,323만 원에 2020년 봉급 인상률 2.8%와 2021년 봉급인상률 0.9%를 적용해 계산), 중령은 1억 371만원(대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 소령은 7천 841만 원(대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이다.
- 6,259명을 줄이면 절약되는 인건비는 5,637억 3,129만원이다.

## ③ 군인 예우 지침 폐기 시, 절약되는 장교 인건비

- 2021년 장교 정원(사관후보생 제외)은 70,061명이다. 군인 예우 지침에 따른 봉급 증가 효과가 월 100만으로 치면 군인 예우 지침을 폐기할 경우, 장교 인건비는 연 700억 원이 절약된다.

## 5. 삭감요구액

- 장교인건비 중 장성 인건비 삭감액 54억 1,440만 원, 영관장교 인건비 삭감액 5,637억 3,129만 원, 각종 특혜 폐기로 인한 700억 원 등 약 6,391억 4,569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

## (14)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8101-882)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2,782,574	2,818,193	35,619	846,000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예산내역

- ① <사업목적>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소요(일반회계 전입금)”
- ② <2021년 예산 산출 근거> 물가상승률과 처우개선 및 인원 증가를 고려한 2020년도 군인연금 지급 소요. 물가상승률(연금인상률) 0.4% 및 처우개선 0.9% 반영. 국가부담금 1조 2,170억 원 및 보전금 1조 6,012억 원(국방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155쪽, 2020. 9.).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군인연금

- 군인연금은 오래 전에 적립금이 소진되어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보전금(국민세금)으로 채워지고 있다. 2021년 군인연금 예산(정부안)대로 하면 군인연금 지급금(3조 5,426억 원)에 대한 국가보전금(1조 6,012억 원) 비율은 45.2%가 된다. 군인연금 수급 당사자도 아닌 일반 국민이 군인연금 지급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는 셈이다.

**<표1>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추이 (단위 : 억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전금	13,431	13,665	14,657	15,100	15,740	15,779	16,012

- 군인연금의 국가재정 압박은 다른 공적 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2021년도 예산(정부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금에 대한 국가보전금 비율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12.5%(국가보전금 2조 3,633억 원/ 연금지급금 18조 8,987억 원)이지만 군인연금은 그 3.6배인 45.2%(국가보전금 1조 6,012억 원/ 연금지급금 3조 5,426억 원)에 이른다.
- 2019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8.75%이며 군인연금의 기여율은 7%로 군인연금 기여율이 더 낮다. 하지만 평균 퇴직연금액은 공무원연금이 월 237만 원인 데 반해 군인연금은 월 272만 원으로 군인연금이 훨씬 많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국방위소관) 분석』, 141쪽, 2020. 8.).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저부담 고급여 체계이며 이것이 국가보전금을 계속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2>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제도 비교 : 2019년 기준**

구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기여율	7%	8.75%
평균기여금(월)	28만원	46만원
평균 퇴직연금액(월)	272만원	237만원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9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국방위소관) 분석』, 141쪽, 2020. 8.)

-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0년 법 개정을 한데 이어 다시 2015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기여금 부담률은 2012년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20년 9%로 점차 오르고 재직기간 당 연금지급률은 2010년 1.9%에서 2016년 1.878%, 2017년 1.856%, 2020년 1.834%로 낮아진다. 반면 군인연금은 2013년 미봉적 개혁에 그쳤고 그 뒤로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고부담·저급여 체계로 바꾸라는 국민의 개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 ② 군인연금의 장기재정 전망과 개혁 필요성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펴낸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2020. 7.)은 현 군인연금 법·제도(기여율 7%, 연금지급률 1.9%)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군인연금의 장기재정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하였다.
- 군인연금은 2020~2090년 사이 수입(보험료, 국가부담 퇴직수당 등)이 연평균 0.8%가 늘지만 지출은 연평균 1.5%가 느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에 따라 재정적자가 2020년 1.7조 원(GDP의 0.1%)에서 2030년 2.5조 원, 2040년 3.4조 원, 2050년 4.2조 원, 2090년 6.7조 원(GDP의 0.16%)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특정연도 연금급여 지출을 해당연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 나눈 값인 부과방식비용률(특정연도 연금급여액을 해당연도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통해서만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보험료를 수준을 측정하는 값)은 2020년 30.9%에서 2030년 36.6%, 2040년 41.8%, 2050년 45.8%, 2090년 55.4%로 높아진다. 2020년 부과방식비용률이 30.9%라는 것은 군인연금 가입자(군인)와 사용자(국가)가 14%포인트(각 7% 보험료를 합계)를 부담하고 그 부족분(차이)에 해당하는 16.9%포인트는 국가가 일반회계(예산)를 통해서 보전해준다는 의미다. 이 국가가 보전해주는 국가보전금의 몫(비율)이 2020년 16.9%에서 2030년 22.6%, 2040년 37.8%, 2050년 31.4%로 커진다.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다.
-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2020년 40.8명에서 2030년 47.1명으로 늘어나고 2040년 53.4명, 2050년 58.2명, 2090년 66.1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군인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가입자(후세대)의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짐을 보여준다.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상응하는 군인연금의 개혁 즉 기여금부담률 인상(7%에서 9%로), 연금지급률 인하(1.9%에서 1.7%로), 유족연금지급률 인하(70%에서 60%로), 기수급자 연금액 한시적 동결(2021~2025년 인상률 0%) 시 군인연금의 재정수지도 전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군인연금은 2030년 6,300억 원, 2040년 8,500억 원, 2050년 1조 2,200억 원의 흑자를 예상하였다. 즉 공무원연금의 2015년 개혁에 준해 군인연금의 기여금부담률을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인하하면 2030년부터는 재정적자가 재정흑자로 반전되어 국가보전금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은 2015년에 제4차 연금개혁을 실행하여 재정건전성이 단기적으로라도 개선된 바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2013년에 제3차 연금개혁을 실행한 이후 제4차 연금개혁은 반영(실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군인연금이) 상대적으로 덜 내고 더 받는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군인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 192쪽)라고 하여 군인연금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 ③ 군인연금의 과도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 • 군인연금의 특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의 잔재

- 군인연금이 만성적인 적자상태인 것은 다른 직역연금에는 없는 특혜구조에 크게 기인한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급기여금 면제(군인연금법 제정 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면서 소급기여금을 면제해 줌), 퇴역 즉시 연금 수급, 전투 종사기간 3배 계산제, 일반 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 등의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다.
- 국방부는 이런 군인연금의 특혜에 대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 수행, 격오지 근무, 짧은 정년, 사회 재취업 곤란 등 군 복무의 특성에 따른 보상이지 특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군인연금에 주어지는, 다른 공적연금에는 없는 특혜들은 군 복무의 특성과는 관련이 없다. 군인들은 현직 때 격오지 수당이나 생명수당 등으로 군복무의 보상을 받는다.
- 군인연금의 특혜는 대부분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군에 대한 시혜차원에서 시행된 것들이다. 이들 특권은 문민통제가 확립되기 이전 군인 우위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은 군인연금을 노동력 상실에 따른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일반적인 연금의 복지적 성격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기반 강화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였던 것이다.
- 군인연금의 특혜는 그 수혜가 고급장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2019년 기준으로 고급장교(현역)는 그 수가 9,906명(정원)으로 군 간부

(대략 18.6만 명)의 5.3%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중령 이상 계급 전역자(28,714명)는 전체 연금수급자(95,281명)의 30.1%나 차지한다. 또 고급장교는 월 연금 250만 원 이상 수혜자(24,393명)의 53.9%를 차지한다(국방부, 『2019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에서 산출).

#### • 전투기간 가산제는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

- 군인연금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4항은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다. 전투가산 부담금은 이 규정에 따라 군인연금 가입자가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였을 경우 그 기간을 3배로 계산하는 제도다.
- <표3>을 보면 전투기간 3배 계산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2016년 653억 원, 2018년 579억 원, 2019년 524억 원, 2021년 460억 원으로 해마다 기여금 부담금의 10% 안팎이다.

<표3> 전투가산금 추이 (단위 : 억 원)

연도		2016	2018	2019	2020	2021
국가부담금	전투가산부담금	653	579	524	498	460
	기여금 부담금	5,775	6,535	6,753	7,107	7,335
	기타 부담금	3,900	3,862	4,261	4,442	4,375
	계	10,328	10,976	11,538	12,047	12,170

(출처 : 평화통일연구소에서 각 년도 국방부 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작성)

-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던 군인들은 매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다.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군인은 65세부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월 32만 원(2020년 기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다. 2020년 참전명예수당(국가보훈처 예산)은 총액이 6,839억 원이다. 군인연금 수급자 중 전투가산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15년 6월 30일 현재 확인 가능한 숫자가 2,878명이다.<sup>2)</sup> 이들 전투가산 혜택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들은 이중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국방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임. 국방부에 따르면 6.25전쟁 및 공비토벌작전 전투가산자, 연금수급 후 사망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현재 보유중인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군인연금 수급자 중 전투가산자로 식별이 가능한 수준에서 파악된 숫자라고 함.

- 전투 종사기간 3배 계산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인에게 지급되었던 은급을 모방한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다.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군국주의 국가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상적 시점에서 생명기간을 전시와 같이 볼 수 없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오광석,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12쪽, 2013) 일본의 경우 패전 뒤 군국주의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이 통합되었고 군인우대제도도 없어졌다.

• 전역 즉시 수급이 외국에서 일반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국방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보다 짧은 정년 설정, 연금은 퇴역 즉시 지급(미국, 프랑스, 대만 등)”(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에 대한 국방부 보도자료, 2013. 3. 27.)한다면서 2013년에 기획재정부 등의 65세 수급개시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전역 즉시 연금수급은 외국의 일반적 사례가 아니다. 스웨덴은 군인을 국가공무원으로 취급하는데 연금지급은 대령 이하는 60세부터, 장성급은 65세부터 지급한다. 일본은 65세가 연금지급 개시연령이다. 이탈리아, 호주는 60세가 연금지급 개시연령이다. ‘전역 즉시’ 지급하던 호주와 영국은 각각 60세와 55세로 지급연령을 늦추었다. 독일은 계급별 정년이 보장된 직업군인(공무원과 같은 신분)은 정년 시(부사관은 55세, 위관급과 소령은 60세, 중령 61세, 대령이상 62세)에 연금이 지급되며 계약 군인(전체병력의 60% 차지)은 군인연금이 65~67세에 지급된다(김영태, 『직업군인의 정년제도에 관한 연구』, 수원대 석사논문, 39쪽, 2012). 프랑스는 최소 복무기간(장교는 27년) 충족 시만 퇴역 직후 연금을 지급하므로 20년 이상 복무 시 퇴역직후 연금을 지급하는 한국과 다르다. 미국은 퇴역 즉시 지급에서 60세 지급으로의 연장을 검토 중이다.

• 전역자의 사회취업 곤란을 이유로 한 ‘전역 즉시 연금지급’은 근거 없어

- 국방부는 ‘전역 즉시 연금 지급’ 제도에 대해서 “짧은 정년으로 대부분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전역”하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군인연금을 노동력 재생산비 개념인 봉급과 노동력 상실에 따른 노후보장개념인 군인연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오류다.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전역한다면 이는 사회 재취업 등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책이다.
-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직업군인 전역자의 재취업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편성

해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5년 이상의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전역 1년 전부터 전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 군인복지기금 예산을 보면 취업활동지원에 149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 내역을 보면 전역 1년 전에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간부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직 기본교육에 5.3억 원, 5년 이상 중장기복무 간부 중 전직 기본교육 수료자 1,260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교육에 7.9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만 34세 이하 청년장병 2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활동 지원사업에는 68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또 국가보훈처 2021년도 예산(정부안)을 보면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126억 원과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33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와 별개로 보훈기금도 2021년 예산(안)에 제대군인지원금 110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 2014~2018년 전역자(5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로 대략 35,000명)의 취업률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57.9%<sup>3)</sup>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률 60.1%(2018년 15세 이상, 통계청 조사)와 비슷하다. 그리고 군인연금의 가입대상자 가운데 생애 최대 지출기라고 하는 45~56세에 퇴직하는 군인은 2019년 퇴직자를 기준으로 할 때 퇴직자(5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 8,505명 중 1,742명으로 1/5(20.5%)에 불과하다. 이런 일부 퇴직자의 이익을 위주로 군인연금의 제도를 설계한다면 군인연금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소수 특권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오명을 자초하는 것이다.

#### ④ 정부는 군인연금 전면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 이채익 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2019년도 결산만 봐도 공무원연금 보전금의 76.5% 수준이었던 군인연금 보전금은 올해(2020년) 공무원연금 보전금의 120%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역전현상은 2015년 연금 개편 때 군인연금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개혁해야 할 과제 아닙니까?”라고 묻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앞으로 향후에도 GDP의 대략 한 0.2% 수준 범위 내에서 국가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국가가 부담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군인의 경우에는 목숨을 담보로 임무수행을 하면서 또 정년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고 조기에 사회

3) 평화통일연구소가 국방부에 2018년 10월 25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다. 이 전역자의 취업 기준은 통계청의 취업기준과 비교해 훨씬 높다. 전역자의 취업기준은 취업을 원하지 않는 전역자라 해도 실업으로 간주된다. 또 통계청은 주당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하지만 전역자 취업률은 월 소득이 2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자를 취업자로 본다. 따라서 전역자 취업률은 통계청의 취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조사된 취업률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에 진출을 해서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되고 하여튼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특수성이 있는 연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국회 국방위 회의록, 14 쪽, 2020. 9. 1.).

- 위 국방장관의 답변은 저부담·고급여로 인해 군인연금의 대규모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매년 1조원이 훨씬 넘는 돈(2021년 1조 6,012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태도로서 군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다. 군인연금의 대규모 적자에 대한 국방책임자로서의 안이한 인식은 군인연금법 제41조1항에 규정된 “급여에 드는 비용을 5년마다 재계산해 재정적 균형을 유지할” 의무를 해태하고 저버리는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41조의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5년에 재정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국가보전금은 2016년 1조 5,906억 원, 2020년 2조 34억 원, 2030년 3조 4,140억 원, 2040년 4조 8,510억 원, 2050년 6조 5,817억 원으로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당연히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41조에 따라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거부하였다. 대신 국방부는 ‘기금 보유 부동산 매각’이나 ‘이자소득 증대’와 같은 미봉책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지엽적인 수입증가책이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15~2020년 사이 국가보전금이 1조 3,431억 원에서 2020년 1조 5,779억 원으로 급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공무원연금은 국가보전금을 산정할 때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수입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기금운용수익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전금은 보험료 수입 등 기금수입에서 연금급여 등 지출을 차감하여 그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군인연금은 기금운용수익을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금운용수익을 수입에 포함시키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국가보전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계산된다. 이 점에서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국가재정의 부담을 덜려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는 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군인연금 수혜자의 반발을 두려워해 사실상 군인연금 개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 5월 국가재정

전략회의 이후 지출 혁신 과제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서 군인연금 개혁을 검토하였으나 그해 8월 10일 선정한 지출 혁신 과제 후보에서 군인연금 개혁을 제외시켰다.

#### ⑤ 군인연금 이렇게 바뀌야 한다

- 공무원연금이 2015년에 기여율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연금액 한시 동결,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등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준해 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9% 이상으로 올리고 연금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 이하로 낮춘다.
-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전역 즉시에서 65세로 늘린다. 군인연금은 도입된 이래 평균 수명이 52세(1960년)에서 2018년 82.7세로 연장되었고 그 결과 25년에서 많으면 35년 넘는 수급기간의 장기화가 초래되고 있다. 장기기간의 수급으로 인한 연금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 정도로 늦춰야 한다.
- 군인연금의 각종 특혜는 군인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폐지되어야 하지만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도 폐지되어야 한다. 전투가산 부담금제도는 폐지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군인연금 개혁은 군 기득권 축소와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더 미룰 수 없는 국방개혁 과제다.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가보전금 절반을 삭감함으로써 군인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국방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 2021년도 전투가산 부담금(460억 원)은 과거 군사독재 잔재 청산, 이중특혜 폐지, 국가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한다.

#### 5. 삭감요구액

- 2021년도 보전금예산 1조 6,012억 원의 절반인 8,006억 원과 전투가산 부담금 460억 원을 합한 8,466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

## (151) 군사시설개선 (5131-302)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371,000	371,000	0	371,000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시설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국방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0. 9.)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2021년도 군사시설개선 예산 편성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편성이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

- 정부는 군사시설개선 사업의 법령상 근거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10차 협정)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이하 10차 이행약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 10차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7조)고 되어있다. 10차 이행약정도 “(10차)특별조치협정의 기간 동안 유효”(제9절)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정부는 상호 서면으로 10차 협정의 연장을 합의한 사실이 없어 10차 협정은 그 유효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국방부 자신도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0. 9.)의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항목에서 “제10차 SMA 유효기간은 ’19년 말 종료되고 제 11차 SMA 협상이 진행 중으로 현시점에서 ’21년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협정과 협정액이 부재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가 10차 특별협정과 이행 약정을 근거로 2021년도 군사시설개선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이며 불법이다.

- 10차 특별협정을 대체하여 2020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아 미체결 상태다.
- 따라서 2021년도 군사시설개선 예산 편성은 법적인 근거에 의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것으로 불법이다.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예산 편성과 이의 국회 제출은 11차 특별협정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정 또는 폐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 54조 1항(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의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
- 이에 국회는 헌법상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행사해 2021년도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② 2020년도 군사건설예산을 불법 집행한 정부의 전횡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다

<표1> 최근 4년간 군사건설 사업비 결산내역 (단위 : 백만 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7	409,739	409,739	76,502	0	0	0	486,241	403,046	98.4	82.9	73,941	9,253
2018	444,231	444,231	73,941	0	0	0	518,172	445,512	100.3	86.0	54,752	17,908
2019	452,671	452,671	54,752	△94,322	0	0	413,101	397,909	87.9	96.3	9,313	5,880
2020	371,000	371,000	9,313	0	0	0	380,313	197,666	53.3	52.0	0	0

- 군사시설개선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표’(『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1357쪽)를 보면 2020년도 군사시설개선 예산(본예산 3,710억 원과 이월액 93억 원)이 1~7월 사이에만 1,977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온다. 만약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0년 말에는 2020년 본예산 3,710억 원도 다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에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2020년 10월 현재도 타결이 안 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군사건설 예산편성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예산편성으로 불법이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편성된 2020년도 군사건설 본 예산을 2020년에 1,884억 원(이월금 93억 원의 집행은 불법은 아님)을 집행한 것 또한 불법이다.

- 국방부는 2020년도 군사건설 사업비 집행액 1,977억 원의 법적인 근거를 묻는 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sup>4)</sup>에 대해서 “현재 지출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현물군사건설 사업 예산은 과거 한미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통해 지급을 약속한 현물군사건설 사업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을 동 협정 제7조<sup>5)</sup>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강변한다. 국방부의 이 답변에 따르면 2020년 1~7월 사이에 집행된 1,977억 원은 8차,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군사건설 사업비 중 ‘집행되지 않은’ 부분(국방부는 이것이 2019년 12월 말 현재 9,079억 원이라고 주장)을 집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그러나 “현물군사건설 사업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을 2020년에 집행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위에서 인용한 ‘최근 4년간 결산표’를 보면 2019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이월액 93억 원이 전부다. 불용액 59억 원이 있지만 이는 미집행액이 아니라 집행이 끝나고 남은 돈으로 국고로 회수되어야 하는 돈이다. 국방 예산 상으로 2019년 말 현재 기준으로 군사시설개선 분야에서 미집행 현물지원분은 93억 원만 있을 뿐이다. 2019년도에 이월된 93억 원을 제외한 1,884억 원은 2020년 본예산 3,710억 원에서 집행한 것이다. 이 점에서 과거 미집행 현물지원분을 집행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 2020년 본예산 3,710억 원에서 1,884억 원을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목적의 사용에 해당한다. 2020년 본예산 3,710억 원은 그 당초 취지가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될 것을 상정해 편성된 것이다. 즉 2020년도 군사건설 본예산 3,710억 원은 ‘과거 한미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4) 평화통일연구소가 2020년 10월 7일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도에 군사건설예산의 집행액(2020년 7월말 현재)이 1977억 원으로 나옵니다. 알다시피 2020년도는 아직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체결되지 않아 예산이 아직 미배정상태이고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예산이 93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 1,883억 원 가량의 집행액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7조는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SMA)』을 통해 지급을 약속한 현물군사건설 사업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을 미국에 보전해 주기 위해 편성된 것이 아니다. 국방부의 『2020년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I)』(2019. 9.)의 군사시설개선 항목 어디를 봐도 과거 협정액보다 덜 집행된 금액(국방부는 이를 '미집행된 현물지원분'이라 부른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20년도 군사시설개선 본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은 없다. 이에 2020년 본예산 가운데 1,884억 원을 국회가 의결한 목적(11차 특별협정 체결에 대비한 예산편성)와 다르게 집행한 것이므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다.

- 국방부가 주장하는 '과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해서 약속한 현물군사건설 사업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이란 사실은 한국이 집행을 해야 할 의무도 이유도 필요도 없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미 집행이 끝난 부분이다. 국방부는 불용액도 '미집행 현물지원분'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불용액은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 국고로 회수되어야 할 돈이다. 군사건설 사업비의 불용액은 2009~2019년 사이에 누적액이 961억 원이다. 이 불용액을 미집행액으로 분류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불용액을 국고로 회수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어기는 것이다.

**<표2> 방위비분담금 및 군사건설비 감액 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감액(전체 항목)	800	900	1335	1203	872	308	152	5570
군사건설비 항목	300	1200	1235	889	756	302	152	4834

- 또 국방부는 소위 '미집행 현물지원분'에 협정액보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발생한 이른바 감액분도 포함시킨다. 그러나 감액분을 미집행 현물지원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협정액보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이유가 협정액대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남기 때문에 애초에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때문이다. 2009~2013년 사이를 보면 군사시설개선 예산은 적게는 315억 원(2009년), 많게는 2,381억 원(2012년)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실제 필요한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예산책정에 대한 우리 국회와 국민의 비판이 거셌음은 당연하다. 이에 한미 당국은 협의를 거쳐 협정액보다 줄여서 예산액을 편성한 것이다. 그렇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군사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은 적은 없다. 불용액이란 집행되고 남은 돈

을 말한다. 그러므로 굳이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었던 부분, 예산 편성을 할 경우 필히 남았을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미집행금이 아니라 불용액으로 보는 것이 맞다. 더욱이 8차 및 9차 특별협정은 이미 그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협정액과 예산액의 차이를 한국이 지금에 와서 미국에 보전해 주어야 할 의무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 약속한 것을 2020년에 이행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대미 굴종에 대한 자기변명이다.

- 미국이 군사건설비에서 불법 축적하고 이를 예금해 올린 이자소득만 최소 3,000억 원 이상이다. 이 돈은 회수해야 할 돈이다. 미국한테 받아야 할 돈은 받을 생각을 안 하면서 줄 의무도 필요도 없는 돈을 예산에서 불법 전용하면서까지 미국에 주는 것은 지나친 굴종이다.
- 10차 협정의 제7조를 근거로 1,977억 원을 집행한 것도 부당하다. 10차 협정은 2019년 한 해에만 적용되는 협정이다. 따라서 2019년에 선정된 어떤 사업이 다년간 지속되는 계속사업에 속한다 하더라도 10차 협정이 끝난 2019년 이후에까지 한국이 이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야 할 책임은 없다. 10차 협정의 제7조는 2019년에 선정된 사업이 그 해 완료되지 않고 이월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한국이 인정한다는 것이지 완성에 필요한 나머지 예산까지 책임을 져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정부안)사업설명자료(Ⅱ-1)』(1375쪽, 2019. 8.)를 보면 ‘2020년도(군사시설개선) 예산안 산출근거’로 “계속사업(3년차 이상) 공사비(14건) 2,456억 원, 계속사업(2019 신규) 공사비(9건) 660억 원, 신규사업(2020 신규사업) 공사비 46억 원, 한 축 건설관리비 103억 원, 현금군사건설비 445억 원(미국에게 현금지급)” 등을 합쳐 3,710억 원이 제시되어 있다. 이 3,710억 원은 별도의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1차)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한국이 미국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11차 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면 2020년도 예산은 집행될 수 없다.
- 정부는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지원분(9,079억 원)’은 다년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설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계속사업비(연부액 잔액)로서, 사업의 진행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0차 협정 검토보고서』, 2019. 3.)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국방부가 주장하는 ‘미집행 현물지원분’이란 사실은 집행이 끝났거나 아니면 애초에 집행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다. 설사 미집행 현물지원분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계속사업비의 특성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미국이 사업 자체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설계지연 또는 변경 등으로 사업 착수 자체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분명히 해둘 것은 어떤 군사건설 사업이 다년간 계속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매년 우리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승인하는 군사건설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될 수 있다.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이를 완성할 때까지 모든 사업비를 다 책임져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 ③ 주한미군이 보유한 쓰고 남은 현금 3,432억 원이면 내년도 군사시설개선 사업비로 충분하다

- 주한미군은 쓰고 남은 현금만 3,432억 원(2018년 12월말)을 보유하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우리 돈 2,880억 원과 4,600만 달러(552억 원, 1달러 1,201원 기준)다.
- 미국은 2002~2008년 사이에 군사건설비에서 모두 합쳐 1조 1,193억 원을 우리 국회와 국민 몰래 빼돌려 축적하였다. 미국은 이렇게 불법 축적한 돈을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사용하였다. 가령 미국은 2014~2016년에 4개의 '특수정보시설'(SCIP)건설에 7,100억 원을 사용하였다(서울신문, 2018. 2. 21.).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현금 2,880억 원은 이런 식으로 쓰고 남아 있는 돈이다. 1조 1,193억 원의 축적과 평택미군기지이전비로의 전용은 국가재정법,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LPP개정협정을 어긴 것으로 불법이다. 따라서 남아있는 2,880억 원은 우리 국고로 회수되어야 마땅하다.
- 달러로 보유한 현금 4,600만 달러(552억 원)는 한국이 군사건설비의 12%(설계감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특별협정 규정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건넨 돈으로 그 중에서 미국이 쓰고 남은 돈 즉, 불용액이다. 이 돈은 불용액이 누적된 것이므로 우리 국고에 돌려주어야 할 돈이지만 미국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는 불용액의 경우 국고로 회수하게 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 미국이 보유한 '미집행현금'(사실상 불용액) 3,423억 원은 내년도 군사건설예산 3,710억 원에 육박한다. 이는 2021년 군사건설 예산을 전액 국회가 삭감한다 해도 2021년도에 예정하는 군사건설 사업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군사시설개선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 ④ 군사건설비가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국방부는 2021년 군사건설비 3,710억 원을 편성하면서 3년차 이상 계속 사업비로 2,363억 원과 2020년 착수 계속공사(미정) 사업비로 789억 원, 2021년 착수 계속 공사비(미정)로 10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 국방부가 구체적인 사업명을 밝히지 않고 있고 또 미정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의 계속공사 가운데는 평택미군기지 군사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그동안 미국은 매해 군사건설비를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비로 전용해왔다. 미국 국방예산 자료(미 국방부, 군사건설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군사건설사업비는 4,659억 원, 4,451억 원, 5,769억 원, 5,844억 원이고 이중에서 평택 미군기지건설에 쓰인 방위비분담금은 각각 165억 원, 2,222억 원, 2,615억 원, 4,416억 원이다. 내년에도 군사건설비 5,222억 원에서 2,278억 원(43.6%)이 평택미군기지건설에 전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건설사업에 쓰는 것은 LPP개정협정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위반이다. 국회는 2007년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때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의 군사건설비 전용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한미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건설비의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비로의 불법적 전용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평택 미군기지건설에 군사건설비의 절반 가까이가 미군기지건설비로 쓰일 것이 예정된 내년도 군사건설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불법적 전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표3> 미군기지 군사건설사업에 대한 한국의 현물 지원 목록**

기지	출처 : 미 국방부 군사건설사업 설명자료(C1)	달러	원(백만 원)
2017년 사업 소개		404,600,000	465,897
CP 탱고	Repair Collective Protection System (집단방호장치 정비)	11,600,000	13,357
평택기지	Duplex Company Operations, (듀플렉스 중대 작전시설)	10,200,000	11,745
	Doppler Very High Frequency Omnidirectional Radio Range Infrastructure (도플러 VCR 기반 시설)	4,100,000	4,721
진해	Upgrade Electrical System Pier 11 (11항구 전기 시스템 개선)	4,600,000	5,297
캠프 무적	Marine Air Ground Task Force Operation Center (해병항공작상 TF 작전본부)	68,000,000	78,302
	Life Support Area Barracks #2 (숙영지역 병영막사 2호)	14,100,000	16,236
오산공군기지	Construct Korea Air Operation Center	160,000,000	184,240
	Air Freight Terminal Facility (항공화물터미널 시설)	40,000,000	46,060
	Construct F-16 Quick Turn Pad (F-16 급발진 패드)	7,500,000	8,636
캠프 캐롤	Sustainment Facilities Upgrade Phase 1-DIA Warehouse (지속시설 개편 1단계 국방군수본부 창고)	74,600,000	85,902
안천특수전사령부	SOCKOR Contingency Operations Center and Barracks	9,900,000	11,400
2018년 사업 소개		385,000,000	445,099

서울공군기지(K-16)	SCF Operations Facility, B-606 (특수작전부대 작전시설 건물 606호)	11,000,000	12,717
평택기지	Vehicle Maintenance Facility and Company Ops Complex (차량정비시설 및 중대지원 시설)	49,500,000	57,227
	8th Army Correctional Facility (마8군 교도소 시설공사)	14,600,000	16,879
	Unaccompanied Enlisted Personnel Housing (독신병사숙소 시설공사)	76,000,000	87,864
	Type I Aircraft Parking Apron	10,000,000	11,561
	Elementary School	42,000,000	48,556
군산공군기지	Construct Airfield Damage Repair Warehouse	6,500,000	7,515
	3rd Generation Hardened Aircraft Shelters, Phases 4&6 (3세대 항공기 엄폐호 시설공사)	132,500,000	153,183
	Upgrade Electrical Distribution System	13,000,000	15,029
오산공군기지	Main Gate Entry (정문 출입통제 시설공사)	13,000,000	15,029
진해	Indoor Training Pool	2,800,000	3,237
캠프 무적	Life Support Area Barracks #3 (숙영지역 막사 시설공사 #3)	14,100,000	16,301
2019년 사업 소계		511,400,000	576,910
캠프캐롤	Upgrade Electrical Distribution, Phase 2	52,000,000	58,661
평택기지	Site Development	7,800,000	8,799
	Air Support Operations Squadron	25,000,000	28,203
	Unaccompanied Enlisted personnel Housing, P2	76,000,000	85,736
	Echelon Above Brigade Engineer Battalion, VMF	123,000,000	138,756
캠프워커	Repair/Replace Sewer Piping System	8,000,000	9,025
진해	Indoor Training Pool	7,400,000	8,348
포항공군기지	Replace Ordnance Storage magazines	87,000,000	98,145
김해공군기지	Airfield Damage Repair Warehouse	7,600,000	8,574
광주공군기지	Airfield Damage Repair Warehouse	7,600,000	8,574
군산공군기지	Explosive Ordnance Disposal Facility	8,000,000	9,025
	Upgrade Flow-Through Fuel System	23,000,000	25,946
오산공군기지	5th Reconnaissance Squadron Aircraft Shelter	12,000,000	13,537
	Airfield Damage Repair Facility	22,000,000	24,818
	Communications HQ Building	45,000,000	50,765
2020년 사업 소계		525,400,000	584,402
수원공군기지	Airfield Damage Repair Warehouse	7,200,000	8,009
캠프 캐롤	Amy Prepositioned Stock-4 Wheeled Vehicle Maintenance Facility	51,000,000	56,727
평택기지	Unaccompanied Enlisted personnel Housing, P1	154,000,000	171,294
	Unaccompanied Enlisted personnel Housing, P2	211,000,000	234,695
	Satellite Communications Facility	32,000,000	35,594
광주공군기지	Hydrant Fuel System	35,000,000	38,931
군산공군기지	Upgrade Electrical Distribution System	14,200,000	15,795
	Dining Facility	21,000,000	23,358
2021년 사업 소계		440,000,000	522,236
수원공군기지	Hydrant Fuel System	24,000,000	28,486
캠프 캐롤	Site Development	49,000,000	58,158
평택기지	Attack Reconnaissance Battalion Hanger	99,000,000	117,503
	Elementary School	58,000,000	68,840
	Hot Refuel Point	35,000,000	41,542
부산기지	Maritime Operation Center	26,000,000	30,859
대구공군기지	AGE Facility and Parking Apron	14,000,000	16,617
군산공군기지	Backup Generator Plant	19,000,000	22,551
오산공군기지	Aircraft Corrosion Control Facility(3단계)	12,000,000	14,243
	Child Development Center	20,000,000	23,738
	Relocate Munitions Storage Area Delta(1단계)	84,000,000	99,700

\* 미 정부환율 적용(2017년 1151.5, 2018년 1156.1, 2019년 1128.1, 2020년 1112.3, 2021년 1186.9)

\* 한글 사업명은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보고서 참고

⑤ 군사시설개선 예산이 사드 기지공사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 2021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S.4049 FY2021 NDDA, 2020. 6. 23.)은 “한국과의 협정에 따라” 캠프 캐롤 기지(성주 사드기지를 가리킴) 개발을 위해 군사건설비(방위비분담금) 4천9백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할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주 사드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쓰는 것은 부지 외에는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한미소파 제5조 위반이다. 따라서 미국 국방부가 우리 돈인 군사건설비를 캠프 캐롤 기지 공사비로 쓰는 예산편성을 한 자체가 불법이다. 2021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이 밝힌 ‘한국과의 협정’이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20년 10월 말 현재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1회계연도 성주 사드기지 건설 예산편성의 근거로 제시한 “한국과의 협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주 사드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쓰는 미국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Projects**

Component	Installation or Location	Project	Amount
Army .....	Camp Carroll .....	Site Development .....	\$49,000,000
Army .....	Camp Humphreys	Attack Reconnaissance Battalion Hangar .....	\$99,000,000
Army .....	Camp Humphreys	Hot Refuel Point .....	\$35,000,000
Navy .....	COMROKFLT Naval Base, Busan .....	Maritime Operations Center .....	\$26,000,000
Air Force .....	Daegu Air Base ..	AGE Facility and Parking Apron .....	\$14,000,000
Air Force .....	Kunsan Air Base	Backup Generator Plant ...	\$19,000,000
Air Force .....	Osan Air Base ....	Aircraft Corrosion Control Facility (Phase 3) .....	\$12,000,000
Air Force .....	Osan Air Base ....	Child Development Center	\$20,000,000
Air Force .....	Osan Air Base ....	Relocate Munitions Storage Area Delta (Phase 1) .....	\$84,000,000
Defense-Wide	Camp Humphreys	Elementary School .....	\$58,000,000

(출처 : 회계연도 2021 미 국방수권법)

- 그러나 2021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성주 사드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쓰는 계획은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든 안 되든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것은 앞서 본 것처럼 2020년 군사건설비 예산을 집행할 법적인 근거(11차 특별협정)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2020년도 군사건설사업 예산

을 편성하고 나아가 이의 집행을 강행한 때문이다. 2021년 방위비분담 군사건설에 산이 삭감되지 않는다면 2021년에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면 체결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미국은 군사건설비를 성주 사드기지에 쓸 것이고 한국 정부는 이를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

- 더구나 성주 사드기지 건설비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는 것이 한미소파 제5조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18년에 이미 방위비분담금(미 측이 보유한 현금)을 사드 성주기지 개발 설계비로 집행한 전례도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작성한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종합보고서”는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 부지)의 기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현금)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설계비용으로 집행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 겉으로는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건설비 전용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회에서 “사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원칙”(2020. 2. 18.)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현재까지 한미 간에 사드 부지 개발과 관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국방부 대변인, 2020. 2. 14.)고 밝히기도 하였다. 2016년 7월 사드배치 결정 직후 한민구 국방장관(당시)은 국회에서 “주한미군의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할 때는 SOFA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라면서 “방위비분담금에서 사드를 위해서 무슨 비용이 들어간 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생각하거나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국회 회의록, 2016. 7. 11.)라고 답변하였다.
-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태도나 입장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한미 간 협상에서는 언제든지 뒤집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은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 한국정부가 그동안 보여 온 무책임하고 굴종적인 태도를 익히 알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이 앞서 말한 주한미군의 ‘연례집행종합보고서’를 인용하여 2018년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설계비 전용 사실을 보도하고 시민사회단체도 그 불법성을 제기하자 우리 국방부는 “설계 감리비 명목의 현금은 미측의 판단 하에 사용되었”(국방부 브리핑, 2020. 2. 20.)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은 관여되지 않은 듯이 발뺌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설계감리비는 미국이 한국과 협의해서 정한 군사건설사업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설계비 전용에 대해서 발뺌하는 듯한 변명은 무책임하고 국민을 속이는 태도다.

- 2021년에 방위비분담금의 성주 사드기지 개발비로의 불법 전용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런 불법적 전용을 막고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개선 예산 전액 삭감은 불가피하다.

**⑥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를 한미 당국이 수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과감한 예산삭감 조치가 필요하다**

-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하였다. 그 부대의견의 핵심내용은 ‘작전지원’ 등 추가항목 신설 불가, 주한미군 경비 전액 부담금지, 쓰고 남은 군수지원 분담금(불용액) 회수,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 사용금지,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비용 부담 금지, 역외 미군장비 정비 지원 폐지 등 6가지다. 이런 국회의 의견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국가재정법, 한미소파 등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너무나 정당하다. 하지만 국회의 이런 정당한 부대의견이 한미 당국에 의해서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10차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제4절 군사건설 8항 가. 사업선정)은 방위비분담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 국방부에 군사건설 5개년 계획 초안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군사건설 사업의 선정과 집행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참여 및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외교부, 10차 협정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보고서, 2019. 4.)고 평가한다. 그러나 미국은 외교부의 이런 평가를 비웃듯이 협정 타결 8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에야 뒤늦게 군사건설 5개년 사업계획안을 한국에 전달하는 등(헤럴드경제, 2020. 4. 17.) 제도개선에 관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국회의 6개 부대의견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제도개선 요구에 불만을 표시하며 11차 협정 타결에 반대하기도 하였다(헤럴드경제, 2020. 4. 17.).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국회의 부대의견이 미국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가령 특정시설 건설을 비한국업체가 맡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회의 부대의견은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것은 특수정보시설(SCIP)의 경우 한국의 접근을 봉쇄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는 평택기지이전사업(국고채무부담행위) 항에서 “평택기지 시설 중 특수정보시설의 건설 책임은 미측에 있으며 한측은 비용을 부담”(1723쪽)한다고 되어 있다. 10차 협정 이행약정도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 비한국업체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이행약정은 미국 정부 또는 미국인, 미국업체에게 영업적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배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업체에게 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방위비분담금이 아닌 자신의 국방예산을 써야 한다.

- 내년도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에 포함된 특수정보시설건설사업의 경우 미국업체가 시공을 맡을 것이 확실하므로 국회는 군사건설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불법부당한 전용을 막아야 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군사시설개선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 2020년도 군사건설 예산이 불법편성되고 이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집행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전횡이 내년에도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주한미군이 보유한 불용액과 불법축적자금 3,432억 원은 내년도 군사건설예산에 육박한다. 추가적으로 미국에 군사건설예산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
- 군사건설비가 불법적으로 평택 미군기지건설이나 성주 사드기지 건설사업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를 한미 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전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군사건설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

#### 5. 삭감요구액

- 군사시설개선 예산 3,71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152) 군수분야 (5131-304)**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167,400	167,400	-	167,400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군수소요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국방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0. 9.)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다**

- 정부는 방위비분담 군수분야 사업의 법령상 근거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10차 협정)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이하 10차 이행약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 10차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7조)고 되어있다. 10차 이행약정도 “(10차)특별조치협정의 기간 동안 유효”(제9절)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정부는 상호 서면으로 10차

협정의 연장을 합의한 사실이 없어 10차 협정은 그 유효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국방부 자신도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0. 9.)의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항목에서 “제10차 SMA 유효기간은 '19년 말 종료되고 제11차 SMA 협상이 진행 중으로 현시점에서 '21년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협정과 배정액이 부재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가 10차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근거로 2021년도 군수분야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이며 불법이다.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예산 편성과 이의 국회 제출은 11차 특별협정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정 또는 폐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 54조 1항(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의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

② 2020년도 본예산에서 627억 원을 불법 집행한 정부의 전횡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군수지원예산 전액 삭감은 불가피하다

<표1> 최근 4년간 군수분야 결산내역표 (단위 : 백만 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7	160,194	160,194	1,017	0	0	0	161,211	134,074	83.7	83.2	21,931	5,206
2018	144,960	144,960	21,931	0	0	0	166,890	140,855	97.2	84.4	23,628	2,408
2019	147,714	147,714	23,628	△15,000	0	0	156,342	145,253	98.3	92.9	9,110	1,979
2020	167,400	167,400	9,110	0	0	0	176,510	62,673	37.4	35.5	0	0

- 국방부가 발행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의 군수분야 항목(1363쪽)을 보면 ‘최근 4년간의 (군수분야) 결산내역표’가 실려 있다. 이 표를 보면 2020년도 군수분야예산 627억 원이 2020년 1~7월 사이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2020년 10월 현재도 타결이 안 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군수분야 예산 편성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예산편성으로 불법이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편성된 2020년도 군수분야 본예산을 2020년에 536억 원(이월금 91억 원은 불법은 아님)을 집행한 것 또한 불법이다.

- 국방부는 2020년도 군수분야 예산 627억 원의 집행 근거를 묻는 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19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19년

말까지 용역, 물품 등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 건을 '20년으로 이월하였고,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미지급액 범위 내에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 “군수분야 미지급액(미집행 현물지원)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른 군수분야 합의액과 실제 편성액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 그러나 앞서 언급한 ‘최근 4년간의 결산내역표’에 의하면 2019년도 예산에서 2020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91억 원뿐이다. 국방부는 이 이월금을 2020년에 집행했으므로 2020년 현재 미집행한 금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91억 원을 제외한 536억 원은 전년도(2019년도)로부터 이월된 금액이 아니며 2020년도 본예산 1,674억 원에서 집행된 것이다. 그러나 본예산 1,674억 원은 미지급금이 아니며 11차 특별협정이 체결될 경우 합의된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다. 이에 “군수분야 미지급액 범위 내에서 집행 중에 있다”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국방부는 2020년도에 본예산 중 536억 원을 애초에 편성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것이다.
- “군수분야 미지급액 범위 내에서 집행 중에 있다”는 국방부 주장이 성립하려면 2020년도 이전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미국에 보전해주기 위해 얼마를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그 명목(취지)으로 국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2019. 9.)의 어디를 봐도 이전에 협정 상 합의한 금액 중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얼마를 편성한다는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2020년도 본예산은 과거 합의액에서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 즉 2020년도 본예산 1,674억 원은 그 전부가 11차 특별협정이 체결될 것을 상정하여 편성된 것임이 분명하다. 또 위에서 인용한 2020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2020년도 본예산 1,674억 원에서 집행된 536억 원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이므로 국가재정법 제45조(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불법이다.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른 군수분야 합의액과 실제 편성액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군수분야 미지급’ 또는 ‘군수분야 미

집행 현물지원분'으로 부르면서 마치 미국에게 추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입장은 명백히 잘못이며 시정되어야 할 입장이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말하는 소위 '군수분야 미지급'이란 사실은 한국이 미국에게 이미 지급을 마친 것이거나 아니면 지급해야 할 의무도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군수분야 '미집행 현물지원분'이란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협정액보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발생한 차이를 일컫는다. 그러나 군수분야 예산을 협정액보다 줄여서 편성한 것을 가지고 마치 한국이 집행해야 할 것을 집행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협정액보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이유가 협정액대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애초에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때문이다. 2009~2013년 사이를 보면 방위비분담 군수분야 예산은 109억 원(2011년), 많게는 726억 원(2009년)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실제 필요한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방위비분담 예산책정에 대한 우리 국회와 국민의 비판이 거셌다. 이에 한미 당국은 협의를 거쳐 협정금액보다 줄여서 예산액을 편성한 것이다. 이 차액(감액분이라 표현하기도 한다)이 2011~2017년 사이에만 5,570억 원(이 중 군수분야는 727억 원)에 이른다.
- 이른바 '감액분'은 예산 편성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미집행' 개념(이는 결산 개념이다)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 감액편성은 한국이 사전에 미국과 협의해서 결정된 것이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가 아니다. 한미는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수분야의 적정한 예산 수준을 협의해서 정하였다. 그리고 감액하여 예산편성했다고 해서 미국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의를 하였거나 군수분야 방위비분담사업(미군탄약관리, 전쟁예비물자 정비, 장비정비 등)이 한미 합의대로 수행되지 못한 적도 없다.
- 8차 및 9차, 10차 특별협정은 이미 그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이를 한국이 지금에 와서 집행을 해야 하거나 미국에 보전해 주어야 할 의무도 없다. 지금까지 군수분야 방위비분담 사업이 한미가 합의한 대로 별 차질 없이 수행되었는데도 과거에 합의한 금액이 일부 예산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을 협정이 종료된 뒤에도 한국이 미국에 보전해 주어야 한다면 이는 우리 국익에 반해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주장이며 주한미군의 주둔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미국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 방위비분담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③ 역외 미군자산 정비 지원 폐지 등에 대한 국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내년도 군수분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2019. 4.) “정부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관련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그동안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지속되어 온 역외 미군자산 정비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다.
- 역외 미군자산 정비지원 폐지 요구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기간(2014~2018년) 주일미군이 보유한 F-15 전투기, HH-60 헬리콥터 등을 보수·정비하는 데 954억 원(연평균 191억 원)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한미소파, 국가재정법(예산의 전용금지, 목적 외 사용금지)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국방부는 2019년에 또다시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와 HH-60 헬기 등의 장비 정비에 135억 원을 지원하였다. 국회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된 것이다. 국방부는 “역외 미군장비 정비 지원은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력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활동”(한겨레, 2020. 5. 26.)이라며 정당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장비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협정이므로 역외미군 장비 정비에 방위비분담금을 쓴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 그리고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은 단순히 방어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한다.
-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간의 이행합의서’(이하 ‘군수분야 이행합의서’)는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 사업의 예외사항으로 실시되어온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군수분야 이행합의서’ 별지 1의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 사업의 항목의 5. 수리 및 정비 용역’은 “양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내에 상시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한미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소유의 항공기 보수 및 정비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군수분야 이행합의서(별지 포함)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 간 약정에 불과하며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따라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군수분야 이행합의서를 근거로 역외 미군장비 정비에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한 것은 불법이다. 불법으로 집행된 비용은 우리 국고로 회수되어야 한다.

- 역외 미군장비 정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세금 지출은 시설과 구역 외 다른 모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한미소파 5조 위반이다.
- 역외 미군장비 정비 지원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재정법 제 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된 방위비분담 예산을 주한미군의 장비가 아닌 해외주둔 미군 장비정비 지원 목적에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국방부가 군수분야 예산을 역외 미군장비 정비에 썼을 것이 거의 틀림없다. 2021년에도 군수분야 예산이 2020년과 똑같이 편성된 것으로 볼 때 이런 불법관행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불법적인 역외 미군장비 정비 지원을 폐지시키기 위해서도 군수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수지원은 종료되어야 한다

- 군수지원 사업은 1970~1980년대 냉전이 한창이던 시대에 미국의 공세적인 대북 군사전략을 군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남북 정상은 종전을 선언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을 향해 나아가기로 합의하였고 북미양국도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로 한만큼 과거 냉전시대의 산물인 군수지원 사업들은 폐지되는 것이 정상이다.

- ‘군수지원 이행합의서’ 별지 2. ‘2019년도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 사업의 자금배정서’는 군수분야의 9개 항목을 지정하고 있다. 이 중 살스케이(SALS-K, 한미단일탄약군수체계), 매그넘(한국 공군 시설 내 미 공군탄약 저장), 전쟁예비물자(WRM) 정비, 미군장비정비 등은 북한을 공격·점령하는 공세적인 대북 군사전략에 입각한 전시 군수지원체계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군수지원금(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기준으로 879억 원에 이르며 전체 군수지원비 1,674억 원의 52.5%를 차지한다.

**<표2> 군수지원 사업 예산내역**

항목	금액(백만원)	비고
살스케이(SALS-K)	23,368	한미단일탄약군수체계
매그넘(MAGNUM)	6,943	미 공군탄약 저장 관리
휘발유 기반 연료, 등유 및 윤활유 분배 및 저장	2,400	
수송 용역	21,508	
수리 및 정비 용역	45,238	미군 무기 정비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0	
기지운영지원의 일부	0	
전쟁예비물자 유지	12,285	전쟁 예비 물자
차량, 장비 및 물자 구입	14,132	
시설의 유지 용역	41,526	
총액	167,400	전시 군수지원 예산 합계 : 약 878억 원

- 살스케이는 미 육군 전용탄약(미 태평양 육군사령부 예비탄약 포함)을 한국군이 저장·관리해주는 것으로 다른 미 동맹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협정이다. 또 살스케이는 한국군 20개 사단의 45일분의 탄약을 전쟁예비탄으로 저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물량의 탄약 비축 의무화는 대북 전면전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은 미국이 자신의 넘쳐나는 잉여탄약을 한국에 반입시키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한국군이 저장·관리하는 미 육군 전용탄이나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 예비탄약은 거기에 우라늄탄이나 지뢰제거용 폭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서 보듯이 그 성격이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탄약이라기보다는 대북 공격전략 이행을 위한 탄약이라 할 수 있다. 살스케이의 근거가 되는 ‘한국 내 재래식 탄약의 보급에 관한 합의각서’는 그 불평등성이나 대북 공세적 성격, 엄청난 탄약물량 비축의 비효율성에 비추어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협정이다.

- 한국군이 미 태평양공군의 탄약을 저장·관리하는 매그넘 또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평등조약이다. 전시 증원되는 미 공군 작전부대가 사용하도록 평시에 한국군이 미 공군 예비탄약을 저장·관리하는 매그넘은 북한 공격과 점령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사업이다. 전쟁예비물자 정비도 전시에 증원되는 미 공군 작전부대가 사용하기 위해 COB(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된 한국군 공군기지 내 저장된 각종 물품을 우리 돈으로 정비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북한 공격 및 점령을 위한 미 군사전략 이행을 군수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다. 장비 정비 사업도 북한과의 전면전 시 증원되는 해외주둔 미군장비 등을 정비해주는 사업으로 이 역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장비에만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위배된다. 살스케이나 매그넘, 전쟁예비물자 정비, 미군 장비 정비 등 네 가지 사업은 특히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 또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바뀐 한반도의 정세에 비추어 당장 폐지되어야 할 사업이다. 대북 공격과 점령 시나리오에 따른 전시지원 사업들에 1,000억 원에 가까운 국민세금을 매년 축내는 것은 낭비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진전을 위협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2021년에 적용할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아직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군수분야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의 침해다.
- 법령상 근거가 없어 불법으로 편성된 2020년도 예산을 627억 원이나 집행한 정부의 전횡을 바로잡아야 한다.
- “군수분야 미지급액 범위 내에서 집행 중에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그동안 한미가 합의한 군수분야사업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한국이 미지급한 금액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이에 이런 근거없는 주장으로 인해 국방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도 군수분야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 해외미군 장비 정비는 방위비분담협정과 한미소파,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

회의 거듭된 시정 요구가 묵살되고 있다. 불법적인 방위비분담 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군수분야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 냉전적이고 대북 공세적인 성격의 군수지원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에 역행하므로 종료되어야 한다.

## 5. 삭감요구액

- 군수분야 예산 1,674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 환경조사 및 치유 (4232-302)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21,679	56,754	35,075	56,754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 ① 사업목적

-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 ② 법령상 근거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
- 문화재보호법 등

#### ③ 예산 내역 (국방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1735쪽, 2020. 9.)

- 기 추진 정화사업 대상기지 정화사업비 연차 배분 : 30,390백만 원  
: 캠프 캐슬(북) 6,190백만 원, 캠프마켓 DRMO 지역 24,200백만 원
- 반환완료 기지 정화사업 설계비 및 정화비 반영 : 12,516만 원  
: 캠프 룡(2,579백만 원), 호비 사격장(1,238백만 원), 캠프마켓 B지역(6,700백만 원), 캠프마켓 빵공장(1,999백만 원)

- 2021년 반환 예상기지 정화사업 착수비(조사 및 설계비) 반영 : 13,848백만 원
- : SOFA 미군기지 반환절차 중 현재 환경협의 중(2020. 6.)인 9개 미군기지 대상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내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의 예산 편성은 법적 근거 없는 불법 편성이다

- 국방부는 2021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의 법적 근거의 하나로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을 들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원인자가 정화책임자로서 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항은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나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는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19년 12월 11일 반환받은 네 곳(캠프마켓, 캠프호비쉐아사격장, 원주캠프이글, 캠프롱)을 비롯하여 내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의 대상인 미군기지들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이자 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가 주한미군이므로 주한미군이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자신의 비용으로 실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방부 사업설명자료(『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를 보면 국방부가 정화책임자로서 환경조사와 치유를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 ①항을 위배한 불법이다.

#### ② 환경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미군기지반환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12월 11일 열린 200차 한미소파합동위원회에서 4곳의 미군기지(캠프마켓, 캠프호비쉐아사격장, 원주캠프이글, 캠프롱)를 즉각 반환받되 오염정화 책임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한다는데 합의하였다고 한다. 또 언론은 정부가 “(반환받은 4곳의) 정화비용을 자체 부담하되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 정화비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연합뉴스, 2019.

12. 11.)이라고 전하고 있다. 캠프마켓, 캠프 룡, 호비사격장의 내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 예산 125억 원 편성은 200차 한미소파합동위 결정(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염원인자 부담이 국제법 원칙이고 우리 국내법(토양환경보전법)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정화비를 부담하기로 한 200차 한미소파합동위 합의는 토양환경보전법과 국제환경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우리의 환경주권을 침해한다.
- 한미소파 제7조(접수국법령 준수)는 미국이 우리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토양환경보전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한미군기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마땅히 져야한다. 그러나 200차 한미소파합동위 결정은 미국이 토양정화에 대한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그 비용부담을 한국에 전가하였다는 점에서 한미소파 제7조 위반이다.
- 위에 인용한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정화비를 사후적으로 미국한테 보상받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비용을 우리 국민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 의지가 실종 상태임을 방증한다.
- 내년도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예산에 관한 국방부의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반환 주한미군기지의 환경 조사 및 치유와 관련된 한미 간 합의 자체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00차 한미소파합동위 합의(결정) 문서가 존재할 것인 바 국회는 그 적법성을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4곳의 미군기지를 즉각 반환받되 ‘오염정화 책임에 대한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부 반환 결정이나 “(반환받은 4곳의) 정화비용을 자체 부담하되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 정화비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정부)방침”은 미국의 오염책임을 묻지 못하고 우리 국민세금으로 정화해주기로 한 굴욕적 합의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언론용 수사에 불과하다. 이미 반환절차가 끝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오염책임을 묻지 못하였는데 무슨 수로 오염(위해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책임을 다시 묻겠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 언론은 “정부가 정화 과정에서 미국의 책임을 밝히는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정화비용 산정 뒤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시해 비용부담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연합뉴스, 2019. 9. 19.)고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대로라면 반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행해진 환경조사와 오염책임 규명이 사실상 엉터리로 진행됐음을 정부가 자인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불분명한 오염위해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정부의 말도 뒷북치기가 아닐 수 없다.
- 결국 이대로라면 2019년 12월 반환받은 미군기지와 지금 반환 절차를 밟는 9개의 미군기지의 경우도 그 동안 54개의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책임을 미국에게 묻지 못하고 그 정화에 소요된 2,200억 원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안은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 분명하다.
- 이에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200차 한미소파합동위 결정(합의)은 폐기되어야 하며 그 에 의거해 편성된 내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예산 전액을 국회는 삭감해야 한다.

### ③ 반환 주한미군기지 오염 평가는 국내법상의 오염 기준 및 오염 평가방식에 입각해야 한다

- 미국(주한미군)이 자신의 오염 책임을 발뺌하는 주요 수단이 이른바 ‘KISE’다. 이 KISE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가리키는 말로 주한미군은 이런 수준의 오염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JTBC 보도(2020. 7. 16.)에 따르면 KISE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미국 입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위험 정도를 등급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껏 기지에 근무했던 장병들에게서 특별히 급박한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며 한국이 제시한 위험 등급화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KISE는 미 국방부가 정한 일방적 기준으로 이를 한국이 따라야 할 의무도 이유도 없다. 한국 정부가 애초에 주한미군의 이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KISE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실책이었다.
- 정부는 소파관련 문서에 미국이 정화책임을 져야 하는 구체적인 오염수치 기준을 명시한다는 구상이며 한·미는 200차 한미소파합동위에서 소파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정이 아니고 개정 가능성에 대한 협의이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로는 개정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 오염 기준과 오염 평가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고 미국이 자신의 일방적 기준을 고집하기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미국과의 오염 기준과 평가 방식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환경주권 차원에서 국내법이 정한 오염 기준치 그리고 오염평가방식이 한미 사이에 합의의 기준점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만약 국내법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라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 또는 미국 국내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참고 될 수는 있을 것이다.
- 문제는 정부가 환경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2020년 11월에 열린 52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 장관은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소파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반환을 위해 환경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 공동성명은 주한미군기지의 신속한 반환이 마치 최대의 이익인양 언급되고 정작 우리 국민의 절실한 요구인 주한미군 기지의 온전한 상태로의 반환과 이를 위한 미국의 환경오염 치유책임 언급은 빠짐으로써 우리의 환경주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반환 주한미군기지 정화비용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50억 달러)를 낮추기 위한 협상수단으로 삼은 것은 환경주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다.
- 또 2019년 8월 30일에 정부는 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현행 한미소파체제로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분담 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미소파에는 미국의 오염 정화 책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될 경우 중재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경향신문, 2019. 9. 28.). NSC의 이 같은 결론은 한미소파 7조의 접수국법령 존중 조항 등을 내세워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책임을 미국에 지우겠다는 의지를 포기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뒤에 숨어서 환경주권을 수호해야 할 자신의 엄중한 국가적 책무를 내팽개쳐버린 참으로 비겁한 태도다. 또 이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극구 비공개하고 미국에게 반환미군기지 정화 책임을 당당히 따지지 못하는 자신의 굴종적인 태도를 한미소파로 가리려는 떳떳하지 못한 태도다. 이렇듯 정부가 환경주권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앞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화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며 3천만 평에 달하는 우

리 땅의 주한미군에 의한 오염은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도 계속될 것이다. 이에 환경주권에 대한 정부의 수호의지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④ 내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통과 의례가 되면 우리는 실제로 1조 5,000억 원이 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 내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 예산 568억 원에는 2021년 반환 예상기지 정화사업 착수비(조사 및 설계비) 138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예산은 환경협약(한미소파 상의 미군기지 반환절차)가 진행 중인(2020년 6월 현재) 9개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한다. 200차 한미소파합동위에서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9개 기지 중에는 용산기지도 포함되어 있다.
- 지금까지 반환받은 54곳의 주한미군기지 중 정화대상 17곳의 환경정화를 위해 국방부가 부담한 돈은 2,200억 원에 달하고 환경부가 부담한 환경조사 예산만 340억 원에 달한다. 국방부가 부담한 미군기지 폐기물 처리비용도 1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내일신문, 2020. 10. 8.). 여기에 국방중기계획(2021~2025)에서 예상하는 정화비용 4,538억 원(국방부, 2021년 국방부 소관 사업설명자료, 1737쪽)을 합치면 7,255억 원이다. 앞으로 캠프 레드클라우드(2,698,080평), 캠프 케이시(3,464,413평), 용산미군기지(765,109평)(이상 미 국방부, FY2018 기지구조보고서 기준) 등 규모가 큰 기지를 포함하여 최소 20여 곳의 정화가 남아있고, 최근 확인된 미군 종교휴양소(RRC) 등 서울의 소규모 반환 예정 기지 4곳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캠프 페이 지나 캠프 시어즈 등 이미 정화가 완료된 반환기지에서도 환경오염이 추가 확인되고 있고 이후 더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고, 용산미군기지 정화비용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한겨레, 2017. 7. 11.)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미군기지 전체 정화비용이 1조 5천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19. 12. 11.)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 이런 정황을 생각하면 2021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종전과 같이 통과 의례적이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미국의 오염책임을 묻는데 대한 기왕의 정부의 소극적이고 굴종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경주권이 지켜질리 만무하며 1조 5천억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그 부담을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⑤ 정화가 끝난 반환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이 추가 확인된 것은 그동안의 환경오염 정화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증거이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예고하는 것이다

- 주한미군한테 2005년과 2009년 각각 반환받아 195억 원과 250억 원의 예산을 각각 들여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정화를 마친 춘천 캠프 페이지와 의정부 캠프 시어즈가 개발을 앞둔 2020년 현재도 오염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 2020년 6월, 캠프 페이지에서는 부지의 깊이 1m 지점에서 비행장 활주로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5cm 두께의 길고 검은 아스콘 띠가 발견됐다. 또 인근 다른 발굴터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모래주머니와 철거하지 않은 케이블 등 각종 폐기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 또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6배가 넘는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춘천시가 캠프 페이지에서 기름 등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토양층을 발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3m 지점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수치가 기준치(kg 당 500mg)를 6배 이상 초과했다. 또 2m 지점의 TPH 수치도 기준치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일보, 2020. 6. 1.).
- 의정부 캠프 시어즈(유류저장소)에서도 환경오염이 확인되었다.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부지에서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에 카드뮴, 비소 등이 검출돼 토양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중부일보, 2020. 10. 19.).
- 캠프 시어즈 부지는 2020년 3월에 민간에 매각됐다. 그러나 환경오염이 확인되면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은 중단되었다.
- 시민공원을 조성하려던 춘천시의 계획과 미래직업체험시설과 아파트 등을 건설하려던 의정부시 민간사업자의 계획도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JTBC, 2020. 10. 15.).
- 캠프 페이지와 캠프 시어즈의 부실 정화는 이들 기지 반환 협상이 환경오염 치유 책임을 미군에게 묻지 못한 채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미국의 무책임한 정화가 용인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이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었으며 추가 정화를 위해 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더욱이 이미 정화를 마친 다른 반환 미군기지도 이 두

사례와 같이 부실정화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캠프 페이지와 캠프 시어즈와 같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도 앞으로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미국의 오염치유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내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예산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의와 캠프 페이지와 캠프 시어즈의 부실 정화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 ⑥ 미국이 해외 미군기지 정화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한미당국은 미군이 해외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한미군 측이 자기의 비용으로 오염을 치유하여 한국 정부에 반환을 완료한 사례가 있다. 용산 아리랑택시 부지(2003. 12. 30.)와 오산 베타사우스 탄약고 부지(2004. 8. 27.)가 바로 그런 사례다.
- 국회 입법조사처가 설훈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주둔미군기지 환경조사, 환경정화비용 부담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9년 7월에 이뤄진 라인-마인기지 이전협상에서 독일은 △독일법에 근거한 환경정화기준을 설정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며 △환경정화를 위한 출입이 무제한 허용되며 △반환 후 확인된 환경파괴도 미국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기지 반환이 이뤄졌다. 이는 NATO소파에 대한 독일보충협정이 한미소파와 다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보충협정은 △독일 국내법 기준에 따른 환경 정화 및 보호기준 △환경오염의 평가, 분석, 복원 비용의 미국 부담 등이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군 연료 및 윤활유, 차량의 소음과 매연방출기준까지 모두 독일환경규정과 교통법규를 따라야 한다(내일신문, 2020. 10. 8.).
- 캐나다의 경우 미국이 환경오염치유 책임이 없는데도 1억 달러를 들여 오염된 미군기지 토양오염을 정화한 사례(1998년)도 있다(박기학,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책임에 대한 법적 시각』, 2011, 23쪽).
- 정부는 우리의 환경법이 반영될 수 있게 한미소파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조사와 치유 문제에 대해 주권국다운 태도

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주권국다운 태도와 입장이란 불평등한 한미소파나 미국의 고압적이고 불법부당한 태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는 것이다. 우선 반환절차 중 환경협약의 단계에 있는 용산미군기지부터 환경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내법에 근거하여 미국의 책임을 묻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의 경우에도 환경조사가 낱빔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는 내년도 환경 조사 및 치유 예산을 과감히 삭감함으로써 정부가 환경주권 수호 의지를 회복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4곳 미군기지(캠프마켓, 캠프이글, 캠프롱, 캠프호비쉐아사격장)를 반환받되 한국이 정화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200차 한미소파합동위 결정은 미국의 오염정화 책임을 한국에 떠넘긴 굴욕적인 합의이자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 합의로서 폐기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 내년도 환경 조사 및 치유 예산도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 국방부를 정화책임자로 하는 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은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로 하여금 토양정화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10조의 4. 1항)을 위반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 또한 불법이다.
-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오염 기준인 KISE를 대신해 우리 국내 환경법에 규정된 오염 기준 및 평가방식에 입각해 반환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내법을 기준으로 주한미군과의 환경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는 과감하게 내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 정화가 완료된 반환미군기지에서도 환경오염이 추가 확인되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예고되고 있는 바, 이를 막기 위해서도 2021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한국이 1조 5천억 원 이상의 정화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막대한 국익 훼손을 막기 위해서 2021년 환경조사 및 치유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 5. 삭감요구액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 환경조사 및 치유 예산 567억 5,4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166) 군사정보활동 (7131-302) : 특수활동비**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119,405	114,476	4,929	114,476

**2. 국방부가 주장하는 ‘군사정보활동’ 사업의 목적**

- ① 군사정보활동의 사업목적은 “군사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 및 생산”(국방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0. 9.)으로 되어있다.
- ② 2021 회계연도 군사정보활동 예산(안)은 1,145억 원으로 그 전액이 특수활동비에 해당한다. 이 특수활동비는 전액이 국가정보원이 통제하는, 국가정보원 예산이다.
- ③ 2018년까지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특수활동비가 있었으나 2019 회계연도 부터는 국방부가 자체 편성한 특수활동비는 없다. 참고로 2021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정부안)은 국방부 1,145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2,379억 원(국정원 본예산 제외)으로 2020년 2,508억 원보다 129억 원이 감소했다.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특수활동비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제12조는 군사독재 정권시대의 유물로 폐지되어야 할 독소조항이다
- 국가정보원법 제3조①항 및 제12조③항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

- 국방부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에서 ‘군사정보활동’(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사업의 명칭) 사업의 법적 근거로 국정원법 제3조 ①항을 들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항은 국정원 직무의 하나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는 기획·조정의 대상기관으로 통일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와 기타 정보 및 보안 업무관련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법 제3조 ①항이 국정원이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내 여러 기관의 하나일 뿐임에도 국가 전체의 정보정책 수립과 판단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독소조항이다. 국정원법 제3조(직무)①항은 군사독재정권 시대(1963년) 제정된 중앙정보부법 제2조(직무)①항5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을 그대로 본 딴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현 국정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는 바로 이 국정원법 제3조①항에 의거해 다른 부처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림으로써 독재정권의 수족역할을 하였고 온갖 전횡을 저질렀다. 이 국정원법 제3조①항은 여전히 정보기관의 전횡을 허용하고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할 규정이다. 그리고 설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을 맡는 부처는 정보기관이 아닌 다른 부처나 기관이어야 바람직하다. 또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이 곧 국정원의 타부처 특수활동비 편성까지를 허용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 타부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정원의 예산편성권

- 국정원법 제12조 ③항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법 제3조나 제12조 ③항은 국정원이 다른 부처나 기관의 정보예산 편성권까지 갖게 함으로써 마치 다른 부처의 상급기관처럼 행세하면서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이다.
- 국정원법 제12조③항은 중앙정보부법 제10조(예산회계)④항 “정보부의 예산은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조문을 그대로 본 딴 것이다. 이 중앙정보부법 2조(직무)①항 5 및 제10조(예산회계)④항은 1988년 제정된 안기부법에 그대로 이어지고 다시 2014년 제정된 국정원법에도 계승된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는 바로 이 규정을 근거로 타부처에

자신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를 이용해 타부처를 통제하고 전횡을 휘둘렀다.

- 타부처에 자신의 예산을 편성해 전횡을 휘두른 국정원의 전횡은 2012년 대선 및 총선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여 정치공작을 수행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국정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중 상당부분을 지원하여 왔다. 국정원은 2012년에 사이버사령부 예산 170억 원 가운데 45억 원을, 2013년에는 253억 원 예산 중 57억 원을, 2014년에는 261억 원 중 60억 원을, 2016년에는 226억 원 중 36억 원을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하였다. 이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의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정치댓글활동에 쓰였다. 그런가 하면 김기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당시)은 2010~2012년 사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공작을 수행하면서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25만원씩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경향신문 2017. 8. 30.). 타부처에 자신의 예산을 편성해 이를 정권유지를 위해 이용하는 악습과 관행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 국정원법 제12조 ③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의 예산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재정법(31조 등)에 위배된다.
-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 정권유지 수단이었던 국가정보원법 제3조①항 및 제12조③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그에 근거해 편성된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 ② 특수활동비 편성은 지출을 구조 조정해 감염병 위기극복과 그린뉴딜에 쏟는다는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 방침에 어긋난다

-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지출을 구조 조정해 10조 원을 줄이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로 억제해 감염병 위기 극복과 그린뉴딜에 쏟기로 하였다(연합뉴스, 2020. 9. 1.). 정부는 지출을 삭감할 중심적인 예산으로 공무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관행적인 보조사업을 꼽고 있다.
- 내년 특수활동비(1,145억 원)는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지출 구조조정의 취지에 맞다.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그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깜깜이 예산이다. 또 최근 4년간 결산 내역표(국방부, 위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018년과 2019년에 집행되고 남았거나 집행되지 않은 특수활동비(이월액과

불용액)가 각각 382억 원과 524억 원에 달한다. 이월과 불용 사유는 사업계획 취소 및 집행잔액, 상업외자 구매사업 지불시기 미도래 등으로 되어있다. 특수활동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로 한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어긋나고 국회와 국민의 통제와 감시에서 벗어나 그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

- 특수활동비는 정부에 의해서 예산의 한 비목으로 편성되지만 다른 비목의 예산과 달리 세부 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계상되고 집행 방법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집행내용 확인서의 구비까지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되며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0쪽, 2020. 5.)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정부의 예산편성 책임부서가 각 부처에 대해서 내리는 하나의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법률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 국가재정법(제29조)은 “기획재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지침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등을 어겨서는 안 된다.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임의적으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국회의 예산결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원칙으로서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과정에의 국민 참여 제고 노력’, ‘국민부담의 최소화’ 등의 의무(제16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산의 원칙(제56조)을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이런 예산 및 결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은 국회의 예결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 기획재정부의 지침대로 하면 국회는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사업 목적과 세부적인 예산 내역, 산출근거 등을 알 수 없고 또 결산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 특수활동비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정부의 지속적 편성으로 관행이 되었다. 특수활동비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횡행하던 ‘판공비’(품위유지비)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런 관행이 폐지되지 않고 ‘특수활동비’로 이름을 바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라져야 한다.

#### ④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는 독소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특수활동비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하고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다.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국정원의 이름으로 편성된 사업비)과 타 부처 예산에 끼워 넣은 예산(특수활동비 비목으로 분류됨), 예비비(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 받음)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국정원법 제12조③항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되어있다. 예비비는 그 근거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두고 있다.

<표1> 국정원 예산에 관한 각종 특례규정

	일반 국가기관	국가정보원(본예산)
예산안 제출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예산요구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총액 제출 ·예산안과 관련된 첨부서류 제출 면제
예산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정보위원회 심사 ·예결위 심사 생략 (정보위원회 심사를 예결위 심사로 간주)
회계검사	·감사원의 회계 감사	·국가정보원장이 회계감사

(출처 : 김정도,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통제』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58쪽, 2007)

-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12조(예산회계)②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정부에)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총액만 제출하고 있으며 산출내역 등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정원법 제12조③항은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또 국정원법 제12조⑤항은 국회정보위의 비공개 국정원 예산 심의와 예산내역의 공개 및 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정원법 제14조는 국정원장의 책임 하에 소관 예산의 회계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단계부터 결산에 대한 회계검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재정당국과 회계감독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국정원의 예산이 재정당국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은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재정당국(기획재정부 등) 통제 바깥에 있다”(2017. 10. 31.)는 김동연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도 확인된다.

-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이 국정원법에 의해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다. 국정원법 제12조④항은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국회정보위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제12조⑤항은 국정원예산 심사를 국회정보위에서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3조①항은 국회(정보위 등)로부터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는 경우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회정보위에서도 사실은 총액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현실입니다”라는 권은희 의원의 하소연(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 공청회, 2015. 10. 27.)은 국정원이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를 무기로 국회정보위의 예산 심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증언한다.
-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는 예산의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의 원칙을 정한 국가재정법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감시와 감독기관의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주며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권을 침해한다. 국정원의 불법과 전횡, 횡포의 근간이 되는 이들 조항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 ⑤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특수활동비의 법적 근거로 보아서는 안 된다

- 국정원법 제12조가 특수활동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가 국정원의 예산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특수활동비의 법적인 근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들 법조항들이 국정원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예산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면 국가재정법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면 사용처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초법적 특권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국정원법 제12조④항은 국회정보위에 국정원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은 현행 국정원법 제12조②항에 의거해 예산의 세부내역이나 산출내역,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 정보위에는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법 제12조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할 의무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국정원이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을 내세워 국회에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증빙서류 없이 예산을 멋대로 사용한다면 이는 불법이다.

#### ⑥ 국정원의 안보비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 특수활동비와 다를 바 없다

- 문재인 정부는 2019 회계연도 국정원 본 예산 전체를 특수활동비(230목)로 분류하던 기존 관행을 바꿔 ‘안보비’(270목)로 분류하였다. 안보비 비목은 이번에 국가정보원의 본 예산에 적용하기 위해 새로 설정된 것이다. 참고로 국정원 안보비는 2018년 4,631억 원, 2019년 5,610억 원, 2020년 6,895억 원이었고 2021년 7,460억 원으로 는다.
- 기획재정부는 ‘안보비’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활동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해당기관 운영(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8쪽, 2020. 5.)에 적용된다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안보비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활동 세부 내역 보호를 위해 직·간접 소요 경비를 통합하여 총액으로 요구”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안보비의 편성범위, 편성절차, 편성 방식 등 편성 전반에 대한 자체 지침과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요구”한다는 등의 세부지침을 지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국정원의 본예산을 특수활동비 대신 안보비라는 새로운 비목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법 제3조와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의 독소조항들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특수활동비에 내재한 본질적 문제점들은 안보비 비목 하에서도 그대로 계속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 안보비의 세부지침으로 ‘총액 요구’나 ‘해당 중앙관서 장의 자체 지침과 편성계획 수립’, ‘자체적인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등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안보비 역시

기본 틀에서 특수활동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었든 안보비로 편성되었든 그 예산이 국정원법 제3조와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한 그 예산이 정당한 목적과 사업에 쓰이는지,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낭비되지 않는지, 불법적으로 집행되는 일은 없는지 등을 우리 국민이 감시·통제할 수 없다. 이에 국회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을 회복하고 국정원의 예산에 대한 국민 통제와 감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국방부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 4. 결론 및 건의

- 특수활동비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제12조는 구시대의 유물로 폐지되어야 한다.
-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편성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공무원 특수활동비 등의 지출을 구조 조정해 감염병 위기 극복과 그린뉴딜에 쏟는다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어긋난다.
-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편성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그 사업목적과 산출내역 등이 투명하지 않는 등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
- 내년도 국방예산 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국방부를 부당하게 통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의 온갖 불법과 비리, 전횡, 횡포의 근거가 되어 온 국정원법 제12조 및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삭감되어야 한다.

#### 5. 삭감요구액

- 군사정보활동 : 특수활동비 예산 1,145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7) 신속대응사단 (육군 부대개편 4차) (4131-476)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341	26,546	26,205	26,546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0년 7월 말		2021년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요구안
공정사단 본부/A여단	502	-	15,341
공정여단 B여단	1,638	-	11,205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거 '19년부터 미래 부대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육군 부대 개편 4차 사업 중 '공정사단 본부/A여단 개편'과 '공정여단 B여단 개편'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임
- ② (공정사단 본부/A여단 개편) 신속 대응사단 본부 및 예하여단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임.
- ③ (공정여단 B여단 개편) 신속 대응사단의 예하부대를 창설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임.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 ① 신속대응사단은 신 공세적 작전개념에 따른 것이나, 이는 국방개혁 2.0에서 이미 폐기된 개념임

- 국방부가 밝힌 공정사단 본부/A여단 개편 및 공정여단 B여단 개편은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 공세적 작전개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2018년 7월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폐기된 개념이다.
-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취임 직후(2017. 7.) “전쟁이 일어나면 공수부대, 해병대, 기계화 부대를 동원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하는 내용의 ‘공세적 작전개념’을 세우라고 지시했다.”(중앙일보, 2018. 7. 27.)
- 이에 국방부는 2018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주도의 신작전 수행개념 수립 계획을 밝혔다. 신작전수행개념이란 “(북한이) 수도권 장사정포 공격과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적 도발 시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대량응징보복)를 기반으로 주요표적을 신속히 제압하고, ‘공세적인 종심 기동전투’로 조기에 전환해 ‘최단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승을 달성하는” 개념으로 “공세적 종심 기동전투는 유사시 첨단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개념의 전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한 공세기동부대(공정/기동/상륙부대)도 신설한다고 밝혔다(뉴시스, 2018. 1. 19.).
- 하지만 2018년 7월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보고하며 공세적인 신작전개념 대신 입체기동작전 개념을 보고했다. 군은 “신 공세적 작전개념은 대화 무드 속에 북한을 자극할 우려 등 때문에 폐기됐다고 봐도 된다”며 “입체기동작전에는 평양 조기점령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18. 7. 28.).
- 그런데도 국방부와 군은 이미 폐기된 신 공세적 작전개념 수행을 위한 신속대응사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폐기한 신 공세적 작전개념이 입체기동작전이라는 개념으로 군과 작전 차원에서 엄연히 살아있는 것이다. 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 ‘신 공세적 작전개념’이 폐기되었다면 이 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군

차원의 부대 창설과 관련 전력 도입 계획도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② 대북 침투 공중강습과 중심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공정사단”은 남북 갈등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위배된다

- 국방부는 신속대응사단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올해 말까지 운용개념 연구와 교리 정립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2019. 4. 16.).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단 창설준비단은 현재 신속대응사단의 운용개념을 연구하고 교리를 정립”(이데일리, 2020. 1. 5.)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국방부와 군이 교리와 운용개념도 정립하지 않은 채 먼저 부대를 창설하고 전력을 도입하는,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부대 창설 및 전력 도입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도 송진현 2군단 작전계획처장은 “기동군단은 합참의 미래 합동작전 기본개념인 입체중심기동작전 수행을 위한 비선형 입체기동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공격과 방어 동시 작전으로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조기 공세 이전으로 합동전력, 헬기·기갑·공병전력, 드론봇 등을 활용하여 적 방어지대를 신속히 극복하여 중심기동 여건을 조성하며, 기동부대에 의한 비선형 입체기동을 실시해 적 중심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전개념에 의해 신속대응사단을 편성하고, 아파치 헬기 등 기동성 있는 무기체계를 전력화하여 완전성을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지상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른 지상군 발전방안연구』, 『군사연구 제147호』, 2019. 6. 30.)라고 주장함으로써 입체기동작전이 초공세적인 ‘신 공세적 작전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솔직히 밝히고 있다
- 각종 언론 보도도 신속대응사단이 신 공세적 작전개념 수행을 위한 부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신속대응사단은 항공기로 최단시간에 적진 중심지역에 깊숙이 침투해 요충지 점령과 핵심부대 격멸 등 전략·전술 작전을 수행”하며 “개전 초기에 적 심장부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침투시켜 치명타를 가해 조기에 전쟁을 종결짓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이데일리, 2019. 4. 16.).
- 이에 신속대응사단 신설을 위해 해체된 2사단의 사단 사령부와 2작사 예하 201 특공여단(경북 경산 및 경남 사천에 주둔)과 203 특공여단(세종시 및 충남 계룡 주둔)을 배속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데일리, 2019. 4. 16.). 만약 신속대응사단이 7기동군단 예하로 배속된다면 대북 선봉부대로서 7기동군단의

임무와 성격으로 볼 때 공정부대인 신속대응사단의 임무와 성격은 더욱 공세성을 띠게 될 것이다.

- 신 공세적 작전개념과 신속대응사단은 수천 명의 아군의 생명을 불모로 잡는 매우 무모한 작전이다. 개전 초기에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구축해 놓은 북한 영공을 헬기나 수송기로 침투한다는 것은 제아무리 전투기나 공격용 헬기의 엄호를 전제로 하더라도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다. 또한 신 공세적 작전개념이든 입체기동 작전이든 이 개념들은 미군의 1980년대 공지전 전술/전략과 이를 이어받은 한국군의 입체고속기동작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육군 중심의 낡은 작전개념이다. 그런데 만약 남한이 F-35나 고성능 전투기를 투입해 북한 방공망을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 신속기동부대를 침투시킨다면 이때는 이미 개전 초기에 침투하는 신속기동부대로서의 임무와 성격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 이에 “(한국군 단독 공수작전에 대해) 미군은 이 작전 초기 피해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중앙일보, 2018. 7. 27.)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군의 평가는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통제에서 벗어나 독자 작전을 벌이거나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는 한국군이 미군과 협의/합의 없이 독자 작전을 벌일 것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수송수단의 제한과 북한 대공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초공세적 작전개념을 수행하는 부대를 창설하는 것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위배된다.

### ③ 초공세적 작전개념을 수행하는 신속대응사단 신설은 군비증강을 불러온다

- 신속대응사단의 창설은 육군의 몸집 불리기를 위한 무기도입과 개발의 구실이 되고 있다. “(수리온을) 2020년대 초반 4차 양산 이후 추가로 130여 대를 생산해 새로 창설될 신속대응사단에 배치하거나 신속대응사단에 운용할 공수장갑차 또는 경전차 도입·개발, 최신행 CH-47F 치누크 수송헬기, AH-64E 대형 공격헬기 추가 도입” 등 신속대응사단의 운용에 따른 전력증강비는 수조 원을 상회한다. 수리온 130대의 가격만 3조 원을 넘어선다.

- 이렇듯 신 공세적 작전개념 수행을 위한 기동부대 창설은 이미 창설된 해병대 상륙여단 등을 포함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국방예산과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 ④ 신속대응사단 창설은 군구조 슬림화를 지향하는 국방개혁에 역행한다

- 국방개혁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방만한 군 구조를 슬림화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군대를 만드는 데 있다. 국방부가 1, 3군 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작사를 창설하고, 군단과 사단의 수를 줄이는 등 군 조직 개편에 나서는 것도 같은 이유다.
- 그러나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여전히 전체 병력감축의 목표를 50만 대군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이에 연동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장성과 고급장교 정원의 의미 있는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 등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
- 초공세적 입체기동작전 수행을 앞세운 신속대응사단 창설도 부대와 장성 및 영관급 직위를 보장하기 위한 육군의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군구조 슬림화와 국방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신속대응사단은 작전계획 5015보다 더 공세적인 신 공세적 작전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로 남북 갈등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 신속대응사단은 육군의 장성과 고급장교의 직위 보장, 과도한 관련 장비 도입으로 육군의 몸짓을 불리고 국방개혁에 역행하며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에 신속대응사단은 폐기되어야 한다.

#### 5. 삭감요구액

- 신속대응사단 (육군 부대개편 4차) 예산 265억 4,6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대형수송함-Ⅱ (LPX-Ⅱ) (2332-340)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신규	-	10,108	-	10,108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북한의 군사적 위협,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와 공세적 해양활동 증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요인의 다양화와 범위 확대에 대비(『2019년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 2019. 10. 10.)
- ② 단거리 수직이착륙전투기 운용으로 해상기동부대 작전능력이 향상되고 상륙헬기 운용으로 상륙작전 능력이 증대되는 등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경항공모함(대형수송함-Ⅱ) 확보(2020년 해군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 ③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 및 분쟁 예상 해역의 분쟁 억제, 재해·재난 시 재외국민 보호(국방부, 『‘21-’25 국방중기계획』, 2020. 8. 9.)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으로서 항공모함은 불필요한 과잉 전력
  - 남한의 해군력은 함정 240척에 총 25만 5천 톤, 북한의 해군력은 함정 800척에 총 11만 1천 톤으로, 함정 총 톤수에서 남한은 북한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일본방위백서 2020』, 90쪽).

- 한국군은 이미 상륙 병력 700여 명과 승조원 330여 명, 헬기 7대, 수륙양용차 7대, 전차 6대, 야포 3문, 공기부양상륙정(LCAC) 2대, 트럭 10대 등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운영하거나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주변국들이 사실상 경항공모함으로 부르고 있는 이들 대형수송함은 유사시 대북 공세적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전력들이다.
- 그러나 이들 대형수송함들이 한국군의 공세적 작전개념에 따라 개전 초기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등의 사거리 안에서 공세적 상륙작전을 감행할 경우 해·공군의 엄호 사격 등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항공모함, 그것도 만재배수량이 4만 톤이나 되는 중항공모함을 도입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해군의 과도한 욕심에 불과하다. 한반도 유사시 중항공모함이라고 해도 종심작전 등 대북 공세작전을 전개하는 데서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을 누릴 수 없다. 유사시 전투기나 헬기 등의 각종 항공기들이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것보다 지상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조건에서 항공모함은 전투서열의 후순위에 놓이거나 아예 불필요할 수도 있다. 중항공모함이 12~20대의 전투기와 8~10대의 공격헬기를 탑재하더라도 상륙지원을 위해 휴전선 이북 동해나 서해에서 작전할 경우 북한의 해안포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체 방어가 어렵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사거리를 벗어난 공해상이나 휴전선 이남 해상에서 작전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이미 상륙부대 수송이라는 군사적 효용성은 발휘할 수 없게 되며, 탑재 전투기에 의한 상륙지원 역시 1개 지상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의 지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해 군사적 효용성은 사라진다.
- 이 같은 지적에 해군은 "전투기 운용기지를 육상과 해상으로 다양화하는 것은 방어와 군사력 운용의 융통성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경항공모함은 표적에 대한 기습효과, 전투기 작전반경, 신속한 재무장, 출격 횟수(소티) 등의 전투기 운용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제공하게 될 것"(해군, 2020. 10. 5.)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투기 운용기지를 해상으로 다양화한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방사포 공격으로 남한의 지상 공군기지와 전투기 등이 무력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으로 남한 공군기지 전체와 전투기가 무력화될 정도로 파괴될 가능성은 없다.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가 남한의 공군기지 공격에 모든 전력을 쏟아 부을 수 없으며, 설령 북한이 그런 무모한 전력 운용을 하더라도 기능 불능에 빠질 남한 공군기지와 손상될 전투기는 항모라는 해상기지가 필요할

만큼 절대 다수일 수 없다. 공군기지나 격납고가 자체 방호력을 갖추고 있고 손상된 기능을 바로 복구할 태세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에 산재한 고속도로 등이 대체 활주로 기능을 제공한다. 만약 모든 기지와 전투기가 불능화되어 항모와 여기에 탑재된 전투기만 생존하게 되더라도 20여 기 안팎의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 그것도 지상 배치 전투기에 비해 작전능력이 훨씬 뒤지는 항모 탑재기로는 북한 전투기와의 교전에서 절대 열세에 놓이게 되어 생존이 별 의미가 없게 된다. 항모 탑재 전투기는 공중전에 필수적인 기관포조차 장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상 배치 전투기가 무력화되는 반면 항공모함 배치 전투기가 생존한다는 전제는 항모가 그만큼 후방에서 작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전에 상륙 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항모의 군사적 효용성을 거듭 부정하는 것이다.

설령 남한이 제공권을 장악한 이후 북한 해안포나 미사일 등의 사거리를 벗어난 곳에서 작전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이때도 남한 중부 지역 이북에 위치한 공군기지나 대체 활주로를 활용하는 것이 급유나 출격 횟수 등에서 더 유리하다.

- 이에 다코다 우리 미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2019. 10. 3.)에서 “한반도 동·서해의 과밀한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대형 상륙함(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는 매우 나쁜 접근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 ②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과 분쟁 예상 해역의 분쟁 억제라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먼저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우리 스스로 주변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무모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남한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가 남한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도 없다.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식민지라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현재에 무매개적으로 적용해 안보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군비증강을 꾀하려는 군의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 현재 일본의 해군력은 함정 140척에 50만 톤, 중국의 해군력은 함정 750척에 197만 톤으로 총 톤수에서 일본은 남한의 약 2배이며, 중국은 남한의 약 7.7배, 일본의 약 4배에 달해 상호 간 전력 균형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일본방위백서 2020』, 43쪽).
- 그러나 한중일 간 이러한 해군력 격차가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거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을 훼손할 만큼 큰 위협으로 되지는 않는다. 일본이나 중국이

남한을 무력침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남한은 자체 전력으로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 중국은 육·해·공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승수를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 인도 등 16여 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무력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 침공할 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특히 일본은 공군력에서 한국과 비슷하고 지상군 전력에서는 남한에 크게 뒤지기 때문에 해군력 우위만을 갖고 남한을 무력 침략할 수 없으며, 남한이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일본의 침략을 격퇴시킬 수 있다.

- 한편 군은 독도나 이어도, 7광구 등의 분쟁 수역 수호를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나 이어도, 7광구 등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여기에 항모를 파견하는 것은 정치,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수역을 군사적 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명박 정권 때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자는 일각의 주장보다도 더 대결적이고 호전적인 주장이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자초하는 것이다. 독도는 엄연히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일본이 이를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아무리 한일관계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현 국제질서 속에서는 상정하기 어렵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중국이 이어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한다면 이는 오히려 패착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패배하게 된다. 군이 군사적 유, 불리를 따지자면 독도와 이어도의 육지와 의 거리와 육지 군사시설 위치에 의거할 때 독도는 일본이 유리하며, 이어도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유리하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 분쟁이든 그 해결을 군사력에 기대서는 안 되며, 해결되지도 않는다.

### ③ 해상교통로 보호 및 초국적, 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위협에 대처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중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해군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맹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군이 해양 위협의 사례로 드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해상수송로의 위협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해상수송로를 위협 당하면 생명줄이 끊긴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 미국은 해상수송로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중국을 상정한다. 그러나 중국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스스로 해상수송로를 차단할 까닭이 없다. 실제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해상수송로가 차단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중국이 해상수송로를 차단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때는 한국 해군이 제아무리 원양해군을 양성해도 이를 둘

파할 수 없다. 국방비가 우리의 4배를 상회하는 중국을 상대로 해군력의 격차를 만회할 수 없으며 한국이 대중 우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중국은 연근해에서 싸우는 반면 한국 해군은 원정에 나서기 때문에 승산이 전혀 없다. 한미일 연합해군도 육지의 화력과 군수 지원을 받는 중국 해군을 상대로 승리하기 어렵다.

- 이에 해상교통로 차단 등 해상분쟁이 발생하면 “외교로 풀어야 한다”(『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 2020. 10. 15.)는 신원식 의원의 주장은 지극히 정당하다.
  - 사실 해양수송로란 캐스퍼 와인버거 전 미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 미국의 해상 패권을 위한 ‘침략 경로’다. 한 마디로 미국의 패권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냉전 하에서는 ‘소련 위협론’을 앞세워 1980년대 일본열도 ‘1000해리 해양수송로 방어’를 명분으로 한 일본 열도 ‘불침 항모론’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관철시킨 바 있으며, 냉전 해체 이후로는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소위 남방 해상수송로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제주도 ‘불침 전함론’과 한국 해군력 증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 한편 국가에 의한 차단도 어려운 해상수송로를 비국가 행위자가 차단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해군전력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 군이 말하는 소위 전방위 위협이라는 것이 미중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남중국해와 호르무즈에서의 미·중, 미·이란 간 군사적 대결을 포함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방위 위협이란 미국의 위협이지 한국의 위협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직면한 위협이 결코 같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소위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과 호르무즈 대이란 군사 연합체 구성에 한국군의 파병을 요구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미국의 위협을 한국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국익에 한국의 국익을 복속시키는 대미 굴종적 자세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 그런데도 한국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이나 대이란 군사 연합체 구성에 한국군을 파병하게 되면 한·중, 한·이란 관계는 군사적으로 적국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항공모함과 같은 초공세 전력까지 파병한다면 한·중, 한·이란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파탄을 맞게 된다.
- 이밖에도 항공모함이라는 초공세전력으로 대응할 전방위 위협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주변국 본토에 해병대를 상륙시키고 전투기로 공격하기 위해 투입할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함정들과 수상전이나 대잠전을 수행하기 위해 중항공모함을 투입할 것인가?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해상 교전이 발생해 이에 대응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항공모함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다. 거리, 시간, 보유 척수의 제약과 항공모함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낮다. 투입하더라도 패배로 귀결된다. 항모 전력과 해군전력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 이렇듯 남한 해군의 그 어떤 한반도 역외 (성분) 작전에도 항공모함을 파견해 대응해야 하는 경우 수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로지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 항모 전단의 한 부분으로 동원되어 힘자랑하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실로 클 것이며 결코 우리의 정책적 선택지로 될 수는 없다.

#### ④ 필연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동원될 뿐

- 중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들을 잇달아 도입하고 연이어 기동부대를 창설하게 되면 이 전력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에 동원되는 것은 필연이다. 미 국방부가 펴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 6. 1.)는 중국을 인도·태평양의 지역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구축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국가로, 러시아를 되살아난 악성국가로, 북한을 핵과 생화학무기, 재래식 전력 증강으로 생존을 보장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량국가로 지목함으로써 과거 부시 행정부를 능가하는 대결적 자세와 패권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와 포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따른 중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도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미·일·인·호 중심의 콰드와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결합시킨 콰드 플러스라는 지역 다자 집단 방위체 구축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 2기든 바이든 정권하에서든 대중 군사적 대결을 노골화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집단방위체 구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그 중심 전력을 이루게 될 것이다.
-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부터 항공모함 루스벨트호, 니미츠호가 7함대 작전구역에 전진 배치됨으로써 로널드 레이건호까지 더해 현재 중국 해군력

견제를 목적으로 3척의 항모가 7함대 작전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 해군의 최신 항모급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스텔스 수송 상륙함인 ‘뉴올리언스함’도 현재 7함대 작전구역에 배치되어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지난 9월 16일, ‘퓨처 포워드’(Future Forward)라고 명명한 해군력 증강계획을 발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군의 ‘우선 전장’으로 글로벌 무역의 허브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의 중심지”라고 규정하고 “함대의 함정을 현재 293척에서 355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미국방부, 2020. 9. 16.). 지난 10월 6일에는 오는 2045년까지 미 해군이 500척 이상의 유·무인함정을 보유, 운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2045년 전력 계획’(Battle Force 2045)을 발표하여 오는 2045년까지 최대 80척의 핵잠수함 전력을 운영하고 아메리카급 경항모 6척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해군력 증강을 선도하고 있다.

- 이에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해군력을 동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미국이) 도련선을 앞세워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홀로 맞서기는 어렵다”면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조선 역량을 갖고 있고, 선진화된 해군력을 가진 한국 등에 (남중국해의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등에 대한)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VOA, 2019. 10. 10.).
- 또한 뉴욕 주립대 에릭 프렌츠 교수도 최근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 해군의 F-35B를 포함한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STOVL) 항공기 발진이 가능한 LPX-II 항공모함 개발 계획은 이 방향에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0. 10. 12.).
- 이에 한국 해군은 화답이라도 하듯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구현 되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2019. 10. 10.)이라며 신남방정책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복속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대형 수상함과 중형 잠수함 도입에 이어 중항공모함 도입으로 대양 작전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 ⑤ 미국 방어에 동원될 위험성도 있어

- 중항공모함은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다. 미중, 북미 유사시 항모 전단의 전투

기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이용해 중국과 북한의 ICBM 시설을 타격함으로써 미국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 항공모함 전단의 KDX- I , II , III 구축함, KDDX 사업으로 도입될 구축함, 장보고-III 잠수함 등은 수직발사관 등을 탑재해 사거리 500~800km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1,500km의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다. 한국 수역에서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과 중국 동북 연안과 내륙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전력은 북·미, 중·미 유사시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ICBM과 이동발사대에 대한 선제타격에 나설 수도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고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한국의 중항공모함 탑재 전투기나 함정들의 함대지 공격능력은 미국에게 아주 긴요한 공세전력으로 될 것이다. 대북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군이 남아나는 전력을 주변국, 특히 중국을 상대로 행사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이른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현 한미연합 위기관리 적용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2차(2020. 10.)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은 11항에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미국 유사시’를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북·미, 미·중 간 유사시 한국군은 미국을 공격할 중국과 북한을 공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한국군의 1차 공격 대상은 북·중 ICBM 기지나 이동발사대가 될 것이다. 특히 장보고 III Batch-I , II , III 사업으로 도입될 중형 잠수함의 잠항능력과 탄도미사일 능력은 미국 방어를 위한 대중, 대북 공격에서 북·중이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큰 위협으로 될 것이다. 더구나 중형 잠수함은 일정 규모의 특수부대를 탑승시킬 공간도 확보하고 있어 은밀 기동한 후 북·중 전략시설에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한국군은 태평양상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발사 직후의 중국과 북한의 ICBM을 이지스 요격미사일로 요격하는 작전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은 북·미 유사시는 물론 미·중 유사시에도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 한미 위기관리 각서 개정과 한국군의 미국 방어 가담, 이를 위한 항공모함과 대형 수상함, 중형 잠수함 도입 등은 한국을 한반도, 동북아, 아태지역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국가적, 민족적 절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 한편 한국이 미국 방어에 개입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적용 범위)와 관련 미 상원의 양해사항에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관련 양해사항은 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을 미국 방어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짓이다.
- 중항공모함 사업, 장보고 III Batch- I, II, III 사업, KDX III Batch- I, II 사업, KDDX 사업 등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 수행과 미국 방어에 동원될 자산들로 남한 방어에는 효용성이 거의 없는 무기체계들이며, 예산낭비는 물론 국가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할 뿐이어서 폐기 시기가 빠를수록 국익에 도움이 된다.

#### ⑥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예산낭비가 우려됨

- 해군은 지난 10월 15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항모 자체의 건조 비용이 약 2조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군의 2015년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용역 보고서』는 경항모 획득비용을 약 3.1조로 밝히고 있다. 군은 또한 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20대를, 상륙기동(공격)헬기 8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들 함재기 도입 비용만 약 5조 원에 달한다(일본의 F-35B 도입 비용과 한국의 마린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여기에 더해 항모의 운영유지비는 10년에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데일리, 2020. 8. 12.).
- 항공모함 도입은 2~3척으로 확대되기 마련이다. 정비, 고장 사고 시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항모 3척을 도입하게 되면 무려 21조~24조 가량이 소요된다.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국방예산 증액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2~3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해야 할 만큼 한국이 처한 안보 환경적 요구는 없다.
- 한국이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승격시키기 위해 해군전력을 증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 기동함대의 모함이 될 대형수송함-Ⅱ를 비롯해 장보고

Ⅲ Batch-I, Ⅱ, Ⅲ 사업, KDX-3 Batch-I, Ⅱ 사업이나 KDDX 사업 등 대형 수상함과 중형 잠수함들과 수송함 등을 도입하고, 여기에 탑재할 무기체계의 도입 비용까지 추가하면 2개 기동전단을 새로 편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30조 원을 훨씬 상회한다.

- 신원식 의원도 항공모함 도입에 따른 항모전단 구성과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유지비를 합쳐 “30~40조 원이 들어가게 된다”고 추산(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2020. 8. 25.) 한 바 있으며 군사치에 가깝다.
-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는 실로 숨 가쁘다. 한국 명목 GDP는 일본 명목 GDP의 1/3에도 못 미치는 데 반해 국방예산은 일본과 비슷하다. 또한 한국 명목 GDP는 중국 명목 GDP의 1/8에도 못 미치는 데 반해 국방예산은 중국의 1/4을 넘는다. GDP 대비 국방예산의 비율이 일본은 1% 안팎, 중국은 1.9% 정도인 데 반해 한국은 2.7%나 된다. 재래식 전력에서 대북 압도적 우위를 누리면서도 소위 주변국 위협을 앞세워 숨 가쁘게 재래식 전력 증강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재래식 전력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은 더욱 더 핵능력 강화에 나서게 된다.
- 이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재래식 전력증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하며,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은 그 전제로 된다. 이를 위해 5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예산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의 안보 환경에서 군사적 효용성도 별로 없고,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인 중항공모함, 대형 수상함, 중형 잠수함 도입 계획부터 폐기해 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군축으로 나가야 한다.

#### ⑦ 항공모함 도입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될 뿐, 오히려 군축에 나서야

- 한국은 이미 독도함과 마라도함 등 2척의 헬기 항공모함을 운영하거나 전력화를 앞두고 있고, 세 번째 항공모함 도입에 착수했다. 동북아에서 항공모함 도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해군력 증강과 항공모함 등의 전진 배치에 맞서 중국이 선도하고 일본과 한국이 그 뒤를 따르면서 항공모함 등 해군력을 둘러싼 한·중·일 간 군비경쟁은 날로 가열되고 있다.
-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남·북·중·일 간 해군력 격차는 상호 간 전력균형과 군비경쟁

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군비경쟁은 각국, 특히 경제적 규모가 작은 한국과 특히 북한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출혈을 강제하게 될 것이다.

- 다수의 언론들은 ‘대형수송함-Ⅱ’가 ‘항공모함’으로 공식화되고, 도입 시기가 앞당겨진 배경에는 일본의 경함모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조선일보, 2020. 8. 5.).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2020. 9. 25.)에서 항공모함을 향후 방위체계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

그러나 군비증강에 따른 군사적 대결의 격화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냉전 지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대결을 더욱 고착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게 된다.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가 사문화되는 것이다. 이에 압도적인 대북 해군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중함모 도입 등으로 동북아 해군력 경쟁에 가세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군전력 증강 사업을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생명을 불어넣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한국군의 중항공모함 도입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역행하게 된다. 또한 한국군이 미일 연합군의 뒤를 따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수행에 동원되고 심지어는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북한과의 원치 않는 전쟁을 치르게 됨으로써 국가적, 민족적 절멸을 가져올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한편 항공모함 등 천문학적 액수의 해군 전력 도입, 유지비용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생계유지비를 비롯한 사회복지비를 잠식하고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실로 막대하다. 이에 중항공모함 도입 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 5. 삭감요구액

- 대형수송함-Ⅱ(LPX-Ⅱ) 예산 101억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3-22) 장보고-Ⅲ Batch-Ⅱ (2332-323)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132,614	250,836	118,222	250,836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자주국방 구현을 위하여 장보고-Ⅲ Batch-Ⅰ 보다 성능이 향상된 중형 잠수함을 국내 설계 및 건조 기술로 확보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 ① 자주국방 구현이라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북한 잠수함 위협의 허구성

- 남북 잠수함 전력은 양적 비교에서는 24 대 73으로 북한이 훨씬 우위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은 다수가 300톤 미만의 잠수정으로, 잠수함은 상어급-Ⅱ(320t) 2척, 로미오급(1,800t) 20척과 신포급(2,000t) 1척으로 남한 보유 잠수함 19척과 큰 차이가 없다.
-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 잠수함의 주력인 로미오급은 1973년 중국으로부터 2척을 들여와 1976~1995년에 자체 건조한 구형 잠수함이다. 반면 남한의 주력함인 214급(1,800t) 잠수함은 2006~2017년에 진수된 최신예 잠수함이며, 1993~2000년에 취역한 209급(1,200t) 잠수함도 비교적 신형이다.
- 남한의 214급 잠수함은 수중 최대속도가 20노트로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의 수중

최대속도 13노트보다 훨씬 빠르다. 또한 214급 잠수함은 공기불요추진(AIP) 체계를 탑재해 약 2주간 잠항(4노트 운항 시)할 수 있고 소음이 작아 정숙한 반면, 로미오급은 하루에 2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스노클링을 해야 하고 소음이 매우 커 작전 수행능력에서 214급이 로미오급보다 훨씬 뛰어나다. 또한 214급은 21인치 어뢰 16기를 장착할 수 있는 반면에 로미오급은 21인치 어뢰 8기를 장착할 수 있어 무장력에서도 214급이 로미오급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214급 잠수함은 사거리 1,000km 이상의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3을 장착할 수 있으며, 209급 잠수함도 잠대지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북한 잠수함의 잠대지 공격능력은 신포급(2,000t) 1척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위키백과 등 발췌 인용).

**<표1> 남북 잠수함 수량 비교**

	북한		남한	
	구분	수량	구분	수량
<b>SSB</b>	신포-C급(2000톤)	1	장보고-Ⅲ급(3000톤)	1
<b>SSK</b>	로미오급(1800톤)	20	209급 (장보고-I)(1200톤)	9
			214급(장보고-Ⅱ) (1800톤)	9
<b>SSC</b>	상어급-Ⅰ(280톤)	30	코스모스(70톤) 돌고래(150톤)	6
	상어급-Ⅱ(320톤)	2		
<b>SSW</b>	유고급(110톤)	11		
	연어급(130톤)	12		

(출처 : 『2019년 밀리터리 밸런스』, 『Jane's fighting ships 2018~9』 등)

- 북한 잠수함들은 소음이 매우 크고-로미오급은 ‘바다의 경운기’로 불림-잠수 깊이가 낮아 동해나 서해로 남하할 경우 남한의 초계함, 호위함, P-3C, P-3CK, P-8A(도입 중), 대잠초계기, 수중 집음장치 등에 의해 대부분 탐지해 낼 수 있다. 아울러 북한 잠수함은 잠수 깊이가 얕아 폭뢰 등의 공격에 취약하며 탐지 장비의 성능도 낮고 무장력도 떨어져서 작전 능력이 매우 제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방일보, 2014. 3. 30.).
- 이렇듯 북한 잠수함 위협론은 근거 없는 과장된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북한 잠수함 위협론을 부풀려 3,000~4,000톤급 잠수함을 9척이나 도입하는 국방부의 계획은 과도한 전력 증강이다. 그것도 SLBM을 6~10기나 장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도입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전력 증강으로 주변국들과의 위험한 군비경쟁만 초래할 뿐이다.

- 더욱이 3,000~4,000톤 중형 잠수함으로 209급 잠수함을 대체한다는 것은 기동이 어렵고 피탐되기 쉬워 한반도 해역에서는 오히려 작전에 큰 취약성을 드러내게 된다.

<표2> 남북 잠수함 무장능력 비교

북한		남한	
구분	무장능력	구분	무장능력
신포-C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극성 1호(KN-11, SLBM) 1기</li> <li>• 533mm 어뢰발사관(4문)</li> </ul>	안창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상어 중어뢰(사거리 50km)</li> <li>• K-731 백상어 중어뢰(사거리 30km, 탄두중량 370kg)</li> <li>• SUT Mod 2 중어뢰(사거리 28km, 탄두중량 260kg)</li> <li>• UGM 84 하푼 잠대함미사일 (사거리 140km, 탄두중량 220kg)</li> <li>• 현무 3C 잠대지 순항미사일 (사거리 1500km)</li> <li>• 현무 2B 잠대지 탄도미사일 (사거리 500km)</li> </ul>
로미오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33mm 어뢰발사관(8문)</li> <li>• SEAT-60 중어뢰 14기 (사거리 13~15km, 탄두중량 300~400kg)</li> </ul>	21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33mm 발사관(8문)</li> <li>• K-731 백상어 중어뢰(사거리 30km, 탄두중량 370kg)</li> <li>• SUT Mod 2 중어뢰(사거리 28km, 탄두중량 260kg)</li> <li>• UGM 84 하푼 잠대함미사일 (사거리 140km, 탄두중량 220kg)</li> <li>• 해성-3 잠대지 순항미사일 (사거리 1000km)</li> </ul>
		20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33mm 발사관(8문)</li> <li>• K-731 백상어 중어뢰(사거리 30km, 탄두중량 370kg)</li> <li>• SUT Mod 2 중어뢰(사거리 28km, 탄두중량 260kg)</li> <li>• UGM 84 하푼</li> </ul>

			대함미사일(사거리 140km, 탄두중량 220kg)
상어급-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33mm 어뢰발사관(4문)</li> <li>• 기뢰 16기</li> </ul>		

(출처 : 『Jane's fighting ships 2018』 등)

## ② 핵잠수함(SSN) 도입 군불 지피기 : 핵잠수함 도입 근거의 허구성

- 국방부는 지난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건조될 장보고-III Batch-III (3,600~4,000t) 잠수함에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청와대도 미국에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을 타진하는 등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북극성 1, 2, 3 SLBM 발사에 성공하고 신포급 잠수함을 개량해 발사관을 늘리거나 신포급보다 큰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미확인된 북한의 움직임을 명분삼아 이를 탐지·추적·공격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SSN)을 보유해야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SSB)을 탐지·추적·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해서 디젤 잠수함보다 탐지·추적·공격 능력이 우수한 것이 아니며, 디젤 추진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보다 탐지·추적·공격 능력에서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혹자는 유사시 북한 SLBM 잠수함이 출항해 잠항에 들어가면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SLBM 잠수함 모기지 인근 수중에서 은밀하게 매복해 있다가 잠항 전에 탐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소음과 선체가 커 매복 중 상대에게 먼저 탐지되어 피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최신 핵잠수함은 소음 크기를 줄여 디젤 잠수함과 비슷한 수준(100dB 안팎)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건조할 핵잠수함이 미국 핵잠수함과 같은 수준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214급 잠수함 초도함인 손원일함이 작전요구성능의 소음 수준을 40dB이나 초과해 인도되었음에도 한국 기술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전례에 비춰 볼 때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인 핵잠수함의 소음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희망과 가정에 불과하다. 미국 핵잠수함 로스엔젤레스급은 소음 수준이 120dB로 핵잠수함 중에서는 가장 낮으나 209급 잠수함의 110~120dB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 러시아의 핵잠수함 중 소음이 가장 적은 델타 III 잠수함도 125dB, 중국의 한급 잠수함은 140dB이나 되어 100km 밖에서도 피탐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SLBM 잠수함 기지를 감시하기 위한 매복 임무는 핵잠수함보다 소음과 크기가 작아 피탐 가능성이 적은 209급 잠수함이 제격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찰과 특수전 병력수송을 주된 임무로 하는 50여 척의 북한 소형 잠수함/잠수정의 정탐을 피해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정현균, 『점증하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자체 건조 준비는?』, 2016. 10. 중 발췌 인용).

- 더욱이 잠수함의 탐지범위가 80km(디젤)~160km(핵잠) 정도에 불과하다는 미 해군 자료(중앙일보, 2020. 8. 16.)에 의거한다면 북한 잠수함 모기지에 대한 정탐을 위해서는 남한 잠수함이 북한 영해 안에서 매복해야 하며, 이 경우 피탐, 격침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또한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험적 작전으로 결코 감행해서는 안 되는 작전이다.
- 추적 시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스노클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대체로 소음이 더 크고 회전 반경도 커서 상대에게 탐지되기 쉽고 추적에 불리한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핵잠수함이 추적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수중 작전으로 한정해서 보면 동·서·남해에서의 작전은 항행 거리가 짧고 작전 기간도 짧아 최대 2주 잠항 능력을 갖는 장보고-Ⅱ라면 얼마든지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지·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굳이 핵잠수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SLBM 대응 핵추진 잠수함 도입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일 예비역 해군 대령, 2016. 10. 12. 등 참조).
- 한편 혹자는 북한 SLBM 잠수함이 남한 남해 남쪽 태평양 쪽으로 진출해 남한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남한의 KAMD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도입해 북한 SLBM 잠수함을 추적,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지상 탄도미사일을 600여 기나 보유하고 있어 굳이 SLBM으로 남한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 설령 SLBM 잠수함을 이용해 남한을 공격하더라도 러시아와 가까운 동해에서 작전할 가능성이 크며, 굳이 한미일 대잠 전력의 추적으로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운 남해 또는 태평양까지 진출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 또한 북한의 SLBM 잠수함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미일의 남한 지원과 대북 공격에 대한 억제와 견제를 전략적 목표로 삼는 전략무기다. 따라서 남한 공격에 SLBM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이 미일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를 상실해 버리는 전략적, 작전적 오류를 범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

- 남한의 핵잠수함 건조는 한미원자력협정, 핵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모두 위배된다.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른 농축우라늄(20% 미만)의 군사적 사용 금지와 NPT에 따른 핵폭발장치 보유 금지, 국제원자력협정의 핵물질 이전과 이의 군사적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면서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할 이점이 없다. 또한 핵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가의 정치적, 안보적 목표 추구를 어렵게 한다.
- 결국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엄청난 반대급부를 제공할 때만 가능하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등. 그러나 결과는 대미 종속 가중과 국익 훼손뿐이다.
-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이는 필히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장보고-III 잠수함 도입에 7~8,000억 원의 비용이 든 반면 동급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는 거의 2배의 비용이 든다. 건조 실패나 안전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견제와 국제사회의 비판도 감수해야 하는 등 정치, 외교적 부담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도 굳이 해군이 원자력 추진 중형 잠수함 도입에 매달리는 것은 소위 대양해군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 ③ 다양한 해양위협에 대처라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김영삼 정부에 의해 차기 중형 잠수함 소요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그 명분은 냉전 해체로 “북한이 붕괴할 경우, 붕괴된 북한 지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 가능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중국의 강력한 대량살상무기 전력에 대응하여 최소한 중국의 핵심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격능력을 갖춰 중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수단을 구축하고자 했”으며, 이렇게 해서 선택된 것이 “바로 중국의 선제타격이 불가능한 잠수함 탑재형 순항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밀리터리 리뷰, 2011. 6. 21.).
- 그러나 상호 불가침 등을 천명한 한중 외교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과 수교(1992년), 그리고 한중 경제관계가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시기에, 그것도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관적 희망에 기댄 김영삼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정세 판단하에 사생아처럼 태어난 것이 다름 아닌 차기 중형 잠수함 소요제기였다.
- 따라서 차기 중형 잠수함 사업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감행하며 건재를 과시하고

한중 경제협력도 본궤도에 오른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오히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함께 원양해군 건설을 강조하며 대형 수상함과 중형 잠수함 등 기동전단 구축에 힘을 실었다. 원양해군 건설 주장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힘을 잃는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발발하고 북한 핵실험이 계속되자 대북 위협 우선 대응 주장에 힘을 실어 원양해군 건설 주장은 잠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경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등 대형 함정 건조와 원양 해군론은 다시 적극적인 힘을 받고 있다.

- 해군은 2025년까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는 먼 바다로 작전 영역을 확대해 해상교통로와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 활동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한 전력의 하나로 장보고-Ⅲ 중형 잠수함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그러나 다양한 해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형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해군 주장은 근거 없는 맹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군이 해양위협의 사례로 드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해상수송로의 위협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해상수송로를 위협 당하면 생명줄이 끊긴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 해상수송로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미국은 중국을 상정한다. 그러나 중국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스스로 해상수송로를 차단할 까닭이 없다. 만약 중국이 해상수송로 차단에 나선다고 가정한다면 이때는 한국 해군이 제아무리 원양해군을 양성해도 이를 돌파할 수 없다. 국방비가 우리의 4배에 달하는 중국을 상대로 해군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으며 설령 우리가 대중 우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연안과 근해에서 싸우는 반면 한국 해군은 원정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승산이 없다. 한미일 연합 해군이 대응해도 육지의 화력 지원을 받는 중국 해군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어렵다.
- 사실 해양수송로란 캐스퍼 와인버거 전 미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 미국의 해상 패권을 위한 ‘침략 경로’다. 한 마디로 미국의 패권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는 허구로 밝혀진 ‘소련 위협론’을 명분으로 1980년대 일본열도 ‘불침 항모론’과 ‘1000해리 해양수송로 방어’를 위한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관철시킨 바 있으며, 지금은 ‘중국 위협론’을 명분 삼아 소위 제주도 ‘불침 전함론’과 제주도 남방 해상

수송로 보호를 위한 한국 해군력 증강과 동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해상수송로 차단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상함과 잠수함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209/214급 잠수함이면 원양작전을 수행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
- 군은 또한 독도나 이어도 수호를 위해 대형 함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나 이어도는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군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며 해결되지도 않는다. 일본이 독도를, 중국이 이어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한다면 오히려 패착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패배하게 된다. 독도와 이어도의 육지와 거리의 육지 군사시설 위치에 따른 군사적 유, 불리를 굳이 따지자면 독도는 일본이 유리하며, 이어도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유리하다.
- 이렇듯 해양수송로 위협을 구실로 한 원양해군 건설과 항공모함을 비롯한 대형 수상함과 중형 잠수함 도입 주장은 해양위협을 왜곡, 과장한 무책임한 주장이다.

#### ④ 대중 포위와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에 동원될 위험성

- 그런데도 해군이 대형 수상함과 중형 잠수함을 잇달아 도입하고 기동부대를 창설하게 되면 이들 전력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되리라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미 국방부가 펴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 6. 1.)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구축하려는 수정주의 국가 또는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국가로, 러시아를 되살아난 악성국가로, 북한을 핵과 생화학무기 및 재래식 전력 증강으로 생존을 보장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량국가로 지목함으로써 과거 부시 행정부의 소위 ‘악의 축’ 개념을 되살리는 한편 부시 행정부를 능가하는 대결적 자세와 패권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와 포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따른 중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도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미·일·인·호 중심의 콰드와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결합시킨 콰드 플러스라는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집단방위체 구축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 2기 혹은 바이든 정권하에서도 대중 군사적 대결을 노골화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집단방위체 구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그 중심 전력을 이루게 될 것이다.

-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미국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해군력을 동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미국이) 도련선을 앞세워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홀로 맞서기는 어렵다.”면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조선 역량을 갖고 있고, 선진화된 해군력을 가진 한국 등에 (남중국해의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등에 대한)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VOA, 2019. 10. 10.).
- 이에 한국 해군은 화답이라도 하듯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구현 되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라며 신남방정책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복속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대형 함정과 중형 잠수함 도입으로 기동부대 및 해역함대의 작전능력 강화와 주요 핵심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 ⑤ 미국 방어에 동원될 위험성

- 중형 잠수함은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다. 미중, 북미 유사시 중형 잠수함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이용해 중국과 북한의 ICBM 시설을 타격함으로써 미국 방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장보고-Ⅲ 잠수함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1,500km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한국 수역에서 발사하더라도 중국의 동북부 연안과 내륙의 ICBM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면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개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북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군이 남아나는 전력을 주변국, 특히 중국을 상대로 행사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이른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현 한미연합 위기관리 적용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2차(2020. 10.)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11항에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했다.”는 내용이 반영됨으로써 각서를 개정해 미국 유사 포함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북미, 미중

간 유사시 한국군은 미국을 공격할 중국과 북한을 공격해야 할 상황에 물리게 된다. 이때 한국군의 1차 공격 대상은 북중 ICBM 기지나 이동발사대가 될 것이다. 장보고-Ⅲ Batch-Ⅰ, Ⅱ, Ⅲ 사업으로 도입될 중형 잠수함의 잠항능력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은 미국 방어를 위한 대중, 대북 공격에서 북한과 중국이 방어하기 어려운 가장 위협적인 공격력으로 될 것이다. 더구나 중형 잠수함은 일정 규모의 특수부대를 탑승시킬 공간도 확보하고 있어 은밀 기동한 후 북·중 전략시설에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전략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한국군은 태평양상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발사 직후의 중국과 북한의 ICBM을 이지스 요격미사일로 요격하는 작전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은 북미 유사는 물론 미중 유사시에도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 한미 위기관리 각서 개정과 한국군의 미국 방어 가담, 이를 위한 항공모함과 대형 함정, 중형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동북아, 아태지역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으로, 국가적, 민족적 절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 한편 한국이 미국 방위에 개입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적용 범위)와 관련 미 상원의 양해사항에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관련 양해사항은 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을 미국 방어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짓이다.
- 장보고-Ⅲ Batch-Ⅰ, Ⅱ, Ⅲ 사업은 중형모 도입 사업이나 KDX-3 Batch-Ⅰ, Ⅱ 사업, KDDX 사업 등과 더불어 사실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수행과 미국 방위에 동원될 자산들로 모두 남한 방어에는 효용성이 거의 없는 무기체계들이며, 예산낭비는 물론 국가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할 뿐이어서 폐기 시기가 빠를수록 국익에 도움이 된다.

## ⑥ 무한대 군비경쟁과 국방예산 폭증과 예산낭비가 우려됨

- 장보고-Ⅲ Batch-Ⅰ, Ⅱ, Ⅲ 사업은 그 자체로만 최소 10조 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장보고-Ⅲ Batch-Ⅲ를 핵잠수함으로 건조한다면 그 비용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남한 방어에 별로 효용성도 없는 무기체계 도입에 이토록 많은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다.

-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승격시키기 위해 해군 전력을 증강하는데 드는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장보고-Ⅲ Batch-Ⅰ, Ⅱ, Ⅲ, KDX-3 Batch-Ⅰ, Ⅱ, KDDX 등 중형 잠수함과 대형 수상함에 항공모함까지, 2개 기동전단을 새로 편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장차 무기체계 도입 비용까지 포함하면 30조 원을 상회하고도 남은 것이다.
-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는 실로 숨 가쁘다. 한국 GDP는 일본 GDP의 1/3에도 못 미치는 데 반해 국방예산은 일본과 비슷하다. 또한 한국 GDP는 중국 GDP의 약 1/8인 데 반해 국방예산은 1/4을 넘는다. GDP 대비 국방예산의 비율이 일본은 0.9% 안팎, 중국은 1.9% 정도인 데 반해 한국은 2.7%나 된다.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면서도 소위 주변국 위협을 앞세워 숨 가쁘게 재래식 전력의 증강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재래식 전력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은 더욱 더 핵능력 강화에 나서게 된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재래식 전력 증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하며,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은 그 전제로 된다. 이를 위해서 5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예산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군사적 효용성도 별로 없고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인 항공모함, 대형 수상함, 중형 잠수함 등의 도입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군축으로 나가야 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은 남한 방어에는 군사적 효용성이 별로 없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수행에 동원되거나 심지어는 미국 방위에 동원되어 중국이나 북한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해야 하는 국가적, 민족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북미, 미중 간 대결을 격화시켜 판문점·평양 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장보고-Ⅲ Batch-Ⅱ 도입 사업은 즉각 중단되고, 관련 예산도 전면 삭감되어야 한다.

#### 5. 삭감요구액

- 장보고-Ⅲ Batch-Ⅱ 예산 1,182억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3-10) 광개토-III Batch-II (2332-304)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420,609	577,939	157,330	577,939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

- ①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북 전면전 및 주변국과 해양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대왕급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전 능력이 향상된 이지스급 구축함을 국내건조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
- ② 최신 이지스급 함정 확보를 통해 북한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 및 주변국으로부터 해양주권 수호 가능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북한의 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고성능의 대형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다. 남한은 미사일 전력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곧 비대칭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료마다 편차가 크지만 북한은 노동미사일 200기를 포함해 약 800(국방일보, 2019. 8. 1.)~1,150(미 헤리티지 재단,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1,300(NewDaily, 2019. 8. 16.)기의 탄도미사

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한은 ATACMS 220여 기를 포함해 약 2,220기(동아일보, 2011. 6. 17./SBS, 2016. 1. 25.)의 현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질적 측면에서도 남한 탄도미사일은 북한 탄도미사일보다 우위에 있다. 사거리 120~160km의 화성-11(KN-02)의 원형공산오차(CEP)는 50~100m(Jane's weapons : strategic 2018~9)이며, 살상면적은 약 28,560m<sup>2</sup>(연합뉴스, 2007. 10. 24.)이다. 이에 반해 사거리가 비슷한 남한 KTSSM(양산을 앞두고 있음) 원형공산오차가 2m(이데일리, 2018. 2. 4.)로 화성-11보다 훨씬 정밀하고, 살상면적은 남한이 보유한 ATACMS Block-I의 MGM-140A탄의 살상면적과 비슷한 약 33,000m<sup>2</sup>(글로벌 이코노믹, 2017. 7. 29.)로 화성-11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확도와 결합하면 파괴력이 화성-11보다 훨씬 크다. 북한이 20여 차례의 시험발사(38 NORTH, 2019. 10. 9.)로 화성-11의 정확도를 KTSSM에 필적할 정도로 개선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KTSSM의 양산에 따른 남한의 수적 우위와 함께 KTSSM의 전력 우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사거리 500km의 북한의 화성-6(스커드-C)과 사거리가 비슷한 남한의 현무-2B를 비교해 보더라도 현무-2B의 우위가 확연하다. 화성-6은 원형공산오차가 1,000m나 되고 살상면적도 16,963m<sup>2</sup>(랜드연구소, 1991)에 불과해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다. 반면 현무-2B는 원형공산오차가 50m로 화성-6보다 훨씬 정확하며, 살상면적도 20,000m<sup>2</sup>(월간조선 2011. 3.)로 화성-6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확도와 결합하면 화성-6에 비해 파괴력에서 훨씬 앞선다.
- 북한이 최근에 시험발사(2019.5/7)한 사거리 600km 전후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남한판 이스칸데르 현무-2B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무-2B의 우위가 확연하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확도는 100~200m(38 NORTH, 2019. 10. 9.)로 현무-2B의 50m에 크게 못 미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탄두중량은 0.5톤, 살상반경은 50~100m(38 NORTH, 2019. 10. 9.)로 현무-2B의 살상반경 87m와 비슷하나 현무-2B의 정확도 우위를 고려하면 살상력에서도 현무-2B가 우위에 있다. 한편 현무-2B는 북한의 지하시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관통탄두(1t)까지 장착(중앙일보, 2017. 8. 30.)하고 있으며, 북한 이스칸데르 폴업 기능보다 더 정교한 폴업 기능을 이미 10년 전에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뉴스, 2019. 7. 31.).
- 사거리가 800km 전후인 화성-9(2016년 실전 배치)와 현무-2C(2017년 실전 배치)를 비교해 보더라도 현무-2C가 정확도와 파괴력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화성-9의 원형공산오차는 190m로 원형공산오차가 10m인 현무-2C에 훨씬 못 미친다(중앙일보, 2017. 6. 27.). 그러나 북한 발표대로 화성-9의 원형공산오차가 7m(연합뉴스, 2017. 5. 30.)로 개선되었다면 현무-2C와 정확도가 비슷해졌다고 할 수 있다. 화성-9의 탄두중량은 0.5톤(CSIS, 2020. 1. 31. 검색)으로 현무-2C와 동일하다. 그러나 남한이 개발한 2톤 탄두의 ‘현무-4’(사거리 800km)를 실전 배치할 경우 ‘현무-4’가 파괴력에서 화성-9호를 크게 앞선다.

- 이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능력이 우리에게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미사일 요격·방어능력은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2019. 11. 2.).

임호영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도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경우 총량적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 미사일은 상당 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국방부 브리핑, 2016. 9. 9.)고 밝히고 있다.

- 한편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미사일 방어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은 고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을 비행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층 요격하는 미사일로 남한을 겨냥한 주로 고도 100km 이하를 비행하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의 정점 고도는 150km에 이르나 대부분의 비행이 100km 이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SM-3 요격미사일로 고도 100km 이상을 비행하는 스커드 C를 요격할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탄도탄 요격능력 등이 향상된 이지스함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사업 목적은 허구다.

## ②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다는 사업목적의 허구성

- 남한의 해군력은 함정 240척에 총 25만 5천 톤, 북한의 해군력은 함정 800척에 총 11만 1천 톤으로, 함정 총 톤수에서 남한은 북한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일본 방위백서 2020』, 90쪽). 북한이 보유한 수상 전투함정은 약 383척으로 총톤수는 약 50,000톤에 달하며, 척당 톤수는 약 120톤이다. 남한이 보유한 수상 전투함정은 약 108척으로 총톤수는 약 150,000톤에 달하며, 척당 톤수는 약 1,400톤이다(각종 공식 자료 취합). 이에 남한은 북한과의 전면전이나 국지전에서 현 전력만으로도 얼마든지 해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북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대형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은 허구다.

- 더욱이 “북한의 해군은 동·서로 분할되어 있어 융통성 있는 작전이 제한되고, (1,500톤 미만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국방백서 2014』)되기 때문에 연근해 작전을 위주로 대응해야 하는 남한 해군에게 원해 작전을 위주로 하는 9,000톤이나 되는 대형 이지스 구축함의 추가 도입은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 한편 이지스 구축함의 함대지 공격능력을 강화해 북한 핵·미사일 등의 전략표적을 타격하려는 발상도 타당성이 없다. 한반도 유사시 대북 종심작전을 전개하는 데서 대북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항공기나 미사일 등 보다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대지, 지대지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넘쳐나는 조건에서 북한 해안포나 지대함 사거리 밖에서 공격해야 하는 이지스 구축함은 전투서열의 후순위로 밀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③ 주변국의 위협 및 해양 분쟁에 대비한다는 사업목적의 허구성과 위험성

- 먼저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우리 스스로 주변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무모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남한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가 남한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도 없다.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식민지라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현재에 무매개적으로 적용해 안보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군비증강을 꾀하려는 군의 알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 현재 일본의 해군력은 함정 140척에 50만 톤, 중국의 해군력은 함정 750척에 197만 톤으로 총 톤수에서 일본은 남한의 약 2배이며, 중국은 남한의 약 7.7배, 일본의 약 4배에 달해 상호 간 전력 균형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일본방위백서 2020』, 43쪽).
- 그러나 한중일 간 이러한 해군력 격차가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거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을 훼손할 만큼 큰 위협으로 되지는 않는다. 일본이나 중국이 남한을 무력 침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남한은 자체 전력으로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 중국은 육·해·공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승수를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 인도 등 16여 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무력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제한된다. 러시아와 일본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을 침공할 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특히 일본은 공군력에서 한국과 비슷하고 지상군 전력에서는 남한에 크게 뒤지기 때문에 해군력 우위만을 갖고 남한을 무력 침공할 수 없으며, 남한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일본의 침략을 격퇴시킬 수 있다.

- 독도와 이어도, 7광구 등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주변국과의 군비경쟁과 적대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독도는 엄연히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일본이 이를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아무리 한일관계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현 국제질서 속에서는 상정하기 어렵다.
- 중국, 일본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수역에 위치한 이어도는 수심 4.6m에 위치해 해양법상 ‘수중 암초’다. 섬이 아닌 ‘수중 암초’는 접속수역, 영해, EEZ, 대륙붕과 같은 해양수역을 창설할 수 없어 한 국가의 영유권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한·중·일 간 이어도 관할권 다툼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외교가 아닌 군사력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명분이 없는 맹목적이고 호전적인 발상이며, 승산도 없다. 설령 물리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군이 아닌 해경이 비폭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 그런데도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수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대형 구축함을 도입하려는 것은 중국, 일본 등과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일상화하겠다는 것과 같다. 중국과 일본의 GDP는 각각 14.1조 달러, 5.1조 달러로 1.6조 달러인 남한 GDP의 8.8배, 3.1배에 달한다. 또한 국방예산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1,811억 달러, 486억 달러로 398억 달러의 남한 국방비의 4.5배와 1.2배에 달한다(『The military balance 2020』). 경제 규모나 잠재적 전쟁수행능력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과의 군비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으며, 만약 한국이 중국, 일본과 무한 군비경쟁을 벌이게 되면 국민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 ④ 해상수송로 보호 명분하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 포위전략을 뒷받침해 주려는 의도

- 해상수송로는 “석유나 군사, 무역 물자가 통과하며, 침략 경로로도 사용된다”는 와인버거 전 미 국방장관의 주장처럼 미국의 해양 패권선이다.

-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 6. 1.)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구축하려는 수정주의 국가 또는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국가로, 러시아를 되살아난 악성국가로, 북한을 핵과 생화학무기 및 재래식 전력 증강으로 생존을 보장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량국가로 지목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소위 ‘악의 축’의 개념을 되살리는 한편 이를 능가하는 대결적 자세를 취하면서 한국을 이들과 대결할 미국의 린치 핀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해 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대형 구축함을 도입하는 것은 동맹관계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되어 미국의 대중 패권 다툼에 편승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 광개토-III Batch-II 이지스함이 도입되면 정부가 이미 착수에 나선 항공모함 전단의 일원이 되어 미국이 파견을 요청하는 남중국해, 호르무즈 해협 등의 원해 작전에 적극 동원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의 안보법 제·개정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국해나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전개되는 미일 연합 해군작전에 한국 함정도 참가함으로써 미·중, 일·중 갈등에 한국이 말려들 가능성이 커진다.
-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와 포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따른 중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도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미·일·인·호 중심의 콰드와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결합시킨 콰드 플러스라는 지역 다자 집단방위체 구축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 2기든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든 대중 군사적 대결을 노골화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집단방위체 구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일본과 함께 한국 군사력이 중심 전력을 이루게 될 것이다.
-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 특히 해군력을 동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미국이) 도련선을 앞세워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홀로 맞서기는 어렵다”면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 선진화된 해군력을 가진 한국 등에 (남중국해의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등에 대한)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VOA, 2019. 10. 10.).
- 뉴욕 주립대 에릭 프렌츠 교수도 최근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 해군의 F-35B를 포함한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STOVL) 항공기

발진이 가능한 LPX-II 항공모함 개발 계획은 이 방향에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0. 10. 12).

- 이에 한국 해군은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구현되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2019. 10. 10.)이라며 신남방정책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복속시키고 있다.

#### ⑤ 광개토-III Batch-II 이지스함과 SM-3 요격미사일 도입은 미 본토 방어가 주목적

- 2017년 9월, 합참이 해상 탄도탄 요격미사일의 작전요구성능(ROC)을 고도 100km 이상으로 결정한 것은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다층 방어체계 구축을 고려해 이지스함에 SM-3 요격미사일 장착을 결정했다”는 합참의 국회 국정감사 보고에서도 확인된다(연합 2018. 10. 12.).
- SM-3 블록 IB 요격미사일은 요격고도가 150~500km, SM-3 블록 II A 요격미사일은 요격고도가 1,450km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하강단계와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이 광개토-III Batch-II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하고 SM-3 요격미사일을 장착하려는 것은 오키나와, 괌 등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주려는 숨은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광개토-III Batch-II 이지스 구축함은 수직발사관 등을 탑재해 사거리 500~800km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1,500km의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다. 한국 수역에서 발사해도 북한 전역과 중국 동북 연안과 내륙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전력은 북미, 중미 유사시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ICBM과 이동발사대에 대한 타격에 나설 수도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고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한국군의 광개토-III Batch-II 이지스 구축함의 함대지 공격능력은 중국의 미사일 기지 타격에,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미 항모 전단에 대한 중국의 등평-21/26 항모 킬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긴요할 것이다.
-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이른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현 한미연합 위기관리 적용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20. 10.) 공동성명 11항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했다.”고 명시함으로써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미국 유사시’를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면 북미, 미중 유사시 한국군은 북중을 공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장보고 III Batch-I, II, III 사업으로 도입될 중형 잠수함의 SLBM 능력은 미국 방어를 위한 대중, 대북 공격에서 북중이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큰 위협으로 될 것이다.

- 한편 광개토-III Batch-II 이지스함은 또한 북·중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을 방어해 주기 위한 정보/요격작전을 할 수도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후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선언 이후에도 한국은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미일 3각 MD 구축이 공식화되면 요격작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정보 제공과 요격작전은 한반도의 짧은 종심과 비행시간 때문에 남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도 한국 이지스함은 Pacific Dragon 훈련 등을 통해 한국 남해와 일본 근해, 하와이 인근 등에서 실시되는 미일 겨냥 북·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 한미일 연합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 역시 한미일 3각 MD 구축의 일환이다.

- 한국이 미국 방어에 개입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적용 범위)와 이와 관련한 미 상원의 양해사항에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관련 양해사항은 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을 미국 방어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짓이다.
- 광개토-III Batch-II 사업은 미국 방어에 동원될 무기체계인 반면 남한 방어에는 별로 효용성이 없는 무기체계로 예산낭비는 물론 국가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할 뿐이어서 폐기 시기가 빠를수록 국익에 도움이 된다.

## ⑥ 전형적인 해군의 몸집 불리기

- 해군은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오는 2025년 광개토-III Batch-II의 이지스 구축함을 주력으로 하는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하여 원해 해역에서 주변국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작전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해군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2019. 10. 10.). 이를 위해 대형 수상함과 중형 잠수함 도입에 이어 항공모함 도입으로 대

양 작전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대북 작전,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해상수송로 보호 등의 허구적 명분을 들어 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을 도입하려는 것은 해군의 전형적인 몸집 불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방정책을 조율했던 황병무는 당시 해군의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3개 해역 함대사령부로 해역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군의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계획을 비판한 바 있다(신동아, 2008. 7. 9.).

#### ⑦ 막대한 추가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

-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은 2028년까지 3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장착할 요격미사일 도입에도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SM-3 요격미사일은 한발 가격이 SM-3 블록 IB의 경우 200억 원, SM-3 블록 II A의 경우 343억 원(미 국방예산 기준)으로 요격미사일 도입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함정과 장착 무기체계 도입 후 들어가게 될 운영유지비는 추산조차 하기 어렵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대형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에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반면 미일 방어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포위전략에 동원될 위험성을 안고 있어 우리의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할 뿐으로, 즉각 중단하는 것만이 국가안보에도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 5. 삭감요구액

- 광개토-Ⅲ Batch-Ⅱ 예산 5,779억 3,9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3-9) 한국형구축함(KDDX) (2332-303)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5,696	6,600	904	6,600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전·평시 북한 및 주변국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해양 권익수호, 해양 분쟁 대응을 위한 기동부대 전력으로 운용할 차기구축함을 국내건조로 확보하는 사업
- ② 전투 및 대잠 능력이 우수한 구축함 확보로 해양수호 전력 강화 및 전투체계 등 주요 무기체계 국내 개발로 해외 의존도 탈피 및 방위산업 경기 활성화 기대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전·평시 북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남한의 해군력은 함정 240척에 총 25만 5천 톤, 북한의 해군력은 함정 800척에 총 11만 1천 톤으로, 함정 총 톤수에서 남한은 북한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일본 방위백서 2020』, 90쪽). 북한이 보유한 수상 전투함정은 약 383척으로 총톤수는 약 50,000톤에 달하며, 척당 톤수는 약 120톤이다. 남한이 보유한 수상 전투함정은 약 108척으로 총톤수는 약 150,000톤에 달하며, 척당 톤수는 약 1,400톤이다(각종 공식 자료 취합). 이에 남한은 북한과의 전면전이나 국지전에서 현 전력만으로도 얼마든지 해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전·평시 북한 위협을 근

거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은 허구다.

- 이미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남한은 해군력에서 대북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의 해군은 동·서로 분할되어 있어 융통성 있는 작전이 제한되고, (1,500톤 미만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국방백서 2014』)되기 때문에 연근해 작전을 위주로 대응해야 하는 남한 해군에게 만재 배수량 8,000톤의 대형 구축함은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함대지 공격능력을 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표적을 타격하려는 발상도 타당성이 없다. 한반도 유사시 대북 중심작전을 전개하는 데서 항공기나 미사일 등 보다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대지, 지대지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넘쳐나는 조건에서 북한 해안포나 지대함 사거리 밖에서 공격해야 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은 전투서열의 후순위로 밀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이 갖추게 될 무장능력 또한 전·평시 북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사업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KDDX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형 수직발사기(KVLS) 대비 셀(Cell) 면적이 180%, 길이가 120%, 무장 탑재중량이 185% 증대된 신형 수직발사기(KVLS-II)를 64셀이나 탑재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사거리 1,500km의 해성-2 함대지 순항미사일 등도 장착된다. 또한 KDDX는 탄도미사일 요격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밀리터리 리뷰, 2019. 12. ; 신동아 2020. 8. 28.). 지나친 함대지 공격능력은 대북 초공세적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은 대북 공격에는 불필요하며 주변국들에게는 위협을 줌으로써 오히려 우리 안보에 위협을 불러온다.

## ②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력으로서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은 불필요

- 북한 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방공능력을 갖춘 ‘KDDX’를 건조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도 허구다. 남한은 미사일 전력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곧 비대칭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노동미사일 200기를 포함해 약 800(국방일보, 2019. 8. 1.)~1,150(미 헤리티지 재단,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1,300(NewDaily, 2019. 8. 16.)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한은 ATACMS 220여 기를 포함해 약 2,220기(동아일보, 2011. 6. 17./ SBS, 2016. 1. 25.)의 현무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질적 측면에서도 남한 탄도미사일은 북한 탄도미사일보다 우위에 있다. 사거리 120~160km의 화성-11(KN-02)의 원형공산오차(CEP)는 50~100m(Jane's weapons : strategic 2018~9)이며, 살상면적은 약 28,560m<sup>2</sup>(연합뉴스, 2007. 10. 24.)이다. 이에 반해 사거리가 비슷한 남한 KTSSM(양산을 앞두고 있음) 원형공산오차가 2m(이데일리, 2018. 2. 4.)로 화성-11보다 훨씬 정밀하며 살상면적은 남한이 보유한 ATACMS Block-I의 MGM-140A탄의 살상면적과 비슷한 약 33,000m<sup>2</sup>(글로벌 이코노믹, 2017. 7. 29.)로 화성-11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확도와 결합하면 파괴력이 화성-11보다 훨씬 크다. 북한이 20여 차례의 시험발사(38 NORTH, 2019. 10. 9.)로 화성-11의 정확도를 KTSSM에 필적할 정도로 개선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KTSSM의 양산에 따른 남한의 수적 우위와 함께 KTSSM의 전력 우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사거리 500km의 북한의 화성-6(스커드-C)과 사거리가 비슷한 남한의 현무-2B를 비교해 보더라도 현무-2B의 우위가 확연하다. 화성-6은 원형공산오차가 1,000m나 되고 살상면적도 16,963m<sup>2</sup>(랜드연구소, 1991년)에 불과해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다. 반면 현무-2B는 원형공산오차가 50m로 화성-6보다 훨씬 정확하며, 살상면적도 20,000m<sup>2</sup>(월간조선 2011. 3.)로 화성-6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확도와 결합하면 화성-6에 비해 파괴력에서 훨씬 앞선다.
- 북한이 최근에 시험발사(2019.5/7)한 사거리 600km 전후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남한판 이스칸데르 현무-2B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무-2B의 우위가 확연하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확도는 100~200m(38 NORTH, 2019. 10. 9.)로 현무-2B의 50m에 크게 못 미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탄두중량은 0.5톤, 살상반경은 50~100m(38 NORTH, 2019. 10. 9.)로 현무-2B의 살상반경 87m와 비슷하나 현무-2B의 정확도 우위를 고려하면 살상력에서도 현무-2B가 우위에 있다. 한편 현무-2B는 북한의 지하시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관통탄두(1t)까지 장착(중앙일보, 2017. 8. 30.)하고 있으며, 이미 10년 전에 북한 이스칸데르 폭업 기능보다 더 정교한 폭업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뉴스, 2019. 7. 31.).
- 사거리가 800km 전후인 화성-9(2016년 실전 배치)와 현무-2C(2017년 실전 배치)를 비교해 보더라도 현무-2C가 정확도와 파괴력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화성-9의 원형공산오차는 190m로 원형공산오차가 10m인 현무-2C에 훨씬 못 미친다(중앙일보, 2017. 6. 27.). 그러나 북한 발표대로 화성-9의 원

형공산오차가 7m(연합뉴스, 2017. 5. 30.)로 개선되었다면 현무-2C와 정확도가 비슷해졌다고 할 수 있다. 화성-9의 탄두중량은 0.5톤(CSIS, 2020. 1. 31. 검색)으로 현무-2C와 동일하다. 그러나 남한이 개발한 2톤 탄두의 ‘현무-4’(사거리 800km)를 실전 배치할 경우 ‘현무-4’가 파괴력에서 화성-9호를 크게 앞선다.

- 이에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 미사일 능력이 우리에게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미사일 요격·방어능력은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2019. 11. 2.).

임호영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도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경우 총량적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 미사일은 상당 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국방부 브리핑, 2016. 9. 9.)고 밝히고 있다.

- 한편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미사일 방어가 무용지물이다. 군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요격고도가 150~500km에 달하는 SM-3 블록 1B급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탑재할 예정이다(밀리터리 리뷰, 2020. 6.).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낮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의 정점 고도는 150km에 이르나 대부분의 비행은 100km 이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 고도 100km 이상을 비행하는 스커드 C를 요격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 일각에서는 북한의 SLBM이나 무수단 미사일의 고각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밀리터리 리뷰, 2018. 12.). 그러나 SLBM은 은폐 기동을 통해 발사 지점을 노출하지 않고 공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짧아 요격이 불가능하다. 한편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발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수단은 괌 등 태평양상 미군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체계일 뿐만 아니라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가 낮아 요격이 더 어려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놔두고 굳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남한을 공격하더라도 회피기동이나 동시다발 공격 등을 통해 남한 요격체계를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 전력이라는 측면에서도 KDDX는 불필요한 전력이다.

### ③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대비와 해양 분쟁 대응이라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과 위험성

- 먼저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우리 스스로 주변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무모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남한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가 남한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도 없다.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식민지라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현재에 무매개적으로 적용해 안보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군비증강을 꾀하려는 군의 알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 현재 일본의 해군력은 함정 140척에 50만 톤, 중국의 해군력은 함정 750척에 197만 톤으로 총 톤수에서 일본은 남한의 약 2배이며, 중국은 남한의 약 7.7배, 일본의 약 4배에 달해 상호 간 전력 균형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일본방위백서 2020』, 43쪽).
- 그러나 한중일 간 이러한 해군력 격차가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거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을 훼손할 만큼 큰 위협으로 되지는 않는다. 일본이나 중국이 남한을 무력침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남한은 자체 전력으로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 중국은 육·해·공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승수를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 인도 등 16여 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무력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 침공할 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특히 일본은 공군력에서 한국과 비슷하고 지상군 전력에서는 남한에 크게 뒤지기 때문에 해군력 우위만을 갖고 남한을 무력 침공할 수 없으며, 남한이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일본의 침략을 격퇴시킬 수 있다.
- 한편 군은 독도, 이어도, 7광구 등에서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부대 전력으로서 KDDX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변국과의 군비경쟁과 적대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독도는 엄연히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일본이 이를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제아무리 한일관계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현 국제질서 속에서는 상정하기 어렵다.
- 중국, 일본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수역에 위치한 이어도는 수심 4.6m에 위치해 해양법상 ‘수중 암초’다. 섬이 아닌 ‘수중 암초’는 접속수역, 영해, EEZ, 대륙붕과 같은 해양수역을 창설할 수 없어 한 국가의 영유권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한·중·일 간 이어도 관할권 다툼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외교가 아닌 군사력

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명분이 없는 맹목적이고 호전적인 발상이며, 승산도 없다. 설령 물리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군이 아닌 해경이 비폭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 그런데도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수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대형 함정을 도입하려는 것은 중국, 일본 등과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일상화하겠다는 것과 같다. 중국과 일본의 GDP는 각각 14.1조 달러, 5.1조 달러로 1.6조 달러인 남한 GDP의 8.8배, 3.1배에 달한다. 또한 국방예산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1,811억 달러, 486억 달러로 398억 달러의 남한 국방비의 4.5배와 1.2배에 달한다(2019년 기준, 『The military balance 2020』). 경제 규모나 잠재적 전쟁수행능력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과의 군비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으며, 만약 한국이 중국, 일본 등과 무한 군비경쟁을 벌이게 되면 국민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 ④ 해상수송로 보호 명분하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 포위전략을 뒷받침해 주려는 의도

- 해상수송로는 “석유나 군사, 무역 물자가 통과하며, 침략 경로로도 사용된다”는 와인버거 전 미 국방장관의 주장처럼 미국의 해양 패권선이다.
-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 6. 1.)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구축하려는 수정주의 국가 또는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국가로, 러시아를 되살아난 악성국가로, 북한을 핵과 생화학무기 및 재래식 전력 증강으로 생존을 보장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량국가로 지목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소위 ‘악의 축’의 개념을 되살리는 한편 이를 능가하는 대결적 자세를 취하면서 한국을 이들과 대결할 미국의 린치 핀으로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원해 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대형 구축함을 도입하는 것은 동맹관계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되어 미국의 대중 패권 다툼에 편승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 KDDX가 도입되면 정부가 이미 구축에 나선 경향공모함 전단의 일원이 되어 미국이 파견을 요청하는 남중국해, 호르무즈해협 등의 원해 작전에 동원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안보법 제·개정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국해나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전개될 미일 연합 해군작전에 한국 함정도 참가함으로써 미·중, 일·중 갈등에 한국이 말려들 가능성이 커진다.

-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와 포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따른 중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도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미·일·인·호 중심의 콰드와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결합시킨 콰드 플러스라는 지역 다자 집단 방위체 구축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 2기든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든 대중 군사적 대결을 노골화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집단방위체 구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일본과 함께 한국의 군사력이 그 중심 전력을 이루게 될 것이다. 특히 장거리 함대지/잠대지 능력을 보유한 한국의 해군력은 미국에 매력적이다.
- 이에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 특히 해군력을 동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미국이) 도련선을 앞세워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홀로 맞서기는 어렵다.”면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조선 역량을 갖고 있고, 선진화된 해군력을 가진 한국 등에 (남중국해의 미국의 ‘항해의 자유’ 작전 등에 대한)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VOA, 2019. 10. 10.).
- 뉴욕 주립대 에릭 프렌츠 교수도 최근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 해군의 F-35B를 포함한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STOVL) 항공기 발진이 가능한 LPX-II 항공모함 개발 계획은 이 방향에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0. 10. 12.).
- 이에 한국 해군은 화답이라도 하듯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구현 되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2019. 10. 10.)이라며 신남방정책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복속시키고 있다.
- 한편 KDDX에 탑재될 한국형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외대기권의 요격고도를 갖는다면 서해와 남해에서 일본과 오키나와를 겨냥한, 동해에서 일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 ⑤ 미국 방어에 동원될 위험성도 있어

- 차기 구축함은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다. KDDX 사업으로 도입될 구축함은

수직발사관 등을 탑재해 사거리 500~800km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1,500km의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다. 한국 수역에서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과 중국 동북 연안과 내륙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전력은 북미, 중미 유사시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ICBM과 이동발사대에 대한 선제타격에 나설 수도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고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한국의 KDDX 등 대형 구축함의 함대지 공격능력은 중국의 미사일 시설 타격에,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미 항모 전단에 대한 중국의 등평-21/26과 같은 항모 킬러 탄도미사일 방어 전력으로 긴요할 것이다. 대북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군이 남아나는 전력을 주변국, 특히 중국을 상대로 행사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이른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현 한미연합 위기관리 적용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20. 10.) 공동성명 11항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했다.”고 명시함으로써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미국 유사시’를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면 북미, 미중 유사시 한국군은 북중을 공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한국군의 1차 공격 대상은 북중 ICBM 기지나 이동발사대가 될 것이다. 특히 장보고 III Batch- I, II, III 사업으로 도입될 중형 잠수함의 SLBM 능력은 미국 방어를 위한 대중, 대북 공격에서 북중이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큰 위협으로 될 것이며 KDDX 구축함을 비롯한 중대형 구축함의 함대지 공격력 또한 북중 미사일 전력 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한국군은 태평양상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발사 직후의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지스 요격미사일로 요격하는 작전도 수행해야 한다.

- 한국이 미국 방어에 개입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적용 범위)와 관련한 미 상원의 양해사항에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관련 양해사항은 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을 미국 방어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짓이다.

- 중항공모함, 장보고 III Batch- I, II, III, KDX III Batch- I, II 등과 함께 KDDX 구축함 도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 수행과 미국 방어에 동원될 무기체계

인 반면 남한 방어에는 별로 효용성이 없는 자산들로 예산낭비는 물론 국가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할 뿐으로, 폐기 시기가 빠를수록 국익에 도움이 된다.

## ⑥ 전형적인 해군의 몸집 불리기

- 해군은 오는 2025년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원해 해역에서 주변국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작전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해군 국정감사업무보고 자료, 2019. 10. 10.). 또한 군은 KDDX가 건조되면 이 함정들을 기동함대를 구성하는 3개 기동전단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형 수상함과 중형 잠수함 도입에 이어 중항공모함 도입으로 대양 작전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대로 대북 작전,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해상수송로 보호 등 허구적 명분을 들어 대형 수상함, 중형 잠수함 도입에 이어 차기 구축함, 중항공모함까지 도입하려는 것은 해군의 전형적인 몸집 불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방정책을 조율했던 황병무는 당시 해군의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방안에 반대하면서 3개 해역 함대사령부로 해역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군의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계획을 비판한 바 있다(신동아, 2008. 7. 9.).

## ⑦ 막대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KDDX 사업이 2008~9년 당시 KDX-IIA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을 때만 해도 이지스 구축함을 보조하는 5,600톤급의 중형 구축함 건조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해군이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체계와 고성능 무기체계를 장착하기로 욕심을 부리면서 만재배수량 8,000톤급의 대형 함정 건조 사업으로 몸집이 커지고 비용도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났다.
- 118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안에 따르면 KDDX 사업은 체계개발비 1조 8,0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7조 8,000억 원으로 F-35 도입 사업을 능가한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탄도미사일 요격능력 개발비가 무려 1조 원이나 되지만 M-SAM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듯이 L-SAM의 성능 미달로 고가의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와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탄도미사일 탐지, 요격 레이더를 세계 최초로 S밴드와 X밴드를 사용하는 듀

열 밴드형 AESA 레이더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는 하나 미국이 실패한 이 고성능 레이더가 실전에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른 최고 성능의 탑재 체계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으며, 호랑이 그리려다가 자칫 고양이 그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 ⑧ 방산비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KDDX 사업

- KDDX는 시작부터 방산비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KDDX 사업 담당 중령의 도움을 받아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고, 방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기준 등의 특혜를 받아 KDDX의 기본설계 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에 KDDX 기본설계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며, 차제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여야를 불문하고 다수 의원들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KDDX 사업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국회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2020. 10. 20.).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국방부가 내세우는 전·평시 북한 및 주변국 잠재적 위협과 해양 분쟁 대비, 해상 권익 수호 등의 KDDX 사업 목적은 모두 허구다. 남한 해군력이 북한 해군력보다 절대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KDDX 구축함은 불요불급한 과잉전력이며, 한편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국 방위에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 또한 사업비용이 천문학적인데다 과도한 초고성능 체계 개발에 따른 비용 상승도 예상되어 코로나 시대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KDDX 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 5. 삭감요구액

- 한국형구축함(KDDX) 예산 66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4-16) F-35A (2433-300)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1,509,334	1,208,314	301,020	1,208,314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 ① <사업 목적>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및 전쟁 주도권 조기 장악을 위한 고성능 전투기 F-35A를 국외(FMS)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
- ② <향후 기대효과> 주변국 잠재위협 대비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F-35A 도입 목적의 허구성과 위험성, 불법 부당성

##### • F-35A 사업 목적의 허구성

- 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북핵, WMD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능력을 갖추며 전쟁 주도권 조기 장악을 위해서는 F-35A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2020~2024 국방중기계획보도자료 ; 2021회계연도 예산 설명서).
- 대북 전략적 억제가 성립하려면 선제공격을 통해 반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아무리 정찰감시 자산과

정밀타격무기를 동원하더라도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기란 불가능하다. 1994년에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검토했던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군사공격으로 북한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동아일보, 2013. 2. 19.)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F-35A나 그 밖의 그 어떤 재래식 고성능 첨단무기를 도입해 대북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북의 핵·미사일 반격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따라서 F-35A 도입으로 대북 전략적 억제능력을 구비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허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 • F-35A 사업 목적의 위험성

- 대북 선제공격으로 대북 전략적 억제를 달성할 수 없다면 F-35 등을 동원한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전면전을 자초하는 매우 모험적이고 위험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 개전 초기 한미연합군이 F-35A 등을 동원해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SEAD)하는 등 조기에 공중우세와 지배를 달성하여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고 우세한 항공 전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핵심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하면 북한은 지도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전쟁 패배로 내몰리게 되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F-35A 도입으로 대북 선제공격과 조기에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핵전쟁과 전면전을 불러와 국가와 민족을 공멸의 위기로 몰아넣게 될 매우 위험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 • F-35A 사업 목적의 불법·부당성

- F-35A의 1차적 작전임무는 작계 5015에 따라 SEAD 및 700~800개에 달하는 북한의 전략표적에 대한 타격과 이동식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타격임무가 될 것이다.
- 한미연합군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탐지→교란→파괴→방어), 이를 구현한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이를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개념, 작전계획 5015는 평화적 통일 정책을 천명한 헌법 4조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 위반이다. 또한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유엔헌장 51조 위반이다.

-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개념,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한 F-35A의 대북 선제공격 임무 수행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 F-35A의 도입과 운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군사적 신뢰조치와 단계적 군축을 실시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 대북 체제보장을 천명한 싱가포르 성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북한은 남한의 F-35A 도입에 대해 “대화하자면서 첨단 살인무기를 지속적으로 반입하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태, 판문점선언/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비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 8. 11.).

일본 도쿄 신문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실험 등 무기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은 “한국군이 3월부터 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존재”라고 보도했다(경향신문, 2019. 9. 19.). 북한은 2019년 5월 이후 F-35A 기지인 청주비행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발사체 발사 실험을 반복했다.

- 국방부는 F-35A의 사업 목적으로 판문점/평양선언 이후는 물론 그 이전의 극한 대결 속에서도 “북한 비대칭전력 대비 및 전쟁 주도권 조기 장악”이라는 초공세적 개념을 명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2021 회계연도 사업 설명서에서 이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은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F-35A의 도입은 과잉전력으로 국민혈세만 낭비

### •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주장은 사실 왜곡

- 국방부는 F-35A 사업 목적으로 공군 보유 구형 전투기 도태로 인한 심각한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목적(한국국방연구원, 사업타당성 조사, 2010. 9.)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전투기 전력 공백 주장은 근거 없다. 남북 전투기 보유 현황에서 『2020 일본 방위백서』는 620대 : 550대로, 『2020 밀리터리 밸런스』는 563대 :

545대로 남한이 각각 70대, 18대의 양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질적 측면에서도 남한 전투기는 북한 전투기에 절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2020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남한은 3, 4세대 전투기가 251대(F-4 30대, F-16 162대, F-15 59대), 북한은 74대(Mig-23 56대, Mig-29 18대)로 남한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2020ミリ터리 밸런스』에 따르더라도 남한은 3, 4세대 전투기가 63%에 달하는 반면 북한은 불과 20%에 그쳐 남한 전투기가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보유 전투기의 80%가 1, 2세대의 구형, 저성능 전투기인 것이다.

#### • 스텔스 기능에 집착한 F-35A 도입은 과잉전력

- F-35A는 스텔스 성능, 고성능 레이더 체계, 정밀무장 등을 갖춰 은밀한 종심 침투와 전략표적 타격 등 대북 선제적, 초공세적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전력만으로도 북한의 남침을 충분히 저지, 격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텔스 성능과 같은 대북 선제적, 초공세적 전력은 과잉전력이다.

#### ③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위험성

-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위협관은 우리 스스로가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무모한 발상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남한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가 남한을 무력침공 할 가능성이 없다.
- 설령 이 국가들이 무력침공을 해오더라도 남한 전력으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중국은 육·해·공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침공 할 수 있는 승수를 갖추고 있지만 인도, 러시아 등 16여 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남한과 무력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침공할 전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지상군 전력은 남한보다 크게 열세이며, 항공전력에서도 남한보다 약간의 우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 F-35A 도입은 한중, 한일 유사시 전력이 열세인 한국이 대중, 대일 선제 또는 본토 종심작전을 전개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전력이다.

- 일국의 군사력은 현존 위협을 척도로 삼아 구축되어야 하며, 잠재적 위협을 군사력 건설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과잉전력으로 되어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며, 주변국에 위협이 되어 견제를 받게 됨으로써 도리어 안보를 위태롭게 하게 된다.

#### • 미국의 대중 대결 전선에 가담하는 결과를 불려와

- 미국은 F-35의 판매와 장비공급을 지렛대로 반중 대결 전선 구축을 꾀하고 있다. 포린 폴리시도 F-35의 글로벌 배치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비교하여 미국판 '공중 일대일로'로서 중국·러시아에 맞선 미국의 배타적 연합전선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포린 폴리시, 2019. 7. 12.).
- F-35는 일본, 호주, 한국 등 아태 지역에만 300여 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일본은 총 147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해 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전력을 갖추게 된다. 호주는 모두 72대의 F-35를 도입할 예정이다. 남한은 총 80대(F-35B를 포함할 경우)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 2019년 3월 12일~13일 미 태평양공군 사령부에서 개최된 F-35 운용국 컨퍼런스에는 미국, 호주, 한국, 일본의 F-35 운용부대 장교, 정보 분석관, 기술진, 군수지원 요원이 참가한 가운데 F-35 운용개념, 전술기량, 공중작전 시 상호운용성 등에 대해 토의했으며 콘퍼런스를 주관한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은 미국, 호주, 한국, 일본 간 연합작전능력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경향신문, 2019. 9. 16.).
- 미국이 F-35 구매국에게 화웨이 등 중국제 5G 통신망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영국에 F-35를 제공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F-35 제공은 미국이 수입국들을 반중 전선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콰드 플러스 참여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 ④ 굴욕적이고 기만적인 절충교역 결과와 운용상 제약

- F-X 사업 기종 선정 과정에서 방사청은 타 기종보다 AESA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기술을 포함해 월등히 유리한 절충교역 조건을 제시한 F-15SE를 부결시켰다. 또한 작전요구성능에 스텔스 성능을 추가하여 사실상 F-35A만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방식도 공개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꾸어 F-35A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했다. 그 결과 KF-X 사업에 필요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은 예상된 결과였다.

-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최소한으로 얻어낸 21개의 절충교역 조건마저도 과장, 허위 보고된 것이었다. 군 통신위성의 설계·제작·발사를 절충교역을 통해 무상 이전을 받을 것처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유상 구매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록히드마틴이 예상보다 실제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로 한국에 비용분담을 요구하면서 1년 반 이상 군 통신위성 사업을 지체시켰음에도 300억 원에 달하는 지체배상금을 물리지 못했다.
- 더구나 절충교역 협상 과정에서 방사청은 기체 가격 하락분을 돌려받는 대신 위성 설계·제작·발사 비용으로 갈음하기로 록히드마틴과 합의하면서 해당 가격을 1,211억(추산) 원으로 고정(3차 절충교역 수정 합의각서, 2016. 11.)시킨 결과 F-35 해당 가격이 Lot 12 생산분(2020년 인도분)을 기준으로 8240만 달러(962억 4,320만 원)로 낮아졌는데도 도입가격을 낮추지 못했다. F-35A 한 대당 약 249억 원, 40대 약 9,96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린 것이다.
- 한편 F-35A 제공에 따른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국은 한국의 운용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한국 공군 내에서는 “우리 전투기가 맞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운용상 제약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 기지 부대원도 특별접근인가(SAP) 자격이 없으면 F-35A 핵심시설에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국이 요구하는 보안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굴욕적 결과는 불요불급한 스텔스 기종을 서둘러 도입한 한국 정부와 군이 자초한 것이다.

#### ⑤ 창정비와 부품 조달 등의 분야에서 대일 종속 가능성의 현실화

- 국방부는 F-35의 조립과 부품생산, 창정비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F-35의 ‘정비 및 장비 업그레이드(MRO&U)’ 권한을 획득했다. 창정비 권한과 장비 업그레이드 권한이 없는 한국은 일본이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에 창 정비를 맡겨야 한다. F-35의 운영을 일본에게 의존해야 하며 부품 수입과 창정비에 소요되는 운영유지비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본에서 창정

비를 맡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남태평양 지역 창정비 권한을 획득한 호주에서 창정비를 받게 되면 그만큼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또한 한국군 F-35가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게 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의 운항기록 등 작전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고스란히 일본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35에 사용되는 자율군수정보시스템(Autonomic Logistics Information System)이 전투기 내부에서 어떤 부품에 문제가 생겼는지 판단하고 군수지원 조직에 정비요구와 함께 문제가 발생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임무계획(작전), 교육 및 기술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이라는 점도 이런 가능성을 높인다.
- 일본이 F-35 부품 공급과 창정비 권한을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자국 요구를 관철하는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해 F-35 엔진 정비 등을 일본에서 하기를 바란다는 보도(경향신문, 2019. 9. 16.)도 미국과 일본이 F-35와 정비 문제를 한일군사협력을 높이고 한일군사동맹을 촉진시키는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최악의 경우 F-35의 기체·엔진 정비를 일본이 거부하는 굴욕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시라도 빨리 F-35 도입을 중단하는 것만이 대미, 대일 종속을 막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말해 준다.

#### ⑥ 해가 갈수록 대폭 늘어나게 될 후속 군수지원 예산 소요

- F-35A 도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막대한 운영유지비다. 합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김종대 전 의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년간 F-35 1기 운영유지비에 2500억 원이 소요되며 4~5년마다 다시 칠해야 하는 스텔스 도료 비용은 추산조차 불가능하다(김종대, 『한국의 무기구매 이대로 팬참은가?』 2019. 5. 21.).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전투기를 사오는 가격은 전체 수명 주기의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0%가 운영유지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F-35 40대의 운영유지비는 무려 40조 원으로 추산된다. 홍영표 의원은 무기체계를 30년 동안 운용하는데 드는 유지보수 비용은 통상 도입비의 10배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F-35의 운영유지비를 80조로 추산하고 있다(국회 국정감사회의록 2019. 10. 7.).

F-35를 운영유지하기 위한 후속 군수지원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폭 늘어나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돈 먹는 하마’ F-35A의 도입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만이 국부 유출을 막는 길이다.

#### ⑦ 해결되지 않은 결함, 계속된 추락사고

- 2017년에 미 시험평가국은 기체 자체 결함, Block 3F 임무 시스템 등 미해결 결함을 포함하여 대략 1,000개의 공개결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17 DOT&E 보고서, 35쪽). 이런 지속적인 성능결함으로 인해 미 국방부는 F-35의 인수를 2018년 4월 잠정 중단한 바 있으며, 2017년에도 같은 이유로 1개월 동안 인수를 거부한 적이 있다. 2018년 9월에 발생한 F-35의 첫 추락사고는 연료관 제조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F-X 1차 사업으로 들어오는 F-35 Block 3F의 경우 2018년 4월의 개발 비행 테스트 완료 시 941개의 결함이 확인되었다(2018 DOT&E 보고서, 24쪽). 미 의회 GAO 보고서는 2018년 1월 현재 966개의 공개결함이 발견됐으며, 이 중 180개는 양산 이전까지 개선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2018 GAO 보고서, 14쪽).
- F-X 2차 사업 대상 기종인 F-35 Block 4의 경우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1월 현재 966개의 공개 결함(open deficiencies)이 발견됐으며 이 중 13개가 가장 심각한 결함인 카테고리 I이라고 밝히고 있다.
- 한편 F-35는 탑재 25mm 기관포가 지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19 DOT&E 보고서, 22쪽). 25mm 기관포 결함은 근접전, 방공망 제압, 상륙 지원 등 F-35의 임무 수행을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 이에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국방부 문서들을 인용해 ‘카테고리1 결함(category 1 deficiencies)’에 해당하는 13개의 결함을 공개하면서 F-35 결함에 대한 국방부 문서들은 F-35 프로그램이 초도소량생산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적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씨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제기했다. ‘카테고리 1 결함’은 전투기의 임무 수행을 제약하거나 조종사의 전투준비능력 제한 또는 부상·사망·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전투기나

장비의 손상 또는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들을 말한다(Defense NEWS, 2019. 6. 12.).

- 2020년 5월, 야간 착륙훈련 도중 발생한 미 공군 소속 F-35A의 추락 사고에 대해 미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은 엔진계통 이상은 아니며 한국군이 운용 중인 F-35A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껏 밝히고 있지 않다.
- 2020년 10월, 미 국방부는 F-35기의 성능 평가에 필수적인 최첨단 비행 시뮬레이터 장비(JSE)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올 12월로 예정됐던 시험을 연기하고 록히드마틴에 대한 F-35 전투기의 양산 지정 결정도 2021년으로 연기했다(연합뉴스, 2010. 10. 30.). 이에 초기소량생산 단계에서 들어오는 F-X 1차 사업분 40대는 물론이고 F-X 2차 사업으로 도입하는 20대의 성능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FMS 계약방식으로 수입되는 미국 무기의 하자 보증기간은 물품 인수나 검수가 끝난 시점부터 1년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F-X 1차 도입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인수한 시점까지도 치명적 결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F-35A의 인수를 중단해야 한다. 결함투성이 F-35A에 공군 조종사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국민혈세를 낭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첨단 고성능 전투기 F-35A 도입은 불요불급한 과잉전력이다.
- 국방부와 군의 스텔스 성능에 대한 비상식적 집착이 굴욕적이고 기만적인 초라한 절충교역 획득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국부 유출을 초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F-35A는 심각한 결함이 계속 발생하여 그 성능 발휘를 제약하고 조종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창정비와 부품 조달 등을 일본, 그것도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 방어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선제공격용 F-35A의 도입은 북한, 중국 등과 (핵)대결과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시대 구축에 역행한다.

- F-35A는 남북 군축 협상이 일정에 오를 경우 최우선 군축 협상 대상이 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초공세무기 도입은 삼가야 한다.
- 이에 F-35A 도입을 지금이라도 중단시키는 것은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 5. 삭감요구액

- F-35A 예산 1조 2,083억 1천 4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F-X 2차 (2432-301)

방사청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자료』에는 F-X 2차 사업 목적에 대한 설명 없이 예산안만 기재되어 있다. 국방부는 F-X 2차 사업으로 F-35A와 B를 20대씩 구매한다는 계획이나 어느 기종이 먼저 도입될지는 불확실하다. F-X 1차 사업의 후속으로 F-35A가 먼저 도입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F-35A 도입 사업에 준해서 작성했다. 그러나 항모 도입 사업과 함께 F-35B가 먼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해 첨부한다.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신규	-	277	-	277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 ① <사업 목적>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및 전쟁 주도권 조기 장악을 위한 고성능 전투기 F-35A를 국외(FMS)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
- ② <향후 기대효과> 주변국 잠재위협 대비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F-X 2차 사업 목적의 허구성과 위험성, 불법 부당성

- F-X 2차 사업 목적의 허구성

- 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북핵, WMD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갖추며 전쟁 주도권 조기 장악을 위해서는 F-35A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2020~2024 국방중기계획 보도 자료 ; 2021회계연도 예산 설명서).
- 대북 전략적 억제가 성립하려면 선제공격을 통해 반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아무리 정찰감시 자산과 정밀타격무기를 동원하더라도 이미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기란 불가능하다. 1994년에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검토했던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군사공격으로 북한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동아일보, 2013. 2. 19.)하다고 밝힌 바 있다. F-35A나 그밖의 어떤 재래식 고성능 첨단무기를 도입해 대북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북한 핵·미사일의 반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 따라서 F-35A 도입으로 대북 전략적 억제능력을 구비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허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 • F-X 2차 사업 목적의 위험성

- 대북 선제공격으로 대북 전략적 억제를 달성할 수 없다면 F-35A 등을 동원한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전면전을 자초하는 매우 모험적이고 위험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 개전 초기 한미연합군이 F-35A 등을 동원해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SEAD)하는 등 조기에 공중우세와 지배를 달성하여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고 우세한 항공전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핵심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하면 북한은 지도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전쟁 패배로 내몰리게 되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F-35A 도입으로 대북 선제공격과 조기에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핵전쟁과 전면전을 불러와 국가와 민족을 공멸의 위기로 몰아넣게 될 매우 위험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 • F-X 2차 사업 목적의 불법부당성

- F-35A의 1차적 작전임무는 작계 5015에 따라 SEAD 및 700~800개에 달하는 북의

전략표적에 대한 타격과 이동식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타격임무가 될 것이다.

- 한미연합군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탐지→교란→파괴→방어), 이를 구현한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이를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개념, 작전계획 5015는 평화적 통일 정책을 천명한 헌법 4조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 위반이다. 또한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유엔헌장 51조 위반이다.

-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개념,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한 F-35A의 대북 선제공격 임무 수행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 F-35A의 도입과 운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군사적 신뢰조치와 단계적 군축을 실시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 대북 체제보장을 천명한 싱가포르 성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북한은 남한의 F-35 도입에 대해 “대화하자면서 첨단 살인무기를 지속적으로 반입하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태, 판문점선언/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비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 8. 11.).

일본 도쿄 신문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실험 등 무기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은 “한국군이 3월부터 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존재”라고 보도했다(경향신문, 2019. 9. 19.). 북한은 2019년 5월 이후 F-35A 기지인 청주비행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발사체 발사 실험을 반복했다.

- 국방부는 F-35A의 사업 목적으로 판문점/평양선언 이후는 물론 그 이전의 극한 대결 속에서도 “북한 비대칭전력 대비 및 전쟁 주도권 조기 장악”이라는 초공세적 개념을 명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2021 회계연도 사업 설명서에서 이를 노골적으로 적시한 것은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F-X 2차 사업은 과잉전력으로 국민혈세만 낭비

-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주장은 사실 왜곡

- 국방부는 F-35A 사업 목적으로 공군 보유 구형 전투기 도태로 인한 심각한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목적(한국국방연구원, 사업타당성 조사, 2010. 9.)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전투기 전력 공백 주장은 근거 없다. 남북 전투기 보유 현황에서 『2020 일본 방위백서』는 620대 : 550대로, 『2020 밀리터리 밸런스』는 563대 : 545대로 남한이 각각 70대, 18대의 양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질적 측면에서도 남한 전투기는 북한 전투기에 절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2020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남한은 3, 4세대 전투기가 251대(F-4 30대, F-16 162대, F-15 59대), 북한은 74대(Mig-23 56대, Mig-29 18대)로 남한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2020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남한은 3, 4세대 전투기가 63%에 달하는 반면 북한은 불과 20%에 그쳐 남한 전투기가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보유 전투기의 80%가 1, 2세대의 구형, 저성능 전투기인 것이다.

#### • 스텔스 기능에 집착한 F-35A 도입은 과잉전력

- F-35A는 스텔스 성능, 고성능 레이더 체계, 정밀무장 등을 갖춰 은밀한 종심 침투와 전략표적 타격 등 대북 선제적, 초공세적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전력만으로도 북한의 남침을 충분히 저지, 격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텔스 성능과 같은 대북 선제적, 초공세적 전력은 과잉전력이다.

### ③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위험성

#### •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무모한 발상

-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위협관은 우리 스스로가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무모한 발상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남한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가 남한을 무력침공 할 가능성이 없다.
- 설령 이 국가들이 무력침공을 해오더라도 남한 전력으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중국은 육·해·공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침공 할 수 있는 승수를 갖추고 있지만 인도, 러시아 등 16여 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남한과 무력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침공할 전

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지상군 전력은 남한보다 크게 열세이며, 항공전력에서도 남한보다 약간의 우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 F-35A 도입은 한중, 한일 유사시 전력이 열세인 한국이 대중, 대일 선제 또는 본토 중심작전을 전개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전력이다.
- 일국의 군사력은 현존 위협을 척도로 삼아 구축되어야 하며, 잠재적 위협을 군사력 건설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과잉전력으로 되어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며, 주변국에 위협이 되어 견제를 받게 됨으로써 도리어 안보를 위태롭게 하게 된다.

#### • 미국의 대중 대결 전선에 가담하는 결과를 불려와

- 미국은 F-35의 판매와 장비공급을 지렛대로 반중 대결 전선 구축을 꾀하고 있다. 포린 폴리시도 F-35의 글로벌 배치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비교하여 미국판 '공중 일대일로'로서 중국·러시아에 맞선 미국의 배타적 연합전선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포린 폴리시, 2019. 7. 12.).
- F-35는 일본, 호주, 한국 등 아태 지역에만 300여 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일본은 총 147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해 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전력을 갖추게 된다. 호주는 모두 72대의 F-35를 도입할 예정이다. 남한은 총 80대(F-35B를 포함할 경우)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 2019년 3월 12일~13일 미 태평양공군 사령부에서 개최된 F-35 운용국 컨퍼런스에는 미국, 호주, 한국, 일본의 F-35 운용부대 장교, 정보 분석관, 기술진, 군수지원 요원이 참가한 가운데 F-35 운용개념, 전술기량, 공중작전 시 상호운용성 등에 대해 토의했으며 컨퍼런스를 주관한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은 미국, 호주, 한국, 일본 간 연합작전능력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경향신문, 2019. 9. 16.).
- 미국이 F-35 구매국에게 화웨이 등 중국제 5G 통신망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영국에 F-35를 제공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F-35 제공은 미국이 수입국들을 반중 전선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콰드 플러스 참여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 ④ 창정비와 부품 조달 등의 분야에서 대일 종속 가능성의 현실화

- 국방부는 F-35의 조립과 부품생산, 창정비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F-35의 '정비 및 장비 업그레이드(MRO&U)' 권한을 획득했다. 창정비 권한과 장비 업그레이드 권한이 없는 한국은 일본이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에 창 정비를 맡겨야 한다. F-35의 운영을 일본에게 의존해야 하며 부품 수입과 창정비에 소요되는 운영유지비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본에서 창정비를 맡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남태평양 지역 창정비 권한을 획득한 호주에서 창정비를 받게 되면 그만큼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또한 한국군 F-35가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게 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의 운항기록 등 작전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고스란히 일본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35에 사용되는 자율군수정보시스템(Autonomic Logistics Information System)이 전투기 내부에서 어떤 부품에 문제가 생겼는지 판단하고 군수지원 조직에 정비요구와 함께 문제가 발생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임무계획(작전), 교육 및 기술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이라는 점도 이런 가능성을 높인다.
- 일본이 F-35 부품 공급과 창정비 권한을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자국 요구를 관철하는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해 F-35 엔진 정비 등을 일본에서 하기를 바란다는 보도(경향신문, 2019. 9. 16.)도 미국과 일본이 F-35와 정비 문제를 한일군사협력을 높이고 한일군사동맹을 촉진시키는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최악의 경우 F-35의 기체·엔진 정비를 일본이 거부하는 굴욕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시라도 빨리 F-35 도입을 중단하는 것만이 대미, 대일 종속을 막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말해 준다.

#### ⑤ 해가 갈수록 대폭 늘어나게 될 후속 군수지원 예산 소요

- F-X 2차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막대한 운영유지비다. 합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김종대 전 의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년간 F-35 1기

운영유지비에 2,500억 원이 소요되며 4~5년마다 다시 칠해야 하는 스텔스 도료 비용은 추산조차 불가능하다(김종대, 『한국의 무기구매 이대로 괜찮은가?』 2019. 5. 21.).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전투기를 사오는 가격은 전체 수명 주기의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0%가 운영유지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F-35 40대의 운영유지비는 무려 40조 원으로 추산된다. 홍영표 의원은 무기체계를 30년 동안 운용하는데 드는 유지보수 비용은 통상 도입비의 10배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F-35 40여대의 운영유지비를 80조로 추산하고 있다(국회 국정감사회의록 2019. 10. 7.).

F-35를 운영유지하기 위한 후속 군수지원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폭 늘어나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돈 먹는 하마’ F-35의 도입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만이 국부 유출을 막는 길이다.

## ⑥ 해결되지 않은 결함, 계속된 추락사고

- 2017년에 미 시험평가국은 기체 자체 결함, Block 3F 임무 시스템 등 미해결 결함을 포함하여 대략 1,000개의 공개 결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17 DOT&E 보고서, 35쪽). 이런 지속적인 성능 결함으로 인해 미 국방부는 F-35의 인수를 2018년 4월 잠정 중단한 바 있으며, 2017년에도 같은 이유로 1개월 동안 인수를 거부한 적이 있다. 2018년 9월에 발생한 F-35의 첫 추락사고는 연료관 제조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F-X 1차 사업으로 들어오는 F-35 Block 3F의 경우 2018년 4월의 개발 비행 테스트 완료 시 941개의 결함이 확인되었다(2018 DOT&E 보고서, 24쪽). 미 의회 GAO 보고서는 2018년 1월 현재 966개의 공개결함이 발견됐으며, 이 중 180개는 양산 이전까지 개선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2018 GAO 보고서, 14쪽).
- F-X 2차 사업 대상 기종인 F-35 Block 4의 경우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1월 현재 966개의 공개 결함(open deficiencies)이 발견됐으며 이 중 13개가 가장 심각한 결함인 카테고리 1이라고 밝히고 있다.
- 한편 F-35는 탑재 25mm 기관포가 지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19 DOT&E 보고서, 22쪽). 25mm 기관포 결함은 근접전, 방공망 제

압, 상륙 지원 등 F-35의 임무 수행을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 이에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국방부 문서들을 인용해 ‘카테고리 1 결함 (category 1 deficiencies)’에 해당하는 13개의 결함을 공개하면서 F-35 결함에 대한 국방부 문서들은 F-35 프로그램이 초도소량생산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적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씨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제기했다. ‘카테고리 1 결함’은 전투기의 임무 수행을 제약하거나 조종사의 전투준비능력 제한 또는 부상·사망·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전투기나 장비의 손상 또는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들을 말한다(Defense NEWS, 2019. 6. 12.).
- 2020년 5월, 야간 착륙훈련 도중 발생한 미 공군 소속 F-35A의 추락 사고에 대해 미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은 엔진계통 이상은 아니며 한국군이 운용 중인 F-35A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껏 밝히고 있지 않다.
- 2020년 10월, 미 국방부는 F-35기의 성능 평가에 필수적인 최첨단 비행 시뮬레이터 장비(JSE)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올 12월로 예정됐던 시험을 연기하고 록히드마틴에 대한 F-35 전투기의 양산 지정 결정도 2021년으로 연기했다(연합뉴스, 2010. 10. 30.). 이에 초도소량생산 단계에서 들어오는 F-X 1차 사업분 40대는 물론이고 F-X 2차 사업으로 도입하는 20~40대의 성능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FMS 계약방식으로 수입되는 미국 무기의 하자 보증기간은 물품 인수나 검수가 끝난 시점부터 1년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F-X 1차 도입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인수한 시점까지도 치명적 결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F-35A의 인수를 중단하는 한편 F-X 2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결함투성이 F-35A에 공군 조종사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국민혈세를 낭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첨단 고성능 전투기 도입을 위한 F-X 2차 사업은 불요불급한 과잉전력이다.
- F-35A는 심각한 결함이 계속 발생하여 그 성능 발휘를 제약하고 조종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창정비와 부품 조달 등을 일본, 그것도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 방어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선제공격용 F-35A의 도입은 북한, 중국 등과 (핵)대결과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시대 구축에 역행한다.
- F-35A는 남북 군축 협상이 일정에 오를 경우 최우선 군축 협상 대상이 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초공세무기 도입은 삼가야 한다.
- 이에 F-X 2차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 5. 삭감요구액

- F-X 2차 예산 2억 7천 7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부록 : F-X 2차 (2432-301) : (F-35B)**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신규	-	277	-	277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 ① 항모에 탑재되는 수직이착륙전투기를 국외 구매(FMS)로 도입하는 사업
- ② 수직이착륙전투기 운용을 통한 위협 억제 및 해양 분쟁 발생 해역으로 신속한 전개(2021~2025 국방중기계획)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항모 탑재 F-35B 도입의 부당성

#### • F-35B 도입 관련 의혹

- F-X 2차 사업으로 F-35B 20대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항공모함 주력 함재기로 수직이착륙기인 F-35B를 탑재하여 운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나 해군은 항모 탑재 수직이착륙 전투기의 도입 목적, 작전운용개념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 항공모함은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위협 대비를 위해서도, 주변국 위협 대비를 위해서도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점에서 여기에 탑재되는 F-35B도 군사적 효용성을

가질 수 없다.

- F-35B 도입은 군의 위협 평가와 이에 따른 소요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트럼프 정권과의 협상, 곧 미국무기를 대량 구매하여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승인을 얻어내거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낮춰보려는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회의록 2019. 10. 21.).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으로서 F-35B는 군사적 효용성 없어

- 대북 작전에서 F-35B는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을 누릴 수 없다. 유사시 F-35B 등의 각종 항공기들이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것보다 지상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조건에서 F-35B는 전투서열의 후순위에 놓이거나 아예 불필요할 수도 있다.
- F-35B는 수직이착륙을 위해 수직 리프트 팬을 장착하다 보니 지상 배치 전투기에 비해 무장력이 떨어지고 항속거리와 작전반경이 제한된다. 반면 가격은 훨씬 비싸다. 더구나 F-35B는 공중전에 필수적인 기관포조차 장착하지 않아 근접전, 방공망 제압, 상륙 지원 등 임무 수행에서 크게 제약된다.
- 대북 상륙작전에서도 F-35B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중항공모함이 12~20대의 F-35B와 8~10대의 공격헬기를 탑재하더라도 상륙지원을 위해 휴전선 이북 동해나 서해에서 작전할 경우 북한의 해안포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체 방어가 어렵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사거리를 벗어난 공해상이나 휴전선 이남 해상에서 작전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이미 상륙부대 수송이라는 군사적 효용성은 발휘할 수 없게 되며, 탑재 F-35B에 의한 상륙지원 역시 1개 지상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의 지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해 군사적 효용성은 사라진다.
- 더욱이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대규모 상륙작전은 이제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대규모 상륙작전은 없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작전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군도 상륙작전에서 해상상륙보다는 공중상륙 위주로 교리가 바뀌고 있고 해상 상륙전력도 줄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핵을 실전에 배치한 조건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명운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다.

## ② 분쟁 예상 해역의 분쟁 억제라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먼저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우리 스스로 주변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무모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남한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가 남한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도 없다.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식민지라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현재에 무매개적으로 적용해 안보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군비증강을 꾀하려는 군의 알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 『일본방위백서 2020』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해군력은 함정 140척에 50만 톤, 중국의 해군력은 함정 750척에 197만 톤으로 총 톤수에서 일본은 남한의 약 2배, 중국은 남한의 약 7.7배, 일본의 약 4배에 달해 상호 간 전력 균형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한중일 간 이러한 해군력 격차가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거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을 훼손할 만큼 큰 위협으로 되지는 않는다. 일본이나 중국이 남한을 무력 침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남한은 자체 전력으로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 중국은 육·해·공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승수를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 인도 등 16여 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무력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 침공할 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특히 일본은 공군력에서 한국과 비슷하고 지상군 전력에서는 남한에 크게 뒤지기 때문에 해군력 우위만을 갖고 남한을 무력 침략할 수 없으며, 남한이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일본의 침략을 격퇴시킬 수 있다.
- 한편 해군은 독도나 이어도, 7광구 등의 분쟁 수역 수호를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나 이어도, 7광구 등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여기에 F-35B를 탑재한 항모를 파견하는 것은 정치,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수역을 군사적 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명박 정권 때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자는 일각의 주장보다도 더 대결적이고 호전적인 주장이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자초하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중국이 이어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한다면 이는 오히려 패착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패배하게 된다. 굳이 군사적 유, 불리를 따지자면 독도와 이어도의 육지와와 거리와 육지 군사시설 위치에 의거할 때 독도는 일본이 유리하며, 이어도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유리하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 분쟁이든 그 해결을 군사력에 기대서는 안 되며, 해결되지도 않는다.

- 이밖에도 항모와 F-35B를 어떤 작전에 투입하려는 것일까. 주변국 본토에 해병대를 상륙시키고 전투기로 공격하기 위해 투입할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함정들과 수상전이나 대잠전을 수행하기 위해 중항공모함을 투입할 것인가?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해상 교전이 발생해 이에 대응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항모를 투입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다. 거리, 시간, 보유 척수의 제약과 항공모함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낮다. 투입하더라도 패배로 귀결된다. 항모 전력과 해군전력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 이렇듯 남한 해군의 그 어떤 한반도 역외 (성분) 작전에도 항공모함을 파견해 대응해야 하는 경우의 수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로지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 항모 전단의 한 부분으로 동원되어 힘자랑하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실로 클 것이며 결코 우리의 정책적 선택지로 될 수는 없다.

### ③ 미국의 대중 대결 전선에 가담하는 결과를 불러와

- 미국은 F-35의 판매와 장비공급을 지렛대로 반중 대결 전선 구축을 꾀하고 있다. 포린 폴리시도 F-35의 글로벌 배치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비교하여 미국판 ‘공중 일대일로’로서 중국·러시아에 맞선 미국의 배타적 연합전선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포린 폴리시, 2019. 7. 12.).
- F-35는 일본, 호주, 한국 등 아태 지역에만 300여 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일본은 총 147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해 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전력을 갖추게 된다. 호주는 모두 72대의 F-35를 도입할 예정이다. 남한은 총 80대(F-35B를 포함할 경우)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 2019년 3월 12일~13일 미 태평양공군 사령부에서 개최된 F-35 운용국 컨퍼런스에는 미국, 호주, 한국, 일본의 F-35 운용부대 장교, 정보 분석관, 기술진, 군수지원 요원이 참가한 가운데 F-35 운용개념, 전술기량, 공중작전 시 상호운용성 등에 대해 토의했으며 컨퍼런스를 주관한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은 미국, 호주, 한국, 일본 간 연합작전능력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 2019. 9. 16.).

- 미국이 F-35 구매국에게 화웨이 등 중국제 5G 통신망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영국에 F-35를 제공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F-35 제공은 미국이 수입국들을 반중 전선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콰드 플러스 참여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 ④ 필연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동원될 뿐

- 중국 견제와 포위에 초점을 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일·인·호 중심의 콰드와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결합시킨 콰드 플러스라는 지역 다자 집단방위체 구축을 꾀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 2기든 바이든 정권하에서든 대중 군사적 대결을 노골화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집단방위체 구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그 중심 전력을 이루게 될 것이다.
- 이에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해군력을 동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미국이) 도련선을 앞세워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홀로 맞서기는 어렵다”면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조선 역량을 갖고 있고, 선진화된 해군력을 가진 한국 등에 (남중국해의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등에 대한)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VOA, 2019. 10. 10.).
- 또한 뉴욕 주립대 에릭 프렌츠 교수도 최근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 해군의 F-35B를 포함한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STOVL) 항공기 발진이 가능한 LPX-II 항공모함 개발 계획은 이 방향에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0. 10. 12.).
- 이에 한국 해군은 화답이라도 하듯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구현 되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2019. 10. 10.)이라며 신남방정책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복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 ⑤ 창정비와 부품 조달 등의 분야에서 대일 종속 가능성의 현실화

- 국방부는 F-35의 조립과 부품생산, 창정비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F-35의 '정비 및 장비 업그레이드(MRO&U)' 권한을 획득했다. 창정비 권한과 장비 업그레이드 권한이 없는 한국은 일본이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에 창 정비를 맡겨야 한다. F-35의 운영을 일본에게 의존해야 하며 부품 수입과 창정비에 소요되는 운영유지비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본에서 창정비를 맡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남태평양 지역 창정비 권한을 획득한 호주에서 창정비를 받게 되면 그만큼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또한 한국군 F-35가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게 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의 운항기록 등 작전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고스란히 일본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35에 사용되는 자율군수정보시스템(Autonomic Logistics Information System)이 전투기 내부에서 어떤 부품에 문제가 생겼는지 판단하고 군수지원 조직에 정비요구와 함께 문제가 발생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임무계획(작전), 교육 및 기술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이라는 점도 이런 가능성을 높인다.
- 일본이 F-35 부품 공급과 창정비 권한을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자국 요구를 관철하는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해 F-35 엔진 정비 등을 일본에서 하기를 바란다는 보도(경향신문, 2019. 9. 16.)도 미국과 일본이 F-35와 정비 문제를 한일군사협력을 높이고 한일군사동맹을 촉진시키는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최악의 경우 F-35의 기체·엔진 정비를 일본이 거부하는 굴욕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시라도 빨리 F-35 도입을 중단하는 것만이 대미, 대일 종속을 막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말해 준다.

#### ⑥ 해가 갈수록 대폭 늘어나게 될 후속 군수지원 예산 소요

- F-X 2차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막대한 운영유지비다. 합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김종대 전 의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년간 F-35 1기

운영유지비에 2500억 원이 소요되며 4~5년마다 다시 칠해야 하는 스텔스 도료 비용은 추산조차 불가능하다(김종대, 『한국의 무기구매 이대로 괜찮은가?』 2019. 5. 21.).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전투기를 사오는 가격은 전체 수명 주기의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0%가 운영유지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F-35 40대의 운영유지비는 무려 40조 원으로 추산된다. 홍영표 의원은 무기체계를 30년 동안 운용하는데 드는 유지보수 비용은 통상 도입비의 10배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F-35 40여대의 운영유지비를 80조로 추산하고 있다(국회 국정감사회의록 2019. 10. 7.).

F-35를 운영유지하기 위한 후속 군수지원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폭 늘어나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돈 먹는 하마’ F-35의 도입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만이 국부 유출을 막는 길이다.

#### ⑦ 해결되지 않은 결함, 계속된 추락사고

- 2017년에 미 시험평가국은 기체 자체 결함, Block 3F 임무 시스템 등 미해결 결함을 포함하여 대략 1000개의 공개결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17 DOT&E 보고서, 35쪽). 이런 지속적인 성능결함으로 인해 미 국방부는 F-35의 인수를 2018년 4월 잠정 중단한 바 있으며, 2017년에도 같은 이유로 1개월 동안 인수를 거부한 적이 있다. 2018년 9월에 발생한 F-35의 첫 추락 사고는 연료관 제조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F-X 1차 사업으로 들어오는 F-35 Block 3F의 경우 2018년 4월의 개발 비행 테스트 완료 시 941개의 결함이 확인되었다(2018 DOT&E 보고서, 24쪽). 미 의회 GAO 보고서는 2018년 1월 현재 966개의 공개결함이 발견됐으며, 이 중 180개는 양산 이전까지 개선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2018 GAO 보고서, 14쪽).
- F-X 2차 사업 대상 기종인 F-35 Block 4의 경우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1월 현재 966개의 공개 결함(open deficiencies)이 발견됐으며 이 중 13개가 가장 심각한 결함인 카테고리 I이라고 밝히고 있다.
- 한편 F-35는 탑재 25mm 기관포가 지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19 DOT&E 보고서, 22쪽). 25mm 기관포 결함은 근접전, 방공망 제

압, 상륙 지원 등 F-35의 임무 수행을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 이에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국방부 문서들을 인용해 ‘카테고리1 결함(category 1 deficiencies)’에 해당하는 13개의 결함을 공개하면서 F-35 결함에 대한 국방부 문서들은 F-35 프로그램이 초도소량생산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적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씨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제기했다. ‘카테고리 1 결함’은 전투기의 임무 수행을 제약하거나 조종사의 전투준비능력 제한 또는 부상·사망·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전투기나 장비의 손상 또는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들을 말한다(Defense NEWS, 2019. 6. 12.).
- 2020년 5월, 야간 착륙훈련 도중 발생한 미 공군 소속 F-35A의 추락 사고에 대해 미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은 엔진계통 이상은 아니며 한국군이 운용 중인 F-35A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껏 밝히고 있지 않다.
- 2020년 10월, 미 국방부는 F-35기의 성능 평가에 필수적인 최첨단 비행 시뮬레이터 장비(JSE)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올 12월로 예정됐던 시험을 연기하고 록히드마틴에 대한 F-35 전투기의 양산 지정 결정도 2021년으로 연기했다(연합뉴스, 2010. 10. 30.). 이에 초기소량생산 단계에서 들어오는 F-X 1차 사업분 40대는 물론이고 F-X 2차 사업으로 도입하는 20~40대의 성능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FMS 계약방식으로 수입되는 미국 무기의 하자 보증기간은 물품 인수나 검수가 끝난 시점부터 1년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F-X 1차 도입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인수한 시점까지도 치명적 결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F-35A의 인수를 중단하는 한편 F-X 2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결함투성이 F-35에 공군 조종사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국민혈세를 낭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첨단 고성능 전투기 도입을 위한 F-X 2차 사업은 불요불급한 과잉전력이다.
- F-35는 심각한 결함이 계속 발생하여 그 성능 발휘를 제약하고 조종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창정비와 부품 조달 등을 일본, 그것도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 방어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선제공격용 F-35의 도입은 북한, 중국 등과 (핵)대결과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시대 구축에 역행한다.
- F-35는 남북 군축 협상이 일정에 오를 경우 최우선 군축 협상 대상이 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초공세무기 도입은 삼가야 한다.
- 이에 F-X 2차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 5. 삭감요구액

- F-X 2차 : (F-35B) 예산 2억 7천 7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4-2) 보라매 (R&D) (2431-302)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1,040,255	906,867	133,388	906,867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F-4, F-5)를 대체하기 위해 2020년대 전장 환경에 적합한 미디엄(Medium)급 다목적 전투기(KF-X)를 연구개발로 확보
- ②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나, 탑재되는 전자장비, 레이더 등 우수한 기종 개발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주장의 허구성

- 국방부는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라 우리나라 전투기 보유 대수가 2017년부터 2029년까지 최대 370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전투기 전력 공백 주장은 근거 없다. 남북 전투기 보유 현황에서 『2020 일본 방위백서』는 620대 : 550대로, 『2020 밀리터리 밸런스』는 563대 : 545대로 남한이 각각 70대, 18대의 양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질적 측면에서도 남한 전투기는 북한 전투기에 절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2020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남한은 3, 4세대 전투기가 251대(F-4 30대, F-16 162대,

F-15 59대), 북한은 74대(Mig-23 56대, Mig-29 18대)로 남한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2020ミリ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남한은 3, 4세대 전투기가 63%에 달하는 반면 북한은 불과 20%에 그쳐 남한 전투기가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보유 전투기의 80%가 1, 2세대의 구형, 저성능 전투기인 것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대의 FA-50 로우(Low)급 전투기가 2017년까지 전력화되었다. FA-50 실전배치로 남한 공군의 로우급 전력은 훨씬 향상되었다. 아울러 국방부는 F-4 팬텀을 2025년까지, F-5 타이거를 2030년까지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KF-X 사업 지연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나 이는 국방부가 그동안 운영 가능한 기종의 도태시기를 앞당겨 전투기의 수량 부족을 과장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해 왔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 또한 F-35 40대 도입 완료에 이은 F-X 2차 사업(최소 20대~40대) 등으로 하이(High)급 전투기만도 F-15K 60대를 포함 120~140여대에 달할 예정이다. F-15K의 성능 개량도 이르면 2022년부터 시작된다. 하이급 전투기도 양적·질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전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KF-16도 AESA 레이더 장착 등을 통한 4.5세대급 전투기로의 성능개량을 진행 중이어서 미디엄급 전투기 전력도 하이급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한 전투기는 급격한 질적 위주의 전력 증강을 이루고 있으며, 설령 양적 감소가 있더라도 남한 전체 공군 전력의 공백을 우려할 사항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남북 공군 전력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국방부가 상정하는 보라매(KF-X)의 공세적 대북 작전 임무와 그 불법 부당성

- 국방부는 KF-X 전투기 작전 능력에 대하여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나, 탑재되는 전자장비, AESA 레이더 등은 KF-16보다 더 우수한 전투기를 요구하고 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KF-16 성능개량 목적은 KF-16 전투기가 전시 고위험 적 중심 지역에서 항공차단 및 SEAD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전장비를 최신화하고 AESA 레이더로 교체하여 KF-16 전투기의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KIDA, 2010년 사업타당성 조사, 방사청, 2021년도 사업설명서).
- 이에 KF-16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는 KF-X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 KF-X의 스텔

스 기능을 이용하여 700~800개에 달하는 북의 전략표적에 대한 타격 및 이동식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타격 임무에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는 평화적 통일 정책을 천명한 헌법 4조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 위반이다.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는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유엔헌장 51조 위반이다.
-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KF-X의 운용은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군사적 신뢰조치와 단계적 군축 실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 대북 체제보장을 천명한 싱가포르 성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 ③ 과도하게 설정된 보라매(KF-X)의 작전 능력 요구

- 국방부는 KF-X 전투기를 쌍발엔진에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IRST(적외선 탐색·추적 장비), EG TO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 장비) 등을 비롯한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부분적이거나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개발하고 있다.
- 이는 최초로 KF-X 소요를 결정한 합동참모회의 방침(2002년)을 위배한 과도한 작전 능력 요구다. 당시 합동참모회의 결정은 “첨단전투기(하이급)는 직구매하고 기반전투기(미디엄급 또는 로우급)는 국내 생산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방사청과 공군은 KF-X를 F-15K(4세대)의 성능을 뛰어넘어 F-35(5세대)에 필적하는 하이급 전투기로 건조하려고 하고 있다. 로우급의 FA-50 60대 이외에 모든 전투기를 하이급으로 보유하려는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 KF-X의 과도한 작전 능력 중 대표적인 것이 스텔스 기능이다. 스텔스 기능은 고성능의 레이더, 정밀무장력 등과 결합해 은밀한 종심 침투로 전략표적 타격 등 대북 선제적, 초공세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력만으로도 북한의 남침을 충분히 저지, 격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텔스 기능과 같이 대북 선제적, 초공세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은 과잉전력이다.
- 더욱이 국내 기술 수준으로는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워 KF-X 블록-I에서

구현하지 못하고 블록-Ⅱ, Ⅲ 등에서 단계적으로 구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른 개발 지연과 비용 증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같이 KF-X에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제작비를 2조 원(?)이나 더 늘리고 개발 시기를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

- 또한 국방부는 KF-X에 F-15K 등 하이급 전투기의 공대지 무장능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쌍발엔진에 F-16보다 큰 동체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견고한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AGM-142, GBU-28,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고중량의 공대지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시설 공격을 기본 전제로 한 공세적 군사전략은 남북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채택해서는 안 되는 전략이다.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투기가 파괴력이 큰 고중량의 공대지 무기를 탑재할 필요는 없다.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한 SEAD 작전이나 종심 작전을 수행하는 F-15K와 F-35 같은 하이급 전투기만 장착하면 된다. 미디엄급 전투기들은 영토를 침공하는 적기를 요격하는 임무가 주된 임무이며, 따라서 요격 능력을 기본 성능으로 갖춰야 한다. 그러나 남한 공군은 KF-16 미디엄급 전투기도 성능개량을 통해 공대지 무장능력을 늘려가고 있다. FA-50 로우급 전투기는 CAS(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주 임무로 한다. 그러나 FA-50 무장능력은 현 로우급 전투기에 비해 월등하며 CAS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공대지 무장능력을 갖추고 있다. 모든 전투기들이 넘쳐 나는 공대지 능력을 장착하고 있는 것이다. KF-X가 굳이 고중량의 공대지 무기 탑재를 이유로 쌍발엔진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 AESA 레이더는 남한의 하이급 전투기인 F-15K에도 장착되어 있지 않으며, 도입 중인 F-35에만 장착되어 있다.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미국의 F-22, F-35, FA-18E/F와 유럽의 라팔, 타이푼, 일본의 F-2, 러시아 MIG-35, SU-57, 중국의 J-20 등 남한의 하이급에 해당하는 전투기들이다. F-16 블록 60도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KF-X는 레이더로 보더라도 하이급 전투기에 해당한다. F-35에 필적하는 4.5세대 KF-X 전투기를 미디엄급으로 한다면 하이급 전투기는 F-22와 같은 최신티 고성능 전투기이어야 하는데, 이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또한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F-22에 필적하는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KF-X를 하이급으로 개발하려는 국방부와 공군의 작전 능력 요구는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KF-X를 미디엄급으로 개발한다면 북한 공군 전력으로 볼 때 탐지거리를 늘리고 피탐 단면적을 줄인 기계식 레이더로 충분하다.

#### ④ 핵심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부실하게 추진될 가능성 커

- KF-X 사업은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알려진 대로 한국은 첨단 고성능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면허생산 방식을 통한 전투기 확보 과정에서 미국의 견제와 제약으로 첨단기술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연구원이나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KISTEP) 등도 수차례의 사업 타당성 평가와 재평가에서 기술 부족, 수출 가능성 희박 등을 이유로 KF-X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냈었다.
- 한국은 1970년대 후반 최초로 전투기 국산화 사업으로 제공호를 조립 생산했다. 기체의 68% 정도를 국내에서 만들었지만 항공기 가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핵심 부품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도 플랫폼만 한국이 만들었을 뿐 핵심 부품은 블랙박스화해서 미국 장비를 그대로 장착했기 때문에 첨단기술 획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KF-X 사업도 이른바 4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무늬만 한국 자체 개발인 양.
- F-35도 국방부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수의계약과 FMS 방식의 불리한 협상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기술이전과 절충교역 실패를 자초했다. 미국 정부의 AESA 레이더 등 4대 핵심기술 이전 거부가 이를 말해 주며, 이전에 합의한 21개 항목에 대해서도 세부항목에서 새로운 미 정부의 수출 승인 조건을 내세우거나(?) 이전 범주와 시기 등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으로 절충교역 이행이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F-35의 절충교역이 2026년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방위사업청장 발언(국회 『국방위 속기록』, 2016. 6. 30.)과 2019년 9월 KF-X의 상세설계가 마무리되어 시제기가 2021년 5월 출시되고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F-35 절충교역에 따라 이전된 기술이 KF-X 사업에는 거의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F-35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첨단기술로 KF-X를 제작하겠다는 그간의 정부 주장은 공염불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1~3차 차기 전투기 도입이 모두 (첨단) 기술이전에 매우 인색한 미국 전투기를 선택함으로써 절충교역을 통한 첨단기술 확보 실패라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 AESA 레이더의 개발은 선진국도 20~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한국의 단기간에 걸친 AESA 레이더 개발은 실패하거나 부실한 개발이 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또한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지체되거나 그에 따른 예산만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AESA 개발 사업자로 10년 동안 AESA 레이더를 개발해 온 LIG 넥스원이 탈락하고 한화 탈레스가 선정됨으로써 개발 지연과 예산 낭비(정부 연구, 개발 투자비 490억 원)는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KF-X 레이더, 선수교체로 사라진 490억 원, 그리고 ...』, SBS, 2016. 5. 1.). 또한 이후 개발 과정에서도 보기 드물게 9차례의 수정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금도 1,687억 원에서 2,134억 원으로 26%나 큰 폭으로 늘어났다(SBS, 2020. 4. 21.).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20년 8월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하는 등 불과 4년 만에 AESA 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입증 시제에서 탑재 시제에 이르기까지 400억 원을 들여 이스라엘 ELTA의 지원을 받았던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미 AESA 국내 독자 개발 공식은 깨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AESA를 비롯한 4대 핵심기술 개발은 체계개발 자체보다는 개발된 체계 및 무장을 통합하는 체계통합이 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AESA의 체계통합→지상/비행시험의 관문 또한 외국 업체의 지원 없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 ⑤ FA-50 양산사업, KF-16 성능개량, F-15K 성능개량, 차기전투기(F-X) 사업 등과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만

- 국방부는 노후 전투기 도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로우급 전투기 FA-50 양산사업을 추진해 60대를 도입, 실전 배치했다. 또한 F-15K 1차 40대, 2차 20대 도입에 이어 F-35 1차 40대와 F-35 2차 20대~40대 도입 계획 등 하이급 전투기도 대량 도입하고 있다.
- 국방부는 또한 2021~2025 중기계획 기간 중 KF-X 양산에 돌입하는 한편 KF-16, F-15K 전투기에 무장능력 강화, AESA 레이더 장착 등 항전장비 성능개량 등으로 이들 전투기를 4.5세대 전투기로 성능개량한다는 계획이다(2021~2025 국방중기계획).
- 2025년에 마무리되는 KF-16 성능 개량사업에는 총 2조 2,191억 원이 투입된다.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F-15K 성능개량은 F-15E를 보유하고 있는 각국에 보잉사가 제공하고 있는 F-15EX 제원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F-15K 성능개량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당 400~500억 원씩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주간동아, 2020. 7. 18.). 이와 별도로 F-15K에 항재밍 안테나, 피아식별 장비 및 전술데이터링크(링크-16)를 장착해 재밍 저지와 비화(암

호통신)·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등 3,000억 원 규모의 성능개량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4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기준을 내세워 개발 위험이 큰 KF-X 사업에도 18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전투기의 성능개량과 신규 도입에 지나친 과잉,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맹목적인 전력증강 사업에 군이 마치 국민세금을 쌈짓돈 쓰듯 하고 있는 것이다.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 개발비용으로 약 8조 5,000억 원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국방연구원이 해외 전투기 개발업체에 문의한 결과 보잉사는 약 10조 원, EADAS는 13조~17조 원을 예상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사업비가 1.5~2배가량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등 독자 개발에 나선 모든 국가들도 개발비용이 도입가를 훨씬 상회한다. 과도한 중복투자에도 기술력 없이 무리하게 첨단 전투기 개발에 나선 결과 국민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전투기 개발 사업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일본도 록히드마틴사의 지원을 받아 F-2 전투기를 개발에 나섰지만 최초 130대 생산 계획에서 최종적으로는 100대 생산에 그쳤다. 독자적인 국내 전투기 개발 기술 기반을 구축했는지 모르지만 최초 계획보다 2배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최초에 계획했던 성능에 미치지 못했다. 대만도 IDF 개발을 추진했지만 개발비용 과다와 성능 구현의 한계로 최초 260대 생산 계획에서 120대 생산에 그쳤다.

## ⑥ 수출 가능성이 낮아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 커

- KF-X의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쌍발엔진 채택-공대지 무기 등 무장능력 탑재를 늘리기 위해-등으로 타국 전투기에 비해 단가가 높고 운영유지비도 F-15K에 달할 정도로 많이 드는 데 반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은 공대지 무장능력보다는 요격능력을 중시하고 막대한 운영유지비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영국 등도 전투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웨덴만 낮은 단가와 운영유지비를 활용해 그나마 숨통을 트고 있을 정도다.
- 국내 소요로만 손익분기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300여 대의 KF-X 전투기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보유 전투기 대부분을 하이급 전투기로 충당하려는 것으로 과잉전력이며, 운영유지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 따라서 개발 비용 폭증, 기술 등 생산 인프라 미비, 수출 난관 등 KF-X 사업은 타국의 사례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입 지체와 5% 축소 및 현물 대체 요구와 추가 기술 이전 요구는 KF-X 사업의 적지 않는 난관이 되고 있다.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끝내 이탈했을 경우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은 그대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KF-16/F-15K 성능개량 사업 등과 중복 사업으로 예산 낭비다.
- KF-X 사업은 F-35의 절충교역 실패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추진되고 있다. 이 리스크를 극복하고 국내 기술로 4.5세대 첨단 고성능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호랑이 그리려다가 고양이도 못 그리는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 고양이를 그리는 데도 9조 원에 달하는 개발 비용과 양산비용까지 포함해 18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게 된다.
- 부정적 결과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KF-X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K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ROC를 낮추고 국내 기술 수준에 따른 명실상부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중단해 향후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 5. 삭감요구액

- 보라매 (R&D) 예산 9,068억 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3-20) 특수침투정 (2332-320)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72	208	136	208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 ① 현재 운용 중인 해상침투전력의 노후 도태에 따른 특수침투정을 확보하는 사업
- ② 기동성, 은밀성 등 성능이 향상된 특수침투정을 확보하는 사업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 ① 군사적 효용성 없는 특수침투정 사업

- 특수침투정 사업은 한국군의 공세적 작전개념에 따라 개전 초기에 특수부대원들을 은밀하게 북한의 동·서해로 상륙시켜, 평양을 비롯한 북한 핵심 전략지역으로 신속하게 침투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 그러나 특수침투정을 통한 은밀한 침투/상륙작전은 레이더/TOD/관측병/수중 음탐 장치 등의 감시장치를 뚫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날씨, 조류 등에 의한 침투 실패 가능성도 있다. 경계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평시에도 북한 잠수정이나 반 잠수정이 남한의 관측병이나 TOD에 피탐되어 발각된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전시 경계가 강화된 조건에서 특수침투정을 이용한 침투가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 특수부대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무모한 작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특수

침투정을 개발한 미국이나 스웨덴 등이 자국에서 개발된 특수침투정(소형가잠보트, SRC)을 실제로 전력화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 특수침투정이 은밀한 침투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탐지가 가능한 전탐권 안에서 반잠수 혹은 완전잠수를 해야 한다. 특수침투정이 완전히 잠항할 때는 축전지를 사용해야 하므로 미국의 MRCC는 완전 잠항 거리가 17km(5.5kts로 이동 시)이며, 스웨덴의 Seal SDV도 18km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수침투정이 모함에서 분리해 잠항하기 전까지 수상으로 접근할 때 북한 레이더의 성능과 특수침투정의 스텔스 기능 여하에 따라 피탐될 가능성도 있다.
- 또한 특수침투정이 특수전지원함에서 분리되기 전 선체가 큰 지원함이 피탐/발각됨으로써 특수침투정의 침투를 예견할 수 있다. 특수전지원함이 북한 해상감시레이더를 피해 항해하더라도 정찰기나 잠수함 등에 의해서도 피탐/발각될 수도 있다.
- 이에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은 “이게(특수침투정) 은밀한 작전을 위한 장비인데 은밀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 타는 특수부대 애들이 몰살당할 수가 있어요. 그 쪽에서 사전에 침투를 하겠구나 예측이 돼버리잖아요.”라며 특수침투정을 이용한 침투/상륙작전의 무모함을 지적하고 있다(MBC, 2020. 9. 9.).

<표1> 특수침투정의 제원 및 성능

		미국(STIDD MRCC)	스웨덴(DCE AB Seal SDV)
속력	수상(kts)	33(경하)/31(만재)	35(경하)/30(만재)
	수중(kts)	5.5	5
항해거리	수상(NM)	200(20kts)	200
	수중(NM)	9(5.5kts)	10

(출처 : 『특수침투정 기술 발전 방향\_국방기술품질원』)

- 또한 특수침투정이 요행으로 북한 해안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전시에 촘촘히 구축되어 있는 해안경비를 피해 육지에 상륙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륙을 위해서는 아군의 근접공중지원이나 함포 지원이 필요하나 개전 초기 아직 제공권이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조건에서 지원은 가능하지 않으며, 설령 근접공중지원을 받아 상륙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은밀성을 상실해 목표 지점이나 시설까지 이동하기 어렵다. 또한 목표 지점 또는 시설 타격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헬기나 특수잠수정 등을 이용

한 생환을 보장받기 어렵다. 개전 초기 특수부대 침투는 해상은 물론 지상, 공중 등 그 어떤 경로로 침투하든 침투 및 임무 성공과 생환을 보장받기 어려운 무모한 작전이 아닐 수 없다.

## ②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역행하는 사업

- 특수침투정을 통한 해군 특수부대원들과 육군 특임여단(참수부대)의 침투/상륙은 북한 지휘부 제거와 전쟁지휘시설 파괴 등을 위한 것으로 대북 초공세적 작전이다.
-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채택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해군은 특수침투정 도입을 통한 UDT나 SEAL 부대, 특임부대 침투 등 북한에 대한 초공세적인 부대 및 전력구조를 갖추고 있다. 참수 작전은 전시 국가 간 정규전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반인도적/비신사적 행위다.
- 또한 북한 지휘부 제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특임부대(참수부대) 및 특수침투정 도입은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해 나가기로 한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에 반한다.
- 한편 특수침투정 사업은 특임부대 창설과 함께 킬 체인-한국형 MD-대량응징보복 전략이라는 3축 체계 개념을 전면 폐기하지 않고 용어만 ‘핵 WMD 대응 체계’로 바꿔 온존시키고 있는 문제인 정부의 이중성이 반영된 사업이다.

## ③ 사업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사업

- 특수침투정은 수상·반잠수·잠수 운항모드에 맞게 선체가 개발되고 제조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침투정은 수상 항해 시 레이더나 관측병의 탐지로부터 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스텔스 성능과 수중 장거리 운항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 이 때문에 사업초기(2012년) 탐색개발을 담당했던 대우조선해양은 특수전지원함의 특수침투정은 국내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 방산기업과 기술협력을 통해 생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2015년 10월 선행연구를 통해 특수침투정 사업을 국내개발로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국내개발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사업 예산이 1,400억 원에서 3,1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그러나 그동안의 개발 과정과 현재의 국내 기술 수준에서 미국과 스웨덴 등이 개발한 특수침투정보다 높은 성능을 갖춘 특수침투정을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특수침투정 탐색개발을 담당했던 ‘우남 마린’이 시제품조차 영국 업체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만들었으며, 이 시제품의 시험평가에서 여러 가지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 준다(MBC, 2020. 9. 9.).
- 특수침투정 사업이 국내 기술의 한계로 탐색개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업이 목표 기간 내에 개발이 불투명하며,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 ④ 방산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수침투정 사업

- 특수침투정 사업에 낙찰된 ‘우남 마린’은 작은 규모의 선박 개발 경험만 있을 뿐 잠수정 개발 경험은 전혀 없는 회사다. 더욱이 입찰 과정에서 2등 업체보다 제안 가격을 높이 제시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선정되었다. 이 선정을 두고 업체 관계자는 ‘우남 마린’이 실적도 없고 설계 능력도 없다며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MBC, 2020. 9. 9.).
-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2019년 4월 특수침투정 시제품이 시험평가에서 여러 가지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시험평가서를 보면 보완 요구 사항만 A4용지 10장이 넘는다”며 사실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야 했는데 합동참모본부가 왜 ‘적합’ 판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드러냈다(MBC, 2020. 9. 9.).
- 결국 감사원은 특수침투정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특수침투정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현재도 감사로 인해 방위사업청이 올 6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비용분석 용역연구’를 비롯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소요 예산은 늘고 지출은 계속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특수침투정 사업은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사업 목적 달성도 어렵다.

- 특수침투정 도입은 대북 초공세인 작전 수행을 위한 무기체계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시대역행적 사업이다.
- 방산비리 의혹 제기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 5. 삭감요구액

- 특수침투정 예산 2억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3-17) 특수전지원함 (2332-314)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3,488	22,557	19,069	22,557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 ① 현재 운용중인 해상침투 지원함정 노후 도태에 따른 특수전지원함을 확보하는 사업
- ② 은밀성, 기동성 등 성능이 향상된 특수전지원함을 국내연구개발로 건조하는 사업으로 특수부대의 해상 침투작전 시 생존성과 기동성, 탑재능력이 크게 향상됨(방위사업청, 『제10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2017. 4. 26.).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 ① 무모하고 군사적 효용성 없는 특수전지원함 사업

- 특수전지원함은 특수침투정(소형가잠보트)을 통한 해군 UDT/SEAL 부대나 경우에 따라서는 육군 특임부대의 해상 침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침투정이 분리되어 독자 이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특수침투정의 해상 이동을 지원해 준다.
- 그러나 특수전지원함은 선체가 커 레이더에 탐지되기 쉽고 정찰기나 잠수함에 의해 피탐/발각될 가능성이 있어 특수침투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 이에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은 “이게(특수침투정) 은밀한 작전을 위한 장비인데 은밀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 타는 특수부대 애들이 몰살당할 수가 있어요. 그

쪽에서 사전에 침투를 하겠구나 예측이 돼버리잖아요.”라며 특수침투정을 이용한 침투/상륙작전의 무모함을 지적하고 있다(MBC, 2020. 9. 9.).

- 또한 특수침투정이 요행으로 북한 해안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전시에 촘촘히 구축되어 있는 해안경비를 피해 육지에 상륙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륙을 위해서는 아군의 근접공중지원이나 함포 지원이 필요하나 개전 초기 아직 제공권이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조건에서 지원은 가능하지 않으며, 설령 근접공중지원을 받아 상륙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은밀성을 상실해 목표 지점이나 시설까지 이동하기 어렵다. 또한 목표 지점 또는 시설 타격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헬기나 특수잠수정 등을 이용한 생환을 보장받기 어렵다. 개전 초기 특수부대 침투는 해상은 물론 지상, 공중 등 그 어떤 경로로 침투하든 침투 및 임무 성공과 생환을 보장받기 어려운 무모한 작전이 아닐 수 없다.
- 특수침투정의 침투가 어렵다면 이를 실어 나르는 특수전지원함의 용도도 사라진다.

## ②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역행하는 특수전지원함 사업

- 특수침투정을 통한 해군 특수부대원들과 육군 특임여단(참수부대)의 침투/상륙은 북한 지휘부 제거와 전쟁지휘시설 파괴 등을 위한 것으로 대북 초공세적 작전이다.
-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채택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해군은 특수침투정 도입을 통한 UDT나 SEAL 부대, 특임부대 침투 등 북한에 대한 초공세적인 부대 및 전력구조를 갖추고 있다. 참수작전은 전시 국가 간 정규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반인도적/비신사적 행위다.
- 또한 북한 지휘부 제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특임부대(참수부대) 및 특수침투정 도입은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해 나가기로 한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에 반한다.
- 한편 특수침투정 사업은 특임부대 창설과 함께 킬 체인-한국형 MD-대량응징보복 전략이라는 3축 체계 개념을 전면 폐기하지 않고 용어만 ‘핵 WMD 대응 체계’로 바꿔 온존시키고 있는 문제인 정부의 이중성이 반영된 사업이다.

- 특수침투정이 초공세적이고 반인도적 성격의 무기체계라면 특수침투정을 실어 나를 특수전지원함도 초공세적이고 반인도적 성격의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 ③ 특수침투정 사업의 좌초로 특수전지원함 사업도 좌초될 가능성 커

- 특수침투정 사업 초기(2012년) 탐색개발을 담당했던 대우조선해양은 특수침투정은 국내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 방산기업과 기술협력을 통해 생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개발이 어렵다고 한 대우조선해양의 우려대로 특수침투정의 탐색개발을 맡은 ‘우남 마린’의 시제품은 시험평가에서 여러 가지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MBC 2020. 9. 9.). 특수침투정이 목표 기간 내 개발이 어렵고 설령 개발된다고 해도 실전에서 실제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감사원은 특수침투정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특수침투정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현재도 감사로 인해 방위사업청이 올 6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비용분석 용역연구’를 비롯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 특수침투정이 좌초된다면 특수전지원함의 용도도 함께 폐기된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특수침투정은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반면 초공세적 대북 작전을 지원하는 무기체계로 남북 간 신뢰구축을 저해하고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킬 뿐이다.
- 방산비리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특수침투정 사업의 좌초로 함께 용도가 폐기될 특수전지원함 사업에 예산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 5. 삭감요구액

- 특수전지원함 예산 225억 5,7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4-8)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 (2432-308)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641,948	704,003	62,055	704,003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 ① 군이 운용중인 현용헬기(UH-1H, 500MD 기본기) 노후화에 따른 대체전력으로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를 확보하는 사업
- ②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되고 기동성 및 생존성이 향상된 주/야간 작전수행 능력을 보유한 한국형 기동헬기 확보 필요
- ③ 최초 국산헬기 양산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노후 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이 우려되어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주장의 허구성

- 남한 헬기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한은 680여 대 (육·해·공 보유)를 보유해 불과 290여 대를 보유한 북한에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국방부가 노후화되어 대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UH-1H 및 500MD 헬리콥터는 230대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남한이 보유한 헬리콥터는 450대(육군만 342대)로 북한보다 많으며,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헬기

전력의 남북 격차는 한층 커진다. 남한이 보유한 UH-60, CH-47, 수리온 등 중·대형 다목적(기동, 수송, 탐색·구조) 헬기(189대)는 북한 보유 Mi 4/8/17/26 등의 다목적 헬기(67대)에 비해 수송 능력과 항속거리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다는 점에서도 국방부의 전력공백 주장은 근거 없다.

- 더구나 남한은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대형 공격용 헬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의 노후 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우려는 전혀 근거 없고 헬기 소요는 과장, 왜곡된 것이다.

**<표1> 남북 헬기전력 비교**

구분		북한		한국(육군)	
		기종	대수	기종	대수
공격				AH-1F 코브라 AH-65E 아파치	60 36
다목적		500 D/E	80	500D, MD-500(대전차 공격)	130 45
기동 수송 기타	대형	Mi-26	4	CH-47D 시누크 MH-47E 시누크	31 6
	중형	Mi-4, Mi-8 / Mi-17	48 15	KUH-1 수리온 UH-60 블랙호크	65 87
	소형	Mi-2	139	Bell UH-1H Bo-105	100 12
합계			<b>286</b>		<b>572</b>

(출처 : 『2019년ミリ터리 밸런스』)

**<표2> 남북 기동헬기의 질적비교**

구분	북한		한국	
	Mi-2	Mi-4	UH-60	CH-47
수송능력	800kg/8명	1,740kg/11명	3,630kg/11명	12,000kg/40명
항속거리	170km	250km	600km	1,207km

(출처 : 북한 무기체계의 질적·양적 평가 보고서 『한국국방안보포럼』, 2010. 10.)

- 일반적으로 헬기나 전투기 등 항공기의 노후화는 사용 연한이 아닌 운용시간으로 결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헬기의 기준수명과 운용수명을 넘기더라도 실제 운용을 적절히 조절해 헬기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도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전력 공백 문제도 크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유용원의 군사세계 2014. 1. 14.).
- 국방부가 도태 대상으로 제기하는 500MD 역시 운용시간이 “2만 시간 중 평균 6천 시간으로 향후 20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방부 스스로 밝히고 있다. (국방뉴스, 2018. 11. 1.)
- 일선에서 헬기를 정비하는 기술자들도 “1960년대에 만들어진 헬기라고 할지라도 정비하고 부품을 교체하면 겉에 기골 외에는 안에는 새것이나 다름없다”, “헬기의 규정 수명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뉴스1, 2019. 11. 9.).
- UH-1H 제조사 벨사도 UH-1H 헬기 기체 수명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무제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육군 항공기 정비단 민영화 타당성 검토 및 추진 방향』, 항공우주정책연구원, 2012. 1. 10.). “UH-1H 헬기는 생산량이 많아 다른 노후 기종과 달리 부품 확보에 큰 애로가 없”(서울경제, 2018. 7. 12.)다는 점도 국방부의 UH-1H의 도태 결정과 수리온 양산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최근 국방부는 한국에 도입된 지 20~25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성능에서도 수리온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블랙호크(UH-60) 헬기(103대)도 강제로 퇴역시키고 3조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한국형 기동헬기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국방부의 계획은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 목적이 노후 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이라는 군사적 소요가 아니라 국산 헬기 양산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경제적 명분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조선일보, 2020. 10. 6.). 그러나 이런 경제적 명분이 방산업체의 낮은 이익률로 볼 때 수조 원의 예산 낭비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부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 합참은 2018년 8월 “헬기 기체 수명에 관한 연구” 용역을 안보경영연구소에 의뢰하였다. 이 연구는 UH-60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현 운용 헬기의 사용 수명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효율적인 헬기 운용 및 성능개량 적정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가 2019년 1월에 나왔으나 합참은 이를 공

개하지 않고 있다(온나라 정책연구소 <http://www.prism.go.kr>, '헬기 기체 수명에 관한 연구' 보고서 비공개). UH-60의 수리온 헬기로의 대체가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이라는 연구결과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는 헬기의 작전운용에 적합하지 않다

- 기본적으로 헬기는 공격용 헬기든 다목적 헬기든 자체 방호력이 취약해 지대공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산악지형이 70% 이상에 달하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막강한 지대공 능력을 고려하면 남한 헬기의 생존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2001년, 미국 보잉사가 한반도에서 공격헬기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워게임(war game)에서 아파치 헬기는 100% 격추당했다(아시아투데이, 2011. 4. 15.).

## ③ 기동헬기 양산은 대북 공세적 입체기동작전과 '신속대응사단 창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역행한다

- 국방부는 『'21-'25 국방중기계획』에서 우리 군을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기 위해 육군을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을 해체하고 숙련된 간부 증원, 기동·화력 등이 증강된 전력보강 및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 보도자료, 2020. 8. 9.).
- 신속대응사단은 “공중기동 능력을 갖추고 원거리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뉴시스, 2019. 10. 11.)하며, “항공기로 최단시간에 적진 중심지역 깊숙이 침투해 요충지 점령과 핵심부대 격멸 등 전략·전술작전을 수행한다. 개전 초기 적 심장부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침투시켜 치명타를 가해 조기에 전쟁을 종결짓는 역할”(이데일리, 2019. 4. 16.)이라고 한다. 또한 “(수리온 양산과 관련해서) 2020년대 초반 4차 양산 이후 추가로 130여 대를 생산해 새로 창설될 신속대응사단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서울경제, 2019. 6. 4.)고 한다. 만약 이 보도대로라면 군은 “대화 무드 속에 북한을 자극할 우려 등 때문에 폐기됐다고 봐도 된다”(조선일보, 2018. 7. 28.)는 보도에서 보듯이 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는 ‘공세적 신작전개념’을 폐기해놓고도 ‘신속대응사단’ 창설과 기동헬기 도입 등 전력 차원에서는 ‘공세적 신작전개념’수행을 위한 부대구조를 갖춰 가고 있다.

- 그러나 “미국은 한국군 단독 공수작전은 초기 피해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앙일보, 2018. 8. 26.). 이는 공군에 의한 북 방공망 제압(SEAD)과 제공권 장악 없이 신속대응사단을 투입할 경우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북 방공망을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한 뒤에 ‘신속대응사단’을 투입한다면 이때는 이미 신속대응이라는 군사적 효용성이 사라진 뒤다. 따라서 개전 초기에 ‘신속대응사단’을 투입하는 것은 아군의 생명을 불모로 잡는 무모하고 맹목적인 작전이 아닐 수 없다.
- 한편 공군이 ‘근접항공지원(CAS)’ 작전을 전개할 경우 (공격)헬기에 의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은 더 높은 고도에서 기동하는 공군 전투기의 ‘근접항공지원’ 작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낮은 고도에서 작전하는 (공격)헬기가 아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량의 (공격)헬기 도입이 군의 전투수행능력을 높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수리온 헬기의 무분별한 도입에 나서고 있는 육군의 욕심은 한참 지나치다.
- 한편 초공세적 작전개념을 수행하는 부대를 창설하고, 이러한 초공세작전 수행을 위해 수리온 헬기를 대량생산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반한다.

#### ④ 추락사고와 성능 결함 등 안정성에 문제가 많다

- 수리온의 성능 결함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감사원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3차 양산이 진행되는 지금까지도 성능 결함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표3> 수리온 주요 사고 일지(표)

날짜, 장소, 상황	사고 내용	처리 결과
2013년 2월~2016년 1월	• 5차례 윈드실드(전방유리)가 파손	
2014년 8월, 육군항공학교	• 수리온 16호기가 메인 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와 동체 상부 전선 절단기 충돌로 파손, 엔진 정지됨	
2015년 1, 2월,	• 엔진 과속 후 정지돼 비상착륙함	

육군항공학교에서 비행훈련 중이던 2대 (12·2호기)		
2015년 12월, 4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한 결함으로 추락해 기체가 크게 파손됨</li> </ul>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시착</li> </ul>	
2018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한 해병대 마린온(MARINEON) 헬기가 추락 6명의 사상자를 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관·군 합동조사위 '로터 마스트' 결함으로 발표, 2019년 운항 재개</li> </ul>
2019년 11월, 강원도 양주에서 훈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체 결함에 따른 비상착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군은 같은 기종 110여 대에 대한 운항중지 명령 내림</li> <li>군은 사고 원인에 대해 '주 회전날개' 4개 중 1개에서 충격 흡수장치(댐퍼)의 고정볼트가 풀려 발생했다"고 밝힘</li> <li>군은 수리온 헬기 운항을 중지한 지 37일만인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재개함</li> </ul>
2020년 3월 26일, 시험 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인 기어박스 덮개 연결 부위 균열로 열흘 넘게 멈춰 섰</li> <li>다른 기체에서도 추가로 같은 이상이 발생함. 실전 배치된 수리온까지 운항이 전면 중지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항공우주산업 "전수조사 때문에 (운항) 중단" 조치</li> <li>부품 제조사는 "균열이 빠르게 퍼지진 않아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육군은 운항을 재개함</li> </ul>

(출처 :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기사 정리)

- 게다가 방위사업청은 수리온의 결함을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 수리온의 전력화를 강행해 왔다. 감사원은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비행 안전성 등 감사 결과』(감사원 보도자료, 2017. 7. 16.)에서 수리온 개발과 전력화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주요 부분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메인 로터 블레이드’와 동체 상부에 설치된 ‘전선절단기’ 간의 충돌 가능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규격서 및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됨. 2014년 수리온 16호기가 활주이륙 도중 ‘메인 로터 블레이드’와 ‘전선 절단기’ 충돌로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전선절단기’ 설계 변경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활주이륙 시 성능을 제한하는 내용(사용 출력을 60%로 제한)으로 ‘사용자 교범’만 수정하고 종결 처리됨. △2015년 1월과 2월,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비상착륙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2015년 12월 4호기 추락 사고를 초래. △2016년 3월, 수리온의 체계결빙 성능시험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여 체계결빙 성능이 ‘국방규격’에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수리온을 계속 전력화함. △미국 연방항공청 감항인증기준인 ‘FAR 29(회전익 항

공기에 대한 기술 기준) 등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는 ‘수리온 감항인증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비행 안전성이 저하되고 민수용 전환에도 불리하게 됨 등이다.

<표4> 수리온 운용, 유지상 주요 문제점

문제점	내용	
	발생횟수	원인 및 진행 경과
방빙 장치 관련 엔진 결함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빙 장치 고열로 인한 공기흡입 유도깃 레버가 고착</li> <li>- 엔진 교체(2EA), 4호기 추락으로 대파</li> </ul>
중앙 동체 프레임 크랙 발생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동 흡수기 장착을 위해 보강한 더블러 끝단 장착부에서 응력 집중과 반복된 하중으로 하부 프레임에 균열 발생</li> <li>- 비행 안정성 및 원인 검토 후 추가 후속조치 예정</li> </ul>
윈드 실드 파손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착륙 또는 상공 비행 시 윈드 실드 파손</li> </ul>
주회전 날개와 전선절단기 충돌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주 이륙 도중에 주회전 날개와 전방 동체 상부에 부착된 전선절단기 충돌 사고 발생</li> </ul>
기체 내부 빗물 유입	모든 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체 결함 불량 또는 외부 환경 노출에 따른 실런트 마모 등 추정</li> <li>- 생산 단계 실링 작업 보완 및 검사 강화 추진 중</li> </ul>
유압변환기 작동 불량 및 타이어 파손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업체(이탈리아의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유압변환기 조립 공정 불량으로 추정</li> <li>- 조립 검사 공정 강화, 수락시험절차 강화 등</li> </ul>
착륙 보조장치 조기 마모	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륙 보조장치 지면 마찰로 조기 마모 발생</li> <li>- 마모방지패드 장착 예정</li> </ul>
매인 컴퓨터 부팅 실패	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내부 펌웨어(Firmware) 오류</li> <li>- 부팅 시 내부 타이밍이 최소 100ms 필요하나 1ms로 설정됨</li> </ul>
화물 인양 고리 작동 시 기체 간섭	27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 인양 고리 사용 시 교범에 명시된 운용범위(30°)를 초과 하여 기체 간섭 발생</li> </ul>
충돌 방지등 작동 불량	2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돌 방지등 미점등 및 간헐적 미점등, 충돌 방지등 점멸 불가능</li> <li>- 전원공급기 회로카드 재설계 필요</li> </ul>
연료량 표시장치 에러코드 시현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EMI/EMC 시험 시 신호처리장치(SCU) 및 연료량 측정막 대간 알루미늄 호일을 적용하여 부적합한 EMI/EMC 시험 실시</li> </ul>

(출처 :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보고서』, 감사원, 2016. 10.)

- 2018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는 계속 발생하는 수리

온 결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무마해 온 방위사업청의 안일함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마린온 추락 사고에 대해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헬기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인 '로터 마스트' 결함 때문이라고 최종 발표했다(2018. 12. 21.).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 때문에 로터 마스트가 끊어지며 메인로터(프로펠러)가 날아가고 헬기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로터마스트 균열은 소재 제작사인 Aubert & Duval사의 제작 공정중 동일 Lot(4개)의 열처리 공정 오류(공냉식을 수냉식으로 수행)로 발생하였으며, 공정오류 인지 후 추가 열처리를 하는 자체 보완조치를 하고 에어버스 헬리콥터(AH)에 납품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고기와 동일 생산 Lot(4개) 로터마스트 3개에서 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1개가 사고 마린온에 장착되고 나머지 2대는 수리온에 장착됐다는 것이다. 2019년 봄, 군은 모든 수리온 로터 마스트에 대한 정밀검사와 시험비행을 마쳤으며 정상운항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수리온 부품 결함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은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 생산된 것이다. 수리온은 2차례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기체 결함과 비행 안전성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왔다. 2017년 감사원은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상륙기동헬기, 의무수송헬기 등에 대해 “비행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양산이 추진되었다.”고 지적했다(『군용기 인증 및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실태』, 77쪽, 2017. 7.).
-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권재상은 국회에서 “로터 마스트 파단이란 항공기에서 있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헬리콥터가 나온 지 80~90년 정도 되어 가는데 이래로 그러한 사고는 거의 없었”다고 밝히고 마린온 사고에 대해 헬기 자체의 제작과정에서의 중대한 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져야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2018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 2018. 10. 10.).
- 마린온 사고 직후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 등은 수리온 기어박스의 설계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르웨이 헬기 슈퍼 푸마(수리온의 베이스 설계 모델)의 프로펠러 탈각으로 인한 추락 사고와 관련해 노르웨이 사고 조사위원회가 유럽항공에 기어박스에 대해 재설계 권고를 했으며, 수리온 기어박스 설계도 같은 권고 대상이라고 지

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한국형 헬기 사업단장 유옥상은 “현재는 시정이 안 된 상태”라고 인정했다(제20대 국방위 362회 3차 회의록, 2018. 7. 25.).

-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도 2016년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동일한 기종(슈퍼 푸마 EC-225)으로 확인됐다. 이 헬기 기어박스는 노르웨이 사고조사위원회가 재설계를 권고한 것으로 수리온과 마린온의 기어박스과 동일한 대상이다.
- 정종섭 의원은 마린온 사고 직후 기어박스 설계의 오류 문제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메인 기어박스를 완제품 형태로 들여와서 조립을 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설계를 가져오려면 그것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와 그런 것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20대 국방위 362회 3차 회의록, 2018. 7. 25.) 라며 기어박스 설계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기어박스와 로터 마스트 등 핵심 부품의 결함 여부를 우리 기술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언제 또다시 기체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며, 그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도, 책임소재를 묻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 수리온은 심한 기체 진동도 문제였다. 기체 진동이 심해 윈드 실드가 자주 파손되고, 프레임에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마린온 사고 기체도 진동이 심해 여러 차례 정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린온 추락 사고로 숨진 고 박재우 상병의 유족이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에 보낸 마린온 사고의 심층조사와 후속조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에서 마린온의 진동 문제와 관련하여 “매뉴얼에 의하면 IPS(진동 허용 기준치) 0.5 이상에서는 이륙이 불가하고 정비 시행 조치가 돼야 한다고 쓰여 있지만 사고 헬기는 0.55에서 이륙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연합뉴스, 2018. 10. 15.).
- 안정성 문제는 조종사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최우선적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 한국형 기동헬기의 성능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를 양산,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불러와 군인들의 생명을 계속 위험에 빠트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 ⑤ 뒤죽박죽 사업 추진으로 혈세낭비만 초래

- 감사원의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1차)』(2015. 10.), 『군수장비 획득 및 운

용관련 비리 기동점검』(2016. 10.), 『군용기 인증 및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실태』(2017. 7.) 보고서는 수리온 개발과 전력화 과정의 혈세낭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수리온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계획 실패로 156억 원의 예산이 낭비 됨. 미국과의 기술이전 협의도 없이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를 추진하다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승인을 거부당해 18억여 원의 소프트웨어 설계비 낭비.
  - 체계결빙 규격 미달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개선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 없이 전력화를 재개함으로써 한국항공에 수리온 전력화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약 4,571억 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됨. 또한 미전력화된 물량의 개선비용 약 207억 원을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 수리온 2대(12호기, 2호기)가 훈련 비행 중 엔진 결함에 의한 엔진 정지로 비상 착륙한 사고가 난 후 엔진 교체 비용 24억 원이 낭비됨.
  - 수리온 4호기가 엔진 결함으로 추락해 194억 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함.
- 2015년 12월 발생한 수리온 4호기 추락 사고에 대해 정부가 엔진 결함 때문이라며 수리온 제조사 KAI와 엔진 개발사 한화 에어로우 스페이스(구 삼성테크윈)에 17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19. 9. 10.).
- KAI는 2012년 수리온을 납품한 후 기술지원, 정비지원 등 수리온 운용 등에 관한 후속 지원업무도 수행했다. 그런데 후속지원에 관한 용역계약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수행한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적용대상으로 했고, 2013년과 그 이전에 수행한 업무는 제외되었다. 이에 KAI는 방위사업청에 2013년도와 그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93억 8,165만원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이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고 38억 8,162만원을 KAI에 지급하라고 밝혔다(뉴스1, 2020. 9. 8.). 이 또한 방사청의 방만하고 허술한 사업 운영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된 사례다.

#### ⑥ 최초 국산헬기 양산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 ‘2019년도 방위산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 11년간 방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해마다 하락했고 2017년에는 0.5%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7년 제조

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7.6%이라는 점을 비교하면 극히 낮은 수준이다. 방산업체 총 영업 이익 역시 2010년 6,898억 원에서 2017년 602억 원으로 10분의 1 규모로 급감했다(월간중앙, 2020. 4. 19.). 이런 현상은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19년 방산업체 경영실태'에 따르면 방산업체 방산 부문의 해외 매출액은 대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매출액이 2018년 대비 4.5% 증가한 데 비해 해외 매출액은 11.5%나 줄었다. 총 매출액은 2018년보다 2.2% 증가했는데 대부분 항공·함정 분야의 무기산업이 반영된 결과다. 고용은 2019년보다 줄어든 3만 3천 명 수준이다(연합뉴스, 2020. 7. 2.). “방위산업은 민간업체에게 부담스러운 사업영역”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방산업체의 성장 정체와 수익성 약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함정과 항공기 분야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자로 방산업체의 명맥이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양영철 외, 『한국의 방위산업 연례분석 2019』, 2020). 이는 방위산업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예산이 KAI와 같은 부실 방산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더욱이 한국형 기동헬기의 경우 잦은 결함으로 인해 수출 길도 막혀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13년부터 수리온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2017년 한 국가와 수출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방산비리 수사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비즈니스포스트, 2018. 9. 18.), 2018년에는 필리핀 대통령이 수리온에 직접 탑승하는 등 큰 관심을 보여 수출이 가시화됐으나 그해 7월 마린온 추락 사고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필리핀 수출도 최종 무산되었다(동아일보, 2018. 12. 12.). 수리온과 똑같은 기술적 결함을 안고 있는 마린온이 기술적 결함을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기체의 결함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제작 단가와 해외 부품 의존도로 볼 때 가격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위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낮은 이익률로 볼 때 한국형 기동헬기 양산에 쏟아부은 예산낭비를 보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으로 국가경제를 위한다면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한국형기동헬기 사업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4. 결론 및 건의사항

- 한국형 기동헬기 도입 사업은 남한 헬기 전력이 북한 헬기 전력을 압도하는 상황에

서 시급하고 긴요한 사업이 아니다.

- 국회는 한국형 기동헬기 도입 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국방부에 제기된 각종 성능 결함에 대한 철저한 조사부터 촉구해야 한다.
- 국방부는 국내 항공산업과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허울뿐인 명분을 들어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 5. 삭감요구액

-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 예산 7,040억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4-7) 상륙기동헬기 (2432-307)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248,916	179,261	69,655	179,261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한국형 기동헬기를 기반으로 상륙기동헬기를 개조 개발하여 해병대 입체고속 상륙 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전력으로 운용
- ② 상륙기동헬기의 국내양산 추진으로
  - 해상운용기술의 해외 의존 탈피와 막대한 해외구매 비용 절감
  - 기술파급 효과로 첨단산업 육성 및 국부 창출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 확보라는 사업 목적의 부당성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해병대를 입체고속 상륙작전, 전략도서 방위가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작전이 가능하도록 정보·기동·화력이 보강된 상륙사단으로 개편하고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로 구성된 해병 항공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국방일보, 2019. 9. 18.).
- 상륙작전은 “함정, 주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해군과 상륙군이 해양을 통하여 적

해안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공격작전”(『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2004. 12.)이라는 설명에서 보듯이 초공세작전이다.

- 또한 입체고속 상륙작전은 “미 해병대의 초수평선 상륙작전(OTH)의 한국판이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은 적의 강력한 방어망을 뚫기 위해 수평선 너머 먼 바다에서 발진한 뒤 해상과 공중을 통해 육지로 신속히 이동하는 작전이다. 이 작전을 한반도 전구에 맞도록 재해석한 게 입체고속 상륙작전이다.”(중앙일보, 기관포 단 공격헬기 도입…‘악으로 깡으로’ 해병대 변했다. 2019. 10. 20.) 곧 입체고속 상륙작전이란 “적이 발견하기 어려운 초수평선 해상에 위치한 함정으로부터 고속기동과 회피기동 등을 통해 곧바로 육지 작전 목표지역을 직접 공격”(국방논단 제1415호, 『상륙작전 발전 동향과 상륙기동헬기의 역할』, 2012. 6. 18.)하는 개념으로 공세성이 한층 강화된 상륙작전이다.
- 이러한 초공세적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국방부는 3,000여 명 규모의 여단급 신속기동부대를 편성(2016. 3. 1.)했으며, 이를 지원할 항공대대도 창설(2019. 11. 29.)했다. 2021년에는 항공단도 창설해 기동헬기 36대와 공격헬기 24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기동부대는 “유사시 북한 후방지역으로 가장 먼저 침투해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중앙일보, 2016. 3. 20.)하게 된다.
- 해병대의 입체고속 상륙작전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합참이 수립한 ‘신 공세적 작전개념’의 구성 부분이다. ‘신 공세적 작전개념’ 수행을 위해 국방부와 군은 해병대의 신속기동부대, 육군 공정사단과 기계화군단 등으로 공세기동부대 구성을 추진했다(중앙일보, 2018. 1. 12.). 그러나 ‘신 공세적 작전개념’은 그 초공세성 때문에 청와대가 정치적, 전략적으로 폐기시킨 개념이다. 그런데도 해병대의 입체고속 상륙작전과 신속기동부대와 같이 군과 작전적 차원에서는 그대로 살아남아 이행 부대의 구성까지 추진되고 있는 반통수권적, 반문민적 작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신 공세적 작전개념’을 수행할 경우 “미국은 한국군 단독 공수작전은 초기 피해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앙일보, 2018. 8. 26.). 이는 공군에 의한 북한 방공망 제압(SEAD)과 제공권 장악 없이 북한 내륙으로 진격할 경우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전개할 때는 피해가 이보다 더 클 것이다. 북한 방공망과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개전 초기에 이뤄지는 해병대 상륙작전은 북한의 탄탄한 해

안 방어 전력에 의한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해병대 보유 기동헬기는 북한 방공망과 전투기의 공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해 상륙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다.

한편 남한 공군과 지상군, 함포에 의한 상륙 지원이 이뤄질 경우에 해병대 보유 기동헬기는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빨리 기동하는 남한 육군 (공격) 헬기나 공군 전투기에 의한 ‘근접항공지원’ 작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병대의 기동헬기가 아군기에 의해 격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의 방공포와 해안포 전력이 제압된 다음에 상륙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입체고속상륙을 위한 상륙기동헬기의 효용성은 사라진다. 이에 입체고속 상륙작전과 이를 위한 상륙기동헬기 도입은 해병대의 무모함과 맹목성, 욕심의 합작품이다.

## ② 해병대 상륙작전은 시대 역행적이며 판문점선언,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위배

-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대규모 상륙작전은 이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대규모 상륙작전은 없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작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한 조건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명운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
- 2개 사단과 2개 여단의 3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한국 해병대 전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가는 대규모 전력이다. 한반도 유사시 개전 초기에 남한 해병대의 북한 상륙작전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이런 대규모 해병전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타지에 전력을 투사할 할 수 있는 해병전력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갈등만 유발한다.
- 일본과 중국도 최근에 해병전력의 양성에 나서고 있으나 양국 모두 육군 소속으로 두고 있어 한국처럼 드러내 놓고 해병전력을 강화하고 공세성을 내세우지 않는다.
- 애초 상륙기동헬기에 대한 소요는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소탕 임무 등 장거리 해상 작전에 투입할 다목적 수송헬기가 없다”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해군은 상륙기동헬기를 확보해 장거리 해외파견 작전이나, 림팩 훈련 등의 대규모 해외군사훈련에 활용한다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이다(『해병대 차기 공격헬기 사업 보고서』, 『군사연구』, 2016. 3. 21.). 결국 한국 해병대의 상륙기동/공격헬기 도입 및 항공단 창설은 독도함, 마라도함, 중항공모함 등의 해군 전력과 결합해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

의 패권전략과 제3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 등에 동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칼끝은 중국을 향하게 된다.

- 이에 한미 해병대는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하에 이전보다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19년에만 대대급 13회, 병과별 11회 등 총 24회의 훈련을 실시했다(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연합뉴스, 2019. 10. 15.) 2017년에 17회, 2018년에 11회 실시에 비하면 2배 정도 늘어난 숫자다.
- 코브라(태국), 칸 퀘스트(몽골), 림팩(미국), 카닥만(필리핀), 탈리반 세이버(호주) 등 미군 주도의 국외 해병대 연합 훈련에도 참여 횟수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외에서의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 강화는 미국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맞서 해군/해병대의 강제상륙진입작전을 펼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김유신, 『인도-태평양 시대 미 해병대 임무 확장의 필요성』, <국방과 기술>, 2019. 6.).
- 한편 해병대의 입체고속 상륙작전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도입과 부대 편성은 한반도의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중지와 긴장 해소를 약속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통해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위배된다.

### ③ 남한 압도적 우위의 대북 헬기 전력 보유, 해병대 헬기 도입과 항공부대 창설은 불필요

-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한 헬기 전력은 680여 대(육·해·공 보유)로 290여 대의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더구나 (대형) 공격헬기에서는 남한이 일방적인 우위에 있다. 이에 유사시 해병대가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전개하더라도 남한군은 여기에 소요되는 헬기 등을 지원할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60대의 상륙 기동/공격헬기를 추가 도입하고 항공단까지 창설하겠다는 것은 대북 초공세전략을 수행하려는 군과 해병대의 호전성과 해병대의 이기주의 발로다.
- 또한 해병대가 전략도서 방위를 명분으로 상륙기동/공격헬기 도입 등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서북도서 점령 등 북한의 국지도발은 성공하기 어렵다. 해군력과 공군력에서 크게 열세인 북으로서는 기습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서해 5도에 다다르기도 어렵지만 상륙을 하더라도 점령할 수는 없다. 북한군은 서해

5도에 주둔하고 있는 남측 병력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남한 해·공군의 지원 사격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양산 전에 추락사고 진상규명과 성능결함 원인부터 밝혀야

- 2018년 7월 17일, 정비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추락했다. 이로 인하여 탑승한 6명 중 5명이 목숨을 잃었다.
- 마린온 추락 사고에 대해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헬기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인 '로터 마스트' 결함 때문이라고 최종 발표했다(2018. 12. 21.).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 때문에 로터 마스트가 끊어지며 메인로터(프로펠러)가 날아가고 헬기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로터마스트 균열은 소재 제작사인 Aubert & Duval사의 제작 공정중 동일 Lot(4개)의 열처리 공정 오류(공냉식을 수냉식으로 수행)로 발생하였으며, 공정오류 인지 후 추가 열처리를 하는 자체 보완조치를 하고 에어버스 헬리콥터(AH)에 납품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고기와 동일 생산 Lot(4개) 로터마스트 3개에서 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1개가 사고 마린온에 장착되고 나머지 2대는 수리온에 장착됐다는 것이다. 2019년 봄, 군은 모든 수리온 로터 마스트에 대한 정밀검사와 시험비행을 마쳤으며 정상운항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수리온 부품 결함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은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 생산된 것이다. 수리온은 2차례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기체 결함과 비행 안전성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왔다. 2017년 감사원은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상륙기동헬기, 의무수송헬기 등에 대해 “비행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양산이 추진되었다”고 지적했다(『군용기 인증 및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실태』, 77쪽, 2017. 7.).
- 마린온 사고 직후 하태경 의원 등은 수리온 기어박스의 설계 오류 가능성도 제기했다. 마린온 추락 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냈던 노르웨이 헬기 슈퍼 푸마(수리온의 베이스 설계 모델)의 사고조사위원회가 기어박스 재설계를 에어버스에 권고했다며, 수리온 기어박스 설계도 같은 권고 대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방위사업청 한국형 헬기 사업단장 유옥상은 노르웨이 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는 시정이 안 된 상태”라고 인정했다(제20대 국방위 362회 3차 회의록, 2018. 7. 25.).

-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도 2016년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동일한 기종(슈퍼 푸마 EC-225)으로 확인됐다. 이 헬기의 기어박스는 노르웨이 사고조사위원회가 재설계를 권고한 것으로 수리온과 마린온의 기어박스와 동일한 대상이다.
- 정종섭 의원은 마린온 사고 직후 기어박스 설계의 오류 문제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메인 기어박스를 완제품 형태로 들여와서 조립을 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가져오려면 그것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와 그런 것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20대 국방위 362회 3차 회의록, 2018. 7. 25.)라며 기어박스 설계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기어박스와 로터 마스트 등 핵심 부품의 결함 여부를 우리 기술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언제 또다시 기체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며, 그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도, 책임소재를 묻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개발된 수리온의 제작 기간도 짧지만 마린온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1월 19일 첫 비행에 나서기까지 개발 기간이 채 3년도 되지 않는다.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기반한 모델이라고 해도 헬기 제작 기간이 너무 촉박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헬기로 평가받는 아파치 헬기를 보면 초도비행은 1975년에 이뤄졌지만 약 10년 이상의 시험기간을 거쳐 1986년에야 도입됐다”(비즈니스포스트, ‘해병대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는 무리한 개발 일정 때문인가?’ 2018. 7. 18.). 마린온의 경우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했고 추락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수리온은 심한 기체 진동도 문제였다. 기체 진동이 심해 윈드 실드가 자주 파손되고, 프레임에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마린온 사고 기체도 진동이 심해 여러 차례 정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린온 추락 사고로 숨진 고 박재우 상병의 유족이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에 보낸 마린온 사고의 심층조사와 후속조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에서 마린온의 진동 문제와 관련하여 “매뉴얼에 의하면 IPS(진동 허용 기준치) 0.5 이상에서는 이륙이 불가하고 정비 시행 조치가 돼야 한다고 쓰여 있지만 사고 헬기는 0.55에서 이륙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연합뉴스, 2018. 10. 15.).
- 한편 마린온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은 수리온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미필적 고

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 요청(2019. 1.)했지만, 당시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추락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철저한 수사 없이는 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도 어렵다.

- 또한 포항 동해·청림·제철동 주민들은 ‘해병대 헬기부대 격납고 건설 공사 전면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5명이 숨진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와 같은 기종이 운영되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대구신문, 2019. 8. 20.)며 마린온의 안정성을 우려했다. 그런데도 해병대는 주민 반발을 피해 몰래 항공대대를 창설했고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해병대가 주민들을 기만했다”며 반발했다(연합뉴스, 2019. 12. 5.).
- 마린온은 추락사고 이후 23개월 만에 작전운행을 재개했지만, 마린온 추락 사고에 대한 완전한 후속 안전 대책 없이 비행 재개를 강행하고 마린온을 계속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대대까지 창설하고 마린온을 무장헬기로 개조하려는 것은 제 2, 제3의 사고를 부르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자 국민혈세의 낭비다.

#### ⑤ 마린온 양산으로 해상운용 기술의 해외 의존 탈피와 막대한 해외구매 비용 절감/기술 파급 효과로 첨단산업 육성 및 국부 창출 효과가 크다는 주장의 허구성

- 현재 상륙기동헬기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인데도 기체 결함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인명피해까지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로 인한 손실은 그 어떤 경제적 수치로도 따질 수 없는 사업을 중단해야 할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상륙기동헬기 양산사업의 향후 기대효과로 “경제적으로 수출 사업화, 수입 대체를 통한 외화 절감,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이익 상승효과 발생”(방위사업청,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등을 운운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효과는 희망 사항일 뿐이며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 마린온은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수리온과 함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수출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13년부터

수리온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2017년 한 국가와 수출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방산비리 수사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비즈니스 포스트, 2018. 9. 18.), 2018년에는 필리핀 대통령이 수리온에 직접 탑승하는 등 큰 관심을 보여 수출이 가시화됐으나 그해 7월 마린온 추락 사고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필리핀 수출도 최종 무산되었다(동아일보, 2018. 12. 12.). 수리온과 똑같은 기술적 결함을 안고 있는 마린온이 기술적 결함을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설령 기체 결함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상륙기동헬기의 시장이 좁고 마린온(300억원)의 높은 제작 단가와 해외 부품 의존도로 볼 때 가격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정으로 국가 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정부는 무리하게 국내 수요를 창출해 생산 업체를 연명시키면서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마린온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2019년도 방위산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 11년간 방산업체 평균 영업 이익률은 해마다 하락했고 2017년에는 0.5%로 낮아졌다. 2017년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7.6%와 비교하면 극히 낮은 수치다. 방산업체 총 영업 이익 역시 2010년 6,898억 원에서 2017년 602억 원으로 10분의 1로 급감했다(월간중앙, 2020. 4. 19.). 또한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2019년 방산업체 경영실태’에 따르면 방산업체 방산 부문의 해외 매출액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매출액이 2018년도 대비 4.5% 증가한 데 반해 해외 매출액은 11.5%나 줄었다. 총매출액은 2018년 대비 2.2% 증가에 그쳤다. 고용은 2019년보다 줄어든 3만 3천 명 수준이다(연합뉴스, 2020. 7. 2.). “방위산업은 민간업체에게 부담스러운 사업영역”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방산업체의 성장 정체와 수익성 약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함정과 항공기 분야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자로 방산업체의 명맥이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양영철 외, 『한국의 방위산업 연례 분석 2019』, 2020). 이는 방위산업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같은 부실 방위산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낭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리온의 소방헬기 수주를 위해 2014년 국토부에 “방사청 형식증명(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관련 기관의 증명)도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군용으로 개발된 수리온이 민간용인 국토부의 인증을 받으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 안정성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수리온도 형식증명에 준하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시·도 소방본부는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수리온을 입찰에서 배제하고 있다(한국경제, 1조 3,000억 원 들여 개발한 '수리온'의 눈물 … 시·도 소방본부 구매 외면, 2019. 8. 21.). 방위사업청의 기대와 달리 수리온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외 수출은커녕 국내 판매도 어려운 현실이다.

- 또한 수입 대체를 통한 외화 절감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마린온 헬기의 모체인 “수리온의 핵심장치는 기술이전이 안 돼 전량을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뉴시스, 2019. 10. 26.). 생산할수록 수입 유발과 외화 낭비가 커지는 것이다. 수리온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계획 실패로 156억 원의 예산도 낭비된 사례도 있다(감사원,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1차)』 2015. 10.). 마린온은 핵심 부품의 상당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나 수리온과 호환되지 않아 국산 헬기들 간 호환으로 부품 수입을 줄이고 운영유지비를 낮춘다는 주장도 허상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나왔다(메트로신문, 2020. 4. 9.). 수리온과 마린온 사업을 연관시켜 해외 의존 탈피와 막대한 해외구매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장은 허구로 보인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상륙기동헬기는 남한 헬기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무기체계다.
- 상륙기동헬기는 초공세적 대북 상륙작전을 위한 무기체계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반한다.
- 기체 결함과 추락사고 원인 규명 등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륙기동헬기를 양산하는 것은 군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하고 무책임한 짓이다.
- 가격 대비 효용성이 매우 낮아 수출이 어렵고 국민경제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

#### 5. 삭감요구액

- 상륙기동헬기 예산 1,792억 6,1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2-1) 상륙돌격장갑차-Ⅱ(R&D) (2231-313)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31,631	25,120	6,511	25,120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현용 상륙돌격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기동성, 방호력, 화력 등이 개선된 상륙돌격장갑차-Ⅱ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무모한 입체고속 상륙작전

- 국방부와 해병대는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 보강을 위해 상륙돌격장갑차-Ⅱ(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도자료 2021~25 국방중기계획』).
- 입체고속 상륙작전은 “미 해병대의 초수평선 상륙작전(OTH)의 한국판이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은 적의 강력한 방어망을 뚫기 위해 수평선 너머 먼 바다에서 발진한 뒤 해상과 공중을 통해 육지로 신속히 이동하는 작전이다. 이 작전을 한반도 전구에 맞도록 재해석한 게 입체고속 상륙작전이다”(중앙일보, 기관포 단 공격헬기 도입 … ‘악으로 깡으로’ 해병대 변했다. 2019. 10. 20.). 곧 입체고속 상륙작전은 “적이 발견하기 어려운 초수평선 해상에 위치한 함정으로부터 고속기동과 회피기동 등을 통해 곧바로 육지의 작전 목표지역을 직접 공격”(국방논단 제1415호 『상륙작전 발전

동향과 상륙기동헬기의 역할』, 2012. 6. 18.)하는 작전개념으로 공세성이 더욱 강화된 상륙작전이다.

- 그러나 해안의 적 진지에서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해안선으로부터 약 40km)에 상륙함이 위치하다가 일시에 전력을 해안으로 이동시키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은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가 증가하고 무인기를 비롯한 다양한 정찰수단의 보급 등으로 인해 군사적인 효용성이 없어진 작전이다. 미국 해병대도 2010년 초반 초수평선 작전개념을 포기하였다(『KAAV-Ⅱ를 위한 세계 차세대 상륙장갑차 개발 동향』, 『국방과 기술』, 2019. 1.).
- 북한 방공망과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개전 초기에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과 해안포 등의 사거리 안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할 경우 상륙돌격장갑차를 탑재한 상륙함과 수송함 등은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다. 결국 북한군의 해안포와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에서 벗어난 먼 공해상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거나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과 해안포 등을 제압한 다음에 상륙작전을 전개해야 하나 이에 따른 상륙작전에 소요되는 시간의 증대로 입체고속 상륙작전이 가지는 기습성과 치명성 등의 군사적 효용성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입체고속 상륙작전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상륙돌격장갑차-Ⅱ 도입은 군과 해병대의 무모함과 맹목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 ② 시대 역행적이며 판문점선언,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위배되는 입체고속 상륙작전

-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대규모 상륙작전은 이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대규모 상륙작전은 없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작전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군도 상륙작전에서 해상상륙보다는 공중상륙 위주로 교리가 바뀌었으며, 상륙 장갑차 개발계획을 포기하는 등 해상상륙전력도 줄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한 조건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명운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
- 2개 사단과 2개 여단의 약 3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한국 해병대 전력은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가는 대규모 전력이다. 한반도 유사시 개전 초기에 남한 해병대의 북한 상륙작전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이런 대규모 해병전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타지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해병전력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갈등만 유발한다.

- 일본과 중국도 최근에 해병전력의 양성에 나서고 있으나 양국 모두 육군 소속으로 두고 있어 한국처럼 드러내 놓고 해병전력을 강화하고 공세성을 내세우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해병대는 여전히 초공세적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3,000여 명 규모의 여단급 신속기동부대를 편성(2016. 3. 1.)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상륙기동헬기, 상륙공격헬기를 운용할 항공대대도 창설(2019. 11. 29.)하였다. 또한 차기 상륙돌격장갑차, 무인경전투차량, 상륙형 120mm 박격포 체계 등 시대역행적인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구현하기 위한 무기체계 확보에 나서고 있다(뉴시스, 2020. 10. 15.).
- 한편 해병대의 입체고속 상륙작전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합참이 수립한 ‘신 공세적 작전개념’의 구성 부분이다. 그런데 ‘신 공세적 작전개념’은 그 초공세성으로 말미암아 청와대가 정치적, 전략적으로 폐기시킨 개념이다. 그런데도 ‘신 공세적 작전개념’은 입체고속 상륙작전처럼 각 군과 작전적 차원에서는 그대로 살아 남아있는 반통수권적이고 반문민적 작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아울러 입체고속 상륙작전은 한반도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와 긴장 해소를 약속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통해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도 위배된다.

### ③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며, 혈세만 낭비하는 상륙돌격장갑차-Ⅱ(R&D)

- 상륙돌격장갑차-Ⅱ(R&D) 사업은 2016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엔진과 변속기, 동력전환분배 기술 등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2017년 방위사업청은 사업분과위원회를 통해 엔진과 변속기, 동력전환분배 기술 등의 국내개발이 어렵다며 해외도입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시제 제작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가 달성할 수 없는 과도한 성능-2,000 마력의 엔진 출력-을 요구했고, 결국 2018년 12월 해외구매를 결정하였다.
- 그러나 감사원은 국방과학연구소 감사를 통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국내개발로 결정한 사안을 방위사업청 사업분과위원회에서 무단으로 변경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업체를 배제한 채 해외구매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방위사업청에 주

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상륙돌격장갑차-Ⅱ 개발 사업을 국내개발로 추진하기로 다시 결정했다. 현재 상륙돌격장갑차-Ⅱ(R&D)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사업 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바, 지금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었던 예산을 비롯해 사업 기간의 연장에 따른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

- 상륙돌격장갑차-Ⅱ(R&D) 사업은 2011년 미국이 개발을 포기한 EFV 장갑차를 모델로 하고 있다. 전투중량과 방어력을 비롯한 제원이 같고, 해병대가 요구하고 있는 2,700HP의 엔진 출력과 42km/h의 수상속도도 EFV 장갑차의 제원과 같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한 외형도 EFV와 닮은꼴이다.
- 미국이 EFV 장갑차 개발에 실패한 이유는 기계적 신뢰성과 개발비 폭증 때문이었다. 약 45km/h의 속도로 수상 기동하는 36톤에 달하는 EFV 상륙장갑차를 지탱하는 유압 구조에만 200마력의 동력이 필요했다. 또한 제네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시제 차량은 운행 시 평균 4~5시간 당 한 건씩 고장이 발생했으며, 1시간 가동 당 정비시간은 3~4시간에 달했으며, 11회의 시험 평가 중 2회는 목표 성능을 내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EFV 개발에 예정보다 8년 이상이 더 걸렸으며 30억 달러로 책정되었던 개발비도 5배인 150억 달러로 폭증했다. 그 결과 EFV 한 대 가격이 2,2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가 되어버렸다. 게이트스 전 미 국방장관은 “EFV 개발 프로그램의 복잡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요구사항들은 이 ‘8만 파운드짜리 차량’의 가격을 다른 무기 예산을 잡아먹을 만큼 올려놓았다.”고 불만을 토했으며, 2011년 미국은 끝내 EFV 상륙장갑차 사업을 포기했다(『KAAV-Ⅱ를 위한 세계 차세대 상륙장갑차 개발 동향』, 『국방과 기술』, 2019. 1.).
- 따라서 국내 기술력에 맞지 않는 해병대의 무리한 성능 요구로 미국의 EFV 상륙장갑차를 모델로 개발되는 상륙돌격장갑차-Ⅱ(R&D) 개발 사업은 미국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며, 사업 기간의 연장과 개발비 폭증으로 인해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표1> EFV상륙장갑차와 상륙돌격장갑차Ⅱ의 제원 비교**

구분	EFV	상륙돌격장갑차-Ⅱ
승조원	3+17명	3+17명
전투중량	36톤	34.2톤
방어력	14.5mmAP	14.5mmAP

엔진출력	최대 2,700HP	2,700HP
육상속도	72km/h	72km/h
수상속도	46km/h	42km/h
주요무장	30mm 부시마스터	40mm CTA

(출처: KAVV-II를 위한 차세대 상륙장갑차 기술동향보고서/해병대 홈페이지 인용)

-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 수준에 맞추어서 엔진 출력을 1,500마력으로 크게 줄인다고 하더라도 상륙돌격장갑차-Ⅱ의 개발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국방부는 이미 1,500마력의 엔진과 변속기를 장착한 국산 파워팩을 2010년까지 개발해 K-2 전차에 장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기술로 개발된 파워팩의 결함으로 초도 양산된 K-2 전차에는 독일제 파워팩이, 2차 양산된 K-2 전차에는 국산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가 혼합된 파워팩이 장착되었다. 3차 양산을 앞두고도 국산 변속기의 내구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진표 의원이 감사원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 변속기는 총 7차례 시험에서 변속장치 고장 등의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상륙돌격장갑차-Ⅱ에 장착될 변속기의 국내개발도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사업 기간의 연장과 혈세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 4. 결론 및 건의사항

-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무모한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상륙돌격장갑차-Ⅱ(R&D) 사업은 중단, 폐기되어야 한다.
- 상륙돌격장갑차-Ⅱ(R&D)가 수행할 초공세적인 입체고속 상륙작전은 청와대가 폐기시킨 신 공세적 작전개념의 일환으로 반통수권적 작전개념이며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반한다.
- 사업목표 달성이 어렵고, 이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

#### 5. 삭감요구액

- 상륙돌격장갑차-Ⅱ(R&D) 예산 251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5-31)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2533-307)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71,684	90,983	19,299	90,983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증대에 따른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능력 향상을 위해 탄도탄 직격요격(Hit to Kill)이 가능한 PAC-3 유도탄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능력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한반도는 남북 간 거리가 짧아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지 불과 2~5분이면 남한에 도달하는 한편 산악지형이 70% 이상에 달해 이를 조기에 탐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의 국방연구원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청도 공동연구(2011-2012년)를 통해 “한반도에서 PAC-3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혀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 의회보고서(2015. 4.)도 한미일 통합 BMD 체계에 대해 “한반도는 남북 간 거리가 짧아 한국에는 별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쓰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는 작전종심이 짧은 지형적 특성상 탄도미사일 방어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PAC-3와 같은 요격체계 역시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효용성이 없다.

- 북한은 KN-02, 스커드 B/C 등 단거리미사일을 약 540여 기(아시아경제, 2020. 6. 11.), 단거리미사일 이동식발사대를 약 100기(미 국방정보 탄도미사일 분석위원회 DIBMAC, 2017)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동시다발 공격을 하거나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회피기동 등을 통해 남한의 미사일 방어망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
- 또한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면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회전을 하는 것도 요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은 하강 중 유도에 의해 급상승(폴업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요격이 어렵다.
- 남세균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회피기동이나 폴업기동에 대해 PAC-3 MSE탄 등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주장(국회 국방위 회의록, 2019. 9. 4.) 하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록히드 마틴사는 PAC-3 MSE탄이 종말 유도단계에서 “독자적인 능동유도가 가능해 표적의 회피기동에 더욱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디펜스타임즈 코리아, 2019. 6.)다고 주장한다. 신선규 기자는 MSE탄의 측추력기, 듀얼 펄스 로켓, 개선된 탄도추적 알고리즘이 도입된 패트리엇 레이더(AN/MPQ-65) 등이 표적의 “급격한 궤도 수정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높은 반응성을 갖게”(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2019. 6.)한다고 주장한다. 미 육군도 한국 등 PAC-3 MSE탄 구매 고객을 초청한 가운데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을 본떠 만든 표적용 미사일(패스파인더 쏜비)을 PAC-3 MSE탄으로 요격하는 시험을 진행(미 화이트샌드 미사일 시험장, 2020. 6. 25.)해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조건에서 요격에 성공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PAC-3 MSE탄이 반응시간이 짧고 급기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중심이 극히 짧고 산악지대가 많아 탐지와 요격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동시다발로 회피기동할 수 있는 수백기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 요격할 수는 없다. MD가 한반도에서 갖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가까운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다.
- 방어용(요격용) 미사일보다 공격용 미사일의 개발이 훨씬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은 미국이 70년 동안 천문학적 재정을 투자하면서 개발해 온 미사일방어체계가 여전히 군사적 효용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패트리엇 성능개량이나 신형 패트리엇 도입으로 요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공격 미사일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 패트리엇 체계는 사거리(operational range)가 최대 40km 미만인 점방어 개념의 무기체계이다. 패트리엇으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껏 청와대나 주요 군사기지 등을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민간인이나 시설 등에 대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 ② PAC-3 MSE탄 도입은 한미 MD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미국의 MD 무기체계의 추가도입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안보위험을 자초하게 됨

- 한미는 2013년부터 ‘한미 방공포병 연합훈련’을 정례화하여 “한반도 탄도탄 방어를 위한 연합 방공작전통신망 운영, 중점방어 자산에 대한 효율적 방어계획 및 연합 탄도탄 방어 작전계획 수립”(국방일보, 2013. 5. 2.)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 2015년 6월 말에는 ‘한미 패트리엇 대대급 전술조치 훈련’을 통해 “통일된 시나리오에 따라 유도탄 재적재 훈련과 전술 조치 훈련, 발사대 이동 및 설치 훈련 순으로 이뤄졌고 한미연합 평가단이 동시평가”했다. 7월 15일에는 ‘한미 방공포병 연합훈련’을 통해 “장비 전개 및 연동, 발사대 설치 및 유도탄 재적재, 가상 적기를 활용한 모의 전술조치 등이 진행”됐으며 이와 동시에 “한미 ICC 교전통제소를 상호 연동하는 훈련도 열렸다. ICC 교전통제소는 유도탄 사격 통제 및 화력분배를 담당하는 패트리엇 체계의 주요 장비로 양국 간 체계 연동을 통해 포착한 항적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동일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을 방지해 불필요한 유도탄 소모를 예방하고 중요 방어지역에 대한 화력 집중을 가능케 하고 있다”(국방일보, 2015. 7. 3./2015. 7. 15.).
- 2017년에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한미 패트리엇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PAC-3 사전 운용능력을 습득한다며 “우리 군이 운용하는 유도탄 적재장비 GMT(Guided Missile Transporter)를 활용해 미 측의 PAC-3 유도탄을 적재하는 훈련도 병행”했다(국방일보/아시아경제, 2017. 4. 24.).
- 이처럼 한국군 패트리엇 포대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는 대탄도탄 공동 작전 계획에 따라 대대 차원의 ICC(Information Coordination Center) 연동, 유도탄 적재장비 교환 운용 훈련, 연합 요격 훈련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한 몸처럼”(국방일보, 2017. 4. 24.) 통합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PAC-3 성능개량이 완료되고 MSE탄이 도입되어 운용되면 지금까지의 한국군 MD와 주한미군 MD 체계 간

통합에서 한국군 패트리엇 체계 와 주한미군 사드 체계 간 통합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게 된다.

- MSE탄 도입과 함께 진행되는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에서는 한국군 패트리엇 포대의 교전통제소 ECS(Engagement Control Station)의 운영체제가 PDB(Post-Deployment Build)-8로 성능 개량되고 있다(디펜스투데이, 2019. 12. 6.).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도 2018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PDB-8로 성능개량을 시작했다. 패트리엇 PDB-8은 EWCC(Enhanced Weapon Control Computer)의 소프트웨어 처리 능력을 35~50% 개선하고, 요격 좌표를 계산하는 FSC(Fire Solution computer)를 개량하며, 레이더 디지털 프로세서화(Radar Digital Processor)를 구현한다.
- 나아가 PDB-8.0.6은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에 따라 사드 레이더의 정보를 활용한 PAC-3 MSE탄의 원거리발사(LoR)와 사드 체계와 PAC-3 체계 간 통합을 보장한다(“An agile build, PDB-8.0.6, was created in support of the USFK JEONS to expand Patriot and THAAD interoperability”, 제임스 디킨슨 미 육군 우주 및 미사일 방어사령관, 미 상원 청문회, 2019. 4. 3.). 이에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2019. 6.)도 한국의 MSE탄 운용에 대해 “THAAD의 교전통제소는 PAC-3의 지휘통제체계와 연동이 가능하다. 발사된 THAAD 미사일은 표적 추적 성공여부, 항법 정보 등을 다운로드 하며 THAAD가 추가적으로 교전을 해야 하는지 또는 PAC-3가 교전을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상호 협력적인 교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쓰고 있다. 즉 한국군 패트리엇 체계가 PDB-8에 의해 운영되면 지금까지의 한미 패트리엇 체계 간 통합을 바탕으로 한국 패트리엇 체계와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통합도 예견되는 것이다.
- 나아가 PDB-8은 패트리엇 체계와 미 육군이 구축 중인 미래형 방공 및 미사일 방어의 지휘체계인 IBCS(Integrated Battle Command System)와의 연동도 보장한다. 이에 주한미군은 사드 체계를 기본으로 패트리엇 체계와 센티널 레이더를 통합하고 여기에 한국군의 패트리엇 체계가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은 한국군 패트리엇 체계를 주한미군의 IBCS와 연동시킬 수 있는 추가 장비인 EOS(Engagement Operation Center)와 IFCN(Integrated Fire Control Network)를 도입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탄도탄방어체계는 미국의 방공미사일방어 체계에 전면 통합될 가능성이 그 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 한미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연동(2016. 1.)되어 있고, 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센터(KAOC) 내 ‘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작전 협조본부(CAMDOCC)’로 미 육군 제 94 방공 및 유도탄방어사령부(AAMDC) 전방지휘소가 전개되어 한미 통합 MD 작전의 전술 지휘를 보장하는 등 현재도 정보와 작전지휘체계에서 한미 간 MD 통합은 구현되고 있다. 여기에 패트리엇 체계를 중심으로 한 한미 간 MD 무기체계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한국이 SM-3 요격미사일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한미 간 이지스체계의 통합도 기정사실로 될 것이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한미 군 당국이 양국 MD 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동아일보, 2020. 6. 10.) 이 훈련에서 한미 양국군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탐지, 추적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군 MD, 주한미군 MD, 해외미군 MD 요격 자산을 통해 대응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 MD가 요격과 작전분야까지 이미 미국 MD에 깊숙이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한편 한미 통합 MD 체계가 한국의 주요자산의 방어를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패트리엇 체계의 요격작전에서 교전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것은 대대급 ICC이다(미 육군 교범 FM 3-01.85). 한미 간 패트리엇 ICC 교전통제소가 연동되어 있으므로 한미 연합 탄도탄 방어작전을 주도하는 제94 AAMDC 전방지휘소에 의해 한국군 패트리엇 체계의 교전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한국군 패트리엇 체계가 한국의 주요자산이 아닌 미군의 주요자산을 방어하는데 우선순위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권명국 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도 “누구 책임 하에 어떤 미사일을 언제 어디로 발사할지 세부 작전통제절차가 정립돼야 하고, 이에 대한 절차 훈련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뉴스투데이, 2019. 12. 4.). 주요자산목록(CAL)과 방어자산목록(DAL) 작성에서부터 교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탄도탄 방어작전에서의 지휘와 사격통제권한까지 미군이 주도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한국군 MD 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사격통제권한)이라도 즉각 환수해야 하는 이유다.
- 한국 MD와 주한미군 MD 체계의 통합과 한국 MD의 미 MD 전면 편입은 한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 기지의 제공에 이어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강제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최전방에서 탐지하고 상승단계에서 요격해주는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미중간 전략안정을 무너뜨리고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을 형성하는데 있어 한국이 미국편에 서서 중국을 적대화하게 됨을 의미한다. 나아가 MD 구축을 고리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끌려들어가게 됨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보복은 확대 심화될 것이고, 북한과의 대결로 인한 현재의 안보 위협과 비교도 하기 어려울 만큼 안보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의 미 MD 편입은 중단되어야 하며 패트리엇 체계 성능개량과 MSE탄 도입도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 ③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감당할 수 없는 추가 예산 부담 가능성

- 한반도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PAC-3 MSE탄 도입 사업은 PAC-3 컨피그레이션 3으로의 성능개량 사업과 PAC-3 CRI탄 도입 사업,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철매-2 성능개량 사업(M-SAM)과 중복되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PAC-3 컨피그레이션 3으로의 성능개량에 1조 3,297억 3,300만 원, 2017년부터 시작된 철매-2 성능개량에 1조 128억 2,400만 원, 2018년부터 시작된 PAC-3 유도탄 2차 사업(MSE탄 도입)에 4,986억 7,400만 원 등 무려 총 2조 8,400억 원을 넘는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철매-2 성능개량 사업이 완료되어 7개 포대를 편성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이 양산되는 마당에 굳이 PAC-3 MSE탄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
- 이미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패트리엇 “교전통제소, 발전기 탑재차량이 3대 중 1대 꼴로 1980년대 생산 이후 수명 연한(10년)을 20년 이상 넘겨 사용”(쿠기뉴스, 2020. 10. 16.)된 장비들의 성능개량이나 신규 장비 교체비용도 계속 늘게 된다. PAC-3 미사일도 기존 130여 기의 PAC-3 ERINT탄을 MSE탄으로 교체하는 소요가 계속 제기될 것이다. 매년 패트리엇 포대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유지비만 약 160억 원(포대 당 20억 원 추산) 가량인데 추가 장비 교체 시 그 비용 또한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 한국군이 보유한 8개의 패트리엇 포대 중 4개 포대가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지만 2,500만 서울, 경기 지역을 방어할 수 없는 것은 점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체계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이에 한 예비역 장성은 “청와대 등 수도권 주요시설, 공군기지,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원자력 발전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전략시설을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려면 50개에 가까운 요격미사일 포대가 필요하다는 게 군 내부 평가”라며, “최소 300발 이상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기도 한다(조선일보, 2020. 4. 1.).

- 미국 랜드연구소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군이 800여 기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적어도 1천여 기의 요격미사일이 있어야 한다"(뉴데일리, 2019. 8. 16.)고 주장한다. 2017년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IBCS 연동 패트리엇 체계는 2개 포대로, 208기의 MSE탄과 16대의 M903 발사대, 4대의 AN/MPQ-65 레이더, 12대의 EOC, 15대의 IFCN 등에 약 12조 원(\$10.5 billion)이다. 이에 IBCS 연동 패트리엇 50개 포대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하면 무려 약 300조 원이 소요된다. MSE탄만 도입해도 2020년 네덜란드가 MSE 34기를 약 2,730억 원(\$241 million)에 계약한 사례를 적용하면(1기 당 80억 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량 600기만큼 요격미사일을 도입할 경우 그 비용은 4조 8,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 2018년 계약한 한국의 PAC-3 MSE탄 도입가는 1발당 570만 달러(주장비만 계산 시)~783만 달러(훈련장비 등 포함 시)로, 미 국방부의 PAC-3 MSE탄 도입가 385만 달러(2021년 국방예산안)보다 1.5배~2배 비싸다. 게다가 미 국방부 국방협력국은 PAC-3와 관련해 어떠한 절충교역도 없음을 못 박고 있어 기술이전 등의 혜택도 기대할 수 없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른 수도권과 주요 군사시설 방호능력 향상이란 사업 목적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미사일방어가 효용성이 없다는 점에서 불가능하다.
- 한국의 미 MD 편입의 전면화를 초래하는 PAC-3 MSE탄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 예산 중복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PAC-3 유도탄 2차 도입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 5. 삭감요구액

- 패트리엇 PAC-3 유도탄 2차 예산 909억 8,3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5-2)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2531-314)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155,552	188,911	33,359	188,911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

- ① 적 항공기 및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주요 방호목표 및 군사 핵심시설 방호를 위한 장거리급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를 연구개발
- ② 다층방어개념에 따라 다양한 방어체계 간 사거리, 고도 등의 취약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혼합운용하고, 장거리 탐지 레이더로부터 표적정보를 획득하여 원거리/고고도에서 조기에 요격함으로써 방어시설 피해 최소화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적 항공기 및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주요 방호목표 및 군사 핵심시설을 방호하겠다는 사업목적의 허구성
  -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북한 스커드 B, C, D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지 불과 2~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탐지→식별→추적→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해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기 어렵다. 이는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 방어국이 공동실시한 연구(2010~2012년) 결과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미 의회 보고서(CRS report, 2015. 4.)도 남북으로 길이가 짧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한국

에선 미사일 방어가 효용성이 낮다”고 밝힌 바 있다.

- 미 국방성의 ‘동아시아 TMD 구상에 관한 보고서’(1999년)는 이지스와 같은 해상배치 상층방어 체계는 남한 북부 지역의 3분의 2를 방어하지 못하며, 사드와 같은 종말 고고도 방어 체계도 사거리가 짧고 정점이 낮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이에 종말 상층체계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종말 상층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를 견제할 목적에서 일본이나 오키나와를 타격하기 위한 체계로, 북한이 남한 공격에 보다 효용성이 높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놔두고 굳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이유가 없다.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남한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미사일의 탄두가 기만체나 추진체의 파편과 함께 날아오게 되면 탄두와 기만체 또는 파편을 식별할 수 없어 요격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의 발사각을 조정해 L-SAM의 40~60km의 요격 고도를 피할 수 있는 회피기동을 함으로써 L-SAM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에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상층·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L-SAM 개발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데 주로 사용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지상으로 낙하할 때 공기 밀도가 높은 공간(70km 이하)에서 공기저항을 받아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회전을 하게 되는데, 현재의 미사일 방어 기술로는 이런 불규칙한 낙하운동을 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다. 또한 2019년 5월 북한은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포물선 궤적이 아닌 불규칙한 패턴으로 날아가는 ‘요격 회피능력’을 선보였다. 이런 풀업 기동 능력이 있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요격이 어렵다.
-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는 단거리미사일이 100여 기 미만, 노동미사일이 100여 기 미만으로 알려졌다(미 국방정보 탄도미사일분석위원회 DIBMAC, 2017). 따라서 북한이 십수 기의 탄도미사일을 동시 발사할 경우 L-SAM을 제아무리 많이 실전에 배치하더라도 요격이 불가능하다.

## ② 한반도에서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가 불가능

- 다층방어 개념은 한반도와 같이 종심이 짧은 지역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허구적인 개념이다. 애초 다층방어체계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했을 경우 다시 하층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고고도나 중고도에서 요격하고, 다시 저고도에서 요격하기에는 요격 고도와 시간차가 매우 짧아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십수 기를 동시발사하거나 다탄두 미사일로 공격하면 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국방부가 종말단계 상층체계의 요격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종말단계 상층체계와 거의 동시에 종말단계 하층체계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을 시도하는 경우를 다층방어라고 하는 것이라면 군은 북한이 보유한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600~800기의 최소 2배 이상의 요격미사일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 AP통신(2017. 5. 17.)에 따르면, 과학자와 미사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일본에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과 이지스함 장착 SM-3 요격미사일은 물론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다층 방어전략이 신뢰할 만한 미사일방어 체계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이 동시에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른바 ‘동시다발 공격’ 전략을 구사할 경우 이에 압도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설령 L-SAM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해도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가 낮은 탄도미사일이나 북한이 저궤도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요격 고도를 확보할 수 없거나 요격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특히 수도권에서는 다층방어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 남한 인구의 절반 이상, 남한군의 90% 이상, 대다수 중앙 정부 기관과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다층방어 개념을 구현할 수 없다면 다층방어를 위한 L-SAM 개발이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 ③ 종말 고고도 및 상층체계를 개발·도입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 파기

- 국방부는 그동안 누누이 종말 고고도 및 상층체계를 개발·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2013년 국방부는 “한반도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방어 MD보다는 하층방어 MD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우리 군은 상층방어를 위한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2013. 5. 8.)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 국방부의 설명이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L-SAM의 요격고도는 40~60km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평통사가 국방부에 전화로 문의(2015. 10.)한 결과 L-SAM 요격 고도를 40~150km로 확인해 준 바 있다. 밀리터리 리뷰 이지(1902호, 2019. 2.)도 “L-SAM은 1조 900억 원을 투입해 요격 고도 100km에 사거리 100km 이상의 요격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국방부의 답변과 밀리터리 리뷰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L-SAM을 요격 고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 상층체계로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한국형 사드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 이로써 상층체계를 도입하지 않겠다던 국방부의 대국민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다.

#### ④ 한국 MD의 미국 MD 체계 편입 가속화로 미국의 대중 패권전략에 동원될 가능성

- 국방부가 L-SAM을 종말 고고도 및 상층체계(외대기권 100km 이상)로 개발하리라는 것은 거의 사실로 보인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미중 유사시 중국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사드 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나 한국군 기지 등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때 L-SAM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동원될 수 있다. 즉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고고도나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상층 방어체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L-SAM 레이더는 이지스함의 S밴드 레이더나 주한미군 사드 X밴드 레이더처럼 중장거리 탐지,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로 개발될 것이며, L-SAM 레이더로 확보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이 정보를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활용한다면 이 또한 한국 MD가 상층체계 MD를 구축하는 것이자 미국 MD에 편입되는 것으로 된다. 한편 한국이 L-SAM 배치로 대중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곧 한중 적대관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방부는 수차례 KAMD의 미국 MD로의 편입은 없고, 오로지 한국 독자적인 체계로 구축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위 3불 정책(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불가/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L-SAM 개발과 종말 고고도 및 상층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 한미 양국이 MD 연동 합의각서를 체결(2016. 1.)해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

(KTMO-Cell)와 주한미군 탄도탄 작전통제소(TMO-Cell)를 연동시키기로 합의하고,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주한미군 연동통제소(JICC) 간 연동을 완료(연합뉴스, 2017. 5. 17.)한 것은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의 가장 뚜렷한 징표이다.

-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한미 군 당국이 양국 MD 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동아일보, 2020. 6. 10.). 이 훈련에서 한미 양국군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탐지, 추적정보를 교환하고 한국군 MD, 주한미군 MD, 해외 미군 MD 요격자산을 통합해 대응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 MD가 요격과 작전 분야까지 이미 미국 MD에 깊숙이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일 MD 체계에 참여해 중국과 적대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 MD 전초기지로 전략하게 된다. 이로써 한국은 L-SAM의 개발을 넘어서 대중 MD 작전에서 보다 큰 성능을 발휘할 사드, 나아가 SM-3 요격미사일의 도입까지 강요받게 될 것이며, 이는 현실로 되고 있다. 한국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면 한국이 미국에 이미 제공하고 있는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상층체계)에 대한 정보와 함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상층체계)에 대한 요격 능력까지 갖추게 됨으로써 상층체계를 위주로 한 미국 MD 체계에 전면 편입된다. 그 결과 한국 MD는 정보, 요격작전 등에서 월등히 뛰어난 미국에 전면 예속될 것이며,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3각 동북아 MD 작전을 주도하려는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 이렇듯 L-SAM 사업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편승하려는 잘못된 국가안보전략의 파생 사업이다. 결국 L-SAM 사업은 한중 간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이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미국 MD 가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조성하지 않으려면 L-SAM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 ⑤ 사업 중단 가능성

- 2018년 10월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송창준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4월과 6월에 예정했던 L-SAM의 시험발사가 연기됐던 것에 대해 “L-SAM은 첨단 유도무기로 기술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당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보완돼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경향

신문, 2018. 10. 16.). 또한 2018년 11월 방위사업청은 탐색개발의 마지막 과정으로 탄도탄 요격 시험을 실시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YTN, 2019. 1. 30.). 이성용 공군참모총장도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도입 시점에 관해 "2027~2028년에 L-SAM을 전력화할 예정"이라며 "원래 2024년이었던가 예상보다 개발 기간이 소요돼 늦어졌다"고 밝혔다(뉴시스, 2020. 10. 15.).

- L-SAM이 미국 사드와 사거리와 요격 고도가 유사한 한국형 사드로 개발된다면 그 실패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사일 방어에 대한 기술력과 재원을 갖고 있던 미국도 사드 개발과 전력화에 20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었다. 미사일 방어 기술력과 재원에서 미국에 한참 뒤진 한국이 한국형 사드를 탐색개발(2015년)에 들어간 지 12~3년 만에 개발과 전력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큰 의문이다. 설령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성능을 제대로 갖춘 L-SAM(한국형 사드)이 개발된다는 보장도 없다. 성능이 뒤떨어진 L-SAM이 개발되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개발에 성공한 M-SAM의 양산사업에 대해 중단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던 것처럼 L-SAM 사업도 중단되거나 미국 사드 도입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L-SAM 연구개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발이 중단될 경우 1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 비용을 낭비하는 것으로 되지만 L-SAM 양산 비용을 고려하면 중단하는 것이 더 경제에 기여하는 길이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용성이 없으며, 개발되면 한국 MD의 미국 MD로의 편입만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양산 전에 중단, 폐기되어야 한다.

#### 5. 삭감 요구액

-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예산 1,889억 1,1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 (5-27)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532-338)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78,220 (추경)	98,886	20,666	98,886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수도권 위협 북한 장사정포를 최단시간에 제거하고 화력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확보”(방위사업청,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 (Ⅱ-1)』, 2020. 9.)
- 북한의 장사정포 궤도타격을 비롯한 방사포 궤도타격, 스커드미사일 고정기반시설 파괴를 위한 유도 무기 확보(주간조선 등 언론기사)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은 크게 부풀려져 있으며, 현 전력으로도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 장사정포란 북한 야포 중 서울을 사정거리 내에 두고 있는 포로 170mm 자주포(150문)와 240mm, 300mm 방사포(200문)가 여기에 해당한다. 장사정포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진봉산, 덩불산(황일도, 2007) 등과 같은 선상에 위치한 판문군 평

화리 기준으로 서울 광화문과 남산까지의 거리는 각각 51.5km, 54.5km 정도다.

- 170mm 장사정포는 대부분 갯도진지를 이용해 서울을 타격하게 되는데, 갯도 밖 발사지점으로의 이동과 방열, 포격, 갯도 이동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1회 12발 발사 이후 재발사까지 30분, 교육사령부, 2002)되어 발사 직후 남한 공군과 육군이 대화력전으로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을 겨냥해 사실상 1회(12발) 이상 발사하기는 어렵다. 결국 170mm 자주포는 유사시 1문당 1회 12발 발사, 전체 1,800(12×150)발에 그치고 2회, 3회 사격이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170mm 자주포의 탄 중 일반탄은 서울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거리가 최대 54km인 사거리 연장탄만 남산 이북의 서울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탄들조차 북한산, 인왕산 등에 의해 차단되어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 숫자는 크게 줄어든다. 또한 탄의 유효사거리가 36km에 불과해 남산 이북 서울에 도달한 사거리 연장탄의 정확도와 위력(탄 당 7~8kg 폭약)은 크게 감소한다. 더구나 사거리 연장탄은 고가여서 많은 양을 사용하기 어렵다. 170mm 자주포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거나 북한이 초전에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비대칭 전력이거나 공포의 무기는 결코 아니다.
- 240mm 방사포도 갯도진지를 이용해 서울을 타격하게 되나 갯도 밖 발사지점으로 이동과 방열, 갯도 이동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1회 22발 발사 후 재발사까지 걸리는 시간 40분, 교육사령부, 2002)되기 때문에 발사 직후 남한 공군과 육군의 대화력전에 의해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따라서 서울을 향해 1회(22발) 발사 이상 추가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 결국 240mm 방사포도 1문당 22발, 전체 4,400(22×200)발 이상 2회, 3회 사격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 사거리가 최대 60~65km에 이르는 240mm 방사포는 서울 전역과 광명 소하리, 과천 등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는 있지만 북한산, 인왕산 등에 의해 차단되어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 수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240mm 방사포는 서울을 유효사거리(40km) 내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까지 도달하더라도 정확도와 위력이 크게 감소한다. 240mm 방사포 자탄 위력은 수류탄 1개 위력 정도에 불과하다. 240mm 방사포 역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거나 유사시 북한이 초전에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게임 체인저나 공포의 무기가 결코 아니다.

- 한편 군과 일부 언론 등은 2016년을 전후해 실전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300mm 방사포가 170/240mm 방사포에 더해 북한 방사포의 대남 비대칭 전력 우위를 더욱 확고히 보장해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30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최대 200km로 충남 계룡대의 3군 본부를 사정거리 내에 두고 있고, 탄의 위력도 크며 정밀유도장치까지 갖추므로써 다른 장사정포에 비해 남한에 훨씬 큰 위협을 준다는 것이다.
- 그러나 300mm 방사포도 게임 체인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00mm 방사포의 살상면적은 발당 1,800㎡로 240mm 방사포의 살상면적 514㎡보다 3배 이상 위력이 크다. 그러나 300mm 방사포는 발사속도가 느리고 재장전 시간도 240mm보다 2배나 길어 1시간 당 약 11발을 발사할 수 있다. 1시간에 31발(궤도진지를 이용한 포격 시)을 발사할 수 있는 240mm의 1/3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300mm 방사포의 1제사 당 살상면적은 14,400㎡(노틸러스 연구소, 2018. 6. 10.), 시간 당 살상면적은 약 19,800㎡로 1제사 당 살상면적 11,300㎡(신동아, 2007.12.), 170mm/240mm 방사포가 공포의 무기나 게임 체인저가 아닌 것처럼 300mm 방사포도 공포의 무기나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 반면, 현재 남한이 220여 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ATACMS는 사거리가 300km로 평양을 사거리 내에 두고 있다(동아일보, 2011. 6. 17.). 그런데 ATACMS의 위력은 240mm 방사포나 300mm 방사포의 최소 수십 배에 달한다. 북한 장사정포의 서울 시민에 대한 위협보다는 남한 ATACMS(Block 1A탄)의 평양 시민에 대한 위협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사정포의 위협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 비대칭 우위가 아니라 남한의 대북 비대칭 우위 전력인 것이다.

## ② 전체 포병전력에서도 남한 포병전력이 북한 포병전력에 압도적 우위에 있다

-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박격포를 제외한 북한의 야포 숫자는 14,100문으로 6,000문의 남한의 2.3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견인포는 북한이 4,300문, 남한이 3,500문으로 북한이 다소 우위에 있다. 자주포는 북한이 4,200문, 남한이 1,353+α 문으로 북한이 남한의 3배를 상회한다. 방사포는 북한이 5,100문, 남한이 214+α 문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일방적인 양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의 야포 숫자는 크게 부풀려져 있다. 북한의 견인포는 4,300문(The Military Balance 2020 ; Jane's land warfare platforms 2018-2019)에 달한다지만 상당수가 1940~60년대 개발된 구형으로 많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으며, 대부분 1970~80년대에 생산, 배치되어 야포 수명주기(25년)를 2배 가까이 상회함으로써 잦은 고장 등으로 성능 발휘가 제한되며 상당수는 전투서열에서 제외해야 한다. 반면 남한 보유 견인포는 105mm KH-178, 155mm KH-179가 각각 1977년, 1983년(국방일보, 2008. 8. 27. ; 국방일보, 2017. 12. 7.)부터 배치되어 일부가 도태되지 않고 수명주기를 넘긴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전투서열에서 제외해야 할 정도는 아닐 것이며, 특히 105mm KH-178은 2021년부터 자주포(K105A1)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따라서 남북이 보유한 견인포는 비슷하거나 남한이 오히려 북한보다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
- 견인포의 질적 비교에서는 남한 우위가 확연하다. 남북한 견인포 중 주력포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152mm M-1943과 남한의 155mm KH-179를 비교해 보면 152mm M-1943는 사거리가 12.4km로 155mm KH-17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화력에서도 152mm M-1943의 한 발당 살상면적은 950㎡로 155mm KH-179의 5,100㎡의 1/5에도 못 미친다. 발사속도는 152mm M-1943와 155mm KH-179가 비슷하다.
- 북한 보유 자주포는 숫자가 부풀려져 있는 반면 남한 보유 자주포는 오히려 상당한 규모로 축소되어 있다. 북한 자주포 중 1970년대에 생산되어 수명주기를 훨씬 넘긴 포는 상당 부분은 전투서열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럴 경우 북한 보유 자주포 숫자는 크게 줄어든다. 남한 보유 자주포 중 주력포인 K-9의 경우 『2020 밀리터리 밸런스』는 300문을 보유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실전배치된 K-9는 1,100문(세계일보, 2020. 9. 4.)이다. 또한 155mm K55와 K55A1를 합해 1,040문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K55의 K55A1으로의 개량화가 거의 완료되고, K55A1 5차 양산도 진행 중이어서 전력 확충으로 보유 대수도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요인을 고려하면 남한 보유 자주포는 최소 2,140여 문 이상으로 남북한 격차는 2 : 1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북한 보유 자주포 중 전투서열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까지를 고려하면 그 격차는 더 줄어들 것이다.
- 자주포의 질적 비교에서는 남한 보유 자주포가 사거리를 제외한 화력, 기동력, 방호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다. 특히 남한 보유 자주포는 대북 양적 열세를 만회하

고 전체 전력에서 우위를 누릴 만큼 화력에서 북한 자주포에 일방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K-9 자주포의 1발 당 살상력은  $7,850\text{m}^2$ (연합뉴스, 2015. 5. 27.)으로 북한의 주력 자주포인 170mm 자주포의 1발당 살상력  $2,042\text{m}^2$ (신동아, 2015. 1. 언론 보도 중 최대치이자 국방부 주장으로 매우 과장되었을 가능성 큼)의 3.8배에 이른다. 여기에 발사속도를 반영해 6분 동안의 살상면적을 단순 비교하면 K-9 자주포가  $117,750\text{m}^2$ (분당 2.5발, 지속 사격 시)로 170mm 자주포의  $20,420\text{m}^2$ (10발/6분, 육군 교육사령부, 2002)의 약 5.8배에 이른다. 남한이 보유한 1,100문의 K-9 자주포의 화력만으로도 북한 보유 자주포의 4,300문의 화력을 압도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기동력과 방호력에 더해 포탄 보급 능력도 K-9 자주포가 크게 우위에 있는 만큼 자주포 전력에서 남한은 북한에 일방적인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 『2020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방사포에서도  $214+\alpha : 5,500$ 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26배나 많다. 그러나 『2020 밀리터리 밸런스』가 명시한 북한 방사포도 전투서열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적어도 107mm Type-63(1960년대 생산), 122mm BM-11(1960~70년대 생산), 122mm M-1977(BM-21, 1960~70년대 도입), 200mm BMD-20(1950년대 후반 도입), 240mm BM-24(1950년대 후반 도입) 등의 상당수는 전투서열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반면 남한 보유 방사포 수는 실제 보유 숫자에 크게 못 미친다. 『2020 밀리터리 밸런스』는 남한이 227mm M270을 48문 보유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현재 96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계일보, 2015. 8. 4.). 또한 남한은 신형 MLRS인 230mm 천무를 1차 생산에서 77문을 생산해 배치 완료했으며, 2차 양산으로 2021년까지 127문을 생산할 계획(『2020년 국방예산 설명자료』)이지만 『2020 밀리터리 밸런스』는 이를 누락시키고 있으며 239mm 천무도 ‘약간’(some)으로 쓰고 있을 뿐이다. 230mm/239mm 천무가 130mm 구룡을 대체한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130mm 구룡을 곧바로 퇴역시킬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남한 보유 MLRS 문수는 최소 466문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 남북 주력 방사포/다연장포의 질적 차이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남한이 우위에 있다. 230/239mm 천무의 1발 당 살상면적은  $21,420\text{m}^2$ (한겨레신문, 2018. 5. 30.)로 북한의 240mm 방사포 1발 당 살상면적 약  $514\text{m}^2$ (신동아, 2007. 12.)의 무려 42배에 이른다. 여기에 발사속도(각각 분당 12발, 분당 10발)와 재장전 시간(각각 7분, 22분)만을 고려해 살상면적을 계산하면 시간당 230/239mm 천무는 약 90발을 발사해 살상면적이  $1,927,800\text{m}^2$ 에 이르고 240mm 방사포는 55발을 발사해

살상면적이 28,270m<sup>2</sup>에 달함으로써 그 격차는 무려 68배로 확대된다. 교전 시 갱도진지를 이용한 240mm 방사포의 시간당 발사 탄 수는 약 27발로 줄어들며, 이에 따른 230/239mm 천무와의 살상면적 격차는 136배로 확대된다. 남한이 보유한 200여 문의 230/239mm 천무만으로도 북한 보유 방사포 전력 전체를 압도한다.

- 화력에 못지않게 남한 포병전력의 대북 우위를 보장해주는 포탄 지원 능력과 생존율, 곡사포 비율, 포탄의 운용성과 위력, 표적 획득 장비, C4I 전력 등까지 고려하면 남한 포병전력의 우위는 더욱 확고해진다.

### ③ 미사일 전력 역시 남한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건에서 전술 지대지유도무기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 미사일 전력 역시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곧 비대칭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료마다 편차가 크지만 북한은 노동미사일 200기를 포함해 약 800(국방일보, 2019. 8. 1.)~1,150(미 헤리티지 재단,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1,300(NewDaily, 2019. 8. 16.)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한은 ATACMS 220여 기를 포함해 약 2,220기(동아일보, 2011. 6. 17. ; SBS, 2016. 1. 25.)의 현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질적 측면에서도 남한 탄도미사일은 북한 탄도미사일보다 우위에 있다. 사거리 120~160km의 화성-11(KN-02)의 원형공산오차(CEP)는 50~100m(Jane's weapons : strategic 2018~9)이며, 살상면적은 약 28,560m<sup>2</sup>(연합뉴스, 2007. 10. 24.)이다. 이에 반해 사거리가 비슷한 남한 KTSSM(양산을 앞두고 있음) 원형공산오차가 2m(이데일리, 2018. 2. 4.)로 화성-11보다 훨씬 정밀하고 살상면적은 남한이 보유한 ATACMS Block- I의 MGM-140A탄의 살상면적과 비슷한 약 33,000m<sup>2</sup>(글로벌 이코노믹, 2017. 7. 29.)로 화성-11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확도와 결합하면 파괴력이 화성-11보다 훨씬 크다. 북한이 20여 차례의 시험발사(38 NORTH, 2019. 10. 9.)로 화성-11의 정확도를 KTSSM에 필적할 정도로 개선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KTSSM의 양산에 따른 남한의 수적 우위와 함께 KTSSM의 전력 우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사거리 500km의 북한의 화성-6(스커드-C)과 사거리가 비슷한 남한의 현무-2B를 비교해 보더라도 현무-2B의 우위가 확연하다. 화성-6은 원형공산오차가 1,000m나

되고 살상면적도 16,963m<sup>2</sup>(랜드연구소, 1991)에 불과해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다. 반면 현무-2B는 원형공산오차가 50m로 화성-6보다 훨씬 정확하며, 살상면적도 20,000m<sup>2</sup>(월간조선 2011. 3.)로 화성-6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확도와 결합하면 화성-6에 비해 파괴력에서 훨씬 앞선다.

- 북한이 최근에 시험발사(2019.5/7)한 사거리 600km 전후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남한판 이스칸데르 현무-2B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무-2B의 우위가 확연하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확도는 100~200m(38 NORTH, 2019. 10. 9.)로 현무-2B의 50m에 크게 못 미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탄두중량은 0.5톤, 살상반경은 50~100m(38 NORTH, 2019. 10. 9.)로 현무-2B의 살상반경 87m와 비슷하나 현무-2B의 정확도 우위를 고려하면 살상력에서도 현무-2B가 우위에 있다. 한편 현무-2B는 북한의 지하시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관통탄두(1t)까지 장착(중앙일보, 2017. 8. 30.)하고 있으며, 북한 이스칸데르 폴업 기능보다 더 정교한 폴업 기능을 이미 10년 전에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뉴스, 2019. 7. 31.).
- 사거리가 800km 전후인 화성-9(2016년 실전 배치)와 현무-2C(2017년 실전 배치)를 비교해 보더라도 현무-2C가 정확도와 파괴력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화성-9의 원형공산오차는 190m로 원형공산오차가 10m인 현무-2C에 훨씬 못 미친다(중앙일보, 2017. 6. 27.). 그러나 북한 발표대로 화성-9의 원형공산오차가 7m(연합뉴스, 2017. 5. 30.)로 개선되었다면 현무-2C와 정확도가 비슷해졌다고 할 수 있다. 화성-9의 탄두중량은 0.5톤(CSIS, 2020. 1. 31. 검색)으로 현무-2C와 동일하다. 그러나 남한이 개발한 2톤 탄두의 ‘현무-4’(사거리 800km)를 실전 배치할 경우 ‘현무-4’가 파괴력에서 화성-9호를 크게 앞선다.
- 이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능력이 우리에게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미사일 요격·방어능력은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2019. 11. 2.).  
임호영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도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경우 총량적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 미사일은 상당 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국방부 브리핑, 2016. 9. 9.)고 밝히고 있다.
- 이처럼 포병전력과 미사일 전력에서 남한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

다. 또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서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K55A1와 K-9 자주포, 130mm 구룡이나 227mm M-270/270A1 MLRS, ATACMS, 230/239mm 천무 등의 다연장포 전력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전술지대지유도무기-I에 이어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까지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전력 구축이다.

**④ 대북 선제공격 무기도입은 불법이며 판문점/평양선언 등 남북 합의에 위배된다.  
또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반인도적 무기이다**

- 일명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에 대해서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최단시간 내 무력화하고, 일거에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전력”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 육군은 개전 초기 KTSSM, 현무-2, 현무-4 등 3종류의 탄도미사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장사정포 진지를 선제공격해 초토화한다는 킬체인(Kill Chain) 개념을 실행하기 위해 KTSSM을 개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 10. 24.).
  - 군 관계자는 “군이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화력여단과 미사일여단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KTSSM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아시아경제, 2019. 7. 22.)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한 전문가는 북한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한미 군 및 정보 당국은 수 일 전부터 북한이 지난 10일 쏘았던 이동식 발사차량의 움직임을 포착, 추적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즉각 사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19. 8. 12.).
  - 대북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은 침략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전문, 4조)에 위배되며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배된다.
- 또한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조치와 단계적 군축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도 위배된다. 남북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는 대북 선제공격 무기도입은 평화와 번영, 통일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특히 전술지대지유도무기-I에 이어 최대사거리가 290km로 평양 등의 주요 전략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R&D) 도입

사업까지 강행하는 것은 초공세적이고 도발적이다.

- 전술지대지유도무기- I / II 도입 사업은 남한군으로 하여금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 등의 공격을 “수 분 내 동시 정밀타격”해 이를 무력화함으로써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왜곡된 대북 자신감과 선제공격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
- 한편,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국제인도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도적 무기체계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사용하는 침투관통형 열압력탄은 갯도를 보호하는 1.5미터 두께의 콘크리트 방호벽 또는 10m 이상의 토사를 뚫고 들어가 170mm 자주포 갯도와 240mm 방사포 갯도 내에서 폭발한다. 또한 지능신관을 장착해 지하공간 내부를 감지해 폭발하면서 강력한 열폭풍과 과압을 형성해 내부의 장비와 인원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밀리터리 리뷰, 군사연구, 2020년 7월호, 54쪽). 그러나 국제인도법은 과도한 상해와 불필요한 손상을 야기하는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포병전력과 미사일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남한이 이런 반인도적 무기까지 보유, 운용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⑤ 절차상 하자과 중복투자 등의 난맥상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이 사업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 번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통상적으로 무기체계 사업은 각 군과 합동참모본부가 소요를 제기하고 국방부가 결정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진행되지만 번개사업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로 시작되었다. 객관적이고 전략·전력적인 검토와는 거리가 멀며, 다분히 감정적 차원에서 급박하게 추진된 사업인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졸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10여 년이 지나도록 중복투자 등 수많은 논란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명박 청와대의 종용에 따라 1~2년 동안 탐색개발을 진행했지만 유도무기 체계를 단기간에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별 성과없이 사업을 종료했다.
- 또한 2018년 12월에는 KTSSM- I 사업 개발시험평가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

다가 재시험평가를 거쳐 겨우 “기준충족” 판정을 받았다.

- 2019년 국정감사 때 민홍철 의원 질의에 따르면 MLRS와 ATACMS를 미국에서는 수리 부속 부품 부족을 해결하면서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김관진 국방장관(2010. 12.~2014. 6.) 당시에 동일한 수리 부속 부품 문제를 이유로 2012년, 2013년 2차례에 걸쳐 폐기 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사업에 대한 중기신규 소요 결정(2012. 8.)과 사업추진 기본전략 승인(2014. 2.) 시점과 맞물린다(2019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 60~61쪽, 2019. 10. 7.).
- 그런데 2019년 시점에서도 육군은 “ATACMS를 지속 운영하고 있고 폐기 여부는 향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의 전력화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또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을 위해, 지금도 활용이 가능한 MLRS와 ATACMS를 폐기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2019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 60~61쪽, 2019. 10. 7.).
-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에서도 “양산준비 미흡에 따른 양산타당성 미확보” 판정을 받았다(방위사업청,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1469쪽, 2020. 9.).
- 올해 2월부터는 감사원이 총사업비 3204억 원에 이르는 KTSSM-Ⅰ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감사원은 2018년 완료된 ‘KTSSM 사업 타당성 평가’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동아일보, 2020. 10. 16.). 자세한 이유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KTSSM 사업의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편 이 사업은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 스커드미사일 등을 궤멸시킬 목적으로 개발비 약 1,300억 원에 양산비용 약 3조 5,182억 원을 쏟아 부어 실전배치하고 있는 ‘천무’를 비롯한 다연장포와 현무 미사일 사업(사거리 300km 현무 2A) 등과 중복되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은 폐기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이데일리, 2017. 7. 29.).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남한의 포병전력과 미사일전력은 북한에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다연장포와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 간 전력지형에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전력 구축이다.
-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R&D)와 같은 대북 선제공격용 무기도입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이자 판문점선언/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위배되고 남북 간 첨예한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가중시킬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사업은 절차적, 기술적 하자와 중복투자 등의 난맥상으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 5. 삭감 요구액

-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예산 988억 8,6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R&D) (2531-329)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신규	-	8,780	8,780	8,780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 “개전 초 적 방사포 궤도를 조기 파괴하고, 적 주요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차량 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체계를 연구개발 하는 사업”(방위사업청, 홈페이지, 2020. 9.)
- 북한의 장사정포 궤도타격을 비롯한 방사포 궤도타격, 스커드미사일 고정기반시설 파괴를 위한 유도 무기 확보(주간조선 등 언론기사)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은 크게 부풀려져 있으며, 현 전력으로도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 장사정포란 북한 야포 중 서울을 사정거리 내에 두고 있는 포로 170mm 자주포 (150문)와 240mm, 300mm 방사포(200문)가 여기에 해당한다. 장사정포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진봉산, 덩불산(황일도, 2007) 등과 같은 선상에 위치한 판문군 평

화리 기준으로 서울 광화문과 남산까지의 거리는 각각 51.5km, 54.5km 정도다.

- 170mm 장사정포는 대부분 갯도진지를 이용해 서울을 타격하게 되는데, 갯도 밖 발사지점으로의 이동과 방열, 포격, 갯도 이동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1회 12발 발사 이후 재발사까지 30분, 교육사령부, 2002)되어 발사 직후 남한 공군과 육군이 대화력전으로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을 겨냥해 사실상 1회(12발) 이상 발사하기는 어렵다. 결국 170mm 자주포는 유사시 1문당 1회 12발 발사, 전체 1,800(12×150)발에 그치고 2회, 3회 사격이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170mm 자주포의 탄 중 일반탄은 서울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거리가 최대 54km인 사거리 연장탄만 남산 이북의 서울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탄들조차 북한산, 인왕산 등에 의해 차단되어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 숫자는 크게 줄어든다. 또한 탄의 유효사거리가 36km에 불과해 남산 이북 서울에 도달한 사거리 연장탄의 정확도와 위력(탄 당 7~8kg 폭약)은 크게 감소한다. 더구나 사거리 연장탄은 고가여서 많은 양을 사용하기 어렵다. 170mm 자주포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거나 북한이 초전에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비대칭 전력이거나 공포의 무기는 결코 아니다.
- 240mm 방사포도 갯도진지를 이용해 서울을 타격하게 되나 갯도 밖 발사지점으로 이동과 방열, 갯도 이동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1회 22발 발사 후 재발사까지 걸리는 시간 40분, 교육사령부, 2002)되기 때문에 발사 직후 남한 공군과 육군의 대화력전에 의해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따라서 서울을 향해 1회(22발) 발사 이상 추가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 결국 240mm 방사포도 1문당 22발, 전체 4,400(22×200)발 이상 2회, 3회 사격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 사거리가 최대 60~65km에 이르는 240mm 방사포는 서울 전역과 광명 소하리, 과천 등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는 있지만 북한산, 인왕산 등에 의해 차단되어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 수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240mm 방사포는 서울을 유효사거리(40km) 내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까지 도달하더라도 정확도와 위력이 크게 감소한다. 240mm 방사포 자탄 위력은 수류탄 1개 위력 정도에 불과하다. 240mm 방사포 역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거나 유사시 북한이 초전에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게임 체인저나 공포의 무기가 결코 아니다.

- 한편 군과 일부 언론 등은 2016년을 전후해 실전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300mm 방사포가 170/240mm 방사포에 더해 북한 방사포의 대남 비대칭 전력 우위를 더욱 확고히 보장해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30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최대 200km로 충남 계룡대의 3군 본부를 사정거리 내에 두고 있고, 탄의 위력도 크며 정밀유도장치까지 갖추므로써 다른 장사정포에 비해 남한에 훨씬 큰 위협을 준다는 것이다.
- 그러나 300mm 방사포도 게임 체인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00mm 방사포의 살상면적은 발당 1,800㎡로 240mm 방사포의 살상면적 514㎡보다 3배 이상 위력이 크다. 그러나 300mm 방사포는 발사속도가 느리고 재장전 시간도 240mm보다 2배나 길어 1시간 당 약 11발을 발사할 수 있다. 1시간에 31발(궤도진지를 이용한 포격 시)을 발사할 수 있는 240mm의 1/3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300mm 방사포의 1제사 당 살상면적은 14,400㎡(노틸러스 연구소, 2018. 6. 10.), 시간 당 살상면적은 약 19,800㎡로 1제사 당 살상면적 11,300㎡(신동아, 2007. 12.), 170mm/240mm 방사포가 공포의 무기나 게임 체인저가 아닌 것처럼 300mm 방사포도 공포의 무기나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 반면, 현재 남한이 220여 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ATACMS는 사거리가 300km로 평양을 사거리 내에 두고 있다(동아일보, 2011. 6. 17.). 그런데 ATACMS의 위력은 240mm 방사포나 300mm 방사포의 최소 수십 배에 달한다. 북한 장사정포의 서울 시민에 대한 위협보다는 남한 ATACMS(Block 1A탄)의 평양 시민에 대한 위협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사정포의 위협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 비대칭 우위가 아니라 남한의 대북 비대칭 우위 전력인 것이다.

## ② 전체 포병전력에서도 남한 포병전력이 북한 포병전력에 압도적 우위에 있다

-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박격포를 제외한 북한의 야포 숫자는 14,100문으로 6,000문의 남한의 2.3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견인포는 북한이 4,300문, 남한이 3,500문으로 북한이 다소 우위에 있다. 자주포는 북한이 4,200문, 남한이 1,353+α 문으로 북한이 남한의 3배를 상회한다. 방사포는 북한이 5,100문, 남한이 214+α 문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일방적인 양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의 야포 숫자는 크게 부풀려져 있다. 북한의 견인포는 4,300문(The Military Balance 2020 ; Jane's land warfare platforms 2018-2019)에 달한다지만 상당수가 1940~60년대 개발된 구형으로 많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으며, 대부분 1970~80년대에 생산, 배치되어 야포 수명주기(25년)를 2배 가까이 상회함으로써 잦은 고장 등으로 성능 발휘가 제한되며 상당수는 전투서열에서 제외해야 한다. 반면 남한 보유 견인포는 105mm KH-178, 155mm KH-179가 각각 1977년, 1983년(국방일보, 2008. 8. 27 ; 국방일보, 2017. 12. 7)부터 배치되어 일부가 도태되지 않고 수명주기를 넘긴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전투서열에서 제외해야 할 정도는 아닐 것이며, 특히 105mm KH-178은 2021년부터 자주포(K105A1)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따라서 남북이 보유한 견인포는 비슷하거나 남한이 오히려 북한보다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
- 견인포의 질적 비교에서는 남한 우위가 확연하다. 남북한 견인포 중 주력포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152mm M-1943과 남한의 155mm KH-179를 비교해 보면 152mm M-1943는 사거리가 12.4km로 155mm KH-17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화력에서도 152mm M-1943의 한 발당 살상면적은 950㎡로 155mm KH-179의 5,100㎡의 1/5에도 못 미친다. 발사속도는 152mm M-1943와 155mm KH-179가 비슷하다.
- 북한 보유 자주포는 숫자가 부풀려져 있는 반면 남한 보유 자주포는 오히려 상당한 규모로 축소되어 있다. 북한 자주포 중 1970년대에 생산되어 수명주기를 훨씬 넘긴 포는 상당 부분은 전투서열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럴 경우 북한 보유 자주포 숫자는 크게 줄어든다. 남한 보유 자주포 중 주력포인 K-9의 경우 『2020 밀리터리 밸런스』는 300문을 보유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실전배치된 K-9는 1,100문(세계일보, 2020. 9. 4.)이다. 또한 155mm K55와 K55A1를 합해 1,040문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K55의 K55A1으로의 개량화가 거의 완료되고, K55A1 5차 양산도 진행 중이어서 전력 확충으로 보유 대수도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요인을 고려하면 남한 보유 자주포는 최소 2,140여 문 이상으로 남북한 격차는 2 : 1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북한 보유 자주포 중 전투서열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까지를 고려하면 그 격차는 더 줄어들 것이다.
- 자주포의 질적 비교에서는 남한 보유 자주포가 사거리를 제외한 화력, 기동력, 방호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다. 특히 남한 보유 자주포는 대북 양적 열세를 만회하

고 전체 전력에서 우위를 누릴 만큼 화력에서 북한 자주포에 일방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K-9 자주포의 1발 당 살상력은  $7,850\text{m}^2$ (연합뉴스, 2015. 5. 27.)으로 북한의 주력 자주포인 170mm 자주포의 1발당 살상력  $2,042\text{m}^2$ (신동아, 2015. 1. 언론 보도 중 최대치이자 국방부 주장으로 매우 과장되었을 가능성 큼)의 3.8배에 이른다. 여기에 발사속도를 반영해 6분 동안의 살상면적을 단순 비교하면 K-9 자주포가  $117,750\text{m}^2$ (분당 2.5발, 지속 사격 시)로 170mm 자주포의  $20,420\text{m}^2$ (10발/6분, 육군 교육사령부, 2002)의 약 5.8배에 이른다. 남한이 보유한 1,100문의 K-9 자주포의 화력만으로도 북한 보유 자주포의 4,300문의 화력을 압도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기동력과 방호력에 더해 포탄 보급 능력도 K-9 자주포가 크게 우위에 있는 만큼 자주포 전력에서 남한은 북한에 일방적인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 『2020ミリ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방사포에서도  $214+\alpha : 5,500$ 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26배나 많다. 그러나 『2020ミリ터리 밸런스』가 명시한 북한 방사포도 전투서열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적어도 107mm Type-63(1960년대 생산), 122mm BM-11(1960~70년대 생산), 122mm M-1977(BM-21, 1960~70년대 도입), 200mm BMD-20(1950년대 후반 도입), 240mm BM-24(1950년대 후반 도입) 등의 상당수는 전투서열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반면 남한 보유 방사포 수는 실제 보유 숫자에 크게 못 미친다. 『2020ミリ터리 밸런스』는 남한이 227mm M270을 48문 보유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현재 96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계일보, 2015. 8. 4.). 또한 남한은 신형 MLRS인 230mm 천무를 1차 생산에서 77문을 생산해 배치 완료했으며, 2차 양산으로 2021년까지 127문을 생산할 계획(『2020년 국방예산 설명자료』)이지만 『2020ミリ터리 밸런스』는 이를 누락시키고 있으며 239mm 천무도 ‘약간’(some)으로 쓰고 있을 뿐이다. 230mm/239mm 천무가 130mm 구룡을 대체한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130mm 구룡을 곧바로 퇴역시킬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남한 보유 MLRS 문수는 최소 466문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 남북 주력 방사포/다연장포의 질적 차이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남한이 우위에 있다. 230/239mm 천무의 1발 당 살상면적은  $21,420\text{m}^2$ (한겨레신문, 2018. 5. 30.)로 북한의 240mm 방사포 1발 당 살상면적 약  $514\text{m}^2$ (신동아, 2007.12)의 무려 42배에 이른다. 여기에 발사속도(각각 분당 12발, 분당 10발)와 재장전 시간(각각 7분, 22분)만을 고려해 살상면적을 계산하면 시간당 230/239mm 천무는 약 90발을 발사해 살상면적이  $1,927,800\text{m}^2$ 에 이르고 240mm 방사포는 55발을 발사해 살상면

적이 28,270m<sup>2</sup>에 달함으로써 그 격차는 무려 68배로 확대된다. 교전 시 갱도진지를 이용한 240mm 방사포의 시간당 발사 탄 수는 약 27발로 줄어들며, 이에 따른 230/239mm 천무와의 살상면적 격차는 136배로 확대된다. 남한이 보유한 200여문의 230/239mm 천무만으로도 북한 보유 방사포 전력 전체를 압도한다.

- 화력에 못지않게 남한 포병전력의 대북 우위를 보장해주는 포탄 지원 능력과 생존율, 곡사포 비율, 포탄의 운용성과 위력, 표적 획득 장비, C4I 전력 등까지 고려하면 남한 포병전력의 우위는 더욱 확고해진다.

### ③ 미사일 전력 역시 남한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건에서 전술 지대지유도무기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 미사일 전력 역시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곧 비대칭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료마다 편차가 크지만 북한은 노동미사일 200기를 포함해 약 800(국방일보, 2019. 8. 1.)~1,150(미 헤리티지 재단,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1,300(NewDaily, 2019. 8. 16.)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한은 ATACMS 220여 기를 포함해 약 2,220기(동아일보, 2011. 6. 17 ; SBS, 2016. 1. 25.)의 현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질적 측면에서도 남한 탄도미사일은 북한 탄도미사일보다 우위에 있다. 사거리 120~160km의 화성-11(KN-02)의 원형공산오차(CEP)는 50~100m(Jane's weapons : strategic 2018~9)이며, 살상면적은 약 28,560m<sup>2</sup>(연합뉴스, 2007. 10. 24.)이다. 이에 반해 사거리가 비슷한 남한 KTSSM(양산을 앞두고 있음) 원형공산오차가 2m(이데일리, 2018. 2. 4.)로 화성-11보다 훨씬 정밀하고 살상면적은 남한이 보유한 ATACMS Block-I의 MGM-140A탄의 살상면적과 비슷한 약 33,000m<sup>2</sup>(글로벌 이코노믹, 2017. 7. 29.)로 화성-11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확도와 결합하면 파괴력이 화성-11보다 훨씬 크다. 북한이 20여 차례의 시험발사(38 NORTH, 2019. 10. 9.)로 화성-11의 정확도를 KTSSM에 필적할 정도로 개선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KTSSM의 양산에 따른 남한의 수적 우위와 함께 KTSSM의 전력 우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사거리 500km의 북한의 화성-6(스커드-C)과 사거리가 비슷한 남한의 현무-2B를 비교해 보더라도 현무-2B의 우위가 확연하다. 화성-6은 원형공산오차가 1,000m나

되고 살상면적도 16,963m<sup>2</sup>(랜드연구소, 1991)에 불과해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다. 반면 현무-2B는 원형공산오차가 50m로 화성-6보다 훨씬 정확하며, 살상면적도 20,000m<sup>2</sup>(월간조선 2011. 3.)로 화성-6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확도와 결합하면 화성-6에 비해 파괴력에서 훨씬 앞선다.

- 북한이 최근에 시험발사(2019.5/7)한 사거리 600km 전후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남한판 이스칸데르 현무-2B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무-2B의 우위가 확연하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확도는 100~200m(38 NORTH, 2019. 10. 9.)로 현무-2B의 50m에 크게 못 미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탄두중량은 0.5톤, 살상반경은 50~100m(38 NORTH, 2019. 10. 9.)로 현무-2B의 살상반경 87m와 비슷하나 현무-2B의 정확도 우위를 고려하면 살상력에서도 현무-2B가 우위에 있다. 한편 현무-2B는 북한의 지하시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관통탄두(1t)까지 장착(중앙일보, 2017. 8. 30.)하고 있으며, 북한 이스칸데르 폴업 기능보다 더 정교한 폴업 기능을 이미 10년 전에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뉴스, 2019. 7. 31.).

- 사거리가 800km 전후인 화성-9(2016년 실전 배치)와 현무-2C(2017년 실전 배치)를 비교해 보더라도 현무-2C가 정확도와 파괴력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화성-9의 원형공산오차는 190m로 원형공산오차가 10m인 현무-2C에 훨씬 못 미친다(중앙일보, 2017. 6. 27.). 그러나 북한 발표대로 화성-9의 원형공산오차가 7m(연합뉴스, 2017. 5. 30.)로 개선되었다면 현무-2C와 정확도가 비슷해졌다고 할 수 있다. 화성-9의 탄두중량은 0.5톤(CSIS, 2020. 1. 31. 검색)으로 현무-2C와 동일하다. 그러나 남한이 개발한 2톤 탄두의 '현무-4'(사거리 800km)를 실전 배치할 경우 '현무-4'가 파괴력에서 화성-9호를 크게 앞선다.

- 이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능력이 우리에게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미사일 요격·방어능력은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2019. 11. 2.).

임호영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도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경우 총량적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 미사일은 상당 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국방부 브리핑, 2016. 9. 9.)고 밝히고 있다.

- 이처럼 포병전력과 미사일 전력에서 남한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

다. 또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서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K55A1와 K-9 자주포, 130mm 구룡이나 227mm M-270/270A1 MLRS, ATACMS, 230/239mm 천무 등의 다연장포 전력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전술지대지유도무기-I에 이어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까지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전력 구축이다.

#### ④ 대북 선제공격 무기도입은 불법이며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등 남북 합의에 위배된다. 또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반인도적 무기이다

- 일명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에 대해서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최단시간 내 무력화하고, 일거에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전력”, 남한의 게임 체인저라고 소개한 바 있다.
  - 육군은 개전 초기 KTSSM, 현무-2, 현무-4 등의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장사정포 진지를 선제공격해 초토화한다는 킬체인(Kill Chain) 개념을 실행하기 위해 KTSSM을 개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 10. 24.).
  - 군 관계자는 “군이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화력여단과 미사일여단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KTSSM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아시아경제, 2019. 7. 22.)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한 전문가는 북한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한미 군 및 정보 당국은 수일 전부터 북한이 지난 10일 쏘았던 이동식 발사차량의 움직임을 포착, 추적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즉각 사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19. 8. 12.).
  - 대북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은 침략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전문, 4조)에 위배되며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배된다.
- 또한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조치와 단계적 군축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도 위배된다. 남북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는 대북 선제공격 무기도입은 평화와 번영, 통일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특히 전술지대지유도무기-I에 이어 최대사거리가 290km로

평양 등의 주요 전략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R&D) 도입 사업까지 강행하는 것은 초공세적이고 도발적이다.

-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Ⅱ 도입 사업은 남한군으로 하여금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 등의 공격을 “수 분 내 동시 정밀타격”해 이를 무력화함으로써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왜곡된 대북 자신감과 선제공격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
- 한편,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국제인도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도적 무기체계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사용하는 침투관통형 열압력탄은 갱도를 보호하는 1.5미터 두께의 콘크리트 방호벽 또는 10m 이상의 토사를 뚫고 들어가 170mm 자주포 갱도와 240mm 방사포 갱도 내에서 폭발한다. 또한 지능신관을 장착해 지하 공간 내부를 감지해 폭발하면서 강력한 열폭풍과 과압을 형성해 내부의 장비와 인원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밀리터리 리뷰, 군사연구, 2020년 7월호, 54쪽). 그러나 국제인도법은 과도한 상해와 불필요한 손상을 야기하는 전쟁 수단과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포병전력과 미사일 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는 남한이 이런 반인도적인 무기까지 보유, 운용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 ⑤ 절차상 하자과 중복투자 등의 난맥상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이 사업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 번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통상적으로 무기체계 사업은 각 군과 합동참모본부가 소요를 제기하고 국방부가 결정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진행되지만 번개사업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로 시작되었다. 객관적이고 전략·전력적인 검토와는 거리가 멀며, 다분히 감정적 차원에서 급박하게 추진된 사업인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졸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10여 년이 지나도록 중복투자 등 수많은 논란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명박 청와대의 종용에 따라 1~2년 동안 탐색개발을 진행했지만 유도무기 체계를 단기간에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별 성과없이 사업을 종료했다.

- 또한 2018년 12월에는 KTSSM- I 사업 개발시험평가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재시험평가를 거쳐 겨우 “기준충족” 판정을 받았다.
- 2019년 국정감사 때 민홍철 의원 질의에 따르면 MLRS와 ATACMS를 미국에서는 수리 부속 부품 부족을 해결하면서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김관진 국방장관(2010. 12.~2014. 6.) 당시에 동일한 수리 부속 부품 문제를 이유로 2012년, 2013년 2차례에 걸쳐 폐기를 결정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사업에 대한 중기신규 소요 결정(2012. 8.)과 사업추진 기본전략 승인(2014. 2.) 시점과 맞물린다(2019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 60~61쪽, 2019. 10. 7.).
- 그런데 육군은 2019년 시점에서도 “ATACMS를 지속 운영하고 있고 폐기 여부는 향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의 전력화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또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을 위해, 지금도 활용이 가능한 MLRS와 ATACMS를 폐기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2019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 60~61쪽, 2019. 10. 7.).
-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서도 “양산준비 미흡에 따른 양산 타당성 미확보” 판정을 받았다(방위사업청,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1469쪽, 2020. 9.).
- 올 2월부터는 감사원이 총사업비 3204억 원에 이르는 KTSSM- I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감사원은 2018년 완료된 ‘KTSSM 사업 타당성 평가’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동아일보, 2020. 10. 16.). 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KTSSM 사업의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편 이 사업은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 스커드미사일 등을 궤멸시킬 목적으로 개발비 약 1,300억 원에 양산비용 약 3조 5,182억 원을 쏟아 부어 실전배치하고 있는 ‘천무’를 비롯한 다연장포와 현무 미사일 사업(사거리 300km 현무 2A) 등과 중복되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은 폐기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이데일리, 2017. 7. 29.).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남한 포병전력과 미사일 전력은 북한에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다연장포와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 간 전력지형에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전력 구축이다.
-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R&D)와 같은 대북 선제공격용 무기도입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이자 판문점선언/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위배되고 남북 간 첨예한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가중시킬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사업은 절차적, 기술적 하자와 중복투자 등의 난맥상으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 5. 삭감 요구액

-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R&D) 예산 87억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확산탄

### 1. 2021년 국방예산 중 확산탄 관련예산 현황

**<표1> 2021년도 확산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 원)

No	구분	항목	내용	2020년 예산액
1	전투예비탄약	육군 전투예비탄약	155밀리 DP-ICM BB	200,672
		육군 전투예비탄약	40밀리 이중목적고폭탄	12,229
2	230mm급 무유도탄(R&D)			7,725
3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해군		53,279
4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	해군		3,756
합계				277,661

(출처 : 방위사업청,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20. 9.)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전투 지속일수 00일 미만의 저수준 탄약 중 고위력 장사정탄 및 작전계획 수행에  
  긴요한 탄약을 우선 확보함으로써 군의 작전지속능력을 보장
- 적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 군단 사단의 대화력전 수행 및 종심타격능력 보강, 적  
  종심지역의 지상군 병력 및 장비 등의 표적을 효과적 타격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확산탄이 없더라도 전쟁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국방부는 전쟁 지속능력의 보장을 위해 확산탄의 지속적인 생산과 비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산탄은 국제법으로 금지된 탄약이기 때문에 이를 전쟁 수단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 확산탄을 전쟁 수단에서 완전히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전쟁수행 능력은 약화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적의 장사정포 위협, 지상군 및 전차/장갑차에 대한 타격 능력 향상을 통한 무력화”를 위해 확산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 남한의 무기체계는 넘쳐난다. 한국군은 육군의 K55A1와 K-9 자주포, 공군의 합동정밀직격탄(JDAM), 레이저 유도폭탄(GBU-24), 중거리 GPS 유도키트 폭탄(KGGB), 탄도미사일 현무 등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체계를 오래전부터 구축해 왔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정보·타격 등의 대응 체계가 현재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윤광웅 당시(2004년) 국방장관은 240mm 장사정포는 6분 이내, 170mm 장사정포는 11분 이내에 격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차/장갑차도 남한은 북한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는 대부분 구형이며 3~3.5세대 신형전차(폭풍호, 선군호)는 800대(22%)에 그친 반면 현재 남한이 보유한 3~3.5세대 신형전차(K1, K1A1, K-2, T-80U)는 1,624대(73%)로(『2020년ミリ터리 밸런스』, 287쪽) 북한의 전차 전력을 압도한다. 더욱이 남한 포병전력과 미사일 전력은 북한에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남한의 공군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지상군 및 전차/장갑차에 대한 충분한 타격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확산탄이 없더라도 전쟁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 뿐만 아니라 123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한 사실이나 2019년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5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따라 비축 확산탄을 전량 폐기 처분(150만 개의 비축 확산탄과 1억 7,800만 개의 자폭탄)한 사실은 이들 나라가 확산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국을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 ② 확산탄은 방어무기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불법 무기다

- 확산탄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어 목적의 무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국 영토 침입이나 공격에 효과적인 무기로 개발되었다. 우리 군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유엔헌장에서 인정되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서 확산탄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

- 확산탄을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대부분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3축 체계’를 뒷받침하는 무기체계다. 판문점·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가 ‘3축 체계’ 명칭을 바꾸긴 했지만 3축 체계의 세부적인 작전 및 전력은 유지하기로 했다. 육군의 230mm 다련장(천무)과 공군의 정밀유도확산탄(CBU105) 등은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을 위한 핵심무기체계다.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전술함대지유도탄은 사거리 1,000km 이상의 함대지 순항미사일과 잠대지미사일과 더불어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해상 킬체인 전력의 하나다. 사거리 200km의 전술함대지유도탄은 북한의 지대함 사거리 밖에서 해병대 상륙작전에 앞서 북한의 연안은 물론이고 북한 중심 지역의 지상군 병력이나 장비를 표적으로 하는 전형적 공격무기다. 전술함대지유도탄 수직형은 함정의 진행 방향과 상관없이 360도 전 방향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공세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 대북 (선제)공격을 위해 확산탄을 생산, 비축, 사용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헌법(5조 1항, 4조)에 위배되며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한 유엔헌장 51조를 위배하는 불법이다. 또한 이는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대북 체제보장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한 싱가포르 성명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 지금까지 전쟁예비탄약의 비축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나아가 남북 정상은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근원적이고 실질적으로 전쟁위험을 제거한다는 데도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대북 전면전에 대비한 장기 전쟁예비탄약 비축 관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③ 확산탄은 ‘확산탄금지협약(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에 의해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비인도적 불법 무기다

- 확산탄은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탄약으로, 대표적인 무차별적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다. 확산탄의 피해대상은 군인이 아니라 주로 민간인들이다.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9%가 민간인이며 이 중에서 52%가 어린이들이다(『Cluster Munition Monitor 2019』, 2019. 8. 29., Cluster Munition Coalition).
-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살상하는 확산탄은 국제인도법(전쟁법) 위반이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모든 군사적 공격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2)항과 제2추가의정서 제13조 (2)항,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4)항).
- 확산탄은 ‘확산탄금지협약’ 발효로 국제적으로 불법화된 지 오래다. 2008년 사용·생산·비축·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재고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확산탄금지협약’이 채택되었으며, 2010년 8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2020년 9월 15일 현재, 총 123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했고 이 중 110개국이 발효(당사국)했다.
- 한국은 세계 2위의 확산탄 생산국이자 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확산탄을 수입하고 있는 최대 수입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구실로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이 소멸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가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산탄의 생산, 수출, 수입 및 저장, 사용이 합법이라 할 수 없다. 국제 인도법의 관습은, 불법한 현상의 규정은 비가입 당사국의 행위에도 규정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확산탄금지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과제』, 이재승, 2010. 10. 16.)
-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획득연구센터 하광룡, 박지원 연구원은 “확산탄금지협약의 가입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확산탄의 사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시한 독단적인 확산탄 정책을 펼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확산탄 사용 국가는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확산탄에 의해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주간국방논단 제1434호, 『확산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우리의 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12. 10. 29.). 실제

2017년 ‘확산탄금지연합’과 그 회원 조직인 PAX는 확산탄 제조 기업인 한국 풍산에 대해, 풍산이 생산하는 미가공 동전 구입 중단을 촉구하는 세계적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왕립 화폐 주조청은 “풍산은 국제법상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 제조업체”라며 풍산의 미가공 동전을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천무 다련장로켓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 한화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2007년부터 13년째 한화를 투자 금지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연기금은 한화뿐만 아니라 한화 그룹 전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한화는 최근 확산탄 사업을 종업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예멘에서 확산탄을 사용한 사우디에 확산탄을 수출한 미국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자 미 의회가 사우디에 확산탄 수출을 법적으로 금지(2016. 6.)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④ 한국군의 전투예비탄약량을 미국이 인가하는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해야한다

- 확산탄이 국제인도법과 국제조약으로 금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이를 계속 전투예비탄약으로 비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여서가 아니라 미국이 확산탄 전투예비탄약 비축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은 당초 2018년 말까지 전량 폐기하기로 한 확산탄을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미 국방부는 집속탄을 계속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군의 남침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뉴데일리, 2018. 10. 31.)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한 것으로 미국이 확산탄을 유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 1974년 체결된 ‘한미 재래식 탄약 보급에 관한 합의각서’(샬스케이, SALS-K)는 2항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군 20개 사단 규모의 병력에 대한 미국이 인가한 기준의 45일분을 확보하는데, 한국 소유 재고의 부족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미국 소유의 재래식 탄약을 한국 내에 저장할 것에 합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또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부대구조와 미국이 인가한 보급률(US approved supply rates)의 수정사항을 적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한국군의 전투예비 부족량을 검토할 것에 합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합의각서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군의 전투예비탄약의 종류와 비축량을 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군이 반인도적인 대인지뢰나 확산탄을 계속 비축, 보유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이 대인지뢰금지협약이나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은 전투예비탄약에 대한

미국의 인가제도가 주된 요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 ‘살스케이’는 주한미군 7사단이 닉슨 독트린에 따라 한국에서 철수(1971년)하면서 자신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한 미 육군 소유 탄약을 한국이 대신 저장·관리하도록 한, 또한 미국 내에서 남아도는 수명이 다한 노후탄약을 한국으로 옮겨 보관하기 위해 체결된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이 불평등한 살스케이 합의각서를 폐기하고 확산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 ⑤ 과잉전력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 남한은 북한의 지상군, 장사정포, 야포, 전차, 장갑차 등의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확산탄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또한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이 진전되어 남북이 단계적 군축으로 나아가게 되면 확산탄은 우선적 군축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낭비 사업이다.
- 또한 이미 과잉전력인 전술함대지유도탄을 수직형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복사업으로 국민혈세 낭비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남북, 북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약했다. 또한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가 중지되었다. 비록 남북,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고 과거의 대결로 회귀하게 되더라도 어렵게 이뤄진 남북, 북미 간 합의가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확산탄 폐기 문제는 정세와 무관한 인도적인 문제로 정세의 개선이나 악화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확산탄금지협약 1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는 확산탄금지협약의 보편적 채택과 모든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확산탄 사업의 중단은 확산탄의 개발, 사용, 수출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에 국회는 전투예비탄 중 육군 전투예비탄약 155밀리 DP-ICM BB, 40밀리 이중목적고폭탄, 230mm급 무유도탄(R&D), 해군의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등의 확

산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모든 확산탄의 생산, 비축, 사용을 중단시키고 나아가 전면 폐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5. 삭감요구액

- 확산탄 관련 예산 2,776억 6,1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2-7) K2 전차 (2232-302)

###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140,525	309,410	168,885	309,410

###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① <사업목적>

- 현용 전차 노후 심화로 전력 발휘 및 운영유지 곤란, 추가 성능 향상 제한
- 군 구조 개편에 맞추어 양적 전력을 대체할 질적 전력 향상으로 전력 공백 최소화
-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전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전차 개발 및 전력화

#### ② <기대효과>

- 적의 위협에 동시 대비가 가능한 전쟁 억제력 보유
- 병력 감소에 대한 질적 개선 가능

###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K2 전차는 과잉전력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

- 국방부의 북한 탱크 숫자 부풀리기

-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북 탱크 대수는 2,300 : 4,300대로 북한이 2,000대가

더 많다. 그런데 남북 탱크 보유 대수 차이는 마치 공식처럼 정형화되어 있다. 1988년에 1,500 : 3,500대로 북한이 2,000대 우위에 있었던 것이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격차가 전혀 줄지 않은 것이다. 지난 30년간 남한의 압도적 우위의 경제력과 국방예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똑같이 800대씩 탱크를 늘렸다. 남한이 구형 탱크 M-47 400여 대를 퇴역시켜 창고에 보관하는 등의 감축을 고려하더라도 1987년부터 배치된 1,000여 대 이상의 K-1/E1, 2000년부터 배치된 500여 대의 K1A1/A2, 2014부터 배치된 K1A1 개량형, 100여 대의 K2 등의 증강 대수를 고려하면 남한 보유의 탱크 대수는 2,300대를 훨씬 상회 해야 한다. 그런데도 2,300대의 보유에 그치고 여전히 2,000대의 대북 격차를 허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만약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국민들을 상대로는 그렇게도 탱크 대수(전력)의 열세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차이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 배분 등의 노력을 게을리-달리 말하면 질적 우위를 추구-했거나 남한 보유 대수는 줄이고 북한 보유 대수는 늘리는 숫자 놀음을 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북한이 6.25 때 운용했던 T-34-지금은 사실상 퇴역-나 50~60년대에 도입한 T-54/55를 국방부가 여전히 전투서열에 포함 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 탱크의 양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숫자 놀음의 한 사례다. 이는 남한이 50년대 도입한 M-47을 퇴역시켰으며, 60년대 도입한 M-48이나 이를 70년대 개량한 M48A5도 전량 퇴역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과 매우 대조적이다.
- 『2020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남북 보유 탱크 대수는 2,761 : 4,092로 남북 간 격차는 1,221대로 국방백서보다 훨씬 적다. 여기에 밀리터리 밸런스가 제외시킨 남한의 M-48 300대를 더하면 남북 보유 탱크 대수는 3,061 : 4,092로 격차가 1,000여 대로 줄어든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남한은 K-21과 같은 보병전투차량(IFV)을, 북한은 PT-76 경전차 등을 제외하고 주력 전차(MBT)만 산정하면 2,474 : 3,500이다. 여기 퇴역한 북한의 T-34 525대를 제외하고 남한이 보관 중인 M-47 400여 대를 포함 시키면 남북한이 보유한 탱크 대수의 격차는 불과 100여 대로 줄어든다.
- 설령 남북 간 탱크 대수의 차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 작전지구에 투입할 수 있는 탱크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협소한 전구와 산과 하천 등이 많은 지리적 조건, 대전차 방어 장벽, 갖가지의 대전차무기 등 탱크의 작전 효용성이 매우 낮은

한반도의 특성에서 500~1,000여 대의 양적 차이는 별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 노후 전차 도태로 인한 전력 공백 주장은 허구

- 질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남한 탱크 전력은 북한 탱크 전력을 압도하며, 양적 열세를 만회하고도 남는다. 『2020ミリ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주력 전차 중에서 3~3.5세대 탱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한(K-1/E1, K1A1/A2, K-2, T-80u)이 무려 73%(1,624대)에 달하나 북한(폭풍호, 선군호)은 최대 22%(800대)에 그쳐 남한 전차가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1~2세대 탱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한 27%(2세대 M48A5 597대)에 불과하나 북한은 78%(1세대 T-34/54/55/59 1,700대, 2세대 T-62 1,000대)나 된다. 교전 시 1,700대의 1세대 북한 주력 전차는 거의 90%의 확률로 1,624대의 3세대, 597대의 2세대 남한 주력 전차를 상대해야 한다. 이는 남한 주력 전차가 북한 주력 전차에 비해 1~2세대 앞서 있으며, 남한 전차의 질적 전력 우위가 북한 전차의 양적 전력 우위를 메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 한편 K-1 전차의 K1E1, K1A1 전차의 K1A2 전차로의 성능개량도 계속되고 있어 남한 탱크 전력의 대북 우위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국방부는 모든 K1A1 전차에 대해 디지털 전장관리체계를 도입하며 전후방감시카메라와 조종수 열상 잠망경 장착을 통해 전투효율을 높이는 성능개량사업(K1A2)을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K-1 전차에 대해 디지털 전장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전후방감시카메라와 조종수 열상 잠망경 장착을 통해 전투효율을 높이는 성능개량사업(K1E1)은 2025년까지 완료된다. 이와 별도로 K1E1 전차의 2차 성능개량 사업도 2021년부터 시작된다. K1E1 2차 성능개량 요소는 포수 조준경, 북한 화확탄 대비 양압/냉난방장치 장착, 진지 점령하 임무 수행 시 진지 노출 방지와 엔진 정지하에서도 임무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보조전원 장치 추가 장착 등이다(방사청, 2021년 사업예산 설명서). 이와 같이 남한 전차는 질적 위주의 급격한 전력 증강을 이루고 있으며, 설령 M-48 계열의 전차를 전량 도태하여 양적 감소가 있더라도 남한 전차 전력의 공백을 우려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
- 탱크 전력을 평가하는 데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대전차무기다. 남북 모두 상대 전차를 위협할 수 있는 다량의 대전차무기를 지상군 분대 단위까지 배치해 놓고 있다. 그러나 불새-2/3 등 북한군이 보유한 대전차무기는 관통력이 300(AT-4

Spigot)~1,000mm(AT-3sms)로 남한의 모든 세대 주력전차에 대한 파괴가 가능하나 주력 대전차무기는 관통력이 대부분 600mm 이하로 방호력이 600mm 이상인 K-1 개량형과 그 이후 도입된 남한의 3세대 전차에 대한 전면 파괴가 크게 제한된다. 반면 남한군이 보유한 대전차무기는 관통력이 305(90mm 무반동총)~1,500(TOW-2A)로 북한의 모든 주력전차에 대한 전면 파괴가 가능하며 PZF-III, METIS-M, TOW 등의 주력 대전차무기들의 관통력이 7~900mm로 북한의 주력 대전차무기보다 관통력이 훨씬 앞서며, 유효사거리와 명중률 등에서 우위에 있다. 특히 남한이 최근 전력화하고 있는 현궁 대전차무기는 전차 상판에 대한 공격(Top Attack)이 가능하며, 2016년에 전력화된(?) 360여 발의 정밀유도확산탄(CBU-105)은 F-15K 전투기나 공격헬기 등에 탑재해 사용하는데, 한 발로 탱크 40여 대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동아일보, 2014. 6. 2.). 또한 최근 전력화된 36대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대형 공격용 헬기에 장착할 288기의 헬 파이어 대전차무기도 북한 기갑전력에는 매우 큰 위협으로 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입체고속기동전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효용성이 없으며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위배된다

- K2 전차는 기존 전차에 비해 화력, 기동력, 방호력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북한으로 진격 시 필수적인 자력 도하 능력도 갖추고 있다. 육군이 K2 전차 등 고성능의 대량 전차를 고집하는 데에는 유사시 대북 종심작전을 위한 입체고속기동작전을 수행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월남전 패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1980년대에 채택된 미군의 공지전 전술/전략을 모방한 한국군의 입체고속기동작전은 합동전 교리를 경시하고 선방어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낡은 교리다. 산악 지형이 80%를 차지하고 동서를 횡단하는 하천과 기동로가 제한되는 협소한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는 입체고속기동작전의 작전 효과는 매우 낮다. 특히 입체고속기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육군이 자체 항공 전력 이 요구되는 한편 공군의 SEAD나 근접항공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협소한 작전 구역 내에서 공군 전투기와 육군의 헬기가 밀집 전개되어 작전을 하는 경우 효율적인 공역관리가 어려워 오폭으로 인한 지상과 공중에서 아군 살상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입체고속기동작전에 따라 북한 중심으로 진격하는 부대는 전방과 측면에서 북한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포위되어 몰살될 수도 있는, 아군의 생

명을 담보로 한 모험적인 작전개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무모한 작전 수행을 위해 K-2 전차를 대량생산해야 한다는 육군의 주장은 무책임하다.

- 한편 K-2 전차는 한반도 유사시 대북 진격과 평양점령 등 대북 공세작전의 선봉을 맡는 7군단 예하 기계화사단 등에 전면 배치, 운용된다. 이에 K-2 전차 도입과 이의 공세적 운용은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군사적 신뢰조치와 단계적 군축 실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위배된다.

### ③ 첨단 국산 전차 개발이라는 목적 달성은 기약하기 어렵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 2005년부터 시작된 1,500마력 국산 파워팩 개발사업은 엔진은 개발에 성공했으나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속기 개발에 실패하고 있으며, 예산(476억 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S&T 중공업이 개발하고 있는 국산 변속기는 9,600km, 320시간이라는 내구 주행 검증 기준을 7,110km, 237시간만 달성(2017)하고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더구나 이 국산 변속기라는 것도 변속, 조향, 브레이크, 제어 장치 등 핵심 부품들을 독일에서 들여와 조립(조선일보, 2020. 10. 20.)하는 수준이어서 국산 변속기라고 부르기에조차 낮부끄러운 실정이다.
- 그런데 업체와 국회의 압력에 밀려 방사청은 국방규격을 개정하여 성능 미달의 현 변속기를 국산이라는 이름으로 K-2 전차 3차 양산 전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 검증 시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변속·조향·제동 등으로 제한해 창정비 수준의 심각한 결함이나 심각한 기본기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시험을 계속하기로 했고, 검사 시 일반정비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결함 발생으로 시험이 중단했을 경우 재시험을 하지 않고 중단 때부터 재개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이는 방사청이 업체 주장을 전면 수용한 것이며, 현 S&T 중공업의 국산(?) 변속기는 이제 K-2 3차 양산 전차에 버젓이 장착될 수 있게 되었다.
- 이렇듯 방사청의 특혜를 받아 K-2 3차 양산 전차가 생산된다면 국산 첨단 전차 개발이라는 사업목적은 한 마디로 억지추향격이 될 것이다.
- 한편 K-2 변속기 사업과 관련한 2019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청은 1차(2010), 2차(2014) 양산 계약체결 시 파워팩을 관급 품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도

급품목으로 분류함으로써 관급 품목으로 분류할 경우 K-2 전차 체계업체인 현대 로템에 149억 원의 추가 이윤을 보장해 주었다. 체계업체가 변속기 품목 선택권과 설계 책임이 없어 변속기 성능 보장책임이 제한되고 사업비 규모(2,999억 원)도 커서 관급품목으로 분류해야 하는데도 도급품목으로 분류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 K-2 전차 3차 양산분부터 대용량무선통신기(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의 장착을 검토했으나 이 또한 성능 미달로 중단되었다. TMMR은 아날로그 중심의 군 통신체계를 디지털화해 미래형 전투체계를 뒷받침할 핵심장비로 꼽힌다. 10년여에 걸친 개발 끝에 2018년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초도 양산 계획을 승인했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맡은 국방연구원은 “5km 사양의 무전기는 작전 효과가 떨어지며 성능이 뛰어나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업 역시 국방부가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작전요구성능을 요구한 결과라는 비판이나 책임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차치하더라도 작전 효과 없는 저성능의 무전기 개발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K-2 전차의 핵심무기체계인 대응파괴장치(KAPS)는 방위사업청이 2012년에 개발 완료를 선언했으나 소프트 킬 시스템과 연동 시 간섭현상이 일어나며 보병과의 합동작전 시 아군 피해 우려 등 때문에 대응파괴장치(KAPS)의 K-2장착은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2018년 1월 현재 대응파괴장치(KAPS) 관련 현안 미해결상태”, 2019년도 사업설명 자료).
- 파워팩 개발 난맥상과 함께 대용량무선통신기(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대응파괴장치(KAPS) 등과 같은 장비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국내 기술 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불요불급한 국산 첨단 전차를 돈으로 개발하겠다는 과욕이 빚어낸 참사들이다.

#### ④ 적의 위협에 동시 대비가 가능한 전쟁 억제력 확보의 허구성

- 국방부가 K-2 전차의 전력화에 따른 기대 효과로 적 위협에 동시 대비가 가능한 억제력 확보를 든 것은 탱크 전력에서 이미 남한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자 주변국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비한 전력까지 갖추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군은 K1/K1E1 전차 1,000여 대, K1A1/A2 전차 480여 대, K2 전차 100대+α 등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

째로 많은 3세대급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군이 적어도 전차에 관한 한 이미 중국과 북한의 전차 전력에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을 갖추고 있음을 말해 준다.

-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전장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국방부의 적 위협 동시 대비가 북한 및 주변국 위협 동시 대비를 의미한다면 군의 끝 모를 전력 증강의 과욕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 ⑤ 병력 수 감소에 대한 질적 개선 가능 설정

- 국방부는 K-2 전차사업의 기대효과로 “군 전력구조 개편 시 병력 수 감소에 대한 질적 개선 가능”을 들고 있다. 이는 과도한 전차 전력 증강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 4. 결론 및 건의 사항

- 남북의 전차 전력 비교에서 남한이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어 K2 전차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으로 예산만 낭비한다.
- 공세적인 입체고속기동작전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K2 전차 도입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위배된다.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위해서도 K2 양산을 중단해야 한다.
- 최첨단 국산 전차를 개발한다는 목적 달성은 기약이 없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십수 년째 이를 방치하고 예산을 승인한 국회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2021년 K-2 전차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K2 3차 양산사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육군의 과도한 전력증강 욕심과 잘못된 사업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 5. 삭감 요구액

- K2 전차 예산 3,094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